2018 새로운경기위원회 백서

공정·평화·복지

새로운중심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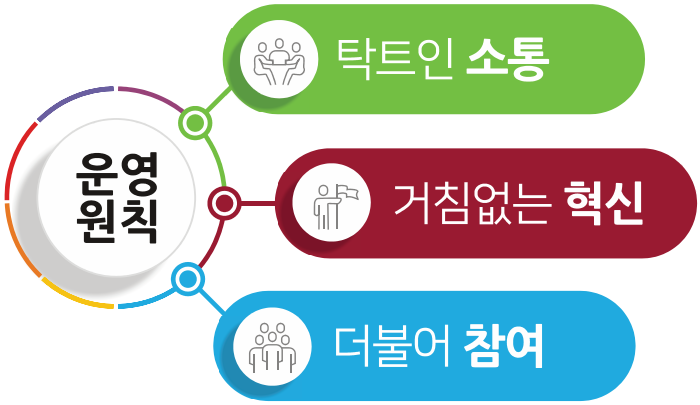
새로운경기위원회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중심 경기도

경기도정 3대 가치

새로운중심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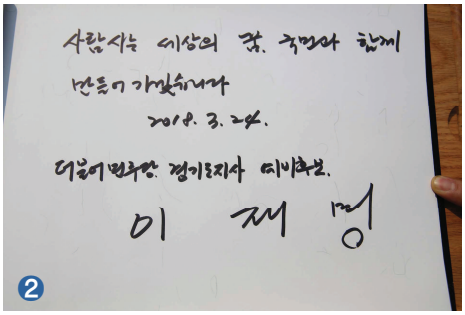
경기도정 3대 운영원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❶ 2018년 3월 24일 故노무현전대통령님께 경기도지사 출마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했다.

❷ 봉하마을에 故노무현전대통령 묘소 참배 후에 방명록에 남긴 문구

❸ 2018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 전에 국립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故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였다.



❹ 2018년 3월 27일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렸다.

❺ 같은 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❻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가진 후에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5.31~6.12)

❶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❷ 파주 금촌역 유세
❸ 수원 행궁 유세에서 추미애 당대표와 함께
❹ 성남 서현역 광장 유세
❺ 의정부 유세
❻ 부천역 유세
❼ 수원역 유세 연설 장면
❽ 화성 유세
❾ 안양 유세
❿ 성남 모란시장에서 상인과 인사나누는 이재명후보
⓫ 6월8일 남양주 별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7

8

9

10

1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선 (6.13)

❶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내외와 함께 손을 들고 당선을 축하하는 원혜영, 정성호 국회의원

❷ 당선이 확정된 후 경기도지사 당선을 축하하며 케익을 준비한 장애아동들과 함께 기념촬영

❸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 캠프를 방문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경기도당위원장의 축하 꽃다발 전달

❹ 당선이 확정된 후 이를 축하하는 지지자들에게 답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내외

국립 현충원 참배 및 국민께 드리는 약속 (6.15)

❶ 2018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와 함께 국립 현충원 참배
❷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출범 (6.18)

❶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인수위원들

❷ 1차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❶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국회의원의 강연

❷ 2차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는 인수위원들

❸ 2차 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화영 기획운영분과위원장

❶ 회의에서 논의중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수위원들

❷ 인수위원의 발언을 지켜보며 활짝 웃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한주 공동위원장

❸ 인수위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 참석 (6.19)

❶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

❷ 축하 꽃다발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기념촬영

❸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협치를 핵심적 기치로 삼아 경기도의회와 함께 정치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❶ 안전행정분과 업무보고
❷ 기획재정분과 업무보고
❸ 농정건설분과 업무보고
❹ 문화복지분과 업무보고

3

4

❶ 교육여성분과 업무보고

❷ 노동경제환경분과 업무보고

“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❶ 시민참여위원회 업무보고

❷ 시민참여위원회 주최 ‘시민참여 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 특강

민선7기 경기도지사 취임식 (7.1)

❶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식 취임 전에 현충탑을 참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내외

❷ 태풍 쁘라삐룬의 한반도 상륙이 예고됨에 따라 공식 취임식 행사를 취소하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취임 절차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태풍대비 긴급회의 및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7.1)

❶ 휴일에 태풍대비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❷ 태풍 대비 긴급회의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각 시·군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7.5)

❶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분과에서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❷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의의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7.19)

❶ 평화통일특구특위, 평화경제특위, 평화안보특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❷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는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 보고회 (7.24)

❶ 새로운경기위원회가 한달 여 간 진행된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보고회를 가졌다.
❷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종합보고서 프리젠테이션
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연설
❹ 새로운경기위원회의 인수위원과 기념 촬영
❺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와 새로운 중심 경기도의 3대가치와 운영원칙을 담은 액자를 들고 기념 촬영
❻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더나은 경기도를 위해 자원봉사한 전문위원 및 정책 자문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
❼ 새로운경기위원회의 조정식 위원장으로부터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새로운 경기 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일시 : 2018. 07. 24(화)
장소 : 도청 대회의실
주최 : 새로운경기 위원회
4

새로운 경기 위원회 활동 종합보
새로운중심 경기도
새로운중심 경기도
5

새로운 경기 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6

7

발간사

조정식 인수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이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공고히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에서 시작한 나라다운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17 곳 가운데 민주당은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14석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지사 뿐만 아니라 총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중 95%인 135명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16년간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한 도민들의 민심은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16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경기도에서 실현해나가기 위해, 평화의 시대에 경기도가 중심으로 서기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활동의 결과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바꿔나갈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서 '새로운 경기도'라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씨앗을 만들었다면 나무를 잘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신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몫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변화와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튼실한 나무를 가꾸고 도민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모든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7

목차

사진으로 보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 선거와 인수위 활동 4

발간사 24

제1부
도정의 비전과 목표 35

1장. 도정의 비전 36

2장. 도정의 목표 44

제2부
새로운경기위원회 구성 및 활동보고 57

1장 분과위원회 59

기획운영분과 61

1. 구성과 역할 62
2. 인수위원 회의 운영 63
3.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68

■ 청년정책단 활동 보고서 71
■ 재정건전화 TFT 활동 보고서 100
■ 추경예산 TFT 활동 보고서 110
■ 도정운영개선 TFT 조직개편 소위 활동 보고서 119
■ 도정운영개선 TFT 산하기관 경영진단 소위 활동 보고서 124
■ 도정 슬로건 TFT 활동 보고서 129

기획재정분과 137

1. 구성 138
2. 활동방향 138
3. 주요 활동내용 138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143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150

■ 기본소득준비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및 조례안 150
∴ 기본소득 의의와 기본소득위원회 152
∴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3

안전·행정분과 167

1. 구성 168
2. 활동방향 168
3. 주요 활동내용 169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184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189
6. 정책제안 및 과제 191

∴ 1.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191
∴ 2. 조직개편안 검토 192
∴ 3. 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 195
∴ 4. 공무원 역량 개발 및 평가 강화 196
∴ 5. 학교 및 공원 등을 활용한 재해 대피시설 확충 196
∴ 6.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 및 적정 기준인건비 산출 196
∴ 7. 도 행정사무의 시·군 이양 197
∴ 8. 자치경찰 추진 199
∴ 9.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 약자 아동·어르신 “천사보호”운동 200
∴ 10. 경기도 어린이 천사 지킴이“스마트 키즈폰”지원사업 202

노동·경제·환경분과 205

1. 구성 206
2. 활동방향 206
3. 주요 활동내용 206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215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232
6. 정책제안 및 과제 235

∴ 1. 조직신설 및 개편 237
[1] 혁신창업지원과 신규설치 237
[2]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 구축 필요 237
[3]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개편 238
[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국 조직 개편 238
[5]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 제안 239
[6]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 건립 240
[7] 경기 금융소비자 보호재단(가칭) 설립 제안 241

∴ 2. 제도개선 242
[1] 경기도 공무원 일자리, 노동 전문성 제고 필요(교육강화 등) 242
[2] 노동복지기금 확대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사업 정상화 242
[3] 일자리재단의 운영방식 등 전면검토 243

목차

[4]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의 재정립 243
[5]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사업 및 연료 개선사업 확대 243
[6] 경기도 금고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244
[7]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운영개선 시급 245
[8] 섬유산업등 3D산업 대체복무 지원제도 개선 246
[9] 청년통장 지원제도 개선 246
[1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발주체계 개선 247
[11] 도·시군간 산업단지 운영관리협약체결 및 민간 관리기관 지원 강화 247
∴ 3. 신규사업제안 248
[1] 경기 우수공원 인증제(경기그린프라그어워드, GyeongGi Green Flag Award) 도입 248
[2] 경기도 산하기관 태양광발전소 의무 설치 249
[3] 공동전기료 제로아파트 사업 250
[4] 축령산 산림복지서비스 특화지구 지정 제안 250
[5] 꽃 속의 경기 (GyeongGi in Bloom) 사업 제안 251
[6]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신고 제도 제안 252
[7] 테크노밸리 정책팀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252
[8] 글로벌 평화 예술특구 253
[9]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휴게공간 설치비 지원) 254
[1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보조) 255

문화·복지분과 257

1. 구성 258
2. 활동방향 258
3. 주요 활동내용 259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267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284
6. 정책제안 및 과제 287
∴ 1.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 287
∴ 2. 무한돌봄센터 개편 288
∴ 3. 국제장애인교류센터 설치 290
∴ 4. 장애인 생활편의 스마트 앱 구축 291
∴ 5. 장애인정책 협치·연구·조직 확대(안) 292
∴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제도 확대 294
∴ 7. 경기도 예술정책 전담부서 신설 295
∴ 8. 문화체육관광실 신설 및 실국별 조직 정비 296
∴ 9. '문화가 있는 삶, 삶이 있는 경기' [경기31·생활문화축제위원회] 설립 297
∴ 10.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경기'[경기 축제형 국제 융복합예술 엑스-티벌(Exhibition-Featival) 개최] 298
∴ 11. 제목 : 무형문화제 전수장학금 지급 299
∴ 12. 경기스토리텔링 공모사업 300
∴ 13. (가칭)경기예술비엔날레 개최 301
∴ 14. 우리동네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302

농정·건설분과 303

1. 구성 304
2. 활동방향 304
3. 주요 활동내용 304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315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336
6. 정책제안 및 과제 340

∴ 1. 기존 사업 재편 340
[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재협상 340
[2] 급식예산구조 개편으로 적정식품비 확보와 친환경 급식 비율 상향 추진 340
[3] 이원화되어 있는 경기도 급식 지원체계를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 341
∴ 2. 기존 사업 재편 및 조직 신설 342
[1]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공공급식, 군납, 대학급식 등 경기도 내 공적 조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적극 확장, 경기도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확대발전 도모 342
∴ 3. 기존 사업 확대 343
[1] 도시농업 육성 343
∴ 4. 신설 사업 제안 344
[1] 상수원다변화, 규제완화, 주민지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실시 344
[2]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345
[3]「수도법」개정 지원 345
[4] 청소년수련원 등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346
∴ 5. 조직 신설 및 재편 347
[1] 경기도의 먹거리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 제언 347
[2] 경기연구원내 농정해양연구실 신설 347
[3]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검토 348
∴ 6. 정책 수정 제안 - 농정 시각에서 본 스마트팜 시행정책 349

교육·여성분과 351

1. 구성 352
2. 활동방향 352
3. 주요 활동내용 352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362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371
6. 정책제안 및 과제 375

∴ 민선7기 교육여성분과 제안 조직개편(안) 375
[1] 여성정책 전달체계 재구축을 위한 TFT 제안 375
[2]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정책실로 위상 격상 375

[3] 여성비전센터 기능 강화 방안 375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 376
[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명칭 변경 필요 376
[6] 청소년정책과 신설 376
[7]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376
[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리직(1급상당) 채용 방법 다양화 376
377

2장 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379

1. 구성 380
2. 활동방향 380
3. 주요 활동내용 380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386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396
6. 정책제안 및 과제 398

∴ 1.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 398
참고 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황 및 역할 400
참고 2 시·도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401
∴ 2. 경기도 R&D 체제 혁신 402
∴ 3.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확대 403
∴ 4. 경기 드론 특구 조성 404
∴ 5. 스마트 파킹 405
∴ 6.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406
∴ 7. 블록체인 기반의 도정 공정성 및 신뢰성 증대 407
∴ 8. 인공지능 120 경기도 콜센터 408
∴ 9.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로봇 솔루션 보급 및 확산 409
∴ 10. 인공지능 119 정보센터 구축 410
∴ 11. 육, 해, 공 무인이동체 연구, 실증 클러스터 조성 412
∴ 1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연구개발 사업 지원 413
∴ 13. 은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안심하고 상용시키는 “테크 세이프 (Tech-Safe) 414
∴ 14. 경기도형 융합기술 R&D 지원 사업 “융합 기술 상용화 사업” 416
∴ 15. 경기도 초등학생 코딩교육 확대 417
∴ 16. VR·AR 기반 가상 건설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 418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419

1. 구성 420
2. 활동방향 420
3. 주요 활동내용 420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425

핵심과제 1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426
[1] 공약개요 426
[2] 기대효과 427
[3] 공약사업 추진내용 427
[4] 자체평가 427
핵심과제 2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428
[1] 공약개요 428
[2] 기대효과 428
[3] 공약사업 추진내용 428
[4] 자체평가 430
핵심과제 3 경기교통공사 설립 431
[1] 공약개요 431
[2] 기대효과 432
[3] 사업 추진내용 432
[4] 자체평가 433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436
6. 신규 정책제안 437

∴ 1. 수요응답형 셔틀(Dial-a-Ride) 도입 검토 4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발췌 439
∴ 2. 청소년, 어린이 버스 이용요금 혜택 지원 440
∴ 3.GB지역 내 공영 차고지(사업용 대형버스) 확보방안 검토 44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44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45
∴ 4.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검토 446
∴ 5.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447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450
△「택시발전법 시행령」 451
△ 민 법 452
∴ 6.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제 도입 453
∴ 7. 경기도 택시 노동 복지회관 건립 455
△ 택시쉼터 · 택시 복지센터 · 복지회관 구분 45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457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458
△ 근로복지기본법 458

목차

평화통일특구 특별위원회 459

1. 구성 460
2. 활동방향 460
3. 주요 활동내용 461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464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471
6. 정책제안 및 과제 472

∴ 판문점 포럼 472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473

1. 구성 474
2. 활동방향 474
3. 주요 활동내용 474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478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488

[1]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 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벨트 구축 488
[2] 경원선 연결, 사통발달 경기북부 프로젝트 488
[3] 남-북-중/러 교류·협력 준비 488

6. 정책제안 및 과제 489

∴ 1.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489
∴ 2.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490
∴ 3. 경기도 북부청사의 예산편성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490
∴ 4.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확대 개편 491
∴ 5.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설치 492
∴ 6. '경기북부 평화포럼'(가) 설립·운영 지원 493
∴ 7. 경원선 'Peace Road' 관광·문화 벨트 조성 494
∴ 8. 평화로(국도 3호선) 가로 환경 개선 추진 495

평화안보 특별위원회 497

1. 구성 498
2. 활동방향 498
3. 주요 활동내용 499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501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503
6. 제언 503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505

1. 구성 506
2. 활동방향 506
3. 주요 활동내용 507
4. 경기도정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와 제안 509
5. 새로운 경기를 위한 자치분권 소위원회 제안 513
6. 성과 및 제안 516

■ 공유경제 소위원회 보고 517

시민참여위원회 523

1. 구성 524
2. 활동방향 524
3. 주요 활동내용 524
4. 업무보고 검토 결과 526
5. 공약이행 세부 과제 532
6. 성과 및 제언 535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549

553

3장 대변인실 활동 보고 553

1. 구성 554
2. 활동방향 554
3. 주요 활동내용 554
4. [별첨] 대변인실 보도자료 보고 577

부록

부록 1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사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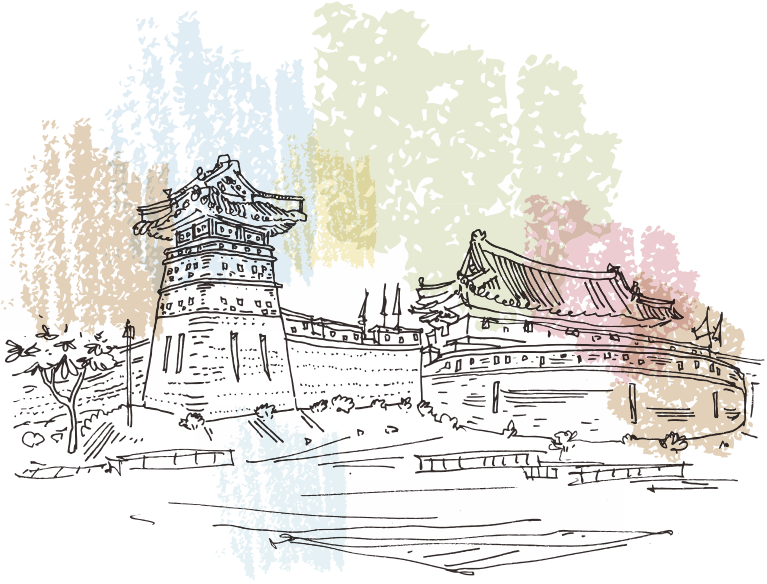
부록 2 :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 목록 624

부록 5 :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644

부록 6 :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 보고회 658

부록 7 : 새로운경기위원회 예산결산 내역 674

부록 8 :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677



제1부

도정의 비전과 목표

1장. 도정의 비전

(1) 이재명 도정 출범의 의미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 주먹과 권력, 돈의 힘으로 부당하게 지배하고 약탈하던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공존하는 '인간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힘의 격차를 이용해 벌이는 폭력과 착취의 참상이 드러나고, 이를 고치려는 치열한 노력이 폭넓게 진행중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들은 중앙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지방권력을 교체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적폐도 청산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6.13지방선거는 분단과 대결이냐 평화와 번영이냐를 판가름 짓는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4월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이었다.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선을 넘나들고,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를 겸한 산책을 한 뒤 배석자 없는 사실상 '단독회담'을 30분간 진행했다.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깊은 울림을 받은 것은 자명했다.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들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두 정상은 한 달 뒤인 5월26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열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시대가 끝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한반도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평화와 협력, 번영의 길목으로 가는 길에서 6.13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경기도민들에게 있어 평화의 시대 개막은 크나큰 기회일 수밖에 없다. 수십 년간 군사적 이유로,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던 접경지역이 평화의 전진기지로,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는 경기도민들에게 있어 정체냐 변화냐를 선택하는 선거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300만 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면적도 우리나라 전 국토의 10.2%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372조3천억원으로 전국의 22.8%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지만 국가와 서울 중심 정책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 간 불균형으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했다. 수도권이라 차별받고 서울이 아니라 소외받으며 안에서는 지역격차에 신음했다.

도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동부는 환경보전에 따른 손실을, 북부는 분단에 따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10개의 개별법령의 중복규제를 받느라 재산권 행사와 기업활동 등에 제한이 생기고, 산업시설에 규모를 제한하니 영세공장이 많이 생겨 난개발을 초래했다.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기북부지역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지난 16년간 일당 장기집권의 결과, 도민들의 삶은 정체되었다.

경기도는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 키우기 나쁜 환경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5.5%에 불과하다. 서울시 평균 20.1%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며, 전국평균 7.7%에도 30%나 뒤처지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2017년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10.5%로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내 실업자 가운데 45.4%가 청년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은 '그림의 떡'이다. 경기도 530만 노동자 중 30%가 비정규직이며 42%가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12%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경기도 노동자들의 처우를 짐작하게 해주며, 노동 존중 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골목경제도 어렵다. 2000년에만 해도 36.8%에 달하던 도내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25.6%로 급감했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전월세 가구도 43%나 되며,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은 월소득 중 36%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다. 주택노후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구 1천만인 서울은 2만7천명의 경찰인력이 있는 반면 인구 1천3백만의 경기도는 2만1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 치안인력의 부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발생한 변사사건 가운데 22.2%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민들은 안심하고 숨 쉴 권리조차 제약받고 있다. 2016년에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합의를 했지만 경기도는 단속은 물론 단속시스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서울은 2012년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어 경유버스가 모두 사라졌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경유버스 4,109대가 운행중이다. 경기도 내 자체 미세먼지 생산량이 많은 공장 및 제조업체, 발전시설, 건설기계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경기도민들은 적폐청산과 함께 평화의 시대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56.4%로 현역 도지사인 남경필 후보를 무려 20.89%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곳(양평, 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29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42.08%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5곳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에 비춰볼 때 전통적으로 보수색채가 짙었던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다. 도민들은 지위보다는 실적과 성과를 보여준 후보를 선택했다. 그 결과 현역 도지사였던 남경필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경력이 없는 기초단체장 출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입증했다. 빚더미에 올라있던 성남시를 정상화했으며,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3+1 원칙'을 적용해 성남시를 복지도시로 만들어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해 뚝심과 실천력을 인정받았다. 도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를 바꾼 실력으로 경기도 또한 바꿀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기간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열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공고하게 하고, 경기도를 남북 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차례다.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균형발전하는 경기도, 생애주기별, 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땅 경기도를 만들어 낼 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도민들의 자부심 또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기도의 닻은 올랐다.

(2) 민선7기 경기도정의 비전과 원칙

1) 비전

“새로운 중심 경기도”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도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경기도, 평화의 시대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중심으로 서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앞선 복지를 누리는 삶의 질 최고의 자부심 넘치는 경기도가 시작된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가치는 공정한 경기도, 평화의 경기도, 복지중심 경기도로 집약된다.

○ 공정한 경기도

기회는 공평하고, 경쟁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당한 사회가 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은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 내릴 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희망이 주어지는 경기도가 완성된다.

○ 평화의 경기도

평화의 시대, 번영하는 나라를 지방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제 남북간 교류 협력,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다.

○ 복지중심 경기도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이다. 복지를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때 도민임이 자랑스러운 경기도,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가 될 것이다.

2) 도정의 원칙

경기도의 주인은 1,300만 도민이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소통, 혁신, 참여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할 것이다.

○ 소통

행정은 일방향이 아니다. 경기도정은 언제나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도민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탁 트인 소통은 경기도정의 시작과 끝이다.

○ 혁신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설 때 혁신이 일어난다.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거침없는 혁신, 경기도정이 갈 길이다.

○ 참여

도민과 더불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상식이자 일상이 된다. 도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경기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에서 도민은 온전한 주인의 지위를 누릴 것이다.

2장. 도정의 목표

5대 목표	16대 전략	54대 과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01.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02.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03.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01. 촛불정신의 계승, 도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 02.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 강화 03. 경기도 예산 및 채용·인사의 투명성 제고 04. 경기도 조세정의 실현 05. 특별사법경찰을 강화로 삶이 안전한 경기도 06.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 07.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08.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 운영 09. 경기 북부,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지 10. 경기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04.기본소득과 3대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05.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06.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11. 경기복지 기준선을 제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12.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13.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4. 경기도 3대 무상복지 확대 실시 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 강화 16.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시행 17. 경기도 치매돌봄체계 개선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18.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경기도 20. 한부모·조손가족의 삶 지원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07.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08.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09.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21. 경기형 경제민주화 실행 22.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23.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및 지원 플랫폼 구축 24. 경기도, 혁신과 창업 중심지 25.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경제 26. 판교형 지식기반산업지역의 안정적 확대 27.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특화·혁신 28.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

		29.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 적극 시행과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혁신 30. 새로운 경기농정 설계 및 농촌의 경쟁력 강화 31.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10.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11.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12.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32.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3. 빠르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조속히 추진·완공 34. 유라시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교통 물류기지 확보 35.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효율적 진행 36.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37. 미세먼지 해결,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38. 자연형 생태하천 등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39.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복지·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40. 경기 동북부지역 규제의 합리적 해결 41. 지역별 공원과 녹지 연결, 경기도 역사유적 탐방길 조성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13.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14.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15.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16.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42. 경기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보강 43. 경기시민순찰대 창설로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 44.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4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적극 지원 46.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실행 47. 학교안팎의 청소년교육 지원 48. 경기형 평생교육 강화 49. 예술인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고 예술창작 공간 지원 50. '경기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도민의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51.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과 콘텐츠 제작 지원 52.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적극 지원 53. 동물복지 행정체계 정비와 반려동물을 위한 여건 마련 54.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1) 5대 목표

0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촛불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구현

0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민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실현

0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경기형 경제민주화를 실행하여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정경제체계 실현.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서민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0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출퇴근이 편안하고 늦은 밤 귀가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경기도

0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자연재해와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정

(2) 16대 전략

01.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02.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03.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04. 기본소득과 3대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05.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06.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07.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08. 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09.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10.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11.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12.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13.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14. 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15.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16.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3) 54대 중점과제

01. 촛불정신 계승, 도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

도민들이 도의 주요 의제나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기적인 정치축제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촛불정치 문화를 발전적으로 실천

02.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 강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경기도 내의 연구역량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정책의제 개발과 협력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발전의 협치 구현

03. 경기도 예산 및 채용·인사의 투명성 제고

경기도 공익신고자제보 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행정과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04. 경기도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에서 조세 형평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세행정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도의 자주적 재원으로 활용

05. 특별사법경찰 강화로 삶이 안전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충원과 전문성 향상, 치안보좌관제를 도입하고 경찰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민생범죄를 근절

06.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

젠더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경기도, 유리천장·유리벽 없는 경기도, 혐오표현과 성비하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선도하는 정책 추진

07.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복지,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복지로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

08.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 운영

경기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지고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시행하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

09. 경기 북부,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지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협력·지원하고, 경의선·경원선 연결사업을 지원해 경기 북부를 한반도경제공동체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기반을 조성

10. 경기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경의선·경원선지역을 남북평화와 교류협력 시대의 산업과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고, DMZ 일대를 세계적인 평화와 생태의 메카로 조성하여 경기북부에 활력 부여

11. 경기복지 기준선을 제시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하는 복지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31개 시·군에 적용하여 복지균형을 달성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12.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13.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강화하고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차이를 줄여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를 해소

14. 경기도 3대 무상복지 확대실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산과 교육을 뒷받침하는 기본복지시리즈를 확대·시행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보육 강화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재원비율도 대폭 높여 보육의 질 제고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문제 극복

16.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시행

초등학생의 치아건강지원에서 시작하여, 경제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17. 경기도 치매돌봄체계를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이행

18.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이주민과 지역도민의 갈등을 중재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이주민과 특히 이주민 자녀의 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경기도

장애인지적 도정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립하여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0. 한부모·조손가족의 삶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국한된 선별적 지원을 넘어서서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지원

21. 경기형 경제민주화 실행

경제 각 분야에서 '갑'으로부터 '을'의 입장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구체적 권한과 실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

22.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배당 등 도내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시장과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및 행정지원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신설

23.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및 지원 플랫폼 구축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중재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마켓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24. 경기도, 혁신과 창업 중심지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과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내 전통산업도시를 젊고 혁신적인 창업공간으로 조성

25.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경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시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 비즈니스생태계 구축

26. 판교형 지식기반산업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대

판교 등 7개의 거점지역에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활용

27.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특화·혁신

관광·레저, 문화·콘텐츠, 의료·공공서비스 산업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지역별로 특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28.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을 젊은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과 생활이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개발

29.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 적극 시행과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혁신

경기도와 기초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30. 새로운 경기농정 설계 및 농촌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

31.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도민의 재능·경력·개별여건·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연계하는 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32.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

33. 빠르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조속히 추진·완공

경기도에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는 조기 착공·완공하고, 전철의 급행화를 추진하여 경기북부 등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

34. 유라시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교통 물류기지 확보

남북연결 철도·도로망과 서해안 산업물류벨트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조성

35.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효율적 진행

낙후된 도시환경과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허가권을 올바로 행사하여 공공개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

36.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저렴한 공적 지원주택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생활의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37. 미세먼지 해결,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환경

국내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도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

38.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경기도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난개발지역의 자연성 회복 추진과 동시에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39.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복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농어촌지역 폐교 및 유휴공간을 체험학습과 문화·예술교육공간, 복지시설,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

40. 경기 동북부지역 규제의 합리적 해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10개의 개별 법령에 중복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편의를 적극 보장

41. 지역별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고, 경기도 역사유적 탐방길 조성

경기도의 생태·자연환경, 역사유적·기념물, 공원·녹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순환둘레길과 탐방로를 연결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

42. 경기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보강

재난 안전, 구조를 담당한 조직과 행정, 안전교육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재난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와 구조활동 성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43. 경기시민순찰대 창설로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지원

일상적인 방범활동, 안전취약 요소를 점검·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편의서비스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

44.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소비자 관련 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먹거리, 소비자 상품의 안전보장

4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적극 지원

학교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수학여행 등에는 '소방관동행제'를 실시하고, 등하교 교통안전은 경찰과 시민순찰대를 가동해 학교 안팎으로 유해·위험요소 근본적 차단

46.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실현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기반하여 안전한 지역공간을 설계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47. 학교 안팎의 청소년 교육 지원

청소년이 스스로 재능과 꿈을 찾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학교 안과 밖에서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48. 경기형 평생교육 강화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경기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지속가능한 지식·창조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49. 예술인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고 예술창작 공간 지원

예술인의 사회 및 창작안전망 구축, 권익보호,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도민들과 직접 소통·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간을 마련해 운영

50. '경기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 도민의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경기도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생활문화 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지원

51.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과 콘텐츠 제작 지원

도내 지역별 미디어센터를 조성·운영하고, 도민 대상 미디어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립영화 창작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확대와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기능 강화

52.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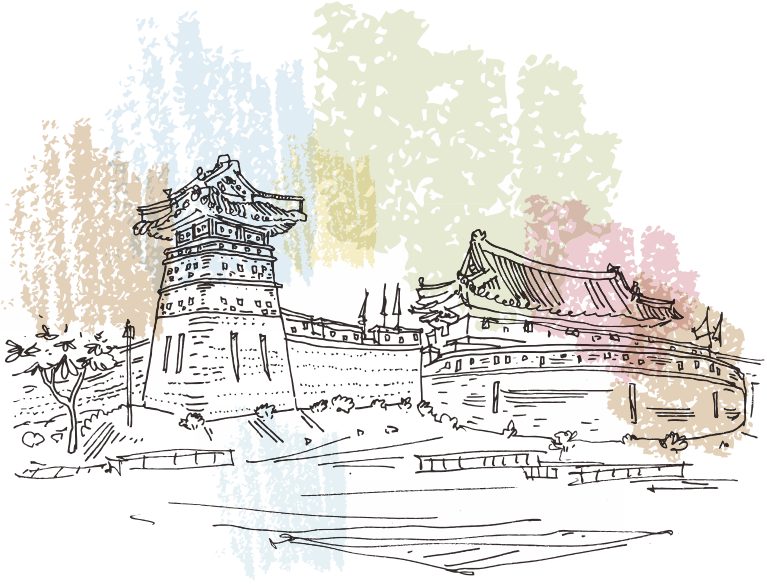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 확대 및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의 지원·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53. 동물복지 행정체계 정비와 반려동물을 위한 여건 마련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 1000만 반려동물인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및 평화롭게 교감하고 공존하는 경기도 조성

54.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도민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확충하고, 도민들의 삶에 활기를 주는 도내 스포츠단체 지원 및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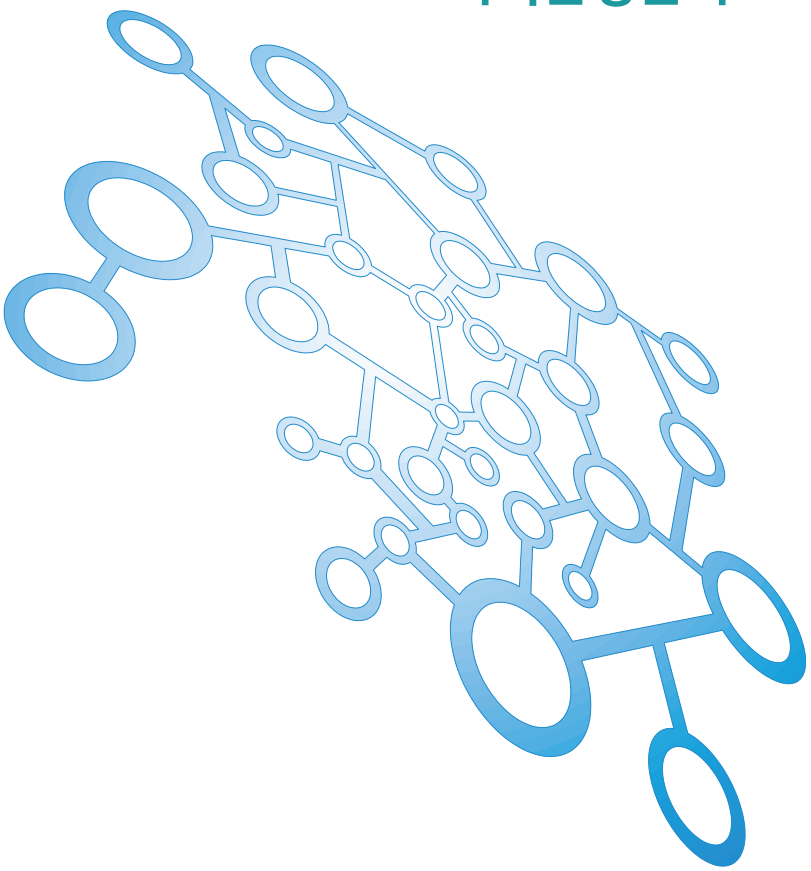


제2부

새로운경기위원회 구성 및 활동보고

1장
분과위원회

기획운영분과



1. 구성과 역할

❍ 기획운영분과위원회 구성

- 3실 운영

기획실(실장 곽윤석), 운영지원실(실장 조승문), 행정실(실장 이우종)

❍ 기획운영분과위원회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역
기획실		· 주요 회의운영 및 인수위 일정관리 · 정책조정 및 분과/특위 간 협력지원 · TFT 설치·운영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기획·편집 · 도정 슬로건 개발, 취임식 기획 지원(TF)
운영지원실	운영	· 분과·특위 업무 지원(위원회별 전담인력 배치) · 인수위원회 성원관리 및 회의 지원 · 도청 자료요청 지원 및 각종 위원회 생산문서 취합
	대외협력	· 도민과의 직접소통 구현 및 도민제안 수렴 · 인수위 웹페이지(새로운경기) 관리 및 홍보 · 도지사 취임식(임명식) 기획·실행
행정실		· 오피스 환경 최적화 및 출입보안 관리 · 회계업무 및 복리후생·복무·공문 등 제반 지원 업무 · 각종 행정서식 관리

2. 인수위원 회의 운영

❍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 개최주기 : 매주 월, 목 오전 10시
- 참석대상

구 분	성 명
인수위원	· 조정식 (상임위원장) · 이한주 (공동위원장) · 정성호 (부위원장, 평화경제특위 위원장) · 이화영 (기획운영분과 위원장) · 윤후덕 (기획재정분과 위원장) ·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기획단장) · 조응천 (안전행정분과 위원장) · 이용득 (노동경제환경분과 위원장) · 문진영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 소병훈 (농정건설분과 위원장) · 백종덕 (농정건설분과 기획단장) · 정춘숙 (교육여성분과 위원장) · 고인정 (교육여성분과 기획단장) · 이원욱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 김경협 (교통대책특위 위원장) · 박 정 (평화통일특구특위 위원장) · 이용광 (평화안보특위 위원장) · 김병욱 (새로운경기특위 위원장) · 오지혜 (새로운경기특위 부위원장) · 최순영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배석 대상자	· 곽윤석 (기획운영분과 기획실장) · 조승문 (기획운영분과 운영지원실장) · 이우종 (기획운영분과 행정실장) · 김 용 (인수위원회 대변인) · 전형수 (도지사 비서실장)

❍ 회의 진행 결과

(1) 제1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6월 18일 (월) 10:00
참석자		이재명 경기도자사 당선인,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대변인 및 비서실장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위원 소개, 상임위원장 인사 · 당선인 인사(모두발언) 및 당부말씀 · 건의사항 및 토의
	의사 결정	·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정기화 : 월, 목 (오전 10시)
특이사항		· 언론 공개 회의

(2) 제2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6월 21일 (목)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대변인 및 비서실장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회의체계 · 취임식 준비위원회 구성계획안 및 기획안 · 분과·특위 구성현황 및 업무추진계획 보고 · 건의사항 및 토의
	의사 결정	· 취임식준비위원회 : (위원장)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최순영 시민참여위원장, 권칠인 영화감독 · 7월 20일까지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목표 · 2018년 추경재원 점검과 수요조사를 위한 TFT 구성하기로 함 (기획재정분과, 기획운영분과 협력)
특이사항		

(3)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6월 25일 (월)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대변인 및 비서실장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현황보고 및 주요일정 · 청년정책 TFT 구성안 · 인수위원회 공식휴무일 지정 건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청년정책 TFT(청년정책단) 구성 결의 : 이화영 기획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구성 · TFT 구성은 기획운영분과 자체논의로 구성하고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특이사항		· 7월 20일까지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목표

(4) 제4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6월 28일 (목) 10:00
참석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대변인 및 비서실장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현황보고 · 분과·특위 특이사항 보고 및 업무조정/쟁점사항 공유 · 도지사 임명식 시행계획 보고(경기도 자치행정국장)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도지사 임명식 관련 - 일시 : 7월 2일 11시~11시40분 - 장소 :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교통현안 관련 업무 조정 : 대중교통 적폐청산은 새로운경기특위 향후 정책검토는 교통대책특위에서 담당
특이사항		· 당선인 지시사항 - 경기도의 재정건화를 위한 TFT 별도로 구성 - 소기업 신기술 제품이 질과 양에서 모두 우수하나 시장 진출 어려움. 공공부분에서 이를 해소해 줄 방안 강구 필요

(5) 제5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7월 2일 (월)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및 대변인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2주차 활동보고 · 분과·특위 특이사항 보고 및 업무조정/쟁점사항 공유 · 인수위원회 TFT 운영현황 보고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인수위 TFT - 현재 운영 TFT : 추경편성, 청년정책, 도정슬로건 - 추가 개설 TFT : 재정건전화, 도정운영개선, 종합보고서
특이사항		· 보고서 취합 및 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상세계획 재수립 필요

(6) 제6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7월 5일 (목) 14: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및 대변인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활동일정 및 보고서 완료계획안 · 도정운영개선 TFT 활동계획 보고 · 재정건전화 TFT 운영현황 보고 · 도정 슬로건 TFT 운영현황 보고 ·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 임명장 수여 여부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보고서 완료일정 - 7월 09일 : 분과·특위 1차 보고서 - 7월 16일 : 분과·특위 수정 보고서 - 7월 23일 : 종합보고서 최종보고일 ·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 임명장 수여 : 즉시 시행
특이사항		· 종합보고서 발표 형식에 대한 건의 : 간소하되 도민과의 약속 컨셉을 살리는 계획안 수립하기로 함

(7) 제7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7월 9일 (월)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및 대변인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3주차 활동보고 및 4주차 활동계획 보고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형식안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형식 - 간소한 형식을 취하되 도민과의 약속 컨셉 적용 - 장소는 도청 대회의실도 고려 - 일시 재조정 : 7/23일(월) 도의회에서 도지사 연설 예정 - 도지사께 보고하여 형식 선택한 후 실행계획 수립하기로 함
특이사항		

(8)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7월 12일 (목)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및 대변인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분과·특위 활동현황 및 계획 보고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형식 의결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회 계획 - 일시 : 7월 24일 (화) 14:00 - 장소 : 경기도청 대회의실 - 발표회(PT) 형식
특이사항		· 인수위원회 사무공간 : 7월 16일 이후 축소 예정

(9) 제9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구 분		내 용
개최일시		2018년 7월 16일 (월) 10:00
참석자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 전원(20명), 기획운영분과 3실장(기획실장, 운영지원실장, 행정실장) 및 대변인
회의 운영	주요 안건	· 인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분과·특위 활동현황 및 계획 보고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회 상세계획안 · 민선7기 경기도 도정슬로건안 · 건의사항 토의
	의사 결정	·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발표회 상세계획 : 원안대로 추진 · 도정슬로건안 투표결과 1) 새로운 중심 경기 2)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3) 모두의 행복 공정한 경기 → 도지사 보고 및 온라인 투표 등 진행한 후 결정
특이사항		· 인수위원원 전체 활동 평가 및 소회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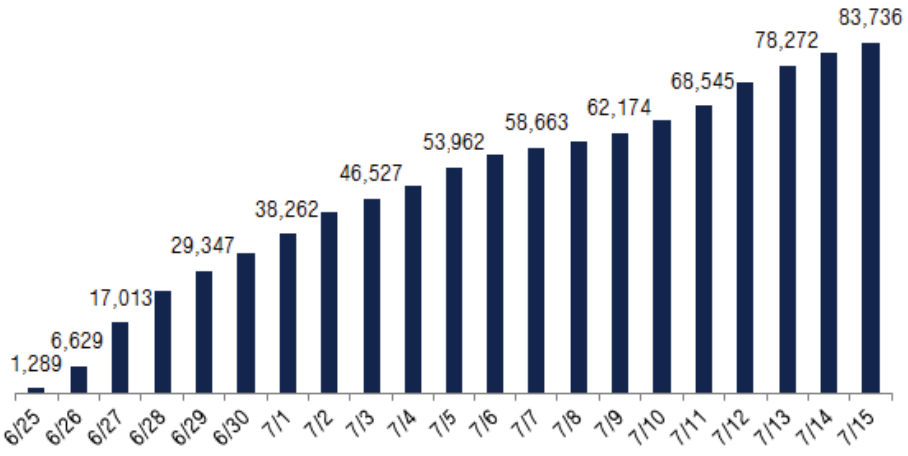
3.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 사이트 개설과 운영

(1) 정책제안 사이트 기획 및 운영

- 광역단체 최초로 도민 정책제안 사이트 ‘새로운경기위원회(www.newgg.org)’ 개설 (6/25)
- 지역별·분야별 정책을 제안하는 ‘경기광장’, 비리·부정부패를 제보하는 ‘도정 핫라인’, 온라인 임명장 수여 등으로 구성
- 네이버·다음 사이트 등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시 상단 노출 및 이용자 편의 증대
- 경기도민의 폭발적인 반응 및 참여로, 약 8.4만명이 사이트 방문, 27,500건의 정책제안 접수

〈새로운경기위원회 누적방문자 수〉



- 인수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 사진 등 일 단위 업데이트
- 주요 정책제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입장, 제안방향 등을 취합해 비서실 및 해당 분과위원회에 공유
- 7월 15일 기준, 지역별 정책 약 2.1만건, 분야별 정책 6천건 제안 및 도정핫라인 약 200건 제보 접수
- 주요 정책제안 :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이전, 경기도 종합국립대 신설, 소방관 처우개선, 연차휴가촉진제 실효성 제고, 내리막길 에코존 표지판 설치 등
- 사이트 내 이슈 강했던 안양 연현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격 방문에 따라 별도 메인배너 제작
- 청년정책 T/F팀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 게시판, 지역별·분야별 주간 Top10 게시판 등 신설

(2) 새로운경기위원회 사이트 홍보

- 사이트 개설 및 운영성과 관련 보도자료 3건 작성 및 배포

※“경기도에 직접 정책제안해볼까?”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개설(6/25)

※ 2일 만에 정책제안 1,700건 돌파 … 경기도민 참여 열기 ‘폭발적’(6/27)

※ 경기도 인수위 '새로운경기위원회'에 일주일 만에 정책제안 1만2천 건 모여 (7/2)

- 사이트 홍보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웹자보 이미지 제작
-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활발한 홍보 결과, 총 488,611명에 홍보 게시물 도달

※ 페이스북 그룹 69개, 네이버 밴드 31개, 단체 카카오톡 6개에 홍보

❍ 정책제안 접수 결과 요약 (7월 15일 기준)

- 지역별 정책제안 (총 22,463건)

수원시(6,459), 용인시(4,175), 양주시(3,569), 안양시(2,906), 고양(1,522), 화성시(1,251), 의정부시(995), 김포시(531), 남양주시(346), 경기도(159), 광주시(141), 오산시(100), 시흥시(62), 군포시(28), 부천시(28), 성남시(27), 평택시(23), 포천시(22), 구리시(20), 파주시(18), 이천시(14), 안산시(14), 하남시(8), 안성시(7), 양평군(6), 가평군(5), 연천군(5), 여주시(5), 의왕시(5), 광명시(5), 동두천시(4), 과천시(3)

- 분야별 정책제안 (총 6,843건)

교통대책(5,247), 교육·여성(842), 안전·행정(270) 노동·경제·환경(198), 문화·복지(105), 농정·건설(45), 새로운경기(31), 시민참여(28), 기획/재정(26), 청년정책(23), 4차 산업혁명(15), 평화통일특구(5), 평화안보(4), 평화경제(4)

청년정책단 활동 보고서

1. 구성

○ 단장 : 이화영

○ 부단장 : 박진수

○ 간사 : 김순이, 이동선

2. 기존 경기도정 청년정책 평가

○ 청년층과의 소통 부재

- 유명무실한 청년위원회, 청년이 알지 못 하는 정책백화점(사업 인지도 10% 미만) 등 청년과 소통하지 않은 청년정책 한계
-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주거·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청년대상 임대주택 사업의 낮은 참여율)
- 청년층 내 다양한 집단(대학생, 비대학생, 고졸, 대졸, 여성, 남성, 경제여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이 없는 인기영합형 정책으로 평가됨

○ 소수의 청년에게 몰아주기 - 청년정책의 방향성 모호

- 경기도의 현 청년정책은 일자리·주거·창업지원 등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청년정책과 유사함
- 하지만 `1억 연금 통장'사업과 같이 소수의 특정 청년에게만 '몰아주기식'의 지원은 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행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

○ 따복공동체 등 일부 복지사업 시도는 긍정적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민선7기 복지사업은 일부 계승하되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
- 청년 공간 등 청년정책 거점 없이 '신청 → 지원' 형태로 답습한 것은 개선해야

❍ 2018년 청년의 실태

○ 끝없는 실업률 증가

- 역대 최고의 스펙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음
- 청년층 감소에도 불구,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청년층(25~29세) 인구는 2000년 410만명에서 2005년 367만명, 2010년 354만명으로 감소. 그러나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7.5%, 7.7%, 7.7%로 오히려 증가추세
  - 한국개발연구원(KDI)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 인구 구조의 변화로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2018년 3월)
- 취업준비생 중 45.4%는 '우울증을 느낀 적 있고', 51%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하는 등 심리적 불안과 미래 불신 현상을 보임(한국고용정보원·청년희망재단, 2016년)

○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

- 소득감소와 주거비용 상승의 이중고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 증가
  - 청년층의 평균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부채는 급증하여 경제적 빈곤 악화
  - 2014년~2017년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은 3,407만원에서 3,279만원으로 128만원(3.8%) 감소, 같은 기간 부채는 1,481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904만원(61%) 급증함
-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72.5%는 월세 형태 거주, 청년 1인가구 중 42.4%가 주거빈곤가구(1인가구 기준 14㎡ 미만)에 속함

○ 희망을 포기한 세대

- 아무 이유 없이 쉰 인구는 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족 증가

-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생활하는 청년층 증가로 인해 부모의 노후생활 안정까지 위협하는 문제 상존
-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불신·비관으로 정착할 우려(장기적 사회불안 요소)
- 2016년 실시한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미국, 독일, 브라질 중에서,

• 청년층의 사회신뢰 지수는 15.1로 최하위(평균 36.4, 주요국 : 중국 64.6, 독일 48.2, 미국 40.5, 일본 19.5)

• 청년층의 미래기대 지수는 37.6으로 최하위권(평균 51.0, 주요국 : 중국 80.2, 인도 70.8, 미국 52.8, 일본 24.6)

○ **사회신뢰지수란?**

: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공가능성, 실패후 회복 가능성,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 부의 분배, 총 5개 지표에 대한 인식과 만족 수준을 측정한 후 5개 항목의 평균치로 산출

○ **미래 기대지수란?**

: 자국의 경제적 성장, 정치적 발전, 사회적 연대강화, 개인의 삶 향상, 총 4개 지표에 대한 인식과 만족수준을 측정한 후 4개 항목의 평균치로 산출

3. 민선7기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

❍ 민선7기 청년정책 방향성

○ 새로운 경기 청년정책 슬로건 “모두의 경기, 누구나 청년”

- 모두의 경기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기본 철학.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억울함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
- 누구나 청년 : 청년 누구나 청년이기에 시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표현

○ 원칙 1 : 청년 기본권 증진 “시민이 아닌 청년에서 청년 시민으로”

-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 및 독립생활영위 불안감으로 사회의 주변부에서 기성세대(부모 등)의 지원 하에 있는 청년 세대의 기본권 증진 관점에서 청년 정책 계획·실행

○ 원칙 2 : 다양한 요구에 맞춤 “맞춤형 청년 정책 프로토콜 실현”

- 청년층 내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을 분석해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
-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주거·일자리·문화 등 정책 시행에서 소통에 기반한 ‘맞춤형 청년 정책 프로토콜’ 실현

❍ 민선7기 청년정책 설계

○ 청년 기본권 증진 프로그램

- 보편적 복지 확대 : 청년배당은 청년의 권리의 출발
- 안정적 주거 : 청년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마련
-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는 청년 일자리 : 기술변화·시대변화에 발맞춰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청년정책

- 청년 거버넌스 강화 : 청년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대표기구의 대표성과 역할 강화, 청년 전담부서 설치
- 장기 미취업 청년(장미족) 지원 : 사회 일원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존감 회복·경제적 자립회복 지원
- 맞춤형 정책 확대
  - 기존 복지정책을 개선해 청년층 특별히 배려(비혼부모도 신혼 주거지원자 대상에 포함, 임대아파트 청년층 입주 기준 완화 등)
  - 창업·보육·재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서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청년공간의 콘텐츠 다양화 : 청년 정책상담, 문화적 욕구 충족, 창업·취업 멘토링, 스몰웨딩&인테리어, 원데이클래스 등 청년이 생산하고 상호 간 협업할 수 있는 콘텐츠

4. 주요활동내용

(1) 전문가 의견청취 간담회

주제	서울시 청년전담기구 담당자 회의
일시	2018. 6. 27.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청 스카이카페
참석자	양호경(서울특별시 비서실 정책비서관), 최창민(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팀장), 이동선(기획실), 김순이(기획실), 박성훈(기획실), 김병준(무중력지대 양천 팀장), 이상민(양천상상마당 사무국장)
주요 논의 사항	○ **청년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조언 청취**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제도 취지 및 조직 기구의 장단점 의견 청취 ○ **무중력지대 활동 내용 청취** - 서울특별시 청년 활동 지원조직인 각 지역별 무중력지대의 활동 내용 및 차이점 의견 청취

(2) 1차 전문위원 간담회

주제	경기도 민선7기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일시	2018. 7. 5. 17시
장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은평구 소재)
참석자	신익태(올댓캠퍼스 대표), 이의헌(사단법인 JUMP 이사장),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박진수(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병준(무중력지대 양천팀장), 이상민(양천상상마당 사무국장), 기현주(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김순이(기획실), 이동선(기획실), 장장원(시민참여위원회), 오지혜(시민참여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 **청년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서울시처럼 단체장의 고도의 관심과 즉각적 사업실행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도입시 중요하며, 청년전담부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인 주택, 일자리 등의 사업을 위한 경기도 내 '청년정책TFT'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서간 협업을 위해 무엇보다 사람의 문제이므로 청년전담부서를 담당한 인력의 전문성과 추진력 등 마인드가 가장 중요할 것임 ○ **청년정책제안 등을 위한 청년위원회 및 가버넌스 조직 운영 관련**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청년활동가(서울시 등의 경우 지역 청년 네트워크 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경기도 청년들의 요구와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한 사업운영이 필요해 보임 ○ **청년정책의 방향** 청년층을 세분화해 대학생, 비 대학생, 20대, 30대, 고졸, 대졸, 여성, 남성 등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예) - 활발한 활동이 중심이 되는 20대 청년활동지원 정책 - 불안정 노동을 오랫동안 하는 장기적 NEET상태의 청년

(3) 2차 전문위원 간담회

주제	경기도 민선7기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일시	2018. 7. 12. 17시
장소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신익태(올댓캠퍼스 대표), 이의헌(사단법인 JUMP 이사장),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박진수(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순이(기획실), 이동선(기획실), 장장원(시민참여위원회), 오지혜(시민참여위원회), 조화영(교육문화분과), 권순형(농정건설분과), 윤소정(기획실)
주요 논의 사항	○ **청년정책의 방향성**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원이어야 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로 변화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청년도 발굴·지원 ○ **민전7기 청년정책제안**

	- 청년이 스스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모델 시험 - 청년이 정책제안자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시 무중력지대와 같은 활동공간 마련 - 비활동적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안내 서비스 공간 필요 ○ **청년정책 브랜딩화** - 민선7기 청년정책 브랜딩 - 민선7기 청년정책 리네이밍

5. 청년전담 행정기구 개편 제안[1)]

❍ 청년전담조직 신설 필요

○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효과, 조정, 축소, 확대 등을 판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맡기기보다 청년지원과가 직접 청년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함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실·국별로 각각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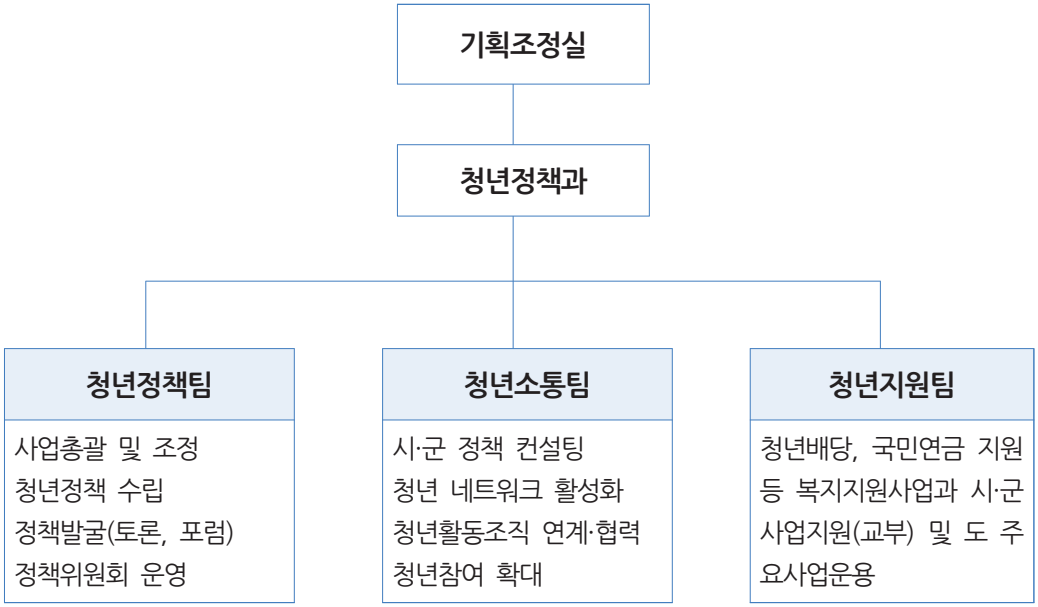
- 10개 이상 부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 사업을 확대 및 보완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함
- 청년정책과는 부서별 청년 관련 사업을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총괄팀, 시·군 및 청년활동조직과 소통 및 협업하는 소통팀,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달하는 지원팀으로 구성함
- 단, 주택사업과 일자리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담부서 배치를 하되 TFT 구성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반영할 필요 있음

○ 일반 사업부서와 달리 청년정책과는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입을 전후한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 됨

1) 청년전담 행정기구 개편 제안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진행중인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의 일부 내용을 협의 후 제출받은 내용임

청년정책전담조직의 구성안

〈표 5-20〉 (가칭)청년정책과 구성안



6. 청년정책 공약

❍ 민선7기 경기도 청년공약

총 38개 개별사업 중 22개 신규사업, 1개 신규 및 계속사업, 15개 계속사업이 청년사업으로 분류되어 검토되었으며, 청년 정책 전문 담당관을 신설해 청년 정책 주무를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청년배당,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청년면접수당 등 직접적이고 차별없는 광범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두드러짐

그리고 청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대학생, 신혼부부, 출산 가구, 산업인력 등 다양한 분야별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음

또한 스타트업, 게임, 영화, 연극, 만화 등 다양한 산업과 문화 영역의 창작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 공간 제공, 창작물 제작 지원 등 세부적인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음

<민선7기 경기도 청년정책 공약 목록>

순서	공약명		담당실국	구분
Ⅰ-7-26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기획조정실	**신규**
Ⅰ-7-26	청년정책 위원회 강화		여성가족국	계속
Ⅰ-7-24-①	청년배당 실시		보건복지국	**신규**
Ⅰ-7-24-②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보건복지국	**신규**
Ⅰ-7-24-③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확대		교육협력국	**신규+계속**
Ⅰ-7-25-②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교육협력국	**신규**
Ⅰ-7-24-④	청년주거복지 확대	기존주택 대학생기숙사	도시주택실	**신규**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신규**
		청년 매입임대(역세권)		**신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Ⅰ-7-24-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보건복지국	**신규**

순서	공약명	담당실국	구분
Ⅰ-7-25-①	취업대비 청년준비 공간 운영	경제실	**신규**
Ⅰ-7-25-③	청년면접수당 지원	경제실	**신규**
Ⅱ-4-51-①	경기도 출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보건복지국	**신규**
Ⅱ-4-51-②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건복지국	계속
Ⅲ-3-80-①②③	스타트업 공간 조성 시범사업 시행	경제실	계속
Ⅲ-4-81-①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경제실(과학기술)	계속
		경제실(기업지원)	
Ⅲ-4-82-②	스타트업·기술창업·재창업 지원 확대	경제실	계속
Ⅲ-5-85-①	경기도 대학의 창업-취업 네트워크 역할 강화	경제실(과학기술)	계속
		경제실(기업지원)	계속
Ⅲ-7-89-①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Ⅲ-7-90-②	파주시·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제작 콘텐츠 융합(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문화체육관광국	계속
Ⅲ-7-90-③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문화체육관광국	계속
Ⅲ-10-100-③	귀농귀촌 지원강화	농정해양국	계속
Ⅲ-10-101-②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농업기술원	**신규**
Ⅳ-5-121-①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도시주택실	계속
Ⅳ-5-121-②	신생아 출산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도시주택실	**신규**
Ⅳ-5-121-③	산업단지 내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	도시주택실	계속
Ⅳ-8-135-④	청년예술가 등 전문인력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8-161-①②③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8-162-①	경기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8-163-①	공연장과 상영관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8-164-①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8-164-②	창작자와 주민의 창작활동 및 발표와 소통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Ⅴ-10-172-①	독립영화 제작 지원분야 지원금 확대	문화체육관광국	계속
Ⅴ-10-172-②	완성작 상영 공간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계속
Ⅴ-10-172-③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7. 새로운 청년정책을 위한 제안

1. 청년 활동공간 확산

[1] 개요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 기본현황

- 전국 청년의 약 1/4 가량인 330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나, 창업지원·문화공간 외에 청년 활동을 위한 지원 시설은 상대적 부족
- 경기도 관내 시·군 별로 다양한 청년 공간을 조성하여 추진 중

〈道 관내 청년 종합활동공간 현황〉

관할	명칭	개요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청바지)	• 취업지원, 교육지원, 활동지원 등 종합 프로그램 운영 • 상담실, 공유카페, 스터디실, 세미나실, 입주오피스 등 종합적 활동공간지원
안양시	에이큐브 범계큐브	• 청년 창업지원 및 활동, 휴식공간 제공 (24시간 개방 • 창업지원 공간, 네트워크 공간, 청년 개방공간 운영
시흥시	경기청년협업마을	• 청년 역량강화, 창업지원, 창작공간 등 제공 • 청년아카데미, 창업지원공간, 시민공유공간 제공

❍ 필요성

- 청년과 경기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필요
- 서울특별시「무중력지대」, 광주광역시「청년공간 the숲」등 전국적으로 청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산

❑ 정책 목표

❍ 경기도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군별 청년 특성에 맞는 종합지원 공간 발굴·보급

-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건강상담, 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통해 청년 삶의 활력을 종합적으로 제고

[2] 기대효과

○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종합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산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

○ 단순 공간 제공을 벗어나,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道-청년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신뢰 회복

[3] 사업 추진 내용

○ 경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모이는 공간에 청년 활동 종합지원 공간 구성(권역별 구성 → 시·군별 수요에 따라 확산)

- (道) 관계기관 협의, 권역별 수요발굴 및 인프라 구축, 청년활동 종합지원 프로그램(안) 마련 및 보급, 시·군 컨설팅 지원 등
- (시·군) 인건비 확보 및 공간 관리, 시·군 청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통제 최소화 운영 등

〈 청년활동 종합지원공간 기능 구성(안) 〉

구분		주요내용
정보	정책안내·연계	• 청년고용지원정책 안내요원(노동부) 배치, 정책DB 종합안내
상담	재무(부채)	• 학자금 등 채무, 재무관리 상담
	취업	• 道가 양성한 전문 취업 상담사를 시·군 센터에 직접 배치
	치유	• 청년 건강 종합상담
직업교육		• 지역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기관 운영 • 공공기관, 기업, 청년 창업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장을 발굴하고 일자리 체험 기회 마련
역량강화	공연 및 전시	• 청년 커뮤니티, 문화, 예술활동 공간 지원(갤러리)
	강연	• 청년이 선정한 직업인, 사업활동가 중심 강연 • 지역 전문가, CEO, 청년의 재능기부 강연 및 커리어 특강 등

[4] 평가 및 제언

○ 청년 시설의 운영 성패는 입지의 적절성에 있으므로 반드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교통이 가까운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시설별 운영 형태로는 외부기관 위탁보다는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간 운영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경우 전문성의 부족, 시·군 간 관할과 대상의 차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道 고용 관리인력(청년활동가 등)을 센터별 1인 배치하여 공공성을 보완하도록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영 모델일 것임

○ 경기청년은 단순한 공간 제공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구직, 소외 청년 중심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주안을 둘 필요

2. 청년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운영

[1] 개요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 기본현황

- 전국 청년의 약 1/4 가량인 330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지만, 청년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맞춘 정책이 부족한 상황
- 현재 민선7기 청년 정책공약은 보편적 복지와 공간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좀 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마련이 요구됨

❍ 필요성

-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경기도 관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제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필요
- 민선7기 청년공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정책수행에 반영하며, 새로운 정책제안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정책 목표

○ 경기도 청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사회 참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 청년배당, 생애최초 국민연금, 군인 상해보험, 창업 공간, 문화창작 공간 마련 등 청년 정책의 수요자적 입장을 반영

[2] 기대효과

○ 청년 정책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즉각적인 정책 수정과 입안 등을 위한 상시 소통의 장 구현

○ 단순한 의견청취를 벗어나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

[3] 사업 추진내용

❍ 경기청년정책제안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청사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방향

- 청년정책 의견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SNS 등에 최적화된 실시간 설문조사 실시
- 청년배당, 생애최초 국민연금, 군인상해보험 등 청년 복지 수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
- 새로운 청년정책의 제안
- 청년들의 의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조화된 플랫폼 제작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년간 평가 및 보완 수행

〈 경기청년정책제안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청사진' 〉

구분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연구용역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용역
온라인 플랫폼 제작	• 온라인 플랫폼 제작, 구축
온라인 플랫폼 '청사진' 운영 및 수시 보완	• 온라인 플랫폼 '청사진'(가칭) 운영 및 수시 운영 보완

[4] 평가 및 제언

○ 경기도 청년 정책제안에 함께할 경기청년들을 대규모로 모집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필요

○ 최초 운영시에는 청년 모니터링단을 사전에 구성해 프로그램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

3.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갭이어(gap year) 프로젝트 계획(안)

목표 :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지역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활성화와 교육복지 향상,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해 '모두의 경기, 누구나 청년'의 슬로건에 적합한 사업 제시

갭이어 프로젝트는?

○ 갭이어란 학업이나 직장을 잠시 중단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갭이어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와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의 대학생·청년들이 익숙한 도시를 떠나, 1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머물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과 마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메리트를 발견하고 지역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촌 교류·활동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 갭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로 떠난 대학생·청년들이 1년간의 활동 이후 농어촌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하여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생·청년들의 농어촌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모두가 갭이어 프로젝트 (가칭)

○ **주최기관**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50% 예산 매칭)

○ **주관기관** : 역량있는 복수의 청년단체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시범사업)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사업규모** : 기초자치단체별로 50명 내외(시범사업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조절)
○ **사업내용** :

- 경기도 도시지역에 거주중인 대학생·청년(필요시 50+ 장년 포함)이 1년간 경기도내 읍면리 단위 지역으로 파견되어 마을 활동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공공일자리 성격의 업무 수행
- 검증된 청년 소셜 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대학생·청년들이 지역을 새롭게 이해하고 전문성과 안정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참여 대학생·청년에게 다양한 진로 및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생·청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 자치단체와 1:1 예산 매칭으로 예산 절감
- 기존 공공근로, 농촌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대학생·청년에게 월 150-200만원 내외의 월급 제공

2. 기대효과

○ 청년이 떠나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청년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해 마을의 활성화 및 건강한 다음 세대 육성으로 공동화 현상 해소
○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보편적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경기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
○ 마을의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장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극단적 대립관계 해소
○ 경기도 대학생·청년은 장기간의 '교육봉사'와 '지역 연계형 활동' 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

3. 사업계획

❍ 선발 단계

신청 (온라인) → 서류심사 (2배수) → 심층면접 → 결과발표 → 캠프 협약식/발대식/ OT/사전교육

1) 신청

-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입력사항 : 기본인적사항·학력사항·재학구분·특기
  학습봉사 활동경험·지원동기·경험·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2) 서류검토

- 선발 내용 : 적격 여부 확인 후 자기소개서 검토
- 선발 인원 : 최종 합격 인원의 2배수

3) 심층 면접

- 심사위원 : 활동지역 마을주민 대표, 주관기관 관계자, 기초단체 관계자
- 교육봉사 및 활동경험·수행능력·기본소양·가치관

❍ 프로그램 관리

- 활동시간 및 기간 : ① 주 5일, 하루 6시간(3h 마을활동, 3h 교육활동)
  ② 주 3일, 하루 6시간(3h 마을활동, 3h 교육활동)
- 활동 모니터링 : 월 1회 간담회, 주 1회 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
-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 활동 대학생·청년에게 시기별로 4개월 간 총 2회 교육 및 훈련 제공

구분	시기	목표	주요내용
사전교육 (직무교육)	활동 초기	• 활동 이해도 증진 • 자부심 및 책임감 제고 • 대학생·청년간 유대감 형성 • 올바른 관계형성 방법 숙지 • 지원 분야 전문성 향상	• 프로그램/교육봉사에 대한 이해 • Team Building • 효과적인 교수법 및 관계형성법 • Design Thinking
중간교육 (보수교육)	활동 중 1회	• 현장의 수요에 따른 전문 능력 향상	•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스킬 업

❍ 대학생·청년 사회인 진로 멘토링 지원

- 멘토 선발 : 경기도 각지역에서 3040 사회인 멘토 선발
- 멘토링 : 만남의 형태에 따라 단체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일대일 멘토링으로 구분

구분	내용
특징	•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3040 사회인으로 구성
멘토링 목표	•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시야 확대 및 진로 선택의 다양성 제고 • 청년들의 능동적인 자기계발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
선발 기준	• 사회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 온라인(이메일,문자 등)과 오프라인(면담)을 통해 청년들과 관계유지 가능한가? • 대학생·청년 해당 업종 및 직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구분	내용	계획/회차(연)
일대일 멘토링	• 대학생·청년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 사회적인 목표를 비롯해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심층 멘토링 / 귀농희망자는 지역 주민 전문가 매칭	연 2회 매칭
소그룹 멘토링	•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사회인 멘토와 5-6명의 대학생·청년 그룹과 함께 진행하는 멘토링	20회
단체 멘토링	•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TED 식으로 진행하는 대형 강의. 모든 경기도민을 초대하는 열린 행사	10회

4. 사업의 특징

○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예산 절감 및 시너지 창출** :

- 기존 예산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 재정 부담이 없음
- 민관학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복지/인재육성/장학사업 운영가능
- 대학생 교육 봉사자와 지역교육기관을 통합 관리하여
- 파트너 기관의 업무 최소화
- 교육 현장·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

4. 공약명에 대한 리네이밍

미래상	공약명		공약 리네이밍 제안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새로운 시작의 중심지 경기도	청년배당 실시	➡	나에게도 청년배당
	청년면접수당 지원		나를 위한 청년면접수당
	스타트업 공간 조성 시범사업 시행		스타트업 공간에서 내 사업의 도약을!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플랫폼에서 기술창업해요!
	스타트업·기술창업·재창업 지원 확대		뭐든 된다! 스타트업·기술창업·재창업
	경기도 대학의 창업-취업 네트워크 역할 강화		경기도 대학의 창업-취업 네트워크에서 나의 일자리 찾기
	신생아 출산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생아 낳은 부모 위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
	청년예술가 등 전문인력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 경기도
	독립영화 제작 지원분야 지원금 확대		경기도가 도와주는 독립영화 제작 참여하기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해보기
따뜻한 돌봄사회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	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확대		
	청년주거복지 확대		누려보자 청년주거 복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받고 군에 입대
	경기도 출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 지원 받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어디든 나의 공공산후조리원
	귀농귀촌 지원강화		내가 살고 싶은 농촌, 산촌 만들기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산업단지 내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		**산업단지 내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
	경기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창작자와 주민의 창작활동 및 발표와 소통 지원		**창작활동 도와주면 당신도 예술인!**
미래상	**공약명**		**공약 리네이밍 제안**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도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취업대비 청년준비 공간 운영		**청년준비 공간에서 취업대비를**
	청년 정책위원회 강화	➡	**내가 만드는 경기도, 청년 정책위원회**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참여해보자,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프로젝트**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혁신적 놀이 창조도시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게임 기업이라면 성남시!**
	파주시·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제작 콘텐츠 융합(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방송영에 관심 있다면 파주시와 고양시!**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	**만화·웹툰은 부천시!**
	공연장과 상영관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어디서든 예술 활동! 공연장과 상영관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받자**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한 창작공간 만들기**
	완성작 상영 공간 지원		**완성작 상영 공간 만들기**

5. 청년정책에 대한 브랜딩

타 시도와 구분되는 경기도 청년정책을 위해 경기도만의 청년정책 브랜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단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 브랜드를 제안함

경기도 만의 차별적인 느낌, 아이덴티티, 브랜딩은 어떻게 만들까?
자주 불러우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청년들과 정책 운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되는
경기 청년 정책의 브랜딩이 필요

새로운 경기 정책 브랜딩의 몇가지 전제 조건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20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블루진

청년은 어떤 의미?

青年

|푸를청|

청년 정책은 청년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

단순한 시혜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도와주어
삶의 '청사진'을 그려 보도록 하는 것

경기도 청년 정책 Branding

B.L.U.E. PRINT

경기도 청년 정책 4대 원칙

B.L.U.E.

B_arrier Free
청년이 실제 불편한 것부터 파악

L_ong term Perspective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며,

U_niversal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E_verlasting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슬로건 대안_A

그대, 경기 청년이기에
그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기청년이라 좋다!

청년의 10년 뒤를 생각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바라봅니다

슬로건 대안_B

모두의 경기,
누구나 청년

당연한 복지 공평한 누림

청년의 눈높이 청년의 씀씀이

청년이 중심, 경기가 중심

青年の主張
Shout it Out

재정건전화 TFT 활동 보고서

1. 재정건전화 TFT 구성 개요

❍ 운영 목표

- 낭비성 예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도 예산의 건전성확보
- 민선7기 공약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방안 수립

❍ 재정건전화 TFT 운영 기간

- 1단계 : 7월 2일 (월) ~ 7월 30일 (월)
- 2단계 : 8월 1일 (수) ~ 8월 30일 (일)

※ 1단계 1차 보고서 : 경기도 세출구조조정계획서

※ 2단계 2차 보고서 : 경기도 세입세출 중장기 기획서

❍ TFT 구성

- 단장 : 윤후덕
- 부단장 : 박완기

2. 재정건전화 TFT 운영계획

❍ 추진 계획

- 경기도 재정사업을 분석해 유지, 부분 삭감, 전액 삭감, 사업 연기 등으로 구분해 세부 사업별 지출구조 조정 방안을 도출
- 일몰, 집행부진, 재정사업 평가, 의회 및 시민단체, 정당 지적사항, 경기도,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지출 구조조정 요인
- 비효율적 사업 예산 삭감

❍ 추진 일정

- 7.3.(화) ~ 7.18.(일) : 자료 입수 및 분석
- 7.19.(월) ~ 7.24.(화) : 1차 부서 조정회의

- 7.25.(수) ~ 7.26.(목) : 추가 조정회의
- 7.27.(금) ~ 7.31.(화) : 1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이후 2019년 예산 편성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2차 작업 진행

3. 추진 방안

❍ 자료 수집

- 집행부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집행현황 및 집행계획(하반기 예상 집행) 검토

❍ 문제사업 분석 및 분류 1) 부분 삭감, 2) 전액 삭감, 3) 일몰, 4) 연기

- · 집행 부진 사업(연례적, 당기)
- · 이월사업 분석
- · 연정 사업 분석
- · 국비보조사업 적정성 분석
- · 지방보조금 사업 분석
- · 의회 및 시민단체, 정당, 감사 지적사항 분석
- · 서울시 등 유사 지자체 비교 필요한 사업 분석
- · 특별회계 및 기금 분석

❍ 부서 의견 청취 및 삭감

- 부서 자율 삭감 사업 목록 제출
- TFT가 제기한 관심 사업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및 논의

❍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목록 작성

4. 활동 경과

❍ 제1차 회의(6.29)

- 윤후덕 기획재정분과 위원장 주재로 재정건전화 TFT 발족 회의를 갖고 활동 방향 및 내용 논의

❍ 제2차 회의(7.4)

- TFT 구성 : TFT 총괄 책임을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기획단장이 맡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곽윤석 기획실장이 상의해 인수위 전문위원과 재정분석 전문가로 구분해 구성
- 운영 방침 : 매주 월, 수, 금 정기회의
- 도청과의 협력 : 예산담당관실 2명(6급) 파견
- 분야별 추진 계획 : 이월사업, 집행부진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의회 지적사항 분석

❍ 제3차 회의(7.6)

- 연정 사업별 분석 및 평가 : 김영환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 오완석 노동경제환경분과 부위원장
- 연정 사업 중 집행 부진, 특정 지역 편중, 쪽지 예산 등 문제 사업을 분석해 일몰, 축소 판단 (박완기, 정창수, 이왕재, 정창욱)
- 연정 사업 세부 사업내역 수령

❍ 제4차 회의(7.9)

- 예산담당관실 2016년, 2017년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받아서 반영
- 경기도 의회 2018년 예산분석보고서 17개 핵심사업, 156개 관심사업 집중분석
- 이월사업(도로국, 철도국)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

❍ 중간보고

- TFT 활동 상황 이화영 기획운영위원장(7.10), 이한주 인수위 공동위원장(7.11) 중간 보고

❍ 제5차회의(7.11)

- 2018년 하반기 1억원 이상 건설 사업, 행사성 사업 추진 계획 파악

❍ 제6차회의(7.12)

- 연정 사업 사업별 검토를 통해 일몰, 감액, 유지, 사업 조정 등 기준 수립 및 의견 제시

❍ 제7차회의(7.14)

- 특별회계 및 기금분석을 통해 재정의 칸막이를 막고 효율적 재정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 제8차회의(7.16)

- 연정 사업은 올해 일몰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을 재분류
-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임진강댐주변정리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정비 및 일반회계 환입 검토
- 특별회계 및 기금 적립금 적극적 지출고려 확대 방안 마련

5. 분야별 검토 내용

❍ 연정 사업별 의미 및 평가

- 2018년 연정 사업 예산은 288개사업 1조 6662억원, 규모임
- 2018년 연정 사업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19년 예산은 연정 종결로 원점에서 재검토.
- 연정 사업 중 집행 부진, 특정 지역편중, 쪽지 예산 등 문제 사업 분석해 일몰, 축소 판단

❍ 이월 과다 사업 구조조정 : 2017년 이월사업 498건, 1조 972억원

-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서 면담을 통해 이월 최소화 방안 마련

① **(2017년 이월사업)** 2017년말 예산 이월사업 총 1조 1천억원 중 도시철도, 도로, 소방 3개 분야의 이월액 규모 8천억원

② **(2018년 이월사업 추산)** 2018년 예산 현액 중 2018년 집행 추계액을 차감한 2018년 말 이월 사업 추산액의 경우 사업부서가 조속한 집행을 의도하는 상황

③ **(도시철도)**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선 사업노선별로 분석하여 각 사업노선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실제 집행 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월 금액 축소 및 절감 금액 산출

④ **(도로)** 국지도와 지방도로 나누어 분석. 토지수용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 금액 산출

⑤ **(소방)** 훈련시설, 북부합동청사, 소방서(센터포함), 자산 및 물품 취득 예산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파악

❍ 기술적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대상사업 선정

○ **집행 잔액 과다 사업**

○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① 연례적 집행 미진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집행이 미진하여 불용액 과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사업에 편성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의 기회비용 소진

② 17년 예산 현액 28.4조원 중, 지출액은 23.1조원 미지출액은 5.3조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미지출액은 19%에 달함

- 특히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0.5조원 중, 지출액은 19.2조원 미지출액은 1.3조원임. 지출액이 부진한 일반회계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 가능
- 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미집행률이 10%를 초과하는 단위 사업은 총 94개[2] 존재함. 94개 단위 사업의 예산 현액은 1.9조원이며 미지출액은 7499억원, 미집행률은 40%임. 94개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삭감할 수 있는 미지출액 규모 파악

2) 도로, 철도, 소방관련 사업은 이월액 과다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제외함

❍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 불필요한 칸막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특별 회계 및 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 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방안 제시함

△ 17년 예산 세출 기준

- 일반회계 19.2조원
- 공기업 특별회계 0.2조원
- 기타 특별회계 2.2조원

△ 18년 기금 세출 기준

- 17년도 조성액 4.6조원 (16년도 조성액 2.5조원)
- 사용액 1.6조원

※ 지역개발기금

- 17년도 조성액 3.3조원(16년도 조성액 1.3조원)
- 사용액 0.85조원

△ 정비가능 특별회계 및 기금

- 지역개발기금 : 적립금 활용 및 감면 정비
- 판교 특별회계 : 비효율적 운영체제 정비 방안 제시
- 임진강댐주변정리 특별회계 : 특별회계 종료 및 환입
- 공유재산관리 기타 특별회계 : 특별회계 종료 및 환입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천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만 편성. 지출확대 가능금액 제시
- 재난관리기금 : 순세계잉여금 4469억원 존재, 법개정 또는 조례개정으로 지출확대 또는 일반회계 편입가능 방안 마련

❍ 주요투자사업, 의회지적 사업 등 삭감대상 사업 분석

① (**유사·중복**) 부서별 유사·중복되어 통합하여 예산 절감 가능

② (**효과성**)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평가 및 검증 필요

③ (**행사·축제성**) 정체성, 효과성 낮은 행사성 축제 실효성 검증

④ (**시설·건설비**) 과다 시설비 책정, 대규모 공사 등 검토

⑤ (**이전**) 도비 100% 자체사업을 국비/시·군/민간을 이전 노력

⑥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향상 필요

⑦ (**사업조정**) 전시성 예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재조정

⑧ (**집행부진**) 3년이상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일몰 또는 조정

❍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국비 지원 조정

① (현황) 경기도 전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1360개이며, 이중 10억 이상 사업은 498개임

부처	총사업수	10억이상	부처	총사업수	10억이상
기재부	16	1	고용노동부	14	7
교육부	2		여성가족부	115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국토교통부	113	79
외교부	4		해양수산부	42	10

통일부	3	1	중소벤처기업부	2	2
법무부	14		식품의약품안전처	23	1
행전안전부	56	20	공정거래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부	101	44	소방청	2	1
농림축산식품부	147	65	문화재청	21	7
산업통상자원부	27	9	농촌진흥청	76	6
보건복지부	351	152	산림청	106	25
환경부	118	38	**총계**	**1360**	**498**

② (국고보조사업 재원규모) 총 1380개 사업 중 1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집행률 하위 30% 이하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

③ (국고보조금 효과성)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검토

6. 향후 추진 계획

❍ 1단계 (~ 7.31.)

- 부서별 의견 청취(~7/24)
- 사업별 세출조정방안 제안(7.31)

❍ 2단계 (~ 9.30.)

① 경기도 2019년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구조조정 방안 적용

- Top-Down 예산 편성 강화로 공약 사업 효과적 추진
- 사업부서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을 제시
- 예산 편성 사업 심사시 1단계 지적 사업 예산 구조조정 여부 점검

②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방안 제시

- 전체 특별회계 및 기금 존치평가 :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안정적 재정 운용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의 칸막이를 형성하는 단점도 있음
- 전체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평가, 분석하여 구체적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

③ 효율적 재정 및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구조 및 조직 개편 방향 제시

-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 중복과 불필요한 하청 구조가 업무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서가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서-산하기관의 하청 업무 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

④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화 방안 제안

- 재정사업평가 내실화
- 사업 일몰제 운영
- 예산정보 및 집행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 유사 중복사업 점검 프로세스 구축

- 분야별 중장기 예산구조 조정 방향 제시 : 농업, 일자리-경제, 복지, 문화
- 성과지표 현실화 등 사업 성과 평가 강화로 성과중심의 결산 체제 구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 세부 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 제출

추경예산 TFT 활동 보고서

1. 기획재정분과 추경예산팀 구성 및 업무분장

❍ 추경예산팀 : 팀장 공영목

❍ 확대운영

- 추경예산 감액 및 증액(안) 검토 : 예산팀 + 김영환(부위원장)
- 추경반영 우선사업 검토 : 예산팀 + 박완기(단장) +김영환(부위원장) + 손낙구(간사) + 김락중(총괄간사)

2. 예산팀 활동 목표

❍ 2018년 추경반영 우선사업 및 소요예산 확정

- 분과·특위별 우선 추진 사업 선별 및 소요예산 추계 (기재분과 자체 검토를 통한 우선사업 선별 동시 진행)
- 기획재정분과 전체회의를 통하여 추경반영 사업 정리
- 인수위원회 회의 → 당선자 보고를 통하여 최종 확정

❍ 2018년 추경예산 과정(道) 조정

- 전체규모 재검토 : 세입예산 보수적 전망에 대한 검토 (기획재정분과 → 道 자치행정국(세정과))
- 공약이행가능재원 재검토 : 일반회계, 특별조정교부금,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 등(기획재정분과 → 道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
- 추경(안) 증액 및 감액 사업 재검토

3. 2018년 추경반영 우선사업 선별 관련 추진경과

○ 6.21(목) : 기재분과 회의에서 2018년 하반기 도정사업에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 예산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추경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재정현안 업무보고를 추진하기로 함

○ 6.22(금) : 추경 등 재정현안 업무보고 (도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세정과)

○ 6.25(월) : 3차 분과회의

- 쌍방향(기재분과 자체, 각 분과·특위) 추경 리스트 작성 후 검토 추진 결정
- 분과 특위 추경사업 제출 양식 검토

○ 6.25(화) : 분과·특위에 추경사업 및 중단 감액 사업 제출 양식 공고

○ 6.28(목) : 기재분과 전체회의

- 김경수위원 자체검토 추경대상 우선사업(30개) 검토
- 검토대상 60개로 확대 검토하기로 결정

○ 6.29(금) : 추경규모 관련 공동인수위원장 업무보고

○ 7.1(금) : 추경규모 관련 인수위원장 업무보고

○ 7.1(일) : 추경관련 확대 회의(참석자 : 손낙구, 김락중, 윤주영, 김경수)

- 추경 검토대상 사업(60개) 검토 → 경기도에 이행 계획 초안 요청키로(7.2 요청, 7.3 제출) 결정
- 분과 특위 제출 사업(12개) 검토

○ 7.4.(수) : 추경관련 확대 회의(참석자 : 박완기, 김영환, 손낙구, 강상재, 김락중, 김경수, 공영목)

- 추경 검토대상 사업(60개) 이행 계획 검토
- 분과·특위 제출 사업 검토 → 도 집행부에 이행 계획 초안 요청
- 경제분야 등 자체검토대상 사업 추가 제출 방안 검토(강상재)

○ 7.5.(목) : 분과·특위 제출 중단 축소 사업 제안 취합 내역(1개 분과, 1개 특위 제출 10개 사업) 재정건전화 TFT로 이관

○ 7.9.(월) : 추경 관련 확대 회의(참석자 : 박완기, 김영환, 손낙구, 강상재, 김락중, 김경수, 공영목)

- 기재분과 자체 추경 검토대상 사업 이행 계획 검토 →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 22개 사업 리스트 작성 도에 전달키로
- 분과·특위 제출 사업 검토 → 제출된 47개 사업 리스트를 기재분과에서 별도 판단하지 않고 도에 전달키로

○ 710.(화) : '2018년 1회 추경예산 인수위 검토 의견' 인수위 위원장 보고 후 도에 전달

4. 20018년 경기도 재정현황 분석

❍ 재정 현황 (2018년 본예산 기준)

- 예산규모 : 총 26조 8,046억원 (최근 5년 재정규모 연평균 12.2% 증)
- 일반회계 19조 1,348억원, 특별회계 2조 8,417억원, 기금회계 4조 8,281억원
- 세입예산 : 인구유입,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안정적 성장 유지
  (최근 4년간 지방세 연평균 13.1% 증가, 道세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 크게 증가)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고
세출예산 총계	191,348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등)	3,668	고정비 성격
재무활동(전출금 등)	13,255	준고정비 성격
정책사업	152,374	경상사업비, 법적의무경비, 용도지정사업 등
자체사업	**22,051**	

❍ 道 보고 2018년 추경 계획(2018년 재정현안 보고 기준, `18.06.22)

- 道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안) : 20조 5,311억원(당초 19조 1,348억원 대비 1조 3,963억원↑)

(단위 : 억원)

세입	13,963	세출	13,963
순세계잉여금	5,524	행정운영경비, 경상사업	134
지방세 추가세입	6,148	재무활동	2,067
세외수입	560	법적의무경비	6,8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	국고보조사업	1,940
지방교부세	363	자체사업	2,307
보조금	1,254	자체사업(감액)※	△1,404
		공약 이행 가능 재원(안)	**2,105**

※ 실내체육관은 자체사업(감액) 의견으로 제출됨

※ 도 추경예산 편성 일정

예산요구	⇨	예산심의	⇨	도지사 보고	⇨	의회심의
6.18~6.19		6.20~7.31		8.1~8.10 (8.17 도의회 제출)		8.28~9.12

5. 추경에 대한 인수위 검토 의견

(1) 추경반영 사업 우선 순위 설정

○ 민생공약 및 실현 가능 공약 우선 반영

○ 체감도 높은 구체적 공약 우선 반영

○ 성남형 성공 사업 경기도 확대(이재명표 실사구시)

(2) 추경은 신중하게, 2019년 본예산에 주요공약 실현

○ 안정적 재정운영 기조 하에 주요 공약 실현 방안 체계적 접근

○ 지방세 추가세입 반영 없이 집행부 예산 규모 수용
(2019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증가)

○ 재정건전화 TFT 활동을 통한 2019년 예산 세출구조 조정

○ 2018년 집행 불가능하거나 정책 효과 낮은 사업은 추경 미반영

(3) 道 추경(안) 감액 사업 중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 감액(안) : 총 1,190억원 (도 35%)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체육관 보유 학교와 형평성 확보로 교육균등 기회 마련
미세먼지 등으로 상시적 야외활동 금지에 대한 체육활동 보장 강화
비와 눈 등으로 졸업식 등 학교의 대규모 행사에 대한 자체공간 마련

■ 사 업 비 : 3,400억원 (**도 1,190 <35%>**, 시군 510 <15%>, 교육청 1,700 <50%>)

■ 사 업 량 : 초·중·고, 특수학교 136개소(개소당 25억원)

○ 감액(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

- 도 집행부 : 감액의견 → 감액 시, 도의회 민주당과 갈등 우려
- 도의회 및 교육청 : 기존 본예산 편성 기조 유지
  → 기존 본예산 편성 시, 추경 공약이행 가능 재원 감소

○ 체육관 미보유교 현황 (2017.10월 기준)

(단위:교)

구 분		초	중	고	특수	소 계	비고
전체 학교수		1,240	627	472	33	2,372	
체육관	보유교	760	456	417	19	1,652	69.6%
	미보유교	**480**	**171**	**55**	**14**	**720**	**30.4%**

※ 미보유교 : 720교

※ 1차 대상교 : 379교 (=720-341)

※ 341교는 "부지협소, 건폐율 초과, 일조권 침해, 인근 주민 민원예상 등"으로 추후 검토

※ 금회대상교 : 136교 내외 (=3,400억원÷25억원/교)

※ 道 부동의 사업 등 처리방침('18.1.23)

도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실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수립, 심의요청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집행 등 처리방향 결정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의뢰	⇨	①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① 최종 방침 결재 및 예산배정 요청	⇨	①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
(실국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실국)**		**(예산담당관, 실국)**

○ **인수위 검토 의견**

- 2018년 본예산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2017년 민주당 요구사업으로 남경필 지사의 부동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으로 부동의 철회
- 도 집행부는 부동의 해소에 장기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으로 예산담당관실의 투융자 심의만 거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이후 도 집행부는 720개 전체 미보유 체육관 대상으로 과다한 예산계획을 잡고 있으나, 추후 사업물량 조정(379교만 대상), 교육청-시군과의 매칭비율 조정 등으로 예산계획 수정이 필요

(4) 道 추경(안) 증액사업 중 도로 사업 : 총 1,190억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요구액	비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광주)	35,000	10,000	25,000	보상비(재결금60억원)
초지-인천1 국지도건설(김포)	20,000	0	20,000	보상비(재결금50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광주)	30,000	10,000	20,000	보상비
갈천-가수 국지도건설(화성,오산)	20,000	0	20,000	보상비
용인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17,000	2,000	15,000	보상비, 설계비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확포장공사	18,331	12,331	6,000	준공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8,366	2,591	5,775	LH공사 분담금
와부-화도 국지도건설(남양주)	9,600	5,000	4,600	보상비
용인-남사(2) 도로확포장공사	2,600	0	2,600	준공
계	**160,897**	**41,922**	**118,975**	

○ **인수위 검토 의견**

- 재결금, 정산금 등 추경 필수사항을 제외한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후 민생예산으로 전환 가능

(5) 道 추경(안) 세입예산 검토

○ **취득세 추가세입 검토**

- 道 추경(안)의 지방세 초과세입 예산액 6,148억원 중 취득세는 5,606억원(91%)
- 취득세 세입 예산 비교

(단위:억원)

사업명	2018년	2017년
본예산	**61,990**	**52,035**
추경예산액(추가세수 반영)	67,596	59,947
결산액		65,886
본예산 대비 최종 추가 징수액		**13,851**

- 2018년 1월~5월 취득세 세입은 작년 동기 대비 6,300억원 증가

○ **인수위 검토 의견**

-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 추가 조치 가능하나
- 도 집행부의 세입예산안 수용
- 이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019년 본예산의 가용재원 확대, 공약이행 재원 확보 가능

(6) 지역개발기금의 경기북부 및 동북부 주요사업 활용방안 검토

○ 5월 말 현재 은행예치금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적극적 활용이 필요

○ 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

>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따라 ①일반회계 전입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③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 다만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의 일부 수정 필요

- 현재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으로 한정된 것을 동북부까지 확대
-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별도 사업운영 방안 마련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융자대상 사업)
1. 상하수도 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4.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인수위 제시 추경반영 우선사업

(1) 기재분과 자체선정 우선사업 : 28개 사업, 예산 약 624억원

※ 해당부서와 일정 정도 조율한 사업임

○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제안**

- 청년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50억원 경기신보 출연(청년창업 계정 신설, 10배수로 500억원 하반기 운영 가능)
- 고갈되고 있는 중기자금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계·설비투자 지원(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원 출연)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50억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비 지원, 사업비 중 일부 경기북부 별도 실링 마련)
-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제세동기 설치 3억원, 안전지킴이 6억원) 등

○ **성남형 무상복지 기반 마련 및 민선7기 신규 주요사업 제안**

-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48억원)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13억원)
-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2.5억원) 등

○ **평화경제 및 안전행정 등 기타 제안**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방범 CCTV 확대 설치, 64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50억원)
- 31개 시군 정책연구사업 강화를 위한 경기연구원 출연금 (5억원)
- 시민순찰대(2.8억원) 등

(2) 분과·특위 요청 우선사업 : 47개 사업, 예산 약 508억원

○ 각 분과 및 특위 위원들이 토의를 거쳐 제출한 것을 취합
(분과·특위별 추경 반영 우선 사업 요청 → 기획재정분과 취합 → 도 집행부 검토 필요)

○ 추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실현 방안을 강구할 필요

도정운영개선 TFT 조직개편 소위 활동 보고서

1 조직개편 소위 구성 및 경과

❍ 조직개편 소위 구성

- 단장 : 이화영(기획운영위원장), 공동부단장 : 이우종(행정실장), 조승문(운영지원실장)

❍ 활동경과

- 6월 25일 ~ 7월 9일까지 기획재정분과 내 조직개편팀 운영
- 7월 9일부터 TF 활동, 경기도청 조직팀·인수위 조직개편팀의 자료 검토 및 논의

❍ 활동내용

-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따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의 방향성 확립
-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른 주요 개편안의 제시

2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 민선7기 조직개편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시대정신과 촛불 민주주의 실현
- 16년 보수 도정의 적폐 청산과 소통·혁신·참여의 도정 운영원칙 반영
- 공정, 평화, 복지 3대 정책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조직개편 시 기본 고려사항

고려 사항	주요 내용
조직 기능의 정상화	조직의 비효율적인 편재, 비정상적인 업무관할의 정상화 실국 분장 및 업무 배분의 적절성(신규, 폐지, 통합 고려)
남부·북부 업무분장	남부청과 북부청의 조직 개편의 흐름, 경기도의 특수성 고려 경기 북부의 현안 및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업무 인식
도지사 정책공약 반영	주요 조직 신설 및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공약 반영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

3 조직개편의 10대 기본방향

	가치	주요 내용
1	**공정 경기**	- '억강부약'을 통한 공정 경기의 실현으로 도지사의 정책 철학 구현 - 공정경제과 등 공정 경기를 위한 조직수요 및 부서 신설 요구 반영
2	**평화 협력**	- 남북평화시대에 남북화해·경제교류 등 신경제지도의 위상 반영할 것 - 평화부지사 산하 평화협력국 신설 및 균형발전기획실의 재편으로 뒷받침
3	**복지 확대**	- 성남의 3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부문별 복지 사업을 경기도로 확대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복지기준선 제시를 통해 복지 경기의 바탕 마련
4	**일자리 확대**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경제와 창업,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 일자리의 숫자 뿐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을 고려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5	**노동 중시**	- 일자리노동국 신설, 노동행정 강화를 통한 노동중심의 행정 구현 - 노동이사제 시행(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활성화
6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과 활동, 소상공인 지원강화 -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 시행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7	**소통 강화**	- SNS 소통관 등 시민과 행정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소통기획관 조직의 강화를 통해 대내외적 소통행정의 강화
8	**행정 혁신**	- 블록체인 활용 등 온라인 기반 도민참여형 소통체제 마련 - 31개 시군정책교류 온라인 플랫폼 설치로 비용절감 및 행정 혁신
9	**참여민주주의**	- 도민발안제, 도민청원제 도입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 공공데이터공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확대 시행
10	**민관정 협치**	- 연정을 넘어 민관정이 함께하는 협치 시스템 마련 - 갈등조정관, 시민사회협력관 등 부서 신설과 관련 위원회의 활성화

4 경기도의 조직관련 핵심현안

(1) 평화부지사 업무영역 검토

-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실국을 관할하는 형태가 될 경우 해당실국을 직접 관할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관여해야 할 것.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를 둘 경우, 균형발전실의 일부 부처를 이관하는 방안.
- 당초 정무 부지사의 역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그간 경기도는 경제 부지사, 연정 부지사 등으로 정무적인 업무(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지자체) 역할에 전력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음.
- 다만 업무 이관 부서가 많을 경우, 부지사의 업무파악에만 긴 시간(1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2) 지역중심 vs 기능중심 편재

- 경기도는 남부청과 북부청에 22개 실국이 나뉘어 편재되어 있음. 과거에는 북부가 단순 출장소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부서의 관할 기능 전체가 이관됨. 업무 분장의 기준이 필요함
- 북부지역에 주로 북부의 현안과 관련된 조직들이 많음. 균형발전, DMZ, 경제실(건설, 주택) 등 북부 현안과 관련된 조직이 북부청에 존재함. 따라서 현재 경기도 조직은 지역성과 기능성이 혼재된 것으로 평가됨
- 위의 이유와 연관되어 직원 분포도 북부는 기능직, 남부는 행정직 위주로 편재된 모습도 보이고 있음
- 부서의 남북 이전 문제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및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북부청의 업무 및 권한 문제

- 북부청은 2008년부터 점차 기능이 확대되어 분청 개념으로 업무가 이관. 민선6기에는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등 북부청으로 넘어갔으나, 기획과 예산, 인사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인사 및 예산권의 확대 요청 등 북부청 권한 강화에 대한 요구.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인가는 선택적인 문제임. 찬반양론이 공존함
- 특히 예산 심의권을 확대하고(현재 2개 부처), 5급 이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핵심 사안임. 그러나 일원화된 정책기조 및 지휘체계에 혼선이 올 가능성도 있음
- 북부청과 남부청의 부처 조정도 검토. 경제실의 남부 이전과 도시주택실의 북부 이관 문제

(4) 실국단위의 신설 및 통합 문제

- 실국 조직 신설은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정 실국을 신설하면 당연히 기존 실국의 통폐합이 필요함. 어느 수준에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현재 5실 2본부 15실국체제. 조직 정상화 차원에서 복지여성실, 공유시장경제국, 철도국은 폐지 확정적. 대신 보건복지국 분리, 도시재생정책관 신설, 건설철도국 통합안으로 진행하면 추가적 조정 여력이 없음
- 실국 숫자를 크게 줄여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경기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큰 폭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5) 도정 철학을 표현하는 부서

- 경기퍼스트추진단(기조실 조직팀 1차 제안) 등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전담조직을 설정할 필요성. 도지사 직속으로 관할하거나 정무부지사 관할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소통기획관을 확대하여 소통혁신기획관으로 재편할 경우, 산하에 민관협치담당관, 혁신담당관 등 도정 철학의 구현과 혁신을 감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 담당관의 관할 처리 문제는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의 서울혁신기획관 조직을 참고. 산하에 6개 과(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등)

(6) 정책보좌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

- 현재 비서실 인원으로는 의전 기능 이상의 정책보좌 역량에 한계가 있음. 정책보좌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조직의 필요성도 요구됨.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과 정책실로 이원화)
- 정책실에 충분한 역량이 없을 경우 기존의 도 조직(기획조정실)의 제안과 방향에 대해 디테일하게 검토하기가 어려움.
- 남경필 전 지사의 경우 경기연구원 인원과 외부 인력을 활용해 20여명을 구성하여 정책실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으나, 불법적이라고 문제가 지적되어 폐지(김영환 전 도의원).
- 전체적으로 道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요건 등에도 일부 손질이 필요할 듯함

5 기타 조직관련 검토 사항

❍ 4차 산업혁명 전담 주무부처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무부처가 없음. 도지사 직속 혹은 경제실 산하 디지털혁신컨트롤타워 필요성. 정보화정책관 산하에 관련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 안전관리실의 분리 독립

- 재난의 대응(소방)과 사후 수습(안전실)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 안전관리실을 독립하여 1행정부지사관할로 지정

❍ 도시재생정책관 신설 및 업무이관

- 도시주택실의 관할이 너무 많아(10개 과) 도시재생 부분을 따로 분리함. 신임 도지사의 도시재생 공약에 맞게 업무와 기구를 재구조화 할 필요성 있음, 도시주택실의 북부이관여부도 검토.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함

❍ 경기연구원 역할 강화 방안

- 경기연구원에 31개 시도정책 연구기능 인력 증원, 의회 정책역량 보완을 위한 경기의정연구소 신설 등 검토

❍ 재정기능 관련 사항

- 재정기능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관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있으나, 별도의 국단위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검토 가능. 재정전략회의 검토 필요성

❍ 실국간 정원 조정 문제

- 에너지과(환경국, 경제실), 도서관정책(교육협력국, 문화체육관광국), 공원녹지과(환경국, 축산산림국)은 업무성격과 업무량(국단위의 존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도정운영개선 TFT 산하기관 경영진단 소위 활동 보고서

1 경영진단 TFT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한다는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설립되어 왔음

○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기업은 설립에 따른 효용만큼이나 역기능 역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에 왔음

○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비정상적 조직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파산 직전으로 가거나, 파산한 지방공기업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기대만큼 높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도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임무 수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와 재무건전성 강화,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운영과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1. 경기도 산하기관 현황

○ 지방공공기관 사업영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과 경영효율성을 위한 수익성 사업을 하며 이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며 독립채산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구분유형으로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보조기관으로 구분됨

○ 경기도 산하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출연기관 17개, 출자기관 2개, 공사 3개, 보조 2개 기관으로 구성

○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7월 이전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체육회, 경기개발공사,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었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분류

분류	기관
출 연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 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공기업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보 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출연(17), 출자(2), 공기업(3), 보조(2)

○ 민선 1기 이인제

경제부문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였고,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함

○ 민선 2기 임창렬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됨

○ 민선 3기 손학규

KINTEX, 경기영어마을(국내 최초),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8개 기관이 설립됨. 역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민선 4기·5기 김문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복지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경기도 산하기관의 진용을 이때 갖추게 됨(산하기관 26개)

○ 민선 6기 남경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함

2. 경기도 산하기관 및 공기업 문제점

○ 경기도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출연금 지속 증가, 재정의존도 심화되고 있음

- 도 출연금 증가율 평균 14.1%, 기타 수입 증가율 평균 13.3%
-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출연금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 재정관리 위한 유인 감소

○ 인건비 등 경상비 증가폭 커, 재정운용 탄력성 저하

- 연 평균 8.5%의 인건비 상승으로 출연금이 공공기관 경상비 보전을 위해 충당
- 도민 복리증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여력 감소

3.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분석

○ 2014년 8월 민선 6기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연정합의문 제16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실시

- 14개 기관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심층진단 (3개)과 조직진단(2개) 및 기타 경영합리화 추진(9개), 공공기관 규정정비에는 인사·노무분야 등 211개 조항 정비

○ 심층진단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 기존 존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개편 및 장기적 발전 계획 마련 필요

○ 조직진단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 조직·인력 등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과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기관 운영의 공공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경영합리화 추진 : 경기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문화의전당,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청소년수련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3 활동 방향

❍ 1단계

○ 산하기관 자료 수집 및 분석

○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료 및 경영평가 검토

❍ 2단계 : 기관진단 모델 개발

○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등 공공기관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효율성, 고객지향성, 공익성 등

❍ 3단계 : 산하기관 의견 청취

○ 업무보고자료 및 경영평가, 예산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서 발송

○ 부서 의견 청취 및 논의

❍ 4단계 : 기관진단 보고서 작성

○ 인사·조직 진단분석

○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실태분석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분석

도정 슬로건 TFT 활동 보고서

1. 구성

○ 단장 : 곽윤석

○ 부단장 : 김상호, 심우용

2. 주요활동 : 총5회 회의실행

일시	논의내용
6/25	• 기존 도정 슬로건 등 민선6기 BI 평가 및 자료 검토
7/4	• 선거정책 공약 및 메세지 리뷰를 통한 브레인 스토밍
7/6	•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컨셉 도출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7/11	• 민선7기 도정 슬로건안 각자 컨셉 및 기초안 발표와 논의
7/13	• 민선7기 도정 슬로건 안 도출

3. 민선7기 도정 3대 가치

❍ 3대 가치 의미

○ **공정한 경기도·평화의 경기도·복지중심 경기도**

-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앞선 복지제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핵심가치

○ **3대 가치의 조화를 통해 도민 행복 추구**

- 공정해야 반목이 없고,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으며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

❍ 디자인 컨셉

1안) 뫼비우스의 띠

- 공정과 평화, 복지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순환을 암시

2안) 게이지와 타이머

- 게이지와 타이머의 디자인 모티브를 통해 끊임 없이 채워나가는 긍정적 키워드를 표현

○ **핵심가치에 대한 적절한 테마 칼라 매칭**

-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자주색,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희망과 생동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연두색의 적절한 매칭

❍ 기대효과 및 활용

○ **3대 가치의 당위성 홍보**

-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지속적 노출을 통해 도정 방향에 대한 설득력 담보

○ **언론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물 활용**

-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게시판 및 입간판, 이벤트 홍보공간에 적극적인 활용

4. 민선7기 도정운영원칙

❍ 운영원칙 의미

○ **도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도정**

- 소통과 혁신, 참여를 통해 도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도정 추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쌍방향 도정**

- 열린 도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쌍방향 도정을 완성하는 민선7기 경기도

❍ 디자인 컨셉

1안) 도정 원칙의 병렬 융합을 암시하는 전구

- 소통과 혁신, 참여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구병렬 디자인을 통해 구현

2안) 줌인과 아이콘의 시각적 매칭

- 줌인과 아이콘의 적절한 사용으로서 시각적 효과 극대화

○ **긍정적 청색 이미지**

- 적절한 시각적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 청색과 색 스펙트럼의 조화로운 배치

❍ 기대효과 및 활용

○ **도정 원칙의 대외 신인도 제고**

- 열린 도정을 강조하는 도정 원칙의 반복적 노출을 통해 도민에 대한 설득력 제고

○ **언론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물 활용**

-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게시판, 입간판, 이벤트 홍보공간 적극적 활용

5. 슬로건안 - 1 '새로운 중심 경기도' : FGI 선호 1위

6. 슬로건안 - 2 : FGI 선호 2위

7. 슬로건안 - 3 : FGI 선호 3위

8. 슬로건안 - 기타 ①

9. 슬로건안 - 기타 ②

슬로건 컨셉

- **민선7기 경기도의 포지셔닝 전략**
  경제/인구 규모 전국 1위 광역 지자체로서의 좌표 설정
- **새로운 시대의 중심 역할 강조**
  서울을 넘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심지로서의 경기도

디자인 컨셉

- **경기도 + 지방정부의 영문 공통이니셜 G**
  경기도(Gyeonggi-Do)와 정부(Government)의 영문 앞 글자 G를 디자인 형상화함으로써 경기도 지방정부를 강조
- **태극기 = 대한민국, 태극 = 경기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중심 위치 태극 문양에 G를 배치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경기도의 도약을 의미

기대효과 및 활용

- **'세계속의 경기도'를 대체 도민 자부심 고취, 미래 비전 암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민선 7기 도정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
- **시각 홍보물 및 공문서 CI로 활용**
  방송 ·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문서, 봉투 등 신규 제작 홍보물에 삽입하는 CI 단계별 교체 활용

10. 슬로건안 - 기타 ③

슬로건 컨셉

- **민선7기 경기도의 포지셔닝 전략**
  경제/인구 규모 전국 1위 광역 지자체로서의 좌표 설정
  간결한 전달력을 위해 슬로건 문구의 축약 시도
- **슬로건 1안과 슬로건 2안의 절충 결합시안**
  통일한국 시대 중심축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Hub'라는 단어 사용

디자인 컨셉

- **한반도 기(旗) + 경기도에서 뿜어내는 빛**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
  경기도의 성장동력으로 한반도의 혈관을 채우는 이미지 구현
- **긍정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
  전체적인 이미지 컬러를 청색으로 설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를 희망과 긍정으로 표현

기대효과 및 활용

- **통일한국 시대를 지향하는 경기도**
  CI 디자인 요소에 한반도기를 삽입해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중심으로 경기도 역할 강조
- **시각 홍보물 및 공문서 CI로 활용**
  방송 ·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문서, 봉투 등 신규 제작 홍보물에 삽입하는 CI 단계별 교체 활용

11. 슬로건안 - 기타 ④

슬로건 컨셉

- **道(도), 한자의 의미 변용**
  경기도의 '도(道)'자를 광역자치단체의 단위 외에 '길'이라는 의미로도 의미 확대
- **경기도정 3대 가치에 대한 주의 환기**
  3대 가치 키워드인 공정, 평화, 복지를 슬로건에 삽입함으로써 도정 방향성 극대화

디자인 컨셉

- **1안) 한자와 타이포 그래피의 혼합**
  '길 道(도)'의 책받침 변을 한반도 지도로 변용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머리수'와 결합하여 경기도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의미 구현
- **2안) 한반도 지도를 '길'로 구현**
  공정 · 평화 · 복지의 희망 컨셉을 청색으로 표현
- **붓 터치 기법을 활용한 속도감 중시**
  한반도 지도의 디자인 기법에 속도감과 힘이 느껴지는 붓 터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효과 극대화

기대효과 및 활용

- **CI를 통해 경기도정 3대 가치 노출 극대화**
  CI에 3대 가치 키워드를 삽입함으로써 반복적 노출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효과 배가
- **시각 홍보물 및 공문서 CI로 활용**
  방송, 인쇄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CI 노출, 공문서, 봉투 등 신규 제작 홍보물에 삽입

12. 슬로건안 - 기타 ⑤

슬로건 컨셉

- **변화를 중시하는 경기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당위적 방향은 변화이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는 의미
- **혁신으로 거듭나는 경기도**
  혁신을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광역단체의 리더라는 사실을 천명

디자인 컨셉

- **사람이 먼저인 경기도**
  CI 심볼의 사람 모양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
- **태극기 칼라로 경기도민의 대표성 표현**
  태극모양의 청색과 홍색을 사람모양에 대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대표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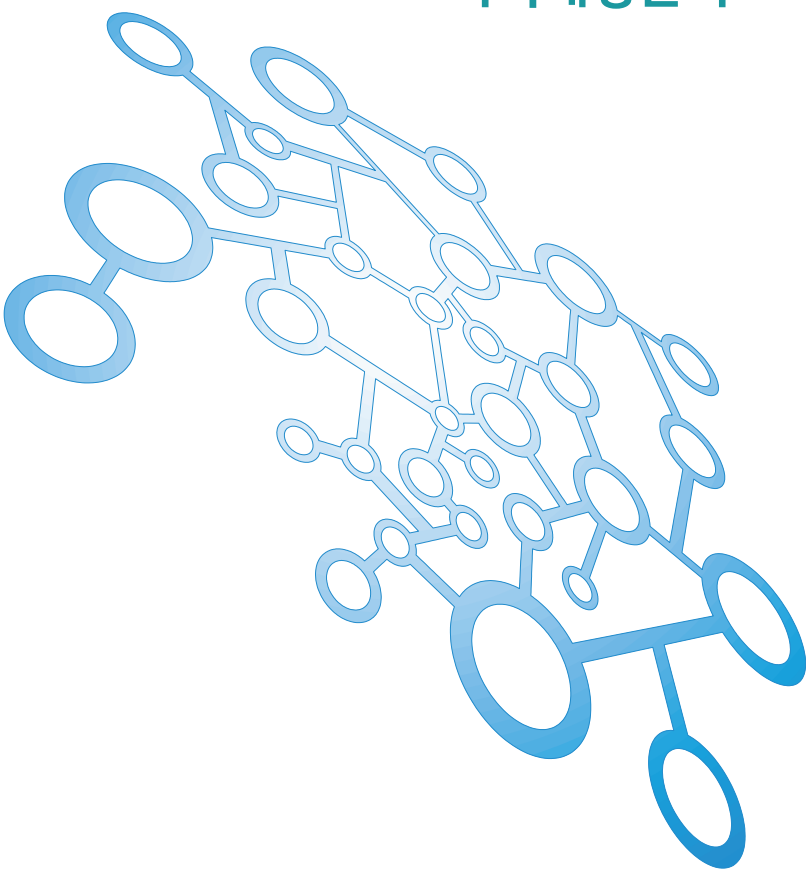
기대효과 및 활용

-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시대적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역동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
- **시각 홍보물 및 공문서 CI로 활용**
  방송, 인쇄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CI 노출, 공문서, 봉투, 각종 인쇄 홍보물을 통해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홍보

13. 슬로건안 - 기타 ⑥

도민중심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경기도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슬로건 컨셉
· 도민이 원하는 경기도정의 방향성
도민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반영하는
경기도 의 도정 방향을 암시
· 도민이 주인되는 경기도정을 표현
잘 알려진 링컨의 명언을 인용하여 '도민'이라는 단어가 담아 내지
못하는 'People(민중)'의 의미로 확대 부여
디자인 컨셉
· 1안) 캘리그래피 + 국 / 영문 병기
타이포 그래피만으로 메시지 전달력 극대화
국/ 영문 병기를 통한 안정적인 디자인 완성도 추구
· 2안) 심플한 타이포 그래피
정제와 깔리가 강함인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이미지 전달력 제고
· 신뢰를 주는 검정색과 청색의 조화
타이포의 이미지 컬러를 검정색과 청색으로 매칭함으로써
메시지의 신뢰성을 담보
기대효과 및 활용
· 국민 주권, 도민 주권 강조
경기도의 모든 사업집행에서 도민 주권이 기본이라는 사실 환기
· 시각 홍보물 및 공문서 CI로 활용
방송, 인쇄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CI 노출, 공문서, 봉투, 각종 인쇄
홍보물을 통해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홍보

기획재정분과



1. 구성

○ 위원장 : 윤후덕
○ 기획단장 :박완기
○ 부위원장 : 김영환
○ 간사 : 손낙구

2. 활동방향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경기도정의 예산, 인사, 조직 관련 자료 검토 및 점검

❍ 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 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철학 및 공약의 취지 공유
-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
- 전체 공약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 및 총 실행 기간 산정
- 2018년 하반기 추경 규모 추산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추경에 반영될 시급한 공약 선별 및 중장기 공약 분류
-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방안 구체화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연정협력국,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균형발전기획관실,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총 6개 실·국, 2개 기관)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예비	6월 22일(금)	16층 대회의실	14:00~16:00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세정과 ※재정현안 보고
1차	6월 26일(화)	16층 대회의실	09:30~10:30	감사관실, 연정협력국
			10:40~11:40	대변인실, 소통기획관
			15:00~15:50	균형발전기획관실
			16:00~18:00	기획조정실
2차	6월 28일(목)	203호	09:30~10:30	감사관실, 소통기획관실
			10:40~11:40	도시공사
			14:00~15:20	균형발전기획관실
			15:30~16:50	기획조정실

※ 3차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받기로 결정함

(2) 업무보고 내용

- 재정관련 세수 추계, 추경계획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현황 및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공약 이행 방안 보고 및 요청 사항 검토 보고

❍ 현장방문

(1) 경기연구원

- 6월 27일 14:00
- 현황 및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요청

❍ 토론회 및 간담회

(1) 1차 준비 간담회

주제	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준비회의
일시	6월 26일(화) 11: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외부인사 : 강남훈(한신대 교수),

	• 인수위원 : 문진영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강상재 위원, 김진엽 위원(이상 기획재정분과)
주요 논의 사항	• '경기기본소득위원회'설립방향과 구성에 관한 논의 • '경기기본소득위원회'설립과정의 공론화 과정 합의 •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립을 2차 준비모임 합의 • 경기도 복지과에서 위원에 설립에 관한 조례 준비 • 2차 준비모임에 회의 참석자 범위와 내용을 확장

(2) 2차 준비 간담회

주제	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준비회의
일시	6월 29일(금) 14: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외부인사 : 강남훈(한신대 교수) • 인수위원 : 문진영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김영환 부위원장, 손낙구 간사, 강상재, 김진엽, 최봉규 전문위원(이상 기획재정분과) 임진 전문위원 (경제분과) • 道공무원 :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허승범 (기획담당관), 조창범 (소상공인과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 논의 사항	• '경기기본소득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방향성 논의 • 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례 및 일정 검토 • 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추진 논의

(3) 정책 토론회

주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일시	7월 4일(수) 10:00
장소	융기원 102호
진행	• 축 사 : 이한주(새로운경기 공동인수위원장) • 인사말 : 박완기(새로운경기 기획재정분과 기획단장) • 사 회 : 강상재(새로운경기 전문위원)

• 발 표1. 강남훈 교수 :
"*기본소득의 개념 및 시대적 의의*"
- 경기도 기본소득의 기본방향 및 의의 제시
- 청년배당과 소상공인 활성화정책의 의의

• 발 표2.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및 조례안 논의*"
- '경기기본소득위원회'조례 가안 설명
- 위원회 구성 및 일정 제안

• 토 론 :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
유성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신근식(소상공인대표)
이상현(청년대표)

• 현장 사진 (인수위원, 외부인사, 기자 포함 약 50명 참석)

※ 참고자료「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논평과 의견」

•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한 논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표현은 기본소득을 최소한의 사회보장 급여 수준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음(문진영)
『사회구성원 모두에』라는 표현은 대상을 너무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폭을 좁힐 수 있음(문진영)
기본소득의 사회보장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야. (유영성)

• 사무처 등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기구에 대한 규정 미비

※ '기본소득준비위원회 조례안 및 정책토론회 자료' 참조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기획재정분과 전체 회의 19회 진행, 실행 내용 역할 분담
- 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전 점검 사항 및 사후 평가
- 분과 내부 팀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2) 분과 내 팀 활동

가. 개요 및 구성

- 추경예산팀, 조직개편팀 총 2개의 팀 구성하여 활동
- 추경예산팀(공영목 팀장, 강상재, 김경수)
  조직개편팀(박찬규 팀장, 황우철, 최봉규, 이준승)
- 박완기 기획단장, 김영환 부위원장, 손낙구 간사 참여

나. 조직개편팀

- 회의 총 4회 진행
- 담당 공무원(기획조정실)과의 연석회의 2회
- 조직진단 관련 개별 인터뷰 진행 3회
- 조직개편안 검토 보고안 마련

※ 조직개편팀 활동보고서

다. 추경예산팀

- 회의 총 7회 진행
- 예비 업무보고 1회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 담당 공무원의 연석회의 3회
- 추경안 마련

※ 추경예산 TFT 활동 보고서 참조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기획조정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 개선
2	공약이행재원 확보 계획	5	중복규제 합리화와 규제혁파
3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6	신청사 정보화 관리체계 조기 확립

나. 주요 논의 사항

- 사회적경제 공약 실현 위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
- 도민들에 대한 총괄적인 道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 경기연구원에 31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연구시스템 구축 방안

(2) 감사관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재도약	3	도민중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확대 운영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나. 주요 논의 사항

- 민선6기 감사관실의 정치적 중립성 미흡 지적(여론조사 감사 등)
- 산하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방안
- 道발주 공사의 감독에 민간 전문가 등 도민 참여 방안
- 감사결과 공개 등 감사 투명성 확보 방안
- 내부 청렴도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3) 소통기획관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열린 도지사실 홈페이지 신규 제작	3	비전 및 슬로건 개발 추진
2	SNS 소통 이벤트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당선인의 SNS에 모이는 도민들의 의견 처리 방안
- SNS 소통관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성남의 사례 등)

(4) 균형발전기획관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	4	미군 반환 공여기 국가주도 개발
2	캠프 그리브스 보전 및 활용	5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지원)” 추진
3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 북부에 관한 당선자의 방향을 검토하여 부처 업무 내용 재검토
- 북부청과 남부청과의 업무 조정 및 북부청 조직 개편
- 인사, 예산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5) 경기도시공사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4	신도시 및 도시 개발

2	지역발전 기반조성	5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립 추진
3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나. 주요 논의 사항

- 당선자의 정책 공약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확대 방안
- 건설분양 등 경기도형 주택공급 계획 수립 필요성
- 직접 해당 공약뿐 아니라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 서민·청년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6) 경기연구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소장 및 직원 공개채용 中	6	민선7기 경기도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운영
2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화 추진 기본계획	7	연구성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보고서 체계 개편
3	연구기획본부 산하 정책분석부를 '미래전략부'로 확대하여 민선7기 현안과제의 적시 대응역량 강화	8	북부연구센터의 역량 강화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4	시·군 정책연구 추진	9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 MOU를 통한 협력연구 확대 추진
5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10	道-GRI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활성화

나. 주요 논의 사항

-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 경기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 당선인의 도정 철학 및 공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진행 요청

(7) 쟁점 및 이슈 내용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 실현위한 실·국 차원의 여건 조성 방안

- 계약심사시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액 상한 문제가 쟁점
- 지방계약법과 사회적경제 법령의 취지가 충돌하는 문제 해결 필요함

나. 평가담당관 및 감사관의 독립성 문제

- 행정1부지사 산하에서 정무부지사 산하로 이전 검토
- 지방자치법 조항 및 시행령 검토하였으나 어려운 것으로 결론

❍ 공약사업

(1) 기획조정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2-②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27-①	노동정책 담당 독립부서 출범 추진
3-①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27-②	노동인지예산 방안 마련
3-②	공공데이터 공개	28-③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3-③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운영	30-①	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①,③	공동 정책의제 설정, 집행, 평가 및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설립	30-②	용역 및 공사입찰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 우대
5-②	경기도 공공기관 시·군 정책연구 제공	136-②	수도권 규제, 도시계획규제, 농지규제 등 동시 개선
5-④	온라인 정책도서관 운영	137-①	공장용지 면적 제한 규제 조정
10-①	공공기관 감사 및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137-④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운영
21-①	중점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적극 운용	149-①	교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26	청년정책 담당관 신설	152-①	방범 CCTV 확대 설치

나. 주요 논의 내용

- 각 실·국간 종합적인 공약 실행 협력 체계 보완
-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안에 청년의 자립 지원 기능 보완
- 노동정책부서의 경제실로부터의 분리 독립 방안

(2) 감사관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9-①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10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스템 개선
9-②	도지사 및 감사실 직속 핫라인 설치	11	감사 기구의 주민 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 실현 위한 감사실 차원의 지침 마련

나. 주요 논의 사항

- 시민옴브즈만 제도 확대 개편 등 활성화 방안
- 실질적인 공익 신고자 보호 방안 미흡

(3) 소통기획관실

가. 해당 공약

	공약
4	도민소통 강화를 위한 SNS 소통관 운영
4	SNS 소통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나. 주요 논의 사항

- SNS 소통관 배치에 따른 업무 체계 프로세스 필요
- 민원24 등 민원 처리 프로세스 중복 문제에 관한 논의
- SNS를 통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4) 균형발전기획관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73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강화 및 시·군별 특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4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
33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36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38	남북 공동수계 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	141	DMZ 올레길 조성
17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추진	174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
174	남북 문화재 공동사업 지원		

※ 북부청 기능 개선 방안 (균형발전기회실 제안)
'조직개편팀 활동보고서'에 검토 내용 기재

나. 주요 논의 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의 세부적인 지출 계획 미흡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미흡
- 남북체육교류 세부과제
- DMZ 올레길 등 도보(자전거) 관광자원 연계에 대한 소관 국·실 간의 종합적 검토

(5) 경기도시공사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34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 조성	117	경기도시공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조직 확대
28	성희롱 성폭력 없는 환경 구축 및 노동이사제 시행	123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기능 활성화
116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북부관련 신규개발 사업 추진 방향 (도시공사 제안)

나. 자체평가

- 도시공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노동이사제 초기 정착이 필요한 지원 방안
- 세대별·계층별 복지 연계 주택사업안 마련
  (공공보육시설, 청년창업지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 임대주택 등)

(6) 경기연구원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5	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협력시스템 마련		

※ 도의회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제안)

나. 자체평가

- 31개 시군구 자체 연구원과의 구체적인 협력 연구 체계 마련 검토

(7) 추가 쟁점 및 이슈 내용

가. 도시공사의 확대 개편 방안

- 업무범위 및 내부 조직 확대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대규모 증원 등 역할 범위 확대 안이 제시되어 있음

나. 도지사 직속 위원회 설치 및 개편 방안

- 기본소득위원회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 기존 경기도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점검이 필요함
- 위원회 강화 방안에 있어 권한의 실질화 방안 논의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2-②, 기획조정실)
○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3-①, 기획조정실)
○ 공공데이터 공개 (3-②, 기획조정실)
○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운영 (3-③ , 기획조정실)
○ 공동 정책의제 설정, 집행, 평가 및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설립 (5-①·③, 기획조정실)
○ 경기도 공공기관 시·군 정책연구 제공 (5-②, 기획조정실)
○ 온라인 정책도서관 운영 (5-④, 기획조정실)
○ 공공기관 감사 및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10-①, 기획조정실)
○ 중점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적극 운용 (21-①,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 담당관 신설 (26, 기획조정실)
○ 노동정책 담당 독립부서 출범 추진 (27-①, 기획조정실)
○ 노동인지예산 방안 마련 (27-②, 기획조정실)
○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28-③, 기획조정실)
○ 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0-①, 기획조정실)
○ 용역 및 공사입찰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 우대 (30-②, 기획조정실)
○ 수도권 규제, 도시계획규제, 농지규제 등 동시 개선 (136-②, 기획조정실)
○ 공장용지 면적 제한 규제 조정 (137-①, 기획조정실)
○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운영 (137-④, 기획조정실)
○ 교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149-①, 기획조정실)
○ 방범 CCTV 확대설치 (152-①, 기획조정실)
○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9-①, 감사관실)
○ 도지사 및 감사실 직속 핫라인 설치 (9-②, 감사관실)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스템 개선 (10, 감사관실)
○ 감사기구의 주민 참여 확대 (11, 감사관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 실현 위한 감사실 차원의 지침 마련 (분과 제안, 감사관실)

○ 도민소통 강화를 위한 SNS 소통관 운영 (4, 소통기획관실)
○ SNS 소통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4, 소통기획관실)
○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33, 균형발전기획관실)
○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 (34, 균형발전기획관실)
○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36, 균형발전기획관실)
○ 남북 공동수계 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 (38, 균형발전기획관실)
○ DMZ 올레길 조성 (141, 균형발전기획관실)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추진 (173, 균형발전기획관실)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강화 및 시·군별 특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173, 균형발전기획관실)
○ 남북 문화재 공동사업 지원 (174, 균형발전기획관실)
○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 (174, 균형발전기획관실)
○ 북부청 기능 개선 방안 (실 제안, 균형발전기획관실)
○ 성희롱 성폭력 없는 환경 구축 및 노동이사제 시행 (28, 경기도시공사)
○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 조성 (34,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116,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및 조직 확대 (117, 경기도시공사)
○ 서민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기능 활성화 (123, 경기도시공사)
○ 북부관련 신규개발 사업 추진방향 (공사 제안, 경기도시공사)
○ 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협력시스템 마련 (5, 경기연구원)
○ 도의회 정책지원 방안 마련 (경기연구원)

〈참고자료〉

기본소득준비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및 조례안

기본소득 의의와 기본소득위원회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1. 기본소득의 세계적 동향

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2018년 4월 몇몇 신문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해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 재정부담은 크면서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곤율도 줄지 않아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원래부터 2018년 말에 종료되기로 되어 있다. 실험의 평가는 실험의 엄밀성을 위하여 실험이 끝난 뒤인 2019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핀란드의 실험은 실업수당을 받던 2,000명의 사람들에게 1달에 560유로의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이다. 기존의 실업수당과 달리 실험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 실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수의 실험 대상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할 수 없다.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무조건성(취업을 해도 지급한다)으로 인한 노동유인 효과만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 실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설계 ② 더 강한 노동유인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재형성 ③ 관료주의 축소와 복잡한 급여 체계 단순화.[3)]
핀란드는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 국가를 만든 나라이다. 실업수당은 구직활동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한 수령할 수 있다. 이런 핀란드의 복지 제도는 완전고용 경제 구조를 전제

3)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

로 한 것인데,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경제 구조와 복지 제도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업수당이다.

실업수당은 실업자에게만 지급되고, 취업을 하면 중단된다. 560유로의 실업수당을 실업자는 560유로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하나 안 하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고통이 400유로라고 한다면 960유로를 주는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복지국가를 만들 때부터 있었지만, 그 때에는 완전고용 시대였다. 실업률이 3% 내외라면 실업자들에게 노동유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업률이 10% 이상이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실업수당 같이 노동유인을 없애는 복지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다.

실업수당이 노동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을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핀란드는 일정한 기간마다 취업활동 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 하고, 의무를 어겼을 때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엄격해지게 된다. 구직활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관료주의적 통제도 불가피하다. 신청자에게 강한 낙인효과를 부여해서 신청자 수를 줄이는 방법도 종종 사용된다.

핀란드의 실험은 기존의 복지 제도의 하나인 실업수당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과연 관료주의적 통제와 구직활동에 대한 강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노동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핀란드 실험에서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의 증가이다. 근로 기간을 제약하거나, 고용관계의 속성을 삼각고용관계나 위장고용관계로 변형시키는 비표준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앱 주문형 노동(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노동)과 클라우드 노동(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실행하는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4)]

기존의 복지 제도는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복지 수급권도 갖게 된다. 비표준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의 적용도 못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정규직노동자는 소득의 4.5%를 내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생기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복지 제도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4) 서정희, 백승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기본소득은 불안정 노동자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소득의 증가이다. 최저임금도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용을 줄일 우려가 있고, 불안정 노동자의 또 다른 주요 부분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반해서 기본소득은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불안정노동자의 소득을 부작용 없이 증가시키게 된다. 다른 하나는 협상력 증가이다. 협상력을 좌우하는 큰 요인의 하나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소득의 크기이다. [5](Nash, 1950)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소득이 보장되면 그만큼 협상에 여유를 갖고 초조함을 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고용되었을 때에나 고용되지 않았을 때에도 지급되므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의 소득을 높여서 불안정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인다.
기본소득의 이런 특징들은 캐나다와 미국의 실험에 반영되어 있다.

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실험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하여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연소득 34,000달러(미혼) 내지 48,000달러(결혼) 이하의 사람들이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에게 17,000달러(미혼) 내지 24,000달러(결혼)를 지급하되, 시장소득이 생길 경우 시장소득의 50%를 기본소득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형태이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이 0달러일 경우에는 17,000달러를 받지만, 시장소득이 10,000달러가 되면 시장소득의 50%인 5,000달러를 공제하여 12,000달러를 받는다.(17,000달러 − 10,000달러×0.5 = 12,000달러)

음의 소득세는 세금을 걷으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위에서 예로 든 사람의 경우, 시장소득 10,000달러와 보조금 12,000달러를 합쳐서 최종 소득이 22,000달러가 된다. 이것은 기본소득 17,000달러를 온전히 받으면서 시장소득에 대하여 50%의 세금을 내는 정책과 동일하다.(기본소득 17,000달러 + 시장소득 10,000달러 − 시장소득에 대한 세금 5,000달러 = 22,000달러)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음의 소득세를 기본소득의 한 가지 형태로 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음의 소득세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음의 소득세도 실제로 실행할 때에는 1년에 한번 소득세를 낼 때 지급액을 정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음의 소득세는 실험으로서 장점을 갖는다. 음의 소득세는 한편으로는 세금을 걷으면서

5) Nash, J. F. (1950). "The Bargaining Problem", *Econometrica* 18, pp. 155 – 162.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음의 소득세 실험은 두 가지 정책을 합친 효과를 한꺼번에 실험하는 셈이 된다. 핀란드와 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만 하는 실험은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 다시 실험해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서 캐나다의 실험은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실험을 다 거친 셈이므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캐나다는 실험의 목표를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과 싸우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는 측정할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안정성,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 건강, 건강 및 건강보험 사용, 주거 안정, 교육과 훈련,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6] 측정 항목 중에서 식품 안정성이 제일 먼저 나오고 노동유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빈곤층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좋아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캐나다는 무상의료와 기본소득에 가까운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상당히 갖춘 나라이지만 핀란드 정도로 복지가 성숙된 나라는 아니다. 최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은 2008년 온타리오 주의 경제적 산출을 5.5% 감소시켰고, 매년 322억 달러에서 383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7] 빈곤과의 싸움을 위하여 복지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실업자를 선별해서 복지를 확대하면 불안정 노동자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캐나다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중위 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캐나다의 실험은 기본소득이 경제구조의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미국의 실험

미국에서는 두 가지 기본소득 실험이 준비 중에 있다. 하나는 스톡턴(Stockton) 시의 기본소득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실험이다.

스톡턴

스톡턴은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인구 30만명의 작은 도시이다. 경제 불황 이후 파산을 선

6) Ontario(2017. 3. 16). Ministers' message.
https://www.ontario.ca/page/basic-income-consultations-what-we-heard에서 2018. 2. 20. 인출.
7) Segal, D. Hugh(2016). Finding a Better Way :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Massey College.

포하였고, 지금도 극심한 가난과 높은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마이클 텁스(Micahel Tubbs) 시장은 27살의 흑인 시장이다. 텁스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5,6년 동안 복지에 의존해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집은 먹을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많았지만, 식품권은 현금이 아니었다. 그는 현금을 주면 사람들이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스톡턴 시는 2019년부터 100명의 거주자들을 선정해서 매월 500달러를 18개월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톡턴 시는 기본소득이 미국 혁명을 일으킨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사상이고,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가 옹호했던 사상이며,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8)]

스톡턴 시의 실험은 경제 안정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라는 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 인물은 페이스 북 공동창업자인 34세의 크리스 휴즈(Chris Hughes)이다. 휴즈가 기본소득 실험을 지지하는 이유는 불평등과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 노동자)의 확대이다. 미국에서 불평등은 1929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자신은 주커버그(Mark Zuckerburg, 페이스 북 CEO)의 룸메이트라는 덕택으로 3년 일하고 5억 달러를 벌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400달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 북 같은 거대한 부는 기술혁신, 지구화, 금융/벤처 자본이라는 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동일한 힘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로 채워진 긱 경제(gig economy)를 만들어냈다. 빈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9)]

와이 콤비네이터

민간 기업인 와이 콤비네이터의 샘 올트먼(Sam Altman)은 미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1,5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세계 최고의 악셀러레이터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는 800억 달러 이상이다. 에어비앤비(Airbnb), 레딧(Reddit), 드롭박스(Dropbox)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이콤비네이터에 의해서 육성되었다.[10)]

와이 콤비네이터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예비 실험을 마무리하였고, 조만간 본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선발해서 매달 1,000달러의 무조건적인 현금을 3년 내지 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실험 결과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실험의 배경은 빈곤의 증가, 소득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안정화, 중산층 축소, 4차 산

8) 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questions
9) Chris Huges(2018), Fair Shot : Rethinking Inequality and How We Earn, St. Martin's Press
10) Y Combinator 홈페이지. http://www.ycombinator.com 에서 2018. 2. 20. 인출.

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이다. 실험의 측정 변수는 다른 나라의 실험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 ① 시간 사용의 변화(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주관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건강 ③ 금융적 건강 ④ 시간 선호와 위험 선호(기본소득이 장기적이고 위험한 투자를 더 잘 수용하도록 만드는가?) ⑤ 정치적 사회적 행동과 태도 ⑥ 범죄 ⑦ 아이들에 대한 영향 ⑧ 가정을 넘어선 외부효과 및 네트워크 효과[11]

올트먼은 스타트랙의 팬으로서 과학기술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자라났다. 인공지능에도 투자하고 있는 그에게는 기술 발전이 미래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적인 창업을 시도하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혁신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12]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소득 실험을 지배하고 있다.

라. 기타

캐나다 자유당(현 집권당) 2016년 기본소득 당 정책으로 채택
http://winnipeg2016.liberal.ca/policy/poverty-reduction-minimum-income/

영국 노동당 대표 Jeremy Corbyn. 기본소득지지자이고 기본소득 설계자인 맥도넬을 재무부 예비장관으로 임명. 전 대표 Ed Miliband 의원 등 추진. basic income working group 설치

스코틀랜드 4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 검토 중
City of Edinburgh Council, Fife Council, Glasgow City Council and North Ayrshire Council.

2. 기본소득의 의의

세계 여러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모두 기술혁신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위의 세 나라의 실험은 모두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의 맥락 위에서 각각 자기 나라에 더 시급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1) Y Combinator Research(2017). Basic Income Project Proposal - Overview for comments and Feedback.
12) https://spectacle.com/001/sam-altman-interview-universal-basic-income

첫째, 일자리 부족.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복지 제도는 노동유인 감소, 낙인 효과, 관료주의, 낮은 포착률 등의 문제로 일자리가 부족한 경제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없다.

둘째, 불안정 노동의 확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의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의 수혜도 받지 못한다. 불안정 노동자가 되면 정규직 노동자 보험료의 2배를 내야 하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 제도를 가지고서는 불안정노동자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셋째, 불평등 확대. 근로소득 사이의 격차 및 근로소득과 자산 소득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넘어서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격차의 확대는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 상실을 가져와서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세 가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지급되므로, 실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노동유인을 없애지 않는다.

둘째,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주면, 결국 상위 근로자는 순납세자가 되고 중하위 근로자는 순수혜자가 된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공유자산에 대한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나누어 소유하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자산소유 분산에 기여하게 된다.

3. 기본소득 효과-청년배당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복지국가에 살고 싶어 하지만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만들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면 복지국가 건설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증세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실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이다. 성남시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1개 연령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지 않고, 대상 연령층 전부에게, 노동이나 구직활동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1만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므로 수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실험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부문의 소상공인들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성남시의 미공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년배당으로 인하여 성남시 소상공인의 매출은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배당은 밑바닥 경제를 확실하게 활성화시켰다.

1인당 GDP의 3% 정도에 불과한 연간 100만원을 가지고서 청년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시켰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정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투표율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 사이에서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인근 도시의 청년들보다 높아졌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지방선거를 마친 결과, 청년배당은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다. 17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이 과연 경기도 밑바닥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경기도 청년과 소상공인의 증세와 복지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소득주도성장과의 관련

- 최저임금 인상 논쟁
- 최저임금은 근로소득 높이려는 정책

- 가계동향조사 2018년 하위 20%(약 400만 가구) 가구소득은 월 128만6,700원
- 하위 20% 소득은 8% 감소, 격차 확대
- 하위 소득 증대에 어려움.
- 불평등, 불공정이 성장까지 저해

- 영세 자영업자 애로 사항
- 내수 부족, 임금,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자
- 청년배당+지역화폐 미치는 효과

- 소득 직접적 증가
- 내수 진작으로 판매 증가
- 지역화폐로 지출 금액 하위 가구 집중
- 보편 복지와 지역 화폐의 결합
- 보편 복지는 선별복지에 비해 확대 속도가 빠름.
- 지역 화폐로 인하여 하위 계층 집중 지원

- 경기도 하위 가구 소득 변화를 타 시도와 비교할 필요.

5. 경기기본소득위원회

가. 목적

-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시민들과의 협치를 통하여 준비, 실행 자문, 홍보 확산, 평가, 자문기구 성격

나. 구성

- 위원회 내 부문별 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군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화폐 대상 업체 대표 시군별 1~2명씩 40명 내외
- 청년 대표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대표
- 교수 및 연구자
- 기획 재정 관련 부서 담당자

다. 활동

- 포럼, 세미나, 공청회, 도민 의견 수렴, 청년배당, 지역화폐 사업 준비, 평가, 연구 등

6. 추가 : 경기영구기금(제안)

가. 사례

알래스카 영구기금
해먼드 주지사, 석유 자원으로 생긴 부의 200분의 1을 기금으로 만드는 데 성공.
매년 주민들 의결에 의하여 1000달러에서 3000달러 배당

오마이뉴스 2018. 1. 29
성남시민 1800억원 배당... 이재명 "세금 퍼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SNS 통해 밝혀... "택지개발 이익금,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재명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시장은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해 단 한푼 투자나 위험 부담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글에서 밝힌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 이익 환수금'을 가리킨다. 일명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12월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6월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시장은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이곳은 LH가 공공개발을 하려던 곳. 민간업자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다"며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으며, LH는 결국 공영개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입 중 "▲ 920억원은 인근 도로 터널 개설 등에 사용 ▲ 2761억원은 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 ▲ 1822억원은 시민들에 배당하기로 했다"며 "불로소득의 원천인 개발허가권이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822억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다"며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말기 바란다"며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며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나. 경기영구기금이란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수익, 도시재생사업 수익, 도 소유 부동산 임대료, 공기업 이윤, 기타 수익을 적립

- 영구기금 위원회는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연령별 성별 권역별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 내외로 구성

- 영구기금 위원회 산하에 영구기금관리위원회 설치. 영구기금관리위원회는 공기업 담당자와 투자 금융 전문가로 구성, 기금으로 금융 및 실물 투자

- 공공토지 확대 첨단, 신재생, 친환경 건축, 매년 경쟁가격에 따라 정해진 토지 임대료를 받아 영구기금에 적립하는 가든시티 사업 점진적 구상. 부동산 개발 수익 100% 환수, 기금에 적립

- 3년 뒤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구기금 위원회 결의에 따라 현금 배당 또는 보편 서비스 제공... 영구기금위원회 결정에 따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 소득”이라 함은 재산 · 소득 ·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 누리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 기본 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도 기본 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도민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 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 및 여성가족, 일자리 관련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위원회 : 기본 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 시민참여위원회 : 기본 소득 관련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
3. 지역경제위원회 : 기본 소득 관련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
4. 연구·평가위원회 : 기본 소득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평가 등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2. 실무위원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직 실무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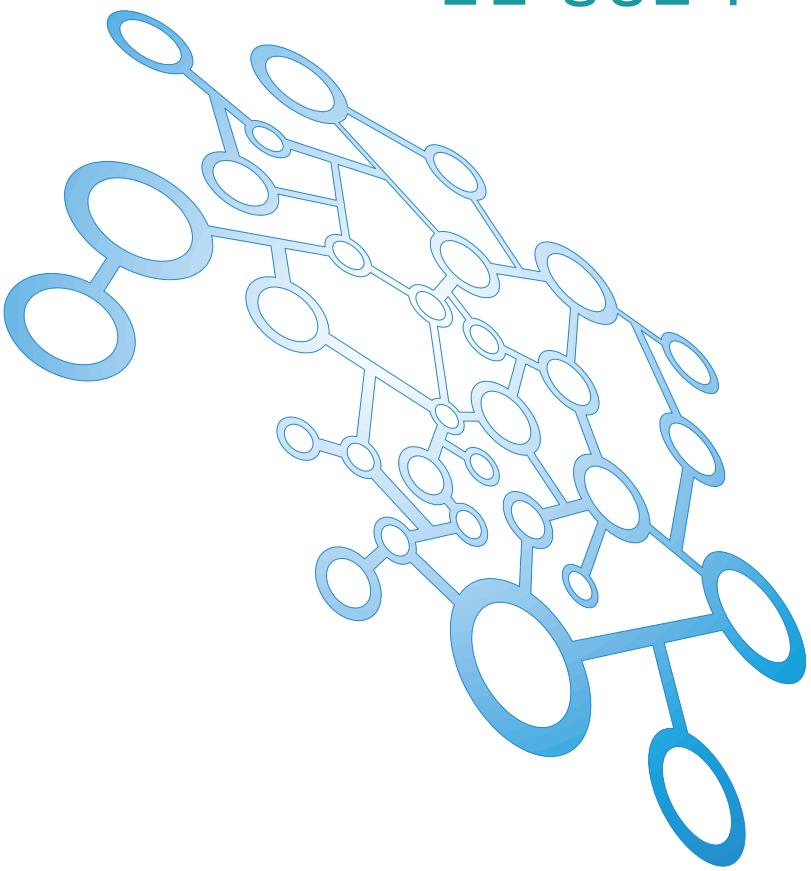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분과



1. 구성

○ 위원장 : 조응천
○ 부위원장 : 권석필
○ 간사 : 최현덕

2. 활동방향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경기도정의 예산, 인사, 조직 관련 자료 검토 및 점검

❍ 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 도지사님의 정책 철학 및 공약의 취지 공유

도지사 주요 도정 철학

① 도민 모두가 안전한 안심 경기
②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따뜻한 경기
③ 도민을 진심으로 받드는 혁신 경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과 경기 퍼스트 달성을 위해 안전, 조세정의, 혁신, 지방 분권 및 자치경찰 등의 공약 구체화 마련
-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등 경기 동서남북간 균형발전 도모
- 분과 비전, 추진 방향과 일정, 공약별 실행 계획 마련

【 안전행정분과 공약 검토방향 도출 】

※ 공약내용, 정책자료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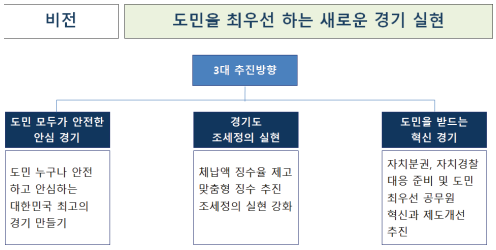
도민들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변방이 아닌, 도민 우선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경기, 경기 퍼스트』

(공정) "누구나 기회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경기",
(공감)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구현"
(참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와 소통 확대"
(평화) "남북 화해에 따른 경기 북부권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미래) "서울의 변방이 아닌 신성장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안전행정분과 비전과 추진방향 수립 】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인재개발원 (총 8개 실·국)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2일(화)	16층 대회의실	09:30~10:30	자치행정국
			10:40~11:40	인재개발원
			15:00~15:50	재난안전본부
			16:00~17:00	북부소방재난본부
			17:00~18:00	균형발전기획실
2차	6월 27일(목)	16층 대회의실	09:30~10:30	자치행정국
			10:40~11:40	인재개발원
			14:00~15:20	재난안전본부
			15:30~16:50	균형발전기획실

※ 3차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받기로 결정함

(2) 업무보고 내용

- 1차 : 부서 현황과 주요 현안 중심
- 2차 : 공약 이행 방안 및 요청 사항 중심 보고

【 1차 업무보고(6.22) 】	【 1차 업무보고 총평 】
	•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보고내용이 주요 현황 소개 위주로 작성 ↓ 2차 업무보고 시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집중 검토 요청

【 2차 업무보고(6.27) 】	【 2차 업무보고 총평 】
	• 공약 관련 보고내용이 충실해졌으나, • 공약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 필요 ↓ 구체적인 실행방안 보완요청 및 분과 자체적으로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약 이행 완성도를 제고

❍ 토론회 및 간담회

(1) 소방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토론회

주제	소방인력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방안
일시	6월 22일(금) 19:00~20: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재난안전본부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외 3명 박세종, 탁종연, 배석홍 위원
주요 논의 사항	- 소방인력 확보 방안 (3부제 근무관련) - 소방장비 단계적 확충방안 및 국비 확보 등 논의 - 효율적인 예산 집행 계획 논의

(2)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자문

주제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자문
일시	6월 22일(금) 19:00~20:00
장소	수원역 인근
참석자	-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
주요 내용	- 현재 자치분권 실태 - 경기도 자치분권 모델 개발 검토 등

(3) 인사제도 및 공직역량 강화 집중 토론회 (1)

주제	인사제도 개선, 공직역량강화 및 특사경 강화 방안
일시	6월 28일(목) 14:00, 15:00, 16: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이필신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등 관계자 -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등 관계자 -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등 관계자
주요 논의 사항	-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방안 - 공직역량강화 방안 - 특사경의 증원 관련 필요사항 - 특사경 전문화를 위한 교육, 인사제도 개선 방안 - 인수위에 접수된 특사경 관련 민원 처리 방안

(4) 안전 및 특사경 조직개편 집중 토론회 (2)

주제	CCTV 설치, 치안전문관, 특사경 조직개편 관련
일시	7월 2일(월) 13:30, 14:00, 16:30
장소	융기원 안전행정분과 사무실
참석자	- 김정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영상정보팀장 등 관계자

	- 자치행정과 치안전문관 등 관계자 - 류호국 기획담당관실 조직팀장 등 관계자
주요 논의 사항	- CCTV 설치 현황과 향후계획, CCTV 효과 획득의 기술적 장애 요인, 도농복합지역 설치 방안 등 - 치안전문관의 역할, 자치경찰제 도입방식, 시민순찰대 운영 방안 등 토론 - 특사경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방안 등 토론

(5) 인사, 특사경, 안전분야 집중 토론회 (3)

주제	인사혁신, 특사경 조직개편, 안전분야 공약 관련
일시	7월 4일(수) 10:20, 14:30, 16: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 김상덕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등 관계자 -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등 직원 - 안전분야 관련자
주요 논의 사항	- 인사혁신에 방안 토론 - 특사경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에 대한 인사과 의견 수렴 - 안전분야 공약 이행방안 관련자 면담

(6) 인사혁신 관련 노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주제	인사혁신 공약 관련
일시	7월 5일(목) 10:00
장소	융기원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 경기도통합노조 대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등
주요 논의 사항	- 노조애로 청취 - 인사혁신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7) 조세정의 실현 관련 집중 토론회

주제	조세정의 실현, CCTV 확대, 안전한 경기도만들기 공약 관련
일시	7월 6일(금) 10:30, 13:1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 이종남 세정과 세외징수팀장,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장 - 김정호 정보통신담당관 영상정보팀장 등 관계자 - 재난재해안전전문가 기성호 박사
주요 논의 사항	- 조세정의 실현에 관한 의견 수렴 - CCTV 확대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 - 안전한경기도 만들기 추진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8) 재해재난 방지대책 간담회

주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공약 관련
일시	7월 6일(금) 15: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 재난재해안전전문가 기성호 박사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의 재해 재난 체제 개선 방안 -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성 및 각 기능 유기적 운영방안 - 산업재해 안전관련 훈련센터 민간시설 이용 및 신설 필요성

(9) 자치경찰제 관련 간담회

주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일시	7월 10일(화) 14: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최관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 등 관계자
주요 논의 사항	-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자치경찰제 경찰청 방안 청취 - 경찰청 주요 의견 : 치안효율성, 분권이념 구현, 재정부담 완화, 국민혼란 최소화 등 - 서울시 자치경찰제 안 비교 및 질의응답(재정, 조직 등) -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시 배정 예상 인력 및 시설 - 경기도 경찰 증원요청 공약관련, 경찰청 자치경찰 계획 중 경기도 자치경찰 인력증원 요구 - 치안보좌관 파견 관련 협조

(10) 범죄예방환경 설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제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티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일시	7월 9일(월) 16:00~17: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경찰대 노성훈 박사 및 분과위원 총 4명
주요 내용	- 기존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활용 평가 - 민선7기 셉티드 추진계획 : 전담팀 신설 및 업무 범위 논의 등 - 경기도 실정에 맞는 셉테드 모형을 개발 필요성 - 셉테드는 주로 구 시가지 재생에 적절한 기법으로서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도로관리, 가로조명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작업에 참여토록 방향설정

(11)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제	경기도형 지방분권 도입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일시	7월 11일(수) 15:00~17:00
장소	경기연구원 8층 소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 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 등 분과위원 총 4명
주요 내용	- 경기도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 필요성 논의 - 집행부-의회간 협치방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12) 범죄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제	범죄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간담회
일시	7월 11일(월) 15:00~17: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 송주영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및 분과위원 - 4차산업혁명특위, 빅데이터담당관, 특사경 총 15여 명
주요 내용	- 범죄통계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경기 구축 방안 - 빅데이터 활용, 안전관련 정책수요 및 성과 분석 방법 -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비)정형화 자료 구축 방안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보 마인드 개선

❍ 현장방문

(1)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 위한 현장방문

주제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
일시	6월 25일(월) 13:30~16:30
장소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참석자	성남시 관계자 및 분과위원 총 9명
주요 내용	- 시민순찰대 운영 현황, 성과 - 시민순찰대 확대 애로사항 청취 및 실질적 범죄예방 등 성과 실현을 위한 방안논의 - 형광도포사업 및 블랙박스 나눔사업 현황 및 성과 확인

(2) 재난통제 및 지휘체계 관련 현장방문

주제	공약사항 관련 현장방문 의견 수렴
일시	6월 26일(화) 09:30~12:00
장소	경기도 재난안전관실- 종합지휘센터, 남부센터
참석자	재난안전본부 관계자 및 분과위원 총 18명
주요 내용	- 상황실 운영체계 보고 및 신고 출동체계 - 출동차량별 적정인원 배치현황 및 장비적재여부 (화재진압요원 및 구급대원 출동여부 등) - 개인장비 적정성 여부

(3) 체납세 징수 관련 현장방문

주제	공약사항 관련 현장방문 의견 수렴
일시	6월 29일(금) 14:00~17:00
장소	성남시 세원관리과
참석자	성남시 관계자 및 분과위원 총 8명
주요 내용	- 체납세 징수 관련 성남시 체납징수반의 정책현황 및 성과 - 체납전담반 운영시 애로사항 파악 - 도정 적용 시 예상문제점 토론

(4) CCTV 확대 관련 현장방문

주제	공약사항 관련 현장방문 의견 수렴
일시	7월 2일(월) 13:30~14:30
장소	성남시 정보화정책과
참석자	성남시 관계자 및 분과위원 총 4명
주요 내용	- CCTV 등 방범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 방안 - 방범효과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의견 수렴

(5) 특수대응단 관련 현장방문

주제	공약사항 관련 현장방문 의견 수렴
일시	7월 9일(월) 13:00~17:00
장소	경기도 특수대응단
참석자	특수단 관계자 및 분과위원 총 7명
주요 내용	- 특수구조 및 해난사고 관련 현황 파악 - 문제점 개선사항 논의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안전행정분과 전체 회의 매일 개최, 위원별 역할 분담 및 현안 처리, 공약과제 이행 방안 등 검토
- 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전 점검 사항 및 사후 평가
- 분과 내부 팀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 당초 분과 전체적으로 역할분담된 공약사항 및 쟁점 관련 질의 내용과 주제, 요구자료 등을 위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리

가. 총무과

질의내용	요구자료	
	주제	내용
(1) 워라벨이 잘 지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주 52시간 근무 관련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가?** **(3) 복무관리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가?**	시간외 근무시간	- 총 시간외 근무시간(16, 17) -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 및 지출액 - 타 광역 시/도 비교 및 시사점 (전체 비교가 어려울 경우 서울만 비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 공무원 현원 및 직급(16, 17) - 현재 근무부서(18) - 타 광역 시/도 비교(전체 현원 중 비율)
	출장	- 총 출장인원과 건수(17) - 여비 지급액(17)
	공가 및 병가	- 공가 및 병가 인원 및 일수(17)

나. 자치행정과

질의내용	요구자료	
	주제	내용
(1) 도지사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심, 특히 **도민우선, 도민중심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2) 자부심 넘치는 경기퍼스트를 위한 도지사 공약 중 **지방분권(사무, 인력, 조직, 재정)에 관한 추진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있는가?** 있다면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경기도가 받는 기대효과 또는 구체적인 수치는 고려하고 있는가? (3) **31개 시/군 주요 갈등 내용 및 건의사항**은 무엇인가? (4) 비영리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가?	도민청원제, 도민발안제, SNS 소통관제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도민 청원내용 및 건수(17) - 주요 청원내용 분석(17) - SNS 소통현황(17) - 플랫폼 구축여부 및 예산현황(17)
	지방정부 행정, 재정, 입법자주권 확보	- 경기도형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여부(17) - 사무분석 → 인력산정 → 조직자율권 → 지방분권에 따른 증가재정 추정 등 - 기대효과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1개 시/군 주요 갈등 및 건의사항	- 자치단체 갈등내용 현황(17 현재) 및 해결가능성 여부(경기도/중앙부처 중재필요, 단/중/장기 등) - 자치단체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 정리(17 현재)
	비영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 비영린단체 현황(17) - 예산지원금액 및 내역(17)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	- 위원회 현황(17) - 위원회지원금액 및 내역(17) - 위원회 활성화 정도(모임숫자, 위원회별 인력 등)

다. 인사과

질의내용	요구자료	
	주제	내용
(1) 새로운 경기, 경기 퍼스트 실현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과 내용은 무엇인가?** (2) 경기도 공무원의 전문성(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3)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 가? 서울시와 비교 시 차이가 있는가? (4)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제도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5) 전문직위제 도입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6) 공무원 징계 현황은?	인사혁신 방안과 내용	- 예를 들어 5대 인사혁신(채용-배치-승진-전보-교육 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재 인사 관련 문제점 정리
	공무원 전문성 수준	- 경기도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이나 업무 만족도 관련 자료가 있는 지? -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공무원 종류	-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수 - 일반직 중 임기제, 시간임기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와 재직 과/팀 명칭 - 서울특별시와 공무원 수, 직급 등 비교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타 광역시/도 승진년수 비교 및 시사점
	전문직위제 도입	- 전문직위제 도입현황과 문제점 - 향후 운영계획
	공무원 징계	- 최근 2년(16-17) 공무원 징계 현황
	파견 및 장기교육	- 국내외 파견자 수 및 장기교육자 수
	육아휴직자수	- 최근 2년(16-17) 육아휴직자 수

라. 언제나 민원실 / 세정과 / 세원관리과 / 회계과

질의내용	요구자료	
	주제	내용
(1)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무엇인가? (2) 주민들의 민원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가? (3) 콜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민원 보이스를 분석하고 있는가? (4) 새로운 민선7기, 민원 혁신 방안이나 개선 방안은 갖고 있는가?	민원	- 도민 민원현황(17) - 주요 민원내용(17) - 해결여부(17)
	콜센터 운영현황	- 콜센터 최근 2년 운영현황(인력, 예산 등) - 콜센터 주요 기능 - 민원 보이스 분석여부
	민원 혁신방안	- 민원접수 - 대응 - 회신 등 각 단계별 혁신방안 - 개선사항 등
(1) 경기도 향후 4년간 세수추계는 얼마나 될 것인가? (2) 체납자 수 증가여부와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3) 경기도에서 시행가능한 신 체납징수기법은 무엇인가? (4)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에 따라 경기도에 증가하는 재정규모는 얼마인가?	세수추계	- 전체 규모 - 세부 내역별 추정 등
	체납자 수	- 전체 체납자 수(17) - 체납징수 현황(17) - 체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유재산	- 경기도 공유재산 목록 및 현황(18) - 타 광역 시/도 비교 및 시사점(전체 비교가 어려울 경우 서울만 비교)
	예산이월	- 예산 이월 규모(16-17)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규모(16-17) - 최근 2년(16-17) 2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및 내용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 세입 구조 개선(8:2 → 6:4)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로 받게 되는 재정 규모 추정

마. 특별사법경찰단

질의내용	요구자료	
	주제	내용
(1) 특별사법경찰단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특별사법경찰단 운영현황과 및 성과	- 최근 2년(16-17) 운영현황(인력, 예산 등) - 주요 성과
(2) 특별사법경찰단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3) 특별사법경찰단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특사경 확대분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상 특사경 확대분야 - 현재는 원산지, 식품, 의약,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6개 분야
(4) 자치경찰제 도입 시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특사경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 제도개선, 자원확대(인력, 조직, 예산 등) 방안

(2) 분과 내 팀 활동

-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도를 반영, 분과를 안전팀, 행정팀, 재정팀 등 총 3개 팀으로 나눠 활동 강화
- 안전팀(박세종, 탁종연, 조항진, 배석홍, 문현수)
- 행정팀(권석필, 최현덕, 신원부, 이상범)
- 재정팀(우지영, 김경윤, 서한석, 최현덕)
- 팀별로 자체 토론, 타 분과 및 공무원과의 연석회의 등 수시 개최

❍ 보도자료 제공(총 6건)

(1) 도청 방역·소독제 인체유해성분 도민 건강 위협(6.27)

- 도청에서 사용하는 방역과 청소 소독제에 발암 유발 물질이 들어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 실태전수조사 등 강력한 대응 필요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6곳, 여성 임원 단 한 명도 없어(7.2)

- 24개 도 산하 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 평균 14%에 불과하고, 6곳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어 '여성임원 임용 목표제'등 여성 친화적인 대책 필요

(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능 강화(7.9)

- 식품위생, 환경 등 기존 특사경의 역할과 기능을 금융과 경제 등까지 대폭확대, 국민들의 일상안전 확보 주력할 예정임

(4) 수 천 억 체납액, 강력 징수한다(7.10)

- 약 6천 여 억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체납기동반을 확대하고 고액·장기·상습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 기틀 마련

(5) 소방관 동행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7.13)

- 150명 이상 대규모 학생 수학여행 또는 현장체험시 현직 소방관 동행, 현장확인부터 긴급구조까지 실질적인 안전 책임관 역할 수행
- 수행여행이 집중되거나 소규모 행사인 경우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체 투입

(6) 법망 사각지대 놓인'경기동북부지역'지원조례 마련한다(7.15)

- 오랜 세월 수도권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을 위해 상수원, 군사 분야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동북부 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보상법 제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 개정 조속 추진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자치행정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복수노조 갈등예방 위한 노사운영	4	특별사법경찰단 기획 수사 및 홍보
2	도세 징수목표 달성	5	도세 행정소송 적극 대응
3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6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배치

나. 주요 논의 사항

- 단체교섭 등 주요 사안에서 3개 복수노조별 대표성 보장 및 대응방안
- 국토보유세 신설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 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입예측 방안
- 도유지 매각 등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방안
- 민선7기 지사님 도정철학에 맞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강화 및 전문화 이행방안

다. 자체평가

- 도와 시·군의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의사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시장·군수 중심의 정책 집행 원칙으로 각 시·군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함
-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설적인 협치시스템을 설치하는 협치위원회 구성 검토 필요
- 도·시군 상생협력으로 지방자치 인프라 구축 사업 : 공약인 '정책협력위원회'로 대체
- 굿모닝하우스 개방 운영 : 게스트하우스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인재개발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직급별 역량에 맞는 필수교육 도입	3	민선7기 도정과제와 공직가치 교육
2	교육운영 체계 혁신을 위한 스마트 강의실 운영		

나. 주요 논의 사항

- 부서 배치 전 신규 공무원 사전 교육 의무화 방안
- 협동심 고취를 위한 집체 교육 강화 등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 민선7기 지사님 도정 철학 및 핵심 가치 조기 교육 방안
-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실질화 방안

다. 자체평가

- 중단 또는 폐지할 사업은 없으나, 지사님의 도정 철학 및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해 특별 공직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

(3) 재난안전본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부족 소방인력 충원 및 소방관서 보강	5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2	예방중심 정책강화로 안전인프라 구축	6	특수재난대응 및 도민 생활안전 교육훈련시설 확충
3	경기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7	권역별 광역방재 거점센터 구축
4	안전관리 취약분야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감찰		

나. 주요 논의 사항

-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력 확보를 위한 4개년 중기계획
- 활동장비 지급 및 봉사의식 고취 등 의용소방대원 활동의 내실화
- 고층빌딩, 전통시장 등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 점검방안
-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관 피해 구제 방안

다. 자체평가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구축 : 행안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 투자가 예상되므로 향후 사업 중단
-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 교육 운영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추가 사업은 중단하고 기존 개발된 시뮬레이션 8종은 향후 적정 규모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시 보급 활용
- 안전대동여지도 사업 : 추가 사업 확대 없이 현 시스템 활용해 서비스 지속 제공하되, 최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 분야로 재배치

(4) 균형발전기획관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비상대비 체제 확립	3	북부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 인프라 구축
2	도내 주민불편 군사시설(낙석) 개선	4	영평 사격장 관련 갈등관리

나. 주요 논의 사항

- 김영우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조기 제정 추진
- 평화시대에 걸 맞는 관·군 실질적인 협력 방안
- 제2청에 대한 인사, 예산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다. 자체평가

-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는 전 일정 해외 방문으로 예산낭비 사업일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통일교육 대비 실질효과 낮다는 비판 있으므로 중단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4.27)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반영, 경기도가 남북평화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조기 가동 필요
- 접경지역 뿐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컨설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 운영 방향 전환 필요
- 아울러,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등 오랜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위해 신속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

❍ 공약사업

(1) 자치행정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②	지방분권 추진 주도*	17-①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12-①	광역체납 기동반 인력 확대	17-②	시군별 자료 종합정리 및 온라인 공개
12-②	광역체납 시군협조체제 구축	18	치안보좌관제 도입
13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19	자치경찰제 준비
14-①	납세기피, 고액 체납자 압류 및 공매 등 추진	21-②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14-②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147-①	순찰 및 생활밀착형 일상범죄로부터 방범활동
15-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및 홍보강화	147-②	안전취약요소 일상적인 점검 및 시정조치 요청 활동
15-②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147-③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활동
16-①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강화	149-②	시민순찰대 경찰 순찰요원 협조하여 등하교길 안전 확인
16-②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 참고 : 선과위 등재 누락된 공약임

나. 주요 논의 내용

- 팀 인력 증원, 시군간 협력체제 강화, 실태 전수조사 등 광역체납기동반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국 단위 규모로 특별사법경찰단 조직과 인력 확대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전문성 강화 방안
- 경찰청안과 서울특별시안을 기반으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 성남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민순찰대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 2022년까지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도청과 공공기관의 관리직(임원 포함) 여성 비율 제고 방안

(2) 재난안전본부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65-③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보급	144-②	사물 인터넷 기반 무인 스마트 화재 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142-①	안전예산을 최우선 확보하고 효율적 집행위한 제도개선	145-①	의용 소방대원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142-②	재해안전 예방을 위한 경기안전 특별점검단 확대 운영	145-②	AI, 구제역 등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체계 개선
142-③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점진적 확대 실시	146-①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및 장비보강, 찾아가는 응급서비스 강화
142-④	안전점검 청구제 확대 실시	150	소방관 동행제
142-⑤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151-①	소방안전 및 긴급대피 현장체험 교육 실시
142-⑥	현장지휘 실무훈련 강화로 소방조직 현장대응 조직으로 혁신	151-②	의용소방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운영
143-①	현장 소방인력 단계별 충원	152-①	방범 CCTV 확대 설치
143-②	지역별 소방, 재난 수요를 고려한 인력배치	152-②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도입 추진
143-③	소방차량,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152-③	범죄감소 효과가 입증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144-①	재난통제 정보통신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52-④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확대

나. 주요 논의 사항

- 2022년까지 4개년간 법정 부족분 소방인력의 단계적 확보 방안
- 31개 시군 전역으로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
- 소방관 동행제 실행을 위한 전·현직 소방관 필요인력 규모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실질적인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확대 방안

(3) 균형발전기획실

가. 해당 공약

	공약
136-①	국회 계류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나. 주요 논의 사항

- 방폐장 주변지역 지원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등 유사 법률 검토를 통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조기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전략
-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추가해야 할 구체적인 지역주민 지원대책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지방분권 추진 주도(1,300만 도민 이익 대표) (1-②, 자치행정국)
○ 광역체납 기동반 인력 확대 (12-①, 자치행정국)
○ 광역체납 시군협조체제 구축 (12-②, 자치행정국)
○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13, 자치행정국)
○ 납세기피, 고액 체납자 압류 및 공매 등 추진 (14-①, 자치행정국)
○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14-②, 자치행정국)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및 홍보강화 (15-①, 자치행정국)
○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15-②, 자치행정국)

○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강화 (16-①, 자치행정국)
○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16-②, 자치행정국)
○ 도내 민생범죄 발생현황 및 단속실적 분석결과 정리(17-①, 자치행정국)
○ 시군별 자료 종합정리, 분석 데이터 온라인 공개(17-②, 자치행정국)
○ 치안보좌관제 도입(18, 자치행정국)
○ 자치경찰 준비(19, 자치행정국)
○ 도정의 실질적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21-②, 자치행정국)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보급 (65-③, 재난안전본부)
○ 국회계류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136-①, 균형발전기획실)
○ 안전예산을 최우선 확보하고 효율적 집행위한 제도개선 (142-①, 재난안전본부)
○ 재해안전 예방을 위한 경기안전특별점검단 확대 운영 (142-②, 재난안전본부)
○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점진적 확대 실시 (142-③, 재난안전본부)
○ 안전점검 청구제 확대 실시 (142-④, 재난안전본부)
○ 전통시장, 고층건축물,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142-⑤, 재난안전본부)
○ 현장지휘 실무훈련 강화로 소방조직 현장대응 조직으로 혁신 (142-⑥, 재난안전본부)
○ 현장 소방인력 단계별 충원 (143-①, 재난안전본부)
○ 지역별 소방, 재난 수요를 고려한 인력배치 (143-②, 재난안전본부)
○ 소방차량,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143-③, 재난안전본부)
○ 재난통제 정보통신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44-①, 재난안전본부)
○ 사물 인터넷 기반 무인 스마트 화재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144-②, 재난안전본부)
○ 의용소방대원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145-①, 재난안전본부)
○ AI, 구제역 등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체계 개선 (145-②, 재난안전본부)
○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및 장비보강, 찾아가는 응급서비스 강화 (146-①, 재난안전본부)

○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147-①, 147-②, 147-③ 자치행정국)
○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소비자 안전 강화(148-①, 자치행정국)
○ 통학로 및 학교 위험요인 제거, CCTV(149-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통학로 및 학교 위험요인 제거, 시민순찰대 및 경찰순찰요원 협조 등교(149-②, 자치행정국)
○ 소방관 동행제 (150-①, 재난안전본부)
○ 소방안전 및 긴급대피 현장체험 교육 실시 (151-①, 재난안전본부)
○ 의용소방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운영 (151-②, 재난안전본부)
○ 방범 CCTV 확대 설치 (152-①, 재난안전본부)
○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도입 추진 (152-②, 재난안전본부)
○ 범죄감소 효과가 입증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152-③, 재난안전본부)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확대 (152-④, 재난안전본부)

6. 정책제안 및 과제

1.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 안전행정분과는 당선인의 공약 중 올 하반기에 우선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검토한 결과, 모두 14개 사업 총 225.75억원을 요구
○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당선인의 도정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단 증원 및 조직 확대와 전문성 강화, 시민순찰대 운영,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소방 인력 및 차량, 장비 등 소방력 확충 등 안전 공약과 함께 경기도형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한 추진기구 설치와 연구가 주요 사업임
○ 특히 경기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천사보호”운동을 통해 어린이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을 반영

추경 목록	금 액 (단위:백만원)
1.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1,116
2. 특별사업경찰관 전문화	130
3.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70
4. 자치경찰제 준비	150
5. 시민순찰대 확대운영	90
6. 재해안전과 예방점검	198
7. 통학로 및 학교 위험요인 제거	594
8.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CCTV등 증설)	6,390
9.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CEPTED)	100
10. 범죄안전 지역환경 조성(아동·어르신 “천사보호”운동)	1,970
10. 안전 예산을 최우선 확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1,376
11. 소방차량,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장비 보강	8,247
12. 자살예방	196
13. 교통사고 줄이기	1,548
14. 지방분권 추진 주도	400
합 계	**22,575**

2. 조직개편안 검토

❍ **안전행정분과는 신속한 공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 개편 방안을 요구**

(1)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 신설

○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새로운 인권수요를 충족하고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수준 달성 필요

○ 현행 1팀 규모의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업무 수행 불가

○ 도지사 직속의 인권담당관(4팀 18명)을 신설, 인권 정책 기획과 보호, 교육과 협력 사업까지 수행, 인권에 앞장서는 경기도 구현 필요

(2) 재난안전본부를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로 분리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소방청 독립과 행정안전부 신설로 소방과 재난안

전 주무부서가 이원화되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소방조직과 재난안전 총괄부서가 통합되어 있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려움 상존

○ 당선인의 역점 과제인 특별사법경찰단의 기구 및 인력 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재편 필요

(3)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 각 소방서에 구조구급팀 신설

○ 구조구급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관리 기능 향상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중앙조직(소방청) 구조구급국 →경기도 구조구급과→ 소방서(구조구급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현실화하도록 조정

○ (소방서 구조구급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지역주민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조구급팀 신설

(4) 소방본부에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신설

○ 건축구조 및 생활환경, 신종업소 증가 등 안전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확대 운영 필요

(5) 안전관리실에 국 규모의 특별사법경찰단 신설

○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분야 6개(식품, 의약, 환경, 공중의생, 원산지표시, 청소년)에서 공정한 경기 건설을 위해 6개 분야(불법금융·부정경쟁·방문판매·선불식 할부거래, 복지, 사행퇴폐)를 확대하고 인력 증원에 따라 조직개편 필요

- 특히 경제범죄수사 분야, 경기도 북부지역 관할 조직을 별도의 과 조직으로 구성하여 경기도 내 공정성 제고라는 도정 철학 실현

○ (현행) 행정자치국 산하 특별사법경찰단 1단 7팀을 안전기획관실 산하 민생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공정경제수사과 등 3과 11팀 체제로 개편

- 인원은 현재 103명을 173명으로 70명 증원하고 그 중 17명은 금융, 회계, 디지털포렌식, 경찰, 법률, 범죄통계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

(6) 안전기획실에 생활안전기획과 신설

○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범죄예방, 시민순찰대, CCTV 설치 운영 등 주요 공약을 종합수행할 컨트롤타워 필요

- CCTV 설치운영 정보통신담당관실, 도시재생관련 도시재생과, 도시설계관련 건축디자인과 및 공공택지과, 시민순찰대 추진조직 등 산개한 기능 종합운영

○ 생활안전기획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범죄예방실행팀, 범죄예방환경 설계팀, 시민순찰지원팀 등 3팀 신설운영하고 과장 1, 팀장 3, 팀원 9명 등 총원 13명으로 근무토록 함

(7) 자치행정국에 지방분권추진단 신설

○ 지방자치제도 구현, 자치경찰 준비, 재정분권 등 시급히 실천해야 할 경기도의 지방분권 안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운영 필요

○ 자치행정국내에 지방분권 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자치분권팀, 자치경찰추진팀, 재정분권팀 등 3개 팀을 설치하고 단장1(3-4급 상당 외부 전문가), 팀장3, 팀원7명 등 총원 11명으로 근무토록 함

(8) 도지사 직속으로 갈등보좌관 신설

○ 시군간, 이해집단간 다양한 갈등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갈등조정 보좌관제를 신설

- 시군 또는 실국의 입장의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할 전문가 필요
- 갈등조정관의 주요사무는 갈등협상 교육, 훈련 등 역량강화 및 갈등 협상 조언 제공

○ 갈등조정관은 갈등협상학 전공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 영입하여 임용하되 행정 사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

(9) 도지사 직속으로 치안보좌관 신설

○ 경기도의 열악한 치안여건을 개선하고, 경찰청 및 경기남부청 및 북부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고위 경찰간부를 치안보좌관으로 파견 받아 근무토록 함

- 경찰청에서 고위 간부 1명을 파견 받고,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현직 경찰관 1~2명 파견 받아 보조케 함

○ 주요 근무내용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및 범죄정보교류, 교통사고 줄이기, 경기도 특수 정책 지원협조, 셉테드 확산 업무 수행

(10) 인재개발원 역량평가담당관 신설

○ 새로운 경기,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의 역량개발 및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 특히 공직생애 단계별 교육훈련 로드맵 설계와 역량 평가 과제 개발이 경기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임

○ 그러나 현재 인재개발원의 조직과 인력은 2과 10팀 57명으로 구성되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벅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급별 역량 모델과 교육과정 개발을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직 내부적으로도 「기획-운영-평가-지원」 부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품질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기획운영과 평가가 동일 부서에서 운영되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인재개발원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과 14팀 12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보다 1과 4팀 65명이나 많음

3. 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

○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제고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경기에 적합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이 필요

○ 채용 → 배치 → 전보 → 평가/교육 → 승진 등 전체 인사운영에 대한 혁신 로드맵 마련 그리고 상하좌우 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 인사과, 인재개발원 외부 전문가 주관 하에 전문가, 노조 및 관계자가 참여

하는 인사혁신 TF를 구성하여 경기도 공무원 인재상, 비전과 주요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정책연구가 필요함

4. 공무원 역량 개발 및 평가 강화

○ 계획적 관리자 육성을 위한「직급별 승진 전후 필수 교육 지정」
○ 기획-운영-평가 등 전 교육과정의 체계적 환류와 공직생애 단계별 교육훈련 로드맵 설계로 역량 강화
○ 신규 임용자 교육기간 강화(현행 3주에서 4주로 1주 증가)

5. 학교 및 공원 등을 활용한 재해 대피시설 확충

○ 옥내외 대피소의 균형적인 시설확충
○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 및 운동장을 중심으로 대피소 지정
○ 재해 현황을 고려한 최적 방재거점 설치 위치 및 필요시설에 대한 검토
○ 재해시 임시대피 시설로서 지자체별 광역방재 거점 학교 리모델링
○ 임시 대피소 및 비상물자 창고 거점으로서 지역공원 정비
○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및 시설 정비 예산 확보

6.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 및 적정 기준인건비 산출

○ 경기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타 시도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공무원 인력 규모 추정
○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 인건비 적정성 진단
○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및 예산 확보

7. 도 행정사무의 시·군 이양

(1) 추진배경

○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정철학 중의 하나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과 경기 퍼스트 달성”임

○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경기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지방분권이 필요

○ 지방분권 내용 중 행정사무를 시군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작점으로 기본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

(2) 현황 및 동향분석

○ (국가와 지방 관계) 대통령 국정과제 74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로 이를 위해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추진

-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관련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분화 : 제11조제①항
- 권한 및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에 필요한 법적 조치 마련 : 제11조②항
-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 제11조③항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부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 발굴 및 조정을 추진 중으로 금년 내 최종 이양 사무 발표와“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준비 중임

(3) 정책제언

①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 추진 방법

및 내용,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상세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사무 시·군 이양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② 행정기능과 사무성격 검토

○ 중앙-지방 사무이양과 달리 경기도-31개 시·군의 사무 이양은 행정기능과 사무 성격이 상이하여 사무 이양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은 정부 기능분류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현재 기준정원제) 인력산정 시 활용한 11개 중기능과 52개 소기능은 기초적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상이한 특징(50만 이상 대도시, 50만 미만 도시, 도농복합시, 군 등)이 있어 기능 분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무 성격이 정책기획이나 조사연구가 아닌 집행적 성격,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도 등을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 집행이 되는 지 명목상의 사무는 아닌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특히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무 성격은 선행 연구 결과 56개 유형으로 구분가능, 지원(82건), 명령(29건), 계획수립 및 시행(30건)[13], 부과/징수(26건), 임명/위촉/운영(24건), 등록(17건), 보고/제출(17건), 사업(시책) 시행/추진(17건)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 재정 등의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조직)과 재정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음

③ 구체적인 추진절차 수립

○ 경기연구원 또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경기도 전체 기능과 사무를 분석 → 이를 대상으로 이양원칙(현지성, 주민수요 등 감안)에 따라 1차적으로

13) 계획수립만 하는 경우는 계획수립, 계획수립과 시행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계획수립/시행으로 구분

이양 검토 → 검토된 사무를 대상으로 시군 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 개최

○ 31개 시군과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④ 조직체계 구성

○ 지방분권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분권 및 향후 자치경찰까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단장 : 외부 전문가 3-4급)

○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추진 등

(4) 추진일정(안)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시행 여부 동향파악 : 2018년

○ 도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사무발굴 및 연구수행 : 2018-2019년

○ 시·군 의견 수렴 및 경기도 조례 및 규칙 반영 : 2019-2020년

8. 자치경찰 추진

(1) 추진배경 및 동향분석

○ 대통령님은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를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선정하셨고 자치경찰 추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 특히 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경우 경찰의 기능과 업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 거의 대다수의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입장

○ 반면, 경찰청의 경우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자치경찰을 창설하되 이는 최소한의 기능 이양과 인력(약 4만명 추정)을 고려하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특히 ‘수사권’, 광역 단위의 설치기구, 수행 기능과 인력 규모, 추정 재원 등이 중요한 이슈임

○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관련 사항을 총괄 정리 중이라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경기도형 모델개발)** 서울시의 경우 연구 결과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

- 서울과 비교 시 인구 수도 가장 많고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특성이 달라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

○ **(자치경찰 적정인력 산정)** 경찰청 입장은 전국 자치경찰 규모가 약 4만명으로 경기도의 경우 자치경찰 수행 기능과 인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분권추진단 설립 또는 T/F를 통해 정밀 검토

(3) 추진일정(안)

- 자치경찰 추진 관련 동향 파악 : 2018년
- 지방분권추진단 설립 시 경기연구원 및 전문가와 정밀 연구 : 2018-2019
-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 결과 발표 : 2019
- 의견 수렴 및 경기도 조례 및 규칙 반영 : 2019-2020년 이후

9.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 약자 아동·어르신 "천사보호"운동

○ 최근 치매노인이 늘면서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수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실종시 최단 시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GPS를 이용한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지원

○ 아동대상 범죄사건도 빈발하여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아동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스마트 키즈폰 지원

❍ 현황

- 치매 노인의 실종 사건이 빈발하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

보), 경찰청 등에서 노인의 위치를 GPS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보급 중

-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인천광역시*등 지자체에서 자체 CCTV 안전망과 연결된 스마트 키즈폰 보급 사업 중

※ 만 7세에서 10세 취약 계층(국민기초,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정) 아동 6,500명

❍ 필요성

- 최근 치매노인이 늘면서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수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 아동대상 범죄사건도 빈발하여 부모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음
- 치매노인과 아동의 안전을 4차 산업기술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안전 인프라 구축

❍ 정책 목표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실종시 최단시간 귀가조치로 안전확보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불안요인 제거 및 삶의 만족도 제고

❍ 기대효과

○ 치매노인 실종사고 감소 및 실종노인 추적시간 단축

○ 아동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감축

❍ 사업 추진 내용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포)

(1) 배회감지기 개요

- GPS를 칩을 통해 통신사망으로 위치신호를 자동으로 쏘는 방식으로, 보호자가 핸드폰으로 요보호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 시계형, 목거리형, 열쇠고리형 등 모양이 있음
- GPS 기계비와 통신비를 합쳐 월 이용료(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2) 대상자와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자이나 이중 1, 2등급은 거동이 불편해서 실제 대상이 되기 어려움. 경기도 내 비수급자 중 3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약 75,486명으로 추정

<표> 18년 5월 현재 경기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현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4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소계
합계	142,348	11,036	19,194	50,152	49,433	11,174	1,359	112,118
비수급자	95,908	7531	12891	33,771	32,764	7,908	1,043	**75,486**

- 월 이용료는 건보에서 85%, 개인이 15%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 의료 급여자는 7.5%만 부담하게 됨
- 월 이용료는 제품별로 다르며 건보 승인 제품의 월 이용료는 19,800원에서 26,900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2,970원에서 월4,030원
- 단, 현재 고시 중인 신형 제품 2종은 월 이용료 9,900원으로 본인 월 부담금 1,485원으로 연 17,820원임

○ 각 시군과 협조, 주민센터 또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노인장기보험등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자로부터 신청 받아 배회감지기 배포

10. 경기도 어린이 천사 지킴이"스마트 키즈폰"지원사업

(1) 스마트 키즈폰 개요

- 아동·부모 간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수발신
- 실시간 아동 위치 및 이동 경로 확인
- 아동 응급호출 시 아동·보호자·경찰 삼자통화
- 아동 응급호출 시 지역 CCTV 관제센터에 인근 CCTV화면 표출 등으로 차량 갇힘, 미아, 폭력 사건 등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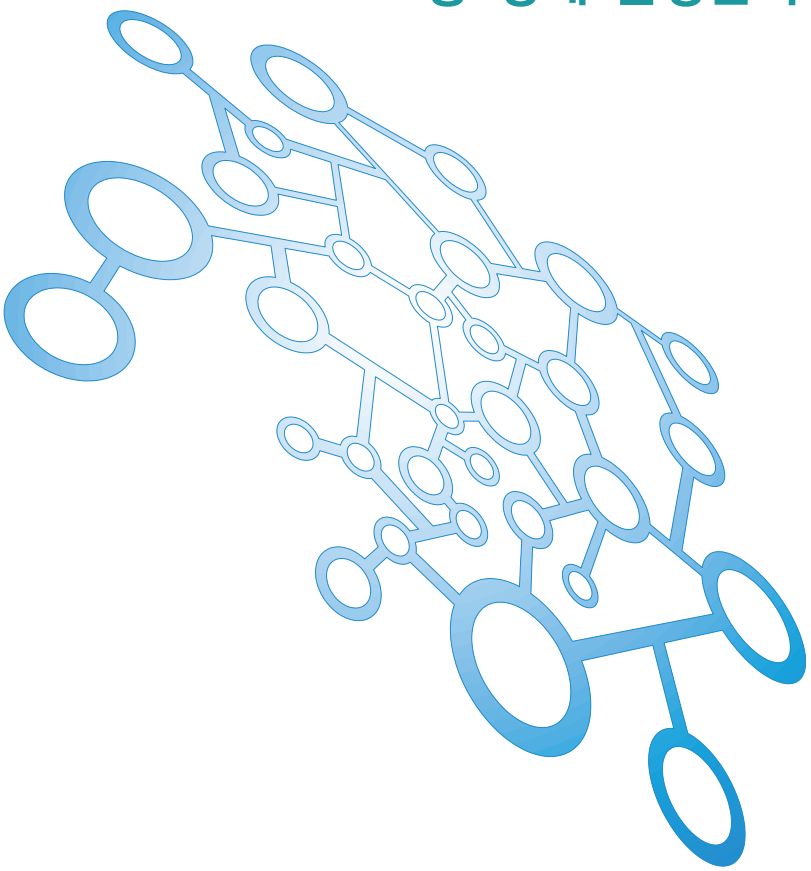
(2) 대상자와 비용

-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만 7세에서 10세에 해당하는 아동 4,016명(4개 유형별로 각각 1,004명)
-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용 후 사업성과 분석 및 의견 수렴을 반영해 추가 대상자 선정 여부 판단
- 비용은 단말기 구매비용, 유심 구매비용, 통신료, 부가서비스(위치조회 기능 및 초록 버튼 응급호출 이용료)임

인천광역시 스마트 키즈폰(바다라) 지원사업 사례

- 지원대상자 : 인천시 관내 취약계층 아동 대상(약 6,500명)
- 주관부서 : 인천시 안전정책과 이홍열 주무관 (032-440-5737)
- 총 사업비 : 10억원(인천광역시 전액 부담)
- 사업기간 : 2018년 추진 중으로 대상자 및 단말기 확대에 따른 지원기간 추가 가능
- 서비스개요 : 지자체 CCTV 안전망과 연계한 스마트 키즈폰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만7세 ~ 만10세 이하 취약계층(국민기초,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 지원내용 : 통신형 안심단말 및 유심비, 통신료, 부가서비스 비용 지원

노동·경제·환경분과



1. 구성

○ 위원장 : 이용득

○ 부위원장 : 오완석

○ 일자리 단장 : 이규민

○ 간사 : 허익수

2. 활동방향

❍ 경기도정의 정확한 업무 파악에 기초한 공약점검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각 소위별 위원체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노동, 경제, 환경, 공유경제소위 구분 및 위원 배분
- 소위 위원별 공약 이해도 수준 조율
- 각 소위별 토론회 및 공약점검 회의 진행

❍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활용

- 현장점검, 간담회, 업무보고 등 인수위 활동 참여
- 공약점검 및 평가제언 등에 전문성 제고

❍ 1일 1회 분과회의 및 수시 소위 회의체제 운영

- 유기적 운영체계 확립
- 철저한 공약검증 및 이행 로드맵 수립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9개과 및 국제협력관 3개과, 환경국 5개과, 수자원본부 4과, 보건환경연구원, 공유경제시장국 2개과 (총 1실·3국·1관·1사업소·1직속기관 · 1출장소, 7개 기관)

❍ 공약 관련 기타 실국 및 기관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일자리노동국 신설), 예산담당관(노동인지예산제도), 평가담당관(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경기도시공사 및 도시주택실(7개 TV와 산업단지 조성), 건설국 하천과(물관리일원화 방안), 축산산림국 산림과, 녹지과(북한숲 가꾸기 지원사업, 선형공원 조성)

❍ 업무보고 - 분과 전체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예비	6월 20일(수)	16층 소회의실	14:00~16:00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분과 내부 워크숍
1차	6월 22일(금)	16층 소회의실	09:30~19:30	경제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일자리재단, 경기TP/경기대진TP,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차	6월 28일(목)	소회의실	09:30~19:30	경제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일자리재단, 경기TP/경기대진TP, 차세대융합기술원
		104호	09:30~19:30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3차	수시	• 각 소위(노동, 경제, 환경, 공유경제)별 수시·분야별 업무보고 청취 ※ 주요내용은 p3이하 세부 기재		

(2) 업무보고 내용

○ 1차 업무보고

- 현재 사업현안, 전체 현황 중심 보고 및 청취
- 2차 업무보고 시 제출할 보완자료 요청
-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 2차 업무보고

- 공약 중심 업무보고 청취(도지사 취지 반영, 소요 예산 및 문제점 등)
- 1차 업무보고 시 요청한 주요 현안 자료 검증
-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토론

❍ 업무보고 - 3차 소위별

(1) 업무보고 일정 및 내용

가. 경제소위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5(월)	1층 세미나실	15:00:~16:00	경기신용보증재단
- “빚 탕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유 부실자산 현황 - 채권소각 등 적극적인 부실자산 관리 계획				
2차	6월 27(월)수	1층 세미나실	15:00:~16:00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유 소멸시효 완성 채권 보유현황 및 소각 가능성 타진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유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연대보증 채무 동시 소각 방안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개선방향				
3차	6월 27(월)수	1층 세미나실	16:00~17:00	경기도시공사
- 노후산단 중장기 대책 - 새로운 산단 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 및 현 테크노밸리 관리의 타당성				
4차	7월 5일(목)	창업지원 센터	14:00~16:00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2007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관 시 장단점 논의				
5차	7월 6일(금)	바이오센터	15:~18:00	산업정책과, 공공택지과, 도시주택정책과, 과학기술과
- 공공주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테크노밸리 공약 관련 검토 * 산단 난개발 방지 위한 계획적 공급 방안 검토보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현황 - 제안 및 자료요청 ▲새로운 모델의 산업단지 개발 필요 ▲산단 개발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필요(경제효과분석 등) ▲관련기관 협조 관련 자료 제출 등				

나. 노동소위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7월 3일(화)	경기도 북부청	09:00~18:00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노동정책과

- 각 과 팀별`17년 사업경과 상세 보고 및`18년 사업 현황 청취
- 청년 면접수당 이행방안<기존 청년구직지원금 중복 문제 해결방안 논의>
- 일자리노동국 독립·신설방안 논의
- 일자리재단 사업재조정 및 운영방식 변화 방안 논의

2차	7월 4일(월)	창업지원 센터	12:00~16:00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 일자리노동국 독립신설방안(민간위탁에서 직접설치 및 운영으로 정리)
- 일자리노동국 산하 노동협력정책관(개방형 임기제) 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 노동인지예산제도 공약 세부이행 계획 논의

3차	7월 9일(월)	창업지원 센터	10:00~16:00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노동정책과

- 공약세부이행 계획 관련 보고 청취 및 논의
- 담당 공약 관련 세부이행 계획 변경 요청
- '안전체험관'유치 관련 담당 부서 명확화 필요 요청(산업안전 담당)

다. 환경소위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7월 2일(월)	대회의실	09:00~18:00	하천과, 에너지과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하천과 수자원 본부 이관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
- 4대강 재자연화 정책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책 수립 필요성 요청
- 환경국의 환경에너지실로의 개편안 필요성 설명 및 제안
- 에너지과를 환경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검토 요청

2차	7월 3일(화)	2층 공개룸	10:00~16:00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교육팀을 환경교육과로 격상 필요성 논의
- 지방선거시 발생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문제제기
- 경기도 환경진흥원 설립 필요성 설명 및 제안

3차	7월 4일(수)	2층 공개룸	10:00~16:00	에너지과, 수자원본부, 산림과, 환경정책과

- 경기도 물산업 지원센터 필요성 및 운영방안 보고청취
- 축령산 일원 산림복지 서비스 특화지구 지정(안) 및 경기도 하늘향기 추모원(수목장림) 조성계획(안) 보고청취
-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 설립안 논의

4차	7월 5일(목)	2층 공개룸	10:00~16:00	공원녹지과

- 경기도 정원문화사업 추진 및 민선7기 주력사업 업무보고 청취
- 추모원 (수목장림) 조성계획(안) 보고청취
-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산하기관 설립안 논의

라. 공유경제소위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6일(화)	A104호	14:00~18:00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현안, 이행방안

2차	7월 3일(화)	A104호	14:00~18:00	공유시장경제국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 및 분리 등 타당성 검토
- 사회적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 현장방문

(1)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현장 (경제소위원회)

- 6월 26일(수) 09:00
- 현덕지구, 평택 BIX의 현황 청취.
  - 부품 소재 기업 유치 및 개발 계획 변경 가능여부 타진, 평택 BIX 분양완료 필지 면적 및 기업 현황 확인, 대북 경협시 협력방안 마련 필요 지적,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성 지적

(2) 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경제소위원회)

- 6월 26일(수) 11:00
- 현덕지구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결과 및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이유 청취 등 활동

(3) 고모리에 산업단지, 섬유소재연구원(경제소위원회)

- 7월 12일(목) 09:00 ~ 12:00
- 공약사항 관련 현장 확인
- 경기 북부 섬유 제조업 및 패션 디자인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현장방문

(4) '고모리에' 추진예정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창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7월 12일(목) 1:00 ~ 4:00
- 공약사항 관련 현장 확인
- 현장 시찰(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추진 예정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창진 : 공단내 섬유 날염전문 입주 기업 현장방문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토론회 및 간담회

(1) 노동권익센터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제	노동권익센터 설립방안
일시	6월 26일(화) 14:00
장소	창업지원센터
참석자 (내부/외부)	허익수, 이민우 / 이상원 고양시 비정규센터장 등 5명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 시군별 비정규센터 현황 도 지원 및 확대 방안 도 노동권익센터 역할과 과제

(2)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간담회

주제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마련
일시	6월 26일(화) 14:00
장소	창업지원센터
참석자 (내부/외부)	송종운, 기효성 / 경기도시공사 신보철 판교테크노밸리 단장
주요 논의 사항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마련, 법률, 제도적 제약조건, 예산 제약조건 검토, 노후 산단에 대한 단/중/장기 대책

(3)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소각 등 관리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

주제	부실채권 소각 등 관리 개선 방안
일시	6월 29일(화) 14:00
장소	창업지원센터
참석자 (내부/외부)	송종운 / 경기신용보증재단 홍한표 기획조정실장, 오영문 채권관리부 차장
주요 논의 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연대보증채무 현황 확인.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증 및 채권관리 체계 논의

(4) 산단, TV, TP관련 마스터플랜 마련 간담회

주제	산단 등 마스터플랜 방안
일시	7월 2일(월) 14:00
장소	소회의실
참석자 (내부/외부)	송종운, 이규민, 기효성 / 산업정책과, 도시주택과, 공공택지과 담당자
주요 논의 사항	기존 산업정책과 판교테크노벨리에 추가로 도시 주택 및 공공택지 관련 정책 융합 필요성

(5) 노동존중 강화 공약안 마련 간담회

주제	노동존중 경기도정을 위한 정책제안
일시	7월 2일(월) 14:00
장소	1층 공개룸
참석자 (내부/외부)	허익수, 이민우, 박태석 자문위원(한국 노총 상임부의장)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등
주요 논의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제안 청취 및 논의

(6)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간 개념 정립 등을 위한 간담회

주제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개념정립 및 조율
일시	7월 2일(월) 10:00
장소	10층 콜라보레이션룸
참석자 (내부/외부)	지운근, 오완석 / 이필구(마을센터 협의회 대표), 김학영, 박완기
주요 논의 사항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등의 개념정리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7) 혁신창업지원과 설치 및 중소기업지원 기관 간 업무조정

주제	혁신창업지원과 설치, 중소기업지원 기관 업무 조정
일시	7월 2일(월) 14:00
장소	대학생창업 BI
참석자 (내부/외부)	오완석, 이규민, 박수훈, 김범규 / 경기도 기업지원과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자
주요 논의 사항	창업활성화 등을 위한'혁신창업지원과'설립 타당성 중소기업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조정 방안

(8) 금융소비자보호 센터 설립을 위한 간담회

주제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설립 방안
일시	7월 3일(화) 14:00
장소	203호
참석자 (내부/외부)	송종운, 임진 / 소상공인과장, 서민금융팀장, 주빌리은행 김미경 이사장 등
주요 논의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방안 등 논의

(9) 중소기업 효율적 지원 시스템을 위한 간담회

주제	중소기업 효율적 지원 방안
일시	7월 4일(수) 14:00
장소	대학생창업 BI
참석자 (내부/외부)	오완석, 김범규, 박수훈 / 신기룡 자문위원 등
주요 논의 사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10) 경기도형 노사관계 구축 모색 및 노동현안 청취위한 노사 대표자 간담회

주제	경기도형 노사관계 구축 모색 등
일시	7월 5일(목) 11:30
장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내부/외부)	이용득, 오완석, 김성철, 허익수, 이민우 / 경기경총 조용이 회장, 부회장, 한국노총 경기본부 김용목 의장 등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형 상생 노사관계 정립 방향 모색

(11) 기관간 업무조정 및 공약사항 검토를 위한 면담

주제	기관간 업무조정 및 공약 사항 검토를 위한 면담
일시	7월 4일(수) 15:00~17:00
장소	대학생창업BI(2층)
참석자 (내부/외부)	오완석, 김범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실장, 경기도지역신용보증재단 홍한표 실장, 기업지원과 각 팀장,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팀장, 국제통상과 수출전략팀장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및 업무조정.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계지원이 필요.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는 융자와 보증업무 병행수행 필요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경제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1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 추진 현황
2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
3	평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지원 강화
4	차세대융합기술원 공동법인 출범
5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도 추진계획
	주요 공약
1	사람중심 경제가 실현되는 경기도

2	노동자가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도
3	골목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이 활짝 웃는 경기도
4	좋은 일자리 많은 경기도
5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기도

나. 주요 논의 사항

[노동소위분야]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재정비 필요성
-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실적 부실에 따른 일몰 필요성
- 일자리 고용통계 등 출처와 수치 정확성 필요
-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지원 방안
- '안전교육체험장'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특화된 체험장으로서, 신설독립부서인 일자리노동국 추진 타당
-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 문화 조성은 산단 구조고도화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노동자 편의 및 주거시설 관련 내용 확인

[경제소위분야]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경기도 TF 구성
- 경기도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 산단, TV, TP 리모델링 및 구조고도화
- 차세대융합기술원 공동법인 출범 향후 계획 및 문제점
- 고모리에 산업단지 문제점
- 섬유 및 가구사업 지원 타당성 및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추진계획 마련 주문

- 스마트 공장 사업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검토
- 4차 산업 소관 부서, 안산 사이언스 밸리 추진 현황
- 소비심리 위축, 가계 대출 증가 대비책 필요
- 빚탕감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정책 중요, 대응 방안 및 추진계획 주문
- 지역화폐 추진 관련, 범용성을 갖춘 플랫폼 활용 적극검토
- 상인연합회와 체결한 MOU 관련, 상생 및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요청
-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 도입 필요
- 상권활성화구역지정 관련 법령 완화 및 실태조사·협의체구성·조례개정 필요
- 시장상권과 설치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표(확대, 지속, 일몰 등)
-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 구축 필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대형유통센터 설립 인허가 이전 상권 영향 분석을 통한 민원 완화 대책
- 산업입지/TV/TP 사업의 정책 목표, 평가 지표 확립 필요
- 560억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 시동
- 경기도 중소기업, 창업, 자금정책 현황
-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진흥원이 통합된 경위와 통합 후 창출된 시너지와 문제점
- 중소기업 융자지원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된 경위
- 중소기업지원 기관간 설립 목적에 맞는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2) 환경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시행
2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3	아스콘 제조 사업장 관리
4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5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6	영세사업장 청정 연료 전환사업
	주요 공약
1	정부와 공동으로 노후 건설기계 및 엔진 교체 지원
2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3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TMS 설치대상 확대
4	불법 소각 단속 강화
5	다중 이용시설 초미세 먼지 조사 강화
6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나. 주요 논의 사항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개편 필요 (경제실 에너지과의 환경국으로 이체)
-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산하기관(가칭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필요
- 경기도 산하기관 태양광 발전소 의무 설치 필요
- 공동전기료 제로 아파트 사업 도입 필요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고형 연료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필요
-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폐차 및 엔진교체 필요
-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자부담 비율 50%는 과다하므로, 자부담 비율을 낮춰 많은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 유도 필요
- 영세 사업장 청정 연료 보일러 교체사업 확대 필요
- 수도권 대체 매립지 연구용역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아스콘 제조 사업장은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 영향이 크므로 시설개선,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중국의 재활용 자원 수입금지 등의 이유로 촉발된 재활용 산업 위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

(3) 수자원본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1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
2	팔당호 및 광교저수지 조류(녹조) 관리 대책 추진
3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 계획 수립 추진
4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5	道, 용인·평택·안성 상수원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추진
	주요 공약
1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2	가뭄극복을 위한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3	수질·생태·치수 등 종합 고려한 하천관리 추진
4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연계형 지원제도 마련
5	경기 동부 중복 규제 합리화 및 발전 기반 조성

나. 주요 논의 사항

-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조직개편 필요 (건설국 소관 하천과의 수자원본부로의 완전한 이체)
- 올해 초, 가축 분뇨 대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주문
-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직접 방류량 과다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개인 하수처리시설/개별 축산폐수 처리시설 적법처리 여부 확인 강화 필요
- 폐관정 관리 강화 필요
- 노후 상수도관은 도민이 마시는 물의 수질 문제와 직결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비점오염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물이용 부담금 관련 서울시와 갈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별 상수도 요금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4) 보건환경연구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1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주요 공약
1	대기측정소 확충 및 자동차 배기가스, 공단인근 오염도, 자연발생 암모니아 측정
2	오염발생 원인과 배출량 분석표 작성, 도민에게 미세먼지 건강 지도 공개

나. 주요 논의 사항

-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있었는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기도 발생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구제역 매몰지 및 시군 오염원 수치 파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보건연구와 환경연구의 분리 필요

(5)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산림과)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2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마무리 및 개원
3	녹색의 숲과 쉼

4	엄마 더 놀다 갈께요, 스마트펀(SmartFUN) 놀이터 확대
5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메카, 새로운 경기가든 조성
6	경기, 새로피다! 정원조성 추진
	주요 공약
1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
2	중국발 황사저감을 위한 사막화 방지조림 확충
3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고 경기도 역사유적 탐방길 조성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 우수공원 인증제(GyeongGi Green Flag Award) 도입 필요
- 1,300만 도민들에게 생활권 녹색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정원문화 관련 사업을 꽃 속의 경기(GyeongGi in Bloom)로 브랜드화하고 경기아름다운정원대상(정원포상제도) 등 신규 사업 확대 필요
- 축령산 산림복지서비스 특화지구 지정 필요
- 미세먼지 저감과 차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학교숲, 가로숲, 옥상녹화숲 등)을 적극적인 조성 필요
- 새로운 경기가든 조성계획(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추후 조성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정원문화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립과 마을정원 만들기, 시민정원사 양성 등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확대 필요

(6) 공유경제소위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따복공동체 사업	3	따복 브랜드
2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공약		공약
95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상향	96-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가점확대
97	시군 기관별 공동구매 실시간 DB 제공으로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나. 주요 논의 사항

-‘따복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는 역사와 법률 근거가 다른 정책. 따라서 분리추진 바람직
-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이윤추구와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하는 구조적 모순
-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회사 운영 문제
-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자본잠식 심각. 조속한 청산 필요
- ‘따복’ 브랜드를 ‘경기’ 또는 ‘경기도’로 변경

❍ 공약사업

(1) 경제실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내용
1-7-25-1	취업준비와 휴식을 위한 '경기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1-7-25-3	청년 면접수당 지원
1-8-28-1	道<노동권익센터>설치
1-8-28-2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1-8-29-1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부여하는 법개정 추진 협력·지원
1-8-29-2	산업재해 보상 지원 강화,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교육체험장' 유치
1-8-31-1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조기달성
1-8-32-1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 문화 환경 조성
2-2-44-1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 및 세부 지침 수립
2-2-44-2	시·군별 상품권 구매혜택, 지류상품권 제작, 가맹점 모집등(각시군부담)
2-2-44-3	핀테크 기반의 전자 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 준비
3-1-69-1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구성과운영
3-1-69-2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 경제시스템 구축위한 행정조직 정비
3-1-70-1	불공정 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3-1-70-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1-70-3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3-1-71-1	건설 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 분쟁 상담지원
3-1-71-2	경기도 중재 및 조사권 부여추진
3-2-72-1	지역 화폐발행 관련 조례 및 지침 제정, 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3-2-72-2	공무원 및 산하기관 활용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추진
3-2-72-3	각종 복지지출, 행사 시상금, 경품 등에 확대 적용
3-2-73-1	민간 주도형 전담기구 설치,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3-2-74-1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련 노후시설 정비
3-2-74-2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상업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3-2-74-3	지역문화소통 소재의 골목형 시장 조성

3-2-75-1	5일장 개설지역 등 중심, '벼룩시장(경기공유마켓)' 육성
3-2-76-1	교육 및 컨설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경영지원
3-3-77-1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체제 마련 및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3-77-2	갑을 관계 해소 위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3-3-77-3	대·중소기업 R&D 연계체제구축(인센티브제공등)
3-3-78-1	중소기업 특성화 지원체제 구축
3-3-79-1	법령 및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 발굴·개선추진
3-3-79-2	글로벌히트상품창출위한수출기업지원
3-4-80-1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의 혁신형 제품 상용화, 사업화 시현 공간 제공
3-4-80-2	스타트업기업에전시·판매기능포함하는공간조성
3-4-80-3	제조업집적지역내의제조공장과창업자들을연결하는연계기업유치및육성
3-4-81-1	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존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4-82-1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및 우수기업 증시상장 지원
3-4-82-2	스타트업과 기술창업, 재창업 지원 확대
3-5-85-1	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취업 연결체제 구축
3-5-86-1	산업단지를 노동자 재교육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3-6-87-1	판교 테크노밸리 : 대학 및 기업, 연구개발 시설 입주 추진
3-6-87-2	광교 테크노밸리 : 연구기반 확대, 기업과 네트워크강화
3-6-88-1	판교 테크노밸리 : 자율 주행·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지원
3-6-88-4	안산 테크노밸리 : 스마트공장
3-7-91-1	경기북부 섬유제조업과 및 패션 디자인 콘텐츠를 융합클러스터로 조성
3-8-93-1	주거 및 생활편의 시설 복합형 산단 조성 지원
3-8-94-1	정부 및 지자체, 노동조합, 기업협회 등 참여형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구축
3-8-94-2	작업환경개선,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직원식당 등 생활편익시설 확충 방안 마련
3-11-104-1	5060 신중년 제2인생 설계 지원 강화
3-11-104-2	전문 퇴직자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4-3-115-1	환황해경제권과 서해안경협벨트 구축 지원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기능 확보
4-4-116-4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나. 주요 논의 내용

- 청년공간 입지선정의 중요성 및 청년 니즈를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
- 청년면접수당 지원공약과 기존 청년구직지원금 중복 문제 해소방안
-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지원 방안
- '안전교육체험장'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특화된 체험장으로서, 신설독립부서인 일자리노동국 추진 타당
-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조성은 산단 구조고도화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노동자 편의 및 주거시설 관련 내용 확인
-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 구축 필요
- 산업입지/TV/TP 사업의 정책목표, 평가지표 확립 필요
- 560억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 시동
-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해지가 바람직
- '안전교육체험장'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특화된 체험장으로서, 신설 독립부서인 일자리노동국 추진 타당
- 중소기업특성화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종합지원기관의 존치 필요
- 혁신형 기술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 부서가 없어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 민간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난립 방지
-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강화
-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거버넌스 정립 및 재정지원 확대
- 남부권 테크노밸리 개발 이익의 북부권 테크노밸리 재투자 방안 마련
- 제1판교 전매제한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마련
- 테크노밸리 공약 조정 (안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원으로 변경, 박달→제3판교로 교체)
- 조기 사업이 가능한 신규 테크노밸리 추가 검토

(1-1) 기획조정실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내용
1-8-27-1	노동정책 담당 독립부서 출범추진
1-8-27-2	노동인지예산 방안 마련
1-8-28-3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1-8-30-1	도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1-8-30-2	도 산하기관 용역 및 공사입찰 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 우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일자리노동국’독립신설에 따른 ‘노동협력정책관’개방형임기제 선임 필요성
-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등 검토 필요
- 노동존중 경기도를 위한 체계적 협업적 시스템 구축 필요

(2) 환경국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
4-6-125-1	도내 4천대 디젤버스를 단계적으로 CNG·전기버스로 교체
4-6-125-2	정부와 공동으로 노후건설기계 및 엔진 교체 지원
4-6-125-3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4-6-125-4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과 일반노후 디젤차의 조기폐차 추진
4-6-126-1	도내 사업장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 단계적 축소
4-6-126-2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디지털 굴뚝 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 대상 확대
4-6-126-3	공사장·사업장·논밭폐기물불법소각단속강화
4-6-127-1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조사 강화
4-6-128-1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4-6-128-2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4-6-129-1	정부와 함께 경기북부 인접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현대화 지원

나. 주요 논의 내용

- 상당수 환경공약 담당 부서가 비환경소관 국·실에 산재되어 있었음. 일관성 있는 환경공약 추진을 위해 환경담당 부서의 조직개편 필요
- 경기도는 환경정책을 위한 부서(환경국)는 있지만 집행을 위한 산하기관이 전무한 상태. 환경정책 담당 산하기관 신설 필요
- 경기도 자체 프로그램이 상당수 개발되어 있으나 국가적 보조 부족, 이의 강화를 위한 역제안 필요
- 산업단지 관리(TMS 설치, 드론 감시 확대, 센서 추가)와 지원(오염방지 시설, 보일러 교체 등) 동시에 강화할 필요
-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의 특성(제조업체, 불법소각, 건설기계 등)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정책 지원 강화할 필요
- [공사장·사업장·논밭폐기물 불법소각 단속강화]는 공약 명으로는 협소하여 [공사장 · 사업장 · 논밭 폐기물 불법 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로 변경 필요
- TMS 설치대상 확대를 위해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소기업 등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대신 도비 비율을 높여야 함

(3) 수자원본부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
4-7-130-1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4-7-131-1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상수도 시스템 협력 구축
4-7-131-2	고도정수처리시설확충
4-7-131-3	실시간 수돗물 품질 확인 등 물 공급의 신뢰성·효율성제고
4-7-131-4	대체수원 개발, 물 풍부지역과 부족지역의 연결
4-7-131-5	지역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 :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지하수댐 개발, 노후 지하수 관정 정비 등
4-7-132-1	도시 빗물침투·함양을 높이는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확대

4-7-132-2	축산분뇨 방류기준 강화 및 양분관리제 도입 후 관리 강화
4-7-133-1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연계형 지원제도 마련
4-9-137-3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수계관리의 시·군 자율성 확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안착을 위해 건설국 하천과의 수자원본부로의 이체 필요
-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함 (수자원펀드 조성을 위한 기초지자체-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수계관리의 시·군 자율성 확대]의 수계관리에 대한 시·군 자율성 확대는 현행 법 체계, 제도상 실현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군 자율성 확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보건환경연구원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
4-6-124-1	대기측정소 확충 및 자동차배기가스, 공단인근오염도, 자연발생 암모니아측정
4-6-124-2	오염 발생원인과 배출량 분석표 작성, 도민에게 「미세먼지 건강지도」 공개

나. 주요 논의 내용

-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장비 강화 필요성
- 미세먼지 건강지도 조기 공개 방안 마련

(5) 축산산림국(산림과, 공원녹지과)

가. 해당 공약

공약번호	공약
4-6-129-2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및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
4-10-138-2	전체적으로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간 교류 강화

나. 주요 논의 내용

- 미세먼지 저감과 대북지원사업차원에서 북한 숲가꾸기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대북 여건 변화를 주시하여 2007년 조성한 개풍양묘장 현지 확인과 시설 복구 등 재가동 준비와 연천군, 파주시 등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숲, 가로숲(가로수길) 등 선형공원 확대 시 다층형 식재기법과 띠녹지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녹색체감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6) 공유경제소위

가. 주요 보고 내용

공약번호	공약
3-9-95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율 상향
3-9-96-1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가점 확대
3-9-97	시군 기관별 공공구매 실시간 DB제공으로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나. 주요 논의 사항

- 공공구매 활성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을 직영하고, 경기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리 필요 및 방안
-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기초 중간지원조직간 역할 구분
-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성 강화 제고 방안

❍ 기존사업평가

부서명	제목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경제실	3D 디지털 패션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종료 (100% 국비)	일몰
	일하는 청년 연금	· 사업 재검토 및 방침 결정 후 예산 반영여부 결정	재검토
	청년 미생카드	·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9월)에 따라 일부 추진 또는 일몰 ·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추진	재검토
환경국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	· 도정홍보 성격의 사업내용으로 인한 시·군 수요 감소	일몰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 학술용역 완료예정 (2018.7월~2019.12월)	일몰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완료(2018.4월)	일몰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	·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	일몰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 '18년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후 추진여부 재검토	재검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마련	· 용역사업 완료 예정(2018.12월)	일몰
	열화상카메라	· 장비구매 완료로 일몰	일몰
	광학줌 카메라	· 장비구매 완료로 일몰	일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기기 등 설치	· 2018년 운영기기 등 장비 설치 완료	일몰
	드론 비행훈련 교육비	· 드론 담당자 교육완료에 따른 사업 일몰 예정	일몰

부서명	제목 (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축산산림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사업완료에 따른 일몰	일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 2018년 사업으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완료(2006부터 2018까지)	일몰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22개월 용역으로 2020년 완료 예정. 사업장 배출상태 진단, 주거지역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한 제한지침 개선(안) 마련	일몰
	무선전원장치 및 배터리 교체	· TMS 운영이 필요한 물품 구입 완료	일몰
	항온항습기 구입	· TMS 운영이 필요한 물품 구입 완료	일몰
산림환경연구소	축령산휴양림 노후시설 개선사업	· 사업종료	일몰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 광산란 미세먼지 측정기 활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할 계획임	일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타당성 조사 2018년 종료, 2019년부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일몰
수자원본부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	일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 (10년 주기, 법정계획)	일몰
	진위천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 (10년 주기, 법정계획)	일몰
	팔당 특별대책지역 총량관리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 (제도개선 발굴사업)	일몰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취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경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25-①, 경제실)
○ 청년 면접수당 지원 (25-③, 경제실)
○ 노동정책 담당 독립부서 출범 추진 (27-①, 기획담당관)
○ 노동인지 예산방안 마련 (27-②, 예산담당관)
○ 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28-①, 경제실)
○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지원 (28-②, 경제실)
○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28-③, 평가담당관)
○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 (29-①, 경제실)
○ 산업재해 보상지원 강화 (29-②, 경제실)
○ 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30-①, 기획담당관)
○ 도 산하기관 용역 및 공사입찰 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 우대 (30-②, 기획담당관)
○ 경기도 생활임금 1 만원 조기 달성 (31, 경제실)
○ 지역화폐 발행·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지역화폐 도 전역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44-①·②·③, 72-①·②·③, 경제실)
○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운영,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정비 (69-①·②, 경제실)
○ 가맹점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70-①·②·③, 71-①·②, 경제실)
○ 경기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담 기구 설치,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73-①, 경제실)
○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 고객편의 증진 (74-①·②·③, 경제실)
○ 5일장 개설지역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경영 지원 (75-①, 경제실)
○ 전통시장·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76-①, 경제실)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77-①·②·③, 경제실)
○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강화 (78-①, 경제실)
○ 법령 및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 개선 (79-①, 경제실)
○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위한 수출기업 지원 (79-①, 경제실)

○ 스타트업 공간조성 시범사업 시행 (80-①·②·③, 경제실)
○ 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존 산학협력클러스터 이용 여건 마련 (81-①, 경제실)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및 우수기업 증시상장 지원 (82-①, 경제실)
○ 스타트업과 기술창업, 재창업 지원 확대 (82-②, 경제실)
○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 산업 혁신지대 조성 (83-①, 경제실)
○ 테크노밸리 산업생태계 관련 창업기업 적극 유치 (83-②, 경제실)
○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 조성 및 융복합 강화 (84-①·②·③, 경제실)
○ 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취업 연결체계 구축 (85-①, 경제실)
○ 산업단지를 노동자 재교육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86-①, 경제실)
○ 판교테크노밸리 : 대학 및 기업, 연구개발 시설 입주 추진 (87-①, 경제실)
○ 광교 테크노밸리 : 연구기반 확대, 기업과 네트워크 강화 (87-②, 경제실)
○ 판교 테크노밸리 : 자율주행,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지원 (88-①, 경제실)
○ 안산 테크노밸리 : 스마트 공장 (88-④, 경제실)
○ 박달 테크노밸리 : IT, BT, NT, CT (88-⑤, 경제실)
○ 경기북부 섬유제조업 및 패션 디자인 콘텐츠 융합클러스터 조성 (91-①, 경제실)
○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 복합형 산단조성 지원 (93-①, 경제실)
○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계획 수립 (94-①·②, 경제실)
○ 5060 신중년 제2인생 설계 지원 강화 (104-①, 경제실)
○ 전문 퇴직자 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 일자리 지원 (104-②, 경제실)
○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106-③, 경제실)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116-④, 경제실)
○ 대기측정소 확충 및 자동차 배기가스, 공단 인근 오염도, 자연발생 암모니아 측정 (124-①, 보건환경연구원)
○ 오염 발생원인과 배출량 분석표 작성, 도민에게 「미세먼지 건강지도」 공개 (124-②, 보건환경연구원)
○ 도내 4천대 디젤버스를 단계적으로 CNG·전기버스로 교체 (125-①, 교통국)
○ 정부와 공동으로 노후건설기계 및 엔진 교체 지원 (125-②, 환경국)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125-③, 환경국)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일반 노후 디젤차의 조기 폐차 추진 (125-④, 환경국)
○ 도내 사업장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 단계적 축소 (126-①, 환경국)
○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디지털 굴뚝자동감시 시스템(TMS) 설치 대상 확대 (126-②, 환경국)
○ 공사장·사업장·논밭 폐기물 불법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126-③, 환경국)
○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조사 강화 (127-①, 환경국)
○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위한 '미세먼지정책협의체'구성·운영 (128-①, 환경국)
○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128-②, 경제실)
○ 정부와 함께 경기북부 인접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129-①, 경제실)
○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개선, 기술협력 추진 및 북한 숲가꾸기 사업 지원 (129-②, 환경국, 축산산림국)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130, 수자원본부)
○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상수도 시스템 협력 구축 (131-①, 수자원본부)
○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 (131-②, 수자원본부)
○ 실시간 수돗물 품질확인 등 물 공급의 신뢰성·효율성 제고 (131-③, 수자원본부)
○ 대체수원 개발, 물 풍부지역과 부족지역의 연결 (131-④, 수자원본부)
○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지하수댐 개발, 노후 지하수 관정 정비 등) (131-⑤, 수자원본부)
○ 도시 빗물 침투·함양을 높이는 저영향 개발기법 적용 확대 (132-①, 수자원본부)
○ 축산분뇨 방류기준 강화 및 양분관리제 도입 후 관리 강화 (132-②, 수자원본부)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마련 (133, 수자원본부)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계관리의 시·군 자율성 확대 (137-③, 수자원본부)

○ 전체적으로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간 교류 강화 (138-②, 축산산림국)
○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소비자안전 강화 (148-②·④, 경제실)
○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상향 (95,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가점 확대 (96-①,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시군 기관별 공동구매 실시간 DB제공으로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97,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6. 정책제안 및 과제

분야	연번	내용	비고
조직개편(신설 등)제안	1	혁신창업지원과 신규설치	
	2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 구축	
	3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개편	정책제언 8
	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국 조직 개편	정책제언 6
	5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	정책제언 7
	6	양주 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 건립	정책제언 4
	7	경기 금융소비자 보호재단(가칭) 설립	
제도개선	1	경기도 공무원 일자리, 노동 전문성 제고 필요(교육 강화 등)	
	2	노동복지기금 확대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사업 정상화	
	3	일자리재단의 운영방식 등 전면검토	
	4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의 재정립	정책제언 5

분야	연번	내용	비고
	5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사업 및 연료 개선사업 확대	
	6	경기도 금고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7	판교 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운영개선 시급	
	8	섬유산업 등 3D산업 대체복무 지원제도 개선	
	9	청년통장 지원제도 개선	
	1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발주체계 개선	
	11	도·시군 간 산업단지 운영관리협약체결 및 민간 관리기관 지원 강화	
신규사업제안	1	경기 우수공원 인증제(경기그린프라그어워드, GyeongGi Green Flag Award) 도입	
	2	경기도 산하기관 태양광발전소 의무 설치	
	3	공동전기료 제로아파트 사업	
	4	축령산 산림복지서비스 특화지구 지정 제안	
	5	꽃 속의 경기 (GyeongGi in Bloom) 사업 제안	
	6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신고 제도 제안	
	7	테크노밸리 정책팀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8	글로벌 평화 예술특구 제안	정책제언 1
	9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언 2,3

1. 조직신설 및 개편

[1] 혁신창업지원과 신규설치

❍ 현 황

-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100대과제로 선정. 창업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음

※ 10년 평균(2005년~2014년) 일자리 창출인원 : 대기업: 46천명, 중소기업 : 293천명, 창업기업 : 1,188천 명 (자료출처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15.5)

❍ 문제점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지자체의 경우 창업지원과 설치 운영, 경기도는 기업지원과 부분 업무로 수행

❍ 제안내용

- 창업 저변확대, 창업초기기업 지원,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창업지원 정책의 독립 부서 필요

[2]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 구축 필요

❍ 현황

- 기본소득제도(골목경제 5대 공약 포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이행조직 체계가 미흡

❍ 문제점

- 민선7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골목경제 5대 공약(지역화폐 발행,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지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경기공유마켓 육성, 전담부서·기관 신설 등)은 민선 5·6기 성남시에서 검증된 정책으로 道 전역으로 조기 확대를 위한 실행조직 정비가 조속히 필요

❍ 제안내용

- 기본소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초 3대 무상복지 등 각종 복지지출이 각 시군단위에서 '경기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차질 없이 발행·지급될 수 있도록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전담부서가 신설(TF팀 포함)되어야함

[3]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개편

❍ 현 황

- 현재 경기도는 물관리 업무를 수자원본부(수질)와 하천과(수량)로 이원 관리 중
-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완료

※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기능이 환경부로 이관

❍ 문제점

- 물관리 이원화로 사업효율성 저하 및 예산낭비 초래
- 물관리 업무의 분산과 상충을 극복하기 위한 물관리 체계 변화 필요

❍ 제안내용

- 환경부와 국토부의 조직개편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경기도는 다양한 물 현안(수도권 물 공급, 수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남북 물 협력 등)이 산재하고 있어, 현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함
- 현재 건설국 소관 하천과를 수자원본부로 이관하여, 실질적인 물관리 조직 일원화 추진 (하천과 소속 5개 팀의 완전한 이체)

※ "[3]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개편" 참고

[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국 조직 개편

❍ 현 황

- 미세먼지 대응, 생활환경 안전 등 도민을 위한 환경 관련 기능이 5개 국·본부에 분산, 산재되어 있어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통합적 환경관리에 한계 (정책 효과성 저하 및 비효율성 발생)

❍ 문제점

- 미세먼지 대응, 물관리 일원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등의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필요
- 특히, 경기도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하여 첫째, 자동차, 사업장 배출, 생물성 연소(노천소각)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 있는 도시숲(산림)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환경리더십 구축 필요

❍ 제안내용

-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자연환경보전 기능 등을 통합하여 기존 환경국을 환경에너지실(2급)로 확대 개편
-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현황을 적시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미세먼지대책과 신설
-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소각행위(논밭, 공사장, 일반사업장)등 생활 주변 오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경기광역환경점검단으로 확대 개편
- 기후변화, 대기환경(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한 에너지 업무를 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실 에너지과를 이체
-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응(저감과 차집)을 위해 공원녹지와 산림 업무를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자연환경 보전 수행(축산산림국 내 산림과(산림생태과), 공원녹지과 이체)

※ “[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국 조직 개편” 참고

[5]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 제안

❍ 현 황

-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 개별 시·군이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민의 참여를 통한 경기도 환경 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
- 환경관련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민간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산발적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어려운 실정

❍ 문제점

-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유해화학물질, 실내공기질), 자연환경 보전,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정책 일관성 유지, 전문성 확보, 예산 절감 등의 실효성을 거두면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전문 통합 집행기관 필요

❍ 제안내용

- 민선7기 공약인 “미세먼지 해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맑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다양한 환경사업 집행을 위한 플랫폼인 「경기환경진흥원(가칭)」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신설 제안
- 경기도는 정책수립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은 산하공공기관을 통하여 연구(R&D), 집행 및 도민 참여의 실효성 있는 사업관리와 지원 체계 마련

[6]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 건립

❍ 현 황

- 양주시 일원에 양주 T/V 건립을 추진 중
- 용지 개발 및 제공중심의 T/V에 기술혁신을 주도할 공간 확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

❍ 문제점

- 섬유, 가구, 뷰티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 조례제정 및 년 200억 규모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 활동을 매개할 핵심요체가 형성되지 못한 낙후지역의 애로를 극복할 랜드마크가 부재함

❍ 제안내용

- 양주역 인근에 현재 양주시가 제안중인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지원
- 토지는 기초단체가 마련하고, 경기도는 건축비를 지원함
- 현재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연간 200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실효적 산업 활동 지원은 미진한 상태

[7] 경기 금융소비자 보호재단(가칭) 설립 제안

❍ 현 황

-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당분간 가계부채로 인한 여러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기존 금융과 관련한 복지는 서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금융은 세대, 계층,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

❍ 문제점

- 가계부채가 양산하는 문제는 불법 채권추심 뿐 아니라 자녀양육, 교육, 자영업자와 노동자 소득 중 금융비용 지출 등에 따른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지체 등 실로 여러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담당기관이 부재
- 이와 더불어 도민의 금융 분쟁에 관한 상담이나 법률 및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도민이 가장 원하고 시급히 요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도의 역할이 사실상 공백상태임

❍ 제안내용

-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도 단위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경기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마련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따라서 경기금융소비자보호재단(가칭)이 도민이 바라는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기관으로 설 필요가 있음

2. 제도개선

[1] 경기도 공무원 일자리, 노동 전문성 제고 필요(교육강화 등)

❍ 현황

- 일자리, 노동 공약 검증 및 이행 방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감수성과 이해도가 매우 낮은 특징이 발견

❍ 문제점

- 이와 같은 현상은 남경필 前지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노동정책을 경제 및 산업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한 실국 편제 및 잦은 인사이동에 기인

❍ 제안내용

- 노동존중 경기도를 표방한 민선7기 경기도정은 특히 선도적인 일자리 노동 공약이 많은 특징이 있는 바,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노동국(과) 운영 및 적극적인 자문위원회 운영(활용), 공무원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노동존중 의식 및 전문성 향상 필요

[2] 노동복지기금 확대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사업 정상화

❍ 현황

-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2000년 20억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이 적립된 이후, 기금 이자 수입으로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진행

❍ 문제점

- 매년 기금 이자율 하락(2013년 3.23% → 2018년 1.39%)으로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10개 사업규모(약 6억)가 2018년 4개 사업으로 축소(약 1억), 사실상 유명무실화

❍ 제안내용

- 기금확충(추경 100억 요구)으로 중단 사업 재시행 및 기존 사업 현실화 시급

[3] 일자리재단의 운영방식 등 전면검토

❍ 현황

- 일자리재단은 자체 기관운영 및 사업비 약 320억원(기본경비 약 240억, 사업비 약 80억)에 대행 사업비 1,200억 규모.

❍ 문제점

- 기본경비 대비 자체 사업비 및 대행 사업비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대행 사업비 중 90%가'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예산으로 단순 지출 비용에 불과.

❍ 제안내용

- 여기에 여러 기관들이 물리적 결합으로 통합되어 기능과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실제 사업비보다 인건비 등 기본 경비가 많은 방만 경영 상태로 종합적인 구조개편이 시급

[4]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의 재정립

❍ 현 황

- 중소제조업의 수출, 고용,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 수행

❍ 문제점

- 경기도 중소제조업(종업원 10인 이상)의 비중은 전국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의 역할이 미약

❍ 제안내용

-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 자금지원, 수출, 정보화 등 지원기능을 집적화 하여 One-Stop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

[5]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사업 및 연료 개선사업 확대

❍ 현 황

- 수도권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전체 배출량의 14%에 이름
- 경기 서부 및 북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로 수도권 전체의 오염 심화
- 경기도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3㎍/㎥(2016)으로 전국 1위

❍ 문제점

- 경기도 내 사업장,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국가 관심 전무
- 경기도:기초지자체:사업장 25:25:50으로 중소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교체사업' 진행 중이나 자부담(8천만원)이 커 참여도 저조
- 사업장 예산은 연간 100-200억원에 불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간 600기 개선을 통해서는 노후화 사업장의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할 것
- 유사사업인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역시 국비보조 전무, 자부담 30%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영세사업장 벙커C유 사용 중)

❍ 제안내용

- 경기도 내 중소규모사업장은 19,000여개 소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 필요
-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은 경기도 수혜사업이 아닌 국가적 대기질 개선사업이므로 국비 보조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빠르게 저감해야 함

[6] 경기도 금고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현 황

- 경기도의 금융기관 운용 자금규모는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자금난은 지속되고 있음

❍ 문제점

- 경기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경기도민으로부터 맡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로 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금융기관의 단기실적주의 때문
- 가령,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장기업 매출액을 평가지표로)으로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단

기에 실적(중소기업 발굴 건수 등)을 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 자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장기성장에 이바지하지 못함

❍ 제안내용

- 당장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고,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으로 경기도 금고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경기도 금고은행(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장기투자의 관점을 견지한, 지역재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내 관계형 금융의 확립을 돕도록 해야 할 것임
- 추가로 지역 환원 금융체계를 구축 및 공고화시키기 위해 전문 역량강화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7]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건물 운영개선 시급

❍ 현 황

- 판교T/V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R&D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3개 건물을 창업기업 활성화 등에 저가임대하고 있으나, 매년 60억의 운영비 적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문제점

- 많은 임대면적을 차지하는 거대 외국기업, 강소기업 등도 초기 창업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저가에 임대하고 있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안내용

- 현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3개 건물의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창업기업 중심으로 청년창업, 특허지원, 자금지원, 수출, 정보화 등 다양한 지원기능을 집적화 하여 종합지원 중심으로 위상을 재정립
- (가칭)'경기판교창업혁신센터'를 두고 현재 3개 건물 운영비 적자액 60억을 지원하여 시설을 책임운용하며, 청년 창업공간 제공, 창업카페, 특허지원 등의 창업초기 지원을 추진

[8] 섬유산업 등 3D 산업 대체복무 지원제도 개선

❍ 현 황

- 현재의 산업인력 대체 군복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병역특례기업으로 지정하고, 채용가능 인원한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병역특례근무제도를 시행

❍ 문제점

- 섬유업체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어렵고, 만약 근무기간 동안 회사가 폐업하면 당사자는 곤란에 처하게 되는 등 사유로 인해 인력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섬유산업은 특성상 청년인력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단기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존하게 되고 품질저하로 이어짐

❍ 제안내용

- 섬유기업은 환경처리 비용절감을 이유로 특화공단에 모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공단본부 혹은 섬유산업기업 연합회 등 해당 지역 내 협회 등에 병역특례 인력을 배정하고, 회원사간에 이직하여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경기도가 국방부에 건의
- 3D산업의 경우에 한해 복무기간 단축 혜택도 검토 필요

  ⇒ “3D업종 중소기업 협회를 통한 군 대체복무 제도”제안

[9] 청년통장 지원제도 개선

❍ 현 황

- 현행의 청년통장은 본인이 30만원 저축시, 경기도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형 지원제도
- 이는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북부의 섬유업체 등의 청년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직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

❍ 문제점

- 섬유업체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으로 인해 청년인력을 구하기

가 어려우며, 타 업종보다 다소 높은 임금으로 고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청년통장으로 인해 격차가 해소되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음

❍ 제안내용

- 기업의 고용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
- (예로) 본인이 10만원, 기업이 20만원, 도가 30만원을 매칭하여 기업부담이 고용이 일정기간(2년) 유지되는 경우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1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발주체계 개선

❍ 현 황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 부문의 초기 구매자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문제점

- 그러나 현재 공공 발주체계는 기업의 관련 수행실적, 신용평가 등 기존 기업에게 유리한 정량평가가 획일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 발생

❍ 제안내용

- 이에 따라, ICT/연구개발 등 주요 창업분야의 경기도 공공발주에 대해서는 분야 특성에 맞게 발주방식 및 평가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발주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11] 도·시군 간 산업단지 운영관리협약체결 및 민간 관리기관 지원 강화

❍ 현 황

- 산집법 상 경기도가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 발생
- 다수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입주기업 등록 등의 공적 관리업무 담당

❍ 문제점

- 관리권이 위임된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산단 활성화 정책 입안 등에 대해 도·시군 간의 권한과 책임 구분 모호
- 민간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적 관리업무 담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필요성, 기업지원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 발생

❍ 제안내용

-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고, 도·시군 간 운영관리 협약체결 작성 (권한/책임 명문화)
- 민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

3. 신규사업제안

[1] 경기 우수공원 인증제(경기그린프라그어워드, GyeongGi Green Flag Award) 도입

❍ 현 황

- 도시공원이 물리적인 그린 인프라 넘어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원으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여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공원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정책적인 유인 제도가 필요함

❍ 문제점

-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는 31개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양한 정책개발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공원녹지분야 녹색서비스 향상 유도가 필요함
-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개선 의욕 촉진, 도민들의 도시공원의 중요성 인식 증대와 함께 우수공원 관리사례를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제안내용

- 영국 그린프라그어워드 제도를 적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중 관리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공원을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
- 영국의 '그린프라그어워드(Green Flag Award)'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조성 관리한 녹지공간을 그린프라그어워드 공모에 신청하여,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합격하면, 녹지공간에 그린프라그(Green Flag)라는 깃발을 수여하는 제도임
-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유지관리, 이용관리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기도 그린프라그어워드 심사기준과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우수한 도시공원을 10개씩 선발하여 시상하고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그린프라그(녹색깃발)를 수여

[2] 경기도 산하기관 태양광발전소 의무 설치

❍ 현 황

- 경기도 내 산하단체와 기관은 100여개 소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 에너지자립을 위해 산하 단체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

❍ 문제점

-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을 꾀하고 있지만(에너지비전 2030)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각 산하단체와 기관의 개별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의 에너지 주무부서에서 압박하기 어려움
- 그러나 경기도 에너지 자립률 및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산하단체장과 기관장을 독려해야 함

❍ 제안내용

- 경기도 산하단체 및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우선설치대상으로 삼도록 함
- 경기인재개발연구원 등 부지가 넓은 장소를 우선 설치대상으로 시범사업하고, 이를 점차 확산하도록 함
-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은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우선 배려하고, 수입은 조합과 부지소유기관이 나누도록 함

[3] 공동전기료 제로아파트 사업

❍ 현 황

- 경기도 내 도시형 지자체 대부분은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량이 압도적
- 경기도 내 도시형 지자체 에너지 자립모델이 아직 구축되지 않음
- 아파트 내 경비원이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료 부담

❍ 문제점

- 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문제로 경비원 에어컨 사용금지 등 갑질 상황 문제시됨
- 공동전기료 부담 문제로 아파트 내 갈등 발생

❍ 제안내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절감 효율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공동전기료 제로아파트 도전
- 경기도 내 발전소 인근 또는 오염원 인근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4] 축령산 산림복지서비스 특화지구 지정 제안

❍ 현 황

- 축령산 일원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우량한 잣나무림, 철쭉군락 등 자연자원과 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등 산림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 하지만, 산림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고 시설보완 및 道-시·군-지역사회 간 연계 활성화 필요

❍ 문제점

- 경기도 특성(도시화, 인구집중 등)에 맞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산림산업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시설별 특성화 전략 및 통합운영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축령산 일원(남양주·가평)을 “산림복지 서비스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도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도유림 활용을 위해 道-시·군-주민 협력을 강화하되 ①공공성, ②산림 생태계 지속성, ③지역 활성화, ④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신규시설은 지양
- 기존 산림복지시설 충분히 활용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 고려

[5] 꽃 속의 경기 (GyeongGi in Bloom) 사업 제안

❍ 현 황

- 경기도는 국내 최초 정원문화박람회 개최(2010년 시흥시)하여 정원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으나,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정원 산업의 진흥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 민선7기에 어울리는 경기도의 정원문화와 산업정책 목표와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정원문화사업의 통합적 브랜드 설정이 필요함

❍ 문제점

- 정원관련 축제와 정원가꾸기활동(gardening)을 통한 이웃 간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일환(숲, 공원, 정원 등)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원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원을 매개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조직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제안내용

- 1,300만 도민들에게 생활권 녹색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정원문화관련 사업을 꽃 속의 경기(GyeongGi in Bloom)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경기아름다운정원대상(정원포상제도) 등 신규 사업 확대

- 이외에도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마을이 정원이 되다」 프로젝트 추진(마을정원조성사업), 그린썸(Green Thumb)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확대 필요

[6]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신고제도 제안

❍ 현 황

- 현재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점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막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 못함

❍ 문제점

- 이미 사금융에 의한 도민들의 피해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연령, 세대, 지역, 직능 직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상황

❍ 제안내용

- 기존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의 경험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7] 테크노밸리 정책팀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현 황

- 현재 제2판교와 북부테크노밸리 등 신규 테크노밸리 개발은 사업법에 따라 경제실(산업단지), 도시주택실(도시개발)로 분리되어 있으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의 운영은 경제실에서 담당

❍ 문제점

- 경제실/도시주택실로의 테크노밸리 개발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부서별 협력 취약 및 남북부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정책추진 한계
- 개발 부서와 운영지원 부서의 업무분리에 따라, 신규개발 테크노밸리에 대해 토지분양 중심의 사업추진 문제 발생

❍ 제안내용

- 산업정책 중심의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실을 중심으로 테크노밸리 업무 일원화 (GB해제 등 개발과정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업무 협조체제 구축)
- 테크노밸리 정책기획을 위한 전담 정책팀 구성 및 북부테크노밸리 등 기초지자체와 공동 시행하는 다수의 신규 테크노밸리의 현안 조율을 위한 경기도/기초 지자체/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8] 세계 평화 예술특구

❍ 현 황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 계기 마련
- 경기 북부 지역 DMZ 인근 지역 평화를 주제로 새로운 관광자원 모색
- 통일전망대등 휴전선 일대 관광객 매년 8%로 감소
  안보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 한계 드러나고 있음

❍ 문제점

- 통일경제 특구, DMZ 관광자원화 논의 많지만 구체성과 현실화에 많은 문제점 노출
- 휴전선을 넘지 못하는 사고력과 북측의 현실성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현 가능성 낮음
- 평창 올림픽의 삼지연 악단 공연 등 북은 외교에 예술사절단을 앞세워 왔음
  북측이 꺼려하지 않고 북측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야 함

❍ 제안내용

- DMZ 일원에 남과 북의 예술단이 상주하며 공연하고 남과 북의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평화 예술특구로 조성하여 분단과 통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원화

- 만수대 창작사 남측 분점, 옥류관 남측분점, 북측 예술단 상설공연장 운영, 남북 교류 협력관 운영
  남측 예술단 상설 공연장, 미술품 전시관, 상품 판매장, 음식점 숙박업소 운영
- 북측 공연 인력과 서비스 인력은 휴전선을 통해 출퇴근, 남측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은 제한 없이 출입.
- 남과 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민속촌 개념의 관광지로 통일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인근 안보 관광과 자연환경 관광과 연계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것임

[9]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휴게 공간 설치비 지원)

❍ 현 황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구직자들의 취업기피

❍ 문제점

- 높은 실업률에도 중소제조업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 중소기업 회피에는 저임금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환경도 큰 문제임
-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 제안내용

- 노동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설치비 지원
- 기업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모델 개발
- 기업대표나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사업장 2,500개사(5년간) 1개 기업당 3천만원 지원하여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구입비 지원

[10]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보조)

❍ 현 황

-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이유에는 저임금도 있지만 노동시간을 준수 하지 않는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함

❍ 문제점

- 높은 실업률에도 중소제조업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조기업 인력난 문제 해결 어려움

❍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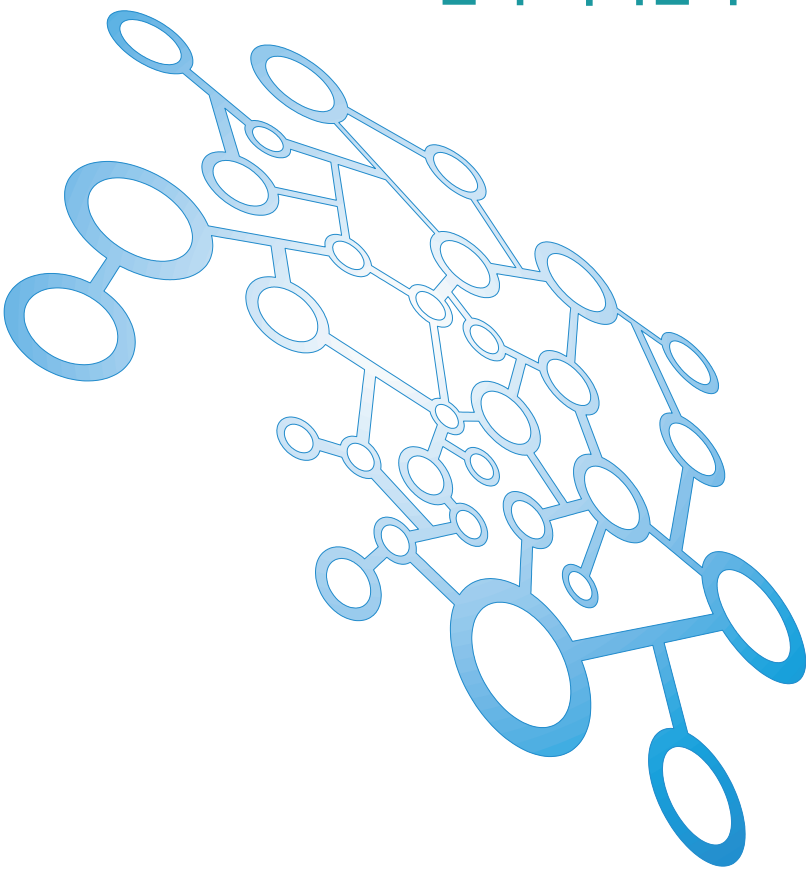
- 노동시간 준수, 법정휴가 보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노동환경개선 참여로 추가 발생하는 보조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기업 보조인력 고용 시 인턴 등 경기도 단기 일자리 사업네 참여하였던 청년 구직자 중 우수 인력을 추천하여 기업의 인재 확보 촉진
- 50개 중소기업에 시범사업(60억원) 주 40시간 노동기준 2,000만원/1인, 고용수요에 따라 5인 내 실비지원

정책제안서 제출 8개 과제

1	글로벌 평화 예술특구 제안
2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휴게 공간 설치 지원)
3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동시간 준수 인력 보조)
4	양주 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비즈니스 센터 건립
5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의 재정립
6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환경국 조직 개편
7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경기환경진흥원(가칭) 설립
8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 개편

※ 세부제안서는 별도 제출

문화·복지분과



1. 구성

○ 위원장 : 문진영
○ 기획단장 : 진석범
○ 간사 : 양동균

2. 활동방향

❍ 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철학 및 복지·문화 공약 비전 공유

-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삶이 풍요로운 경기도'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복지·문화에 대한 정책 비전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경기도의 복지모형을 제시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질적인 삶을 누리는 풍요로운 경기도를 추구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복지정책은 도민 모두가 기본권리로서 향유하는 '보편적 복지'를 기초 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 하나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복지 균등 경기' 실현

- '문화로 즐거운 경기도'
  문화정책은 문화 향유의 일상화, 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익 보호로 도민 문화향유율 제고, 경기도 문화재정 확대를 통해 문화의 객체와 주체가 모두 행복한 '문화 경기' 추구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기 추진 주요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 사업 검토
- 경기도정의 예산, 인사, 조직 관련 자료 검토 및 점검
- 각 과별 업무 분장 내역 및 주요 추진 업무 파악
- 각 과별 주요 핵심(중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검토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및 예산 집행 계획 내역 검토
- 각 부서 산하기관 현황 파악 및 경영 평가 검토

❍ 공약 과제 이행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언

- 민선7기 문화복지 정책 방향 및 미션과 비전 공유
- 복지·보건의료 등 공약 33개, 문화·체육·관광 등 공약 30개 총 63개 공약과제 선정
- 민선 6기 사업 중 민선7기 공약 및 정책과 연동 또는 통합 가능 대상 사업 선별
- 폐지 또는 축소 대상 사업 선별 및 민선7기 공약 즉시 적용 사업 우선순위 선정
-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
- 전체 공약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 및 총 실행 기간 산정
- 2018년 하반기 추경 규모 추산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추경에 반영될 시급한 공약 선별 및 중장기 공약 분류
- 민선7기 복지정책 브랜드 네이밍 구상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총 3개 실·국, 11개 기관)

- 보건복지국 8개과(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 문화체육관광국 7개과 1사업소(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과,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복지여성실 2개과(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 11개 기관(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DMZ국제다큐영화제)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6일(화)	컨퍼런스룸 I	09:30~11:0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 종무, 체육, 문화유산, 콘텐츠산업, 관광, 한류월드사업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1:00~13:00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DMZ국제다큐영화제)
			15:00~15:50	보건복지국 (복지정책, 사회적일자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정책,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식품안전)
			15:50~16:10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16:20~16:50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2차	6월 28일(목)	컨퍼런스룸 II	09:30~13:0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 종무, 체육, 문화유산, 콘텐츠산업, 관광, 한류월드사업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5:00~16:50	보건복지국·복지여성실 (복지정책, 사회적일자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정책,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식품안전,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 3차 업무보고는 소위원회 또는 개별적으로 받기로 결정함

(2) 업무보고 내용

- 국 현안 및 향후 개선 방안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요청
- 현안 및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공약 이행 방안 보고 및 요청 사항 검토 보고
- 재정 관련 세수 추계, 추경 계획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산하기관별 기본 현황 및 추진 실적, 경영 평가 및 향후 계획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현장방문

(1)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 6월 23일(토) 16:00~18:00
- 민선7기 문화예술 분야 공약 설명, 문화예술정책 방향 및 향후 공약이행 계획 의견 교환

(2) 성남미디어센터

- 6월 29일(금) 15:00~18:00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각 미디어센터 활동 내역 파악, 공약 내용 점검 및 이행 방안 논의

(3)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 6월 30일(토) 10:00~14:00
- 지역문화 거점의 하나인 도서관마을 운영 실태와 도서관마을 중심 시민참여 문화예술축제 내용 파악
-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 미술관, 문화사랑방 등의 운영과 내용을 정책 자문위원들과 논의

(4)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 7월 2일(월) 14:00~17:00
-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개선 방안 수립 검토 요청
-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시 영화인 정책 간담회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 검토 요청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7월 3일(화) 14:00~17: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 경기도와 협력 가능 사업 파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새예술정책수립전담팀'의 예술인복지 분야 내용 및 경기도 관련 내용 점검

(6)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7월 3일(화) 14:00~16:00
- 기본 현황 및 공공의료사업 전략 파악, 질의응답 및 자료요청

(7) 누림센터

- 7월 3일(화) 14:00~18:00
- 기본 현황 및 장애인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8) 경기도문화의전당

- 7월 3일(화) 14:00~16:00
- 각 예술단원 면담을 통해 예술단 운영 실태 파악
- 각 공연장, 연습실 등 시설 현황 파악

(9) 파주출판산업단지

- 7월 4일(수) 10:00~12:00
- 입주자 대표와 파주경기창조허브 신설 시 지역특성화 논의

(10) 고양미디어센터

- 7월 5일(목) 10:00~12:00
- 고양 미디어센터 관련 시설 현황 및 성과, 미디어 교육 후 제작단 연계 방안 논의

(11) 캠프그리브스

- 7월 5일(목) 14:00~18:00
- 미군 공여지 개발 현장 확인 및 DMZ 관련 공약 추진 논의

(12) 경기복지재단

- 7월 5일(목) 13:00~17:00
- 기본 현황 및 현안 검토 보고, 복지거버넌스 운영, 경영 성과 평가, 연구 성과, 조직 진단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13) 경기도의료원(본부)

- 7월 6일(금) 09:00~14:00
- 기본 현황 및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경기도의료원 운영 방향, 공공의료원 착한 적자 경영 방안, 조직 및 인력 진단, 공공의료원 기능 전환 및 집중의료사업 등 질의 응답

(14) 안산예술의전당

- 7월 8일(일) 14:00~16:00
- 시민참여문화축제 'Market Forest'참관
- 축제 기획부터 진행까지 과정 파악

(15) 경기광역치매센터

- 7월 10일(화) 14:00~18:00
- 기본 현황 및 공약 검토 보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경기광역치매센터 운영 방향, 경기도 치매정책 추진 방향,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치매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자문

(16) 경기콘텐츠진흥원

- 7월 13일(금) 10:00~10:50
- 실무직원 간담회
- 민선7기 도정 방침 설명 및 진흥원 개선·발전방안 논의

(17) 경기관광공사

- 7월 13일(금) 14:00~14:50
- 실무직원 간담회
- 민선7기 도정 방침 설명 및 공사 개선·발전방안 논의

(18) 한국도자재단

- 7월 13일(금) 14:00~14:50
- 실무직원 간담회
- 민선7기 도정 방침 설명 및 재단 개선·발전방안 논의

❍ 토론회 및 간담회

(1) 복지단체 간담회

일시	6월 27일(수) 14: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및 단체	• 최종현 위원, 김대성 위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수연 회장 외 3명, •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외 3명
주요 논의 사항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 세부 검토 -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2) 복지정책 간담회

일시	7월 2일(월) 14: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 문진영 위원장, 진석범 기획단장, 문영희 위원 • 라호익(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허성철 팀장, 정창섭 팀장 •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주요 논의 사항	-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향 및 시범사업 검토 논의 - 무한돌봄사업 및 센터 향후 운영방향 논의 - 경기복지기준선 관련 논의

(3) 미디어정책 간담회

일시	7월 3일(화) 10:00~15: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및 단체	• 김석현 위원, 이태경 위원 • 부천 및 경기미디어네트워크 관계자
주요 논의 사항	- 부천 및 경기미디어네트워크 시설 현황 파악, 활동 방안 자문 - 경기도 내 미디어네트워크 간 연계 및 지속 활동 방안 검토

(4)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실무직원 대상 차담회

일시	7월 3일(화) 13:30~16:00 / 7월 4일(수) 15:00~16:30
장소	10층 창업베이스캠프 / 바이오센터 1층
참석자	• 김석현, 박리디아, 유종순, 이태경, 이희선, 하재천 위원 • 공공기관 : 심현철 김범수(경기문화재단), 정봉근 윤준오(경기도문화의전당), 김재삼 김성량(경기도체육회), 윤경옥 박광민(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윤성원 김산(경기콘텐츠진흥원), 박재영 안유림(경기관광공사), 주리정, 송지혜(한국도자재단), 박지영(DMZ국제다큐영화제) • 문화체육관광국 과별 6급 이하 주무관
주요 논의 사항	- 공약 및 정책 이행 방안 수립에 따른 개선 의견 수렴 - 신설 또는 추가 필요 공약 및 정책화 아이디어 수렴

(5) 복지정책 간담회

일시	7월 4일(수) 14: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 최종현 위원, 김대성 위원 • 소방발전협의회 박해근 회장, 김홍준 전 회장
주요 논의 사항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의견 청취

(6) 복지정책자문위원 및 민간복지기관 간담회

일시	7월 6일(금) 14:00
장소	16층 대회의실(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 문진영 위원장, 진석범 기획단장, 김대성, 김신영, 문영희, 최종현 이상 위원 • 배승룡 관장, 강기태 관장, 홍갑표 관장, 조재영 관장, 장다교 센터장, 김민수 센터장, 한동식 센터장, 박일규 회장, 박우희 부회장, 김구식 부회장, 이은화 팀장, 유용대팀장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 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 및 현장의견 청취 - 민선7기 복지 방향 및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경기도의 발전적인 복지정책 방향 의견 청취

(7) 의료관련 간담회

일시	7월 10일(화) 10: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새로운 경기위원회)
참석자	• 김대성 위원 • 경기도의료원 노조 한종철 지부장 외 5인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 충실을 위해 공공의료 마인드를 갖춘 리더와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 공공병원 착한 적자, 걱정 없는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성남시 의료원 수준 지원 필요 - 경기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용인정신병원 위탁 계약 만료 시 경기도 직영화 필요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문화복지분과 전체 회의 4회 진행, 63개 공약과제 역할 분담
- 위원회 전체 업무 보고 사전 점검 사항 및 사후 평가
- 분과 내부 소위원회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 복지 및 문화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 분과 내 소위원회 활동

- 복지소위원회, 문화소위원회 총 2개의 소위원회 구성
- 복지소위원회(문진영 위원장, 진석범 기획단장, 김대성, 김신, 김신영, 문영희, 최종현, 홍승권 이상 위원)
- 문화소위원회(양동균 간사, 김석현, 박리디아, 유종순, 이태경, 이희선, 하재천 이상 위원)

- 소위원회별 회의 총 56회 진행, 타 분과 및 도 담당공무원과 소통 회의
- 현안, 조직 진단, 추경 예산 관련 개별 인터뷰 140여회 진행

(3)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 복지 정책자문위원 24명, 문화 정책자문위원 38명 총 62명 문화복지분과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 복지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1회 개최
- 민·관 복지거버넌스 등 개별 자문 2회 진행
- 누림센터 기관 방문 참석, 공무원 연석회의 참석 자문 총 3회 진행
- 캠프그리브스, 도서관 마을 현장방문 동행
- 안산 시민참여축제 'Market Forest' 동행
- 관광정책 자문단 회의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발전 방안 논의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보건복지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	3	헬리 EMS 구축을 통한 중증외상환자 등 이송 체계 개선
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4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불가로 해산, 공정한 혜택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제도 전환 방안 마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 및 만족도·효과성 등 사업 재검토하여 민선7기 청년정책 사업으로 재편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 헬기) 도입에 따른 사업비 및 안정적인 헬기 계류장 확보 방안 마련

-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산하 병원 간 역할·권한·책임 명확한 규정 마련, 착한 적자 및 효율성 저하 원인 분석을 통한 혁신적 경영 개선 방안 마련

다. 자체평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운영비 지원 불가로 해산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재검토하여 민선7기 청년정책 사업으로 재편
- 경기도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및 착한 적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경영 혁신 및 의료 서비스 질 제고 필요

(2) 복지여성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2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나. 주요 논의 사항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낙후된 경기 북부의 장애인 복지 기능 확대 및 강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집중 관리 및 예방 계획 수립 필요

다. 자체평가

-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된 보건·복지·여성 사업을 통합하여 북부의 복지 및 의료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 개편 필요

(3) 경기복지재단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	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 성과 제고 사업 추진	6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

3	경기 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7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 개발	8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주요 논의 사항

- 도민 복지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요청
-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 재검토 및 각종 수탁사업에 대한 공정성 확보
-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복지공약 집중 연구(ex.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등)
-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방향에 대한 재단 역할 및 기능 재검토

다. 자체평가

- 경기복지재단은 31개 시·군 복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조직 재편 및 구성인력 평가, 연구 성과, 민·관거버넌스 등을 통해 정체성 재정립 필요

(4) 경기도의료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道의료원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추진 사항	3	의정부 병원 시설 노후에 따른 현안 보고
2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계획(안)		

나. 자체평가 및 주요 논의 사항

- 퇴직연금 가입 운영 방법 및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노사 합의를 통해 원활한 퇴직연금 도입 방안 마련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2018.1)를 통해 경기의료원 기본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 방안 마련
- 의정부병원 신축 시 경기 북부 지역 건강 의료 격차 해소, 거점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재검토

다. 자체평가

- 경기도의료원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 및 착한 적자 지원,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보강 필요, 북부 지역의 건강 의료 격차 해소 방안 마련

(5) 문화체육관광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 상상캠퍼스 현물 출자 추진 상황	2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나. 주요 논의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현안 집중 검토 및 개선 방향 논의
- 현안 보고에 따른 2018년 추경예산안 내역 중 즉시 이행 가능 공약 선별 및 반영 추진 요청
- 2018년 추경예산 편성 관련 공약 및 정책 이행 가능 사업 검토

다. 자체평가

- 민선 6기 사업 중, [문화복지 · 소외계층 수혜] 관련 사업은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공약 161, 166, 170-①번과 연동 및 수정·보완 하여 추진
- 민선 6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위수탁 관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만큼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 '새로운경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전면 수정하여 추진
- 민선 6기 [팀업캠퍼스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민선7기 출범 이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바, 우선 운영을 선행하고 향후 계약기간 만료 전 신규 운영 방식을 연구 · 수립하여 추진
- 민선 6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인증제] 사업은 지속 유지하되, 지역 서점의 인증제를 확대 · 강화하고 공공 도서관 내 지역서점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6)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문화재단 - 기관 비대화에 따른 개선 방안 수립	6	한국도자재단 - 기관 성격 명확화(공예+디자인 포괄)
2	경기도문화의전당 - 공연장 상시 개방 및 부지소유 일원화	7	경기도체육회 - 단체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 추진
3	경기콘텐츠진흥원 - 정보화 업무 분리(가칭 경기정보화진흥원)	8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시·군 장애인 체육회 행정 및 예산 지원 방안
4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위수탁계약 행위 관련 정상화 논의	9	DMZ국제다큐영화제 - 집행위원장 공석 문제 해결 및 영화제 · 사무국 운영 개선
5	경기관광공사 기관 주요 현황 - 기관 성격 재정립 방안(가칭 경기관광산업진흥원)		

나. 주요 논의 사항

- 각 기관별 주요 현황 보고
- 기관 소관 업무별 공약 이행 계획 수립 관련 방향 검토
- 각 기관별 공약 이행 관련 장애 요인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
- 기관 운영 관련 개선사항 청취

다. 자체평가

- 경기문화재단 : 기관 비대화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향후 공약 과제인 [예술인복지]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도출 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 : 공연장 소유권 문제를 [경기도+기관]이 수원시와 적극 협의하여 소유권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공연장 상시 개방을 통한 도민 향유권 보장을 위한 이행 계획 수립 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 : 현행, ICT 및 빅데이터 업무를 분리하여 (가칭)경기정보화진흥원 신설을 통한 이관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업무에 집중 및 명확화 추진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 문화체육관광국 검토 내용으로 대체, 생략
- 경기관광공사 : 기관 성격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현행, 출자 기관인 공사 성격을 재단법인 형태인 (가칭)경기관광산업진흥원으로의 개편 타당성을 검토 · 추진
- 한국도자재단 : 기관 소관 업무 중 [공예 + 디자인] 장르의 업무가 포괄 가능하도록 기관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재정립하고 연구를 통하여 반영, 추진
- 경기도체육회 : 단체 통합 이후 조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연구 · 마련하고 실행 계획 입안
- DMZ국제다큐영화제 : 궐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집행위원장 임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영화제 운영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다큐 영화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 개최 등을 검토하여 제언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및 제언 이행 추진

❍ 공약사업

(1) 보건복지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24-①	경기도 청년 배당 실시	57-①	경기광역치매센터의 기능 역할 강화
24-②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57-②	경기형 치매안심센터 모델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확산
40-①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58	치매안심마을 ※ 58-①② 병합

41-①	민관협력의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	63-①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 준수 ※ 106-① 병합
45-①	경기의료원의 병원시설과 환경 지속 개선	63-②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연계
45-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65-①	탈시설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46-①	시·군의 44개 보건소 역량강화 추진	65-③- i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지원 ※ 65-③ → i / ii 분리
46-②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66-②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내실화 및 권역별 장애인인권센터 확충
47-①	과잉진료 줄여 의료비 부담 축소	67-①	장애인과 1:1 상담 통한 최적의 서비스 설계 지원
48-①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도 차원의 지원 강화	105-①	노노케어 등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및 사업기간 확대
49-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노동자 건강관리 추진	105-②	경기도내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조정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51-①	경기도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	105-③	사회적 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창업 준비사업 구축
51-②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106-②	장애인 고용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56-①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보건교육·예방진료 실시	누락과제 추가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158 추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활성화 ※ 158-①② 병합하고 공약과제명 조정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공약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이관**

나. 주요 논의 내용

- 청년시리즈 공약 추진에 따른 제도 및 기존 정책 유사·중복, 조례 제·개정, 재정 추계 면밀 검토, 지역화폐 활용 방안 구체성 제시
- 경기복지기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전달 체계 연계 방안 마련(무한돌봄센터 기능 전환 및 개선 방안 재검토)

- 경기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경기북부지역 건강 격차 해소 계획 수립, 기능·조직 개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착한 적자 지원계획 방안 마련
- 산후조리비 지원 공약과 관련 시군의 출산·양육 지원사업과 별개로 지급토록 권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신규 사업 운영매뉴얼 개발 요청
- 경기도의 치매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방안 마련 및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 모델 집중 연구
-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장애인 적합 직종·직무 분석 연구와 장애인 정보앱 개발 및 DB 구축 요청
- 장애인 탈시설화, 자립, 재난·안전, 이동권, 인권 문제에 대해 당사자관점에서 실효성·현실성 있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수립 요청
- 경기도 내 시군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발굴, 치매사업과 연계한 5060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2)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

가. 해당 공약

	공약
65-②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나. 주요 논의 사항

- 탈시설 이후 장애인 주거 안정을 지원할 (가칭)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방안 검토

(3) 재난안전본부(안전교육담당관)

가. 해당 공약

	공약
65-③- ii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보급

나. 주요 논의 사항

- 장애인 재난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 및 장애유형별 피난기구 등 개발

(4) 교통국(교통정책과)

가. 해당 공약

	공약
66-①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휠체어 싣는 고속버스 시범 도입)

나. 주요 논의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 표준(안) 마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 마련

(5) 경제실(기업지원과)

가. 해당 공약

	공약
106-③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나. 주요 논의 사항

- 장애인 기업 물품·용역·공사 의무구매 이행력 강구 및 판로 제공 방안 마련

(6) 문화체육관광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35-①	파주출판단지 복합문화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140-①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및 조성 ※ 185-①과 병합하여 추진
62	역사문화유적지에 스마트 다문화 해설안내판 및 QR코드 설치 ※ 공약 과제 62-1과 62-2를 병합하여 추진	140-②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64-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체육 활동 기회 확대(유니버설 체육관 전환)	140-③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 185-①과 병합하여 추진
89-①	게임 관련 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158	실버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경로당의 교육적 기능제공, 어르신께 문화 교육 등 제공

			※ 158-①과 ②를 병합하여 추진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이관**
90-②	파주시·고양시의 컨벤션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 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161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경기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 공약 161-①, 161-②, 161-③, 162-①과 병합하여 추진
90-③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지원 확대	163-①	공연장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92-①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벨트 거점	164-①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 공약 134-③, 164-①, 164-②, 164-③, 162-②, 161-③, 165-① 등과 병합하여 추진
134	폐교 및 유휴 공간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 134-①, 134-②, 135-①, 135-②, 135-③, 135-④ 등과 병합하여 추진	165-②	건축 ·도시 설계 시 문화영향평가 적용 확대
166	중앙정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 170-①과 병합하여 추진	171-①②③④	경기도내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 171-①~④까지 병합하여 추진
167-①- i	통합문화이용권 수혜 인원 확대 유도	183-①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
167-①- ii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인원 확대	183-②	자연환경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산업 유치 및 활성화 적극 추진
167-②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시 지역화폐 활용	184-①	도민이 함께하는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독립 야구단 적극 지원
168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 미술관 조성 및 확대 ※ 168-①, 169-①, 169-②와 병합하여 추진	**누락과제 추가 F4-3-①**	**DMZ 세계평화자연유산 등재 추진**
170-①②③④	도민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일상화 추진 ※ 170-①~④까지 병합하여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각 공약 의제별 이행 계획 수립 내용 검토
-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 제언
- 공약 추진 관련 지역화폐 활용 방안 모색 및 현실 가능성 검토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연구 및 논의
- 문화영향평가 적용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의 개정 필요성 제시
-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신설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한 업무 전담기구 지정 문제 검토
- [정책기획=문화체육관광국, 사업추진=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 형태의 이원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필요성 검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별 퇴직 공무원 재취업(관피아)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필요성 논의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 검토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내 개방형 직위 운용 필요성 논의

※ 기타 소관 산하기관 공약 사항은 경기도청 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공약 사항 내용으로 하고 산하기관별 운영 관련 제언은 별도 보고로 대체

❍ 공약 조정 최종안 (병합·이관·추가공약·과제명 조정 반영)

- 63개 공약 세부 검토 실시 후, 분석 과정을 거쳐 공약 내용의 중복성, 유사성 및 추진 방향, 경기도의 추진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공약과제를 도출
- 해당 내용은 7.13일까지 분과위원장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추후, 인수위내 공론화 과정을 수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공약 조정 최종 내역]

복지 공약			
연번	공약과제명	연번	최종 공약과제명
1	24-① : 경기도 청년 배당 실시	1	24-① : 경기도 청년 배당 실시
2	24-② :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2	24-② :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3	24-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3	24-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평화특위로 이관
4	4-① : 소득, 보건의료,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6개 분야의 복지기준선을 설정	4	40-① :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공약과제명 조정
5	41-① : 민·관협력의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	5	41-① : 민·관협력의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
6	42-② :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방안 연구 시행	6	42-② :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방안 연구 시행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7	43-① : 청년배당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연10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7	43-① : 청년배당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연10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8	43-① :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 재정 지원 및 세부지침 수립	8	43-① :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 재정 지원 및 세부지침 수립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9	43-② : 시군별 상품권 구매혜택, 지류 상품권 제작, 가맹점 모집 등	9	43-② : 시군별 상품권 구매혜택, 지류 상품권 제작, 가맹점 모집 등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10	43-③ : 핀테크 기반의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 준비	10	43-③ : 핀테크 기반의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 준비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11	45-① : 경기의료원의 병원시설과 환경 지속 개선	11	45-① : 경기의료원의 병원시설과 환경 지속 개선
12	45-②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12	45-②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13	46-① : 시·군의 44개 보건소 역량 강화 추진	13	46-① : 시·군의 44개 보건소 역량 강화 추진
14	46-② :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14	46-② :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15	47-① : 과잉진료 줄여 의료비 부담 축소	15	47-① : 과잉진료 줄여 의료비 부담 축소
16	48-① :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도 차원의 지원 강화	16	48-① :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도 차원의 지원 강화
17	49-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노동자 건강관리 추진	17	49-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노동자 건강관리 추진
18	50-① : 만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18	50-① : 만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기획재정위원회 이관
19	51-① : 경기도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	19	51-① : 경기도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
20	51-②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0	51-②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1	52-①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에게 교복 지급	21	52-①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에게 교복 지급 ※ 여성교육위원회 이관
22	56-① :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보건교육·예방진료 실시	22	56-① :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보건교육·예방진료 실시
23	57-① : 경기광역치매센터의 기능 역할 강화	23	57-① : 경기광역치매센터의 기능 역할 강화
24	57-② : 경기형 치매안심센터 모델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확산	24	57-② : 경기형 치매안심센터 모델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확산
25	58-① :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25	58 : 치매안심마을 ※ 58-①② 병합 및 공약과제명 조정
26	63-①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준수 ※ 106-① 병합	26	63-①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준수 ※ 106-① 병합
27	63-② :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연계	27	63-② :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연계
28	65-① : 탈시설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8	65-① : 탈시설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9	65-②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9	65-②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0	65-③ :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강화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지원,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30	65-③-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지원 ※ 65-③ → ⅰ / ⅱ 분리
		31	65-③-ⅱ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매뉴얼 보급

31	66-① :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휠체어 싣는 고속버스 시범 도입)	32	66-① :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휠체어 싣는 고속버스 시범 도입)
32	66-②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내실화 및 권역별 장애인인권센터 확충	33	66-②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내실화 및 권역별 장애인 인권센터 확충
33	67-① : 장애인과 1:1 상담 통한 최적의 서비스 설계 지원	34	67-① : 장애인과 1:1 상담 통한 최적의 서비스 설계 지원
34	104-① : 5060 신중년 제2인생 설계 지원 강화	35	104-① : 5060 신중년 제2인생 설계 지원 강화 ※ 노동경제환경위원회 이관
35	104-② : 전문 퇴직자 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36	104-② : 전문 퇴직자 위한 중장년 창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 노동경제환경위원회 이관
36	105-① : 노노케어 등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및 사업기간 확대	37	105-① : 노노케어 등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및 사업기간 확대
37	105-② : 경기도내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조정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38	105-② : 경기도내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조정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38	105-③ : 사회적 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창업 준비 사업 구축	39	105-③ : 사회적 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창업 준비 사업 구축
39	106-①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4% 준수 및 제고	40	106-①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3.4% 준수 및 제고 ※ 63-① 병합
40	106-② : 장애인 고용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41	106-② : 장애인 고용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41	106-③ :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42	106-③ :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42	106-① : 장애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지원, 학령기 의무교육을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 강화	43	106-① : 장애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지원, 학령기 의무교육을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 강화 ※ 교육여성위원회 이관
43	106-② : 장애성인 취업교육, 고급 정보화 교육 등 맞춤형 평생 교육과정 개발하여 운영	누락 과제 추가	106-② : 장애성인 취업교육, 고급 정보화 교육 등 맞춤형 평생 교육과정 개발하여 운영 ※ 교육여성위원회 이관
		누락 과제 추가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공약 이관	158 :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활성화 ※ 158-①,②를 병합하여 공약과제명 조정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공약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이관**

문화체육 등 공약			
연번	공약과제명	연번	최종 공약과제명
1	35-① : 파주·고양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1	35-① : 파주출판단지 복합문화콘텐츠클러스터 활성화
2	62-①② : 역사문화유적지에 스마트 다문화 해설안내판 및 QR코드 설치	2	62 : 역사문화유적지에 스마트 다문화 해설안내판 및 QR코드 설치 **※ 공약 과제 62-1, 2를 병합하여 추진**
3	64-②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체육활동 기회 확대(유니버설 체육관 전환)	3	64-②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체육활동 기회 확대(유니버설 체육관 전환)
4	89-① :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4	89-① :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5	90-② : 파주시 · 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5	90-② : 파주시 · 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6	90-③ :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연계망 구축	6	90-③ :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지원 확대 **※ 기존 공약을 하위 사업으로 포함, 공약명 일부 변경하여 추진**
7	92-① : 경기북부라인 최첨단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	7	92-① : 경기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벨트 거점 **※ 공약명 및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
8	134-① : 폐교 및 유휴공간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8	134 : 폐교 및 유휴공간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 134-①, 134-②, 135-①, 135-②, 135-③, 135-④ 등과 병합하여 추진**
9	134-③ : 중앙정부의 '꿈꾸는예술터'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마련	9	※ 164-①과 병합하여 추진
10	140-① :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조성	10	140-① :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및 조성 **※ 185-①과 병합하고 공약명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
11	140-②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11	140-②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12		12	140-③ : 경기도내 역사 · 문화 · 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 185-1을 병합하여 공약 과제 신설**
13	158-①, ② : 실버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경로당의 교육적 기능제공, 어르신께 문화교육 등 제공	13	**※ 158-①과 ②를 병합하여 추진 및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이관**
14	162-① :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 경기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14	161 :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경기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 공약 161-①, 161-②, 161-③, 162-①과 병합하여 추진하고 공약 번호를 161로 확정**
15	163-① : 공연장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15	163-① : 공연장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16	164-① :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16	164 :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 공약 164-①, 164-②, 164-③, 161-③, 162-②, 165-① 등과 병합하여 추진하고 134-③과 연동**
17	165-② : 건축·도시 설계 시 문화영향평가 적용	17	165-② : 건축·도시 설계 시 문화영향평가 적용
18	166 : 중앙정부'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경기도 문화의 날'운영	18	166 : 중앙정부'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경기도 문화의 날'운영 **※ 공약 170-①과 연동 추진**
19	167-①-ⅰ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 인원 확대 유도	19	167-①-ⅰ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 인원 확대 유도
20	167-①-ⅱ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혜자 인원 확대	20	167-①-ⅱ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 인원 확대
21	167-②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지원 시 지역화폐 활용	21	167-②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지원 시 지역화폐 활용

22	168 ①, ② :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조성 및 확대	22	168 :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조성 및 확대 **※ 168-①, 169-①, 169-②와 병합하여 추진**
23	170-①, ②, ③, ④ : 도민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일상화 추진	23	170 : 도민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일상화 추진 **※ 166, 170-①~④까지 병합 추진**
24	171-①, ②, ③, ④ : 경기도내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24	171 : 경기도내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 171-①~④까지 병합하여 추진**
25	172-① : 독립영화 제작 지원분야 지원금 확대	25	172-① : 독립영화 제작 지원 분야 지원금 확대
26	172-② : 독립영화 완성작 공간 지원	26	172-② : 독립영화 완성작 공간 지원
27	172-③ :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27	172-③ :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28	183-① :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프로그램을 지원	28	183-① :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프로그램을 지원
29	183-② : 자연환경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산업 유치 및 활성화 적극 추진	29	183-② : 자연환경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산업 유치 및 활성화 적극 추진
30	184-① : 도민이 함께하는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독립야구단 적극 지원	30	184-① ; 도민이 함께하는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독립야구단 적극 지원
31	185-① : 자연생태 탐방코스 발굴 및 둘레길 연결	31	※ 140-①과 140-③으로 병합 및 이전 하여 추진
32		32	F4-3-① : DMZ 세계평화자연유산 등재 추진 **※ 누락 과제 추가**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보건복지국 (33개)

○ 24-① : 경기도 청년 배당 실시 (복지정책과)

o 24-② :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복지정책과)

○ 40-① :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복지정책과)

○ 41-① : 민관협력의 경기복지거버넌스 강화 (복지정책과)

○ 45-① : 경기의료원의 병원시설과 환경 지속 개선 (보건정책과)

○ 45-②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정책과)

○ 46-① : 시·군의 44개 보건소 역량강화 추진 (보건정책과)

○ 46-② :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보건정책과)

○ 47-① : 과잉진료 줄여 의료비 부담 축소 (보건정책과)

○ 48-① :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도 차원의 지원 강화 (감염병관리과)

○ 49-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노동자 건강관리 추진 (보건정책과)

○ 51-① : 경기도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 (건강증진과)

○ 51-②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건강증진과)

○ 56-① :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실시 (건강증진과)

○ 57-① :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역할 강화 (건강증진과)

○ 57-② : 경기형 치매안심센터 모델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확산 (건강증진과)

○ 58-① : 치매안심마을 (건강증진과)

○ 63-①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준수 (사회적일자리과)

○ 63-② : 스마트 산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취업연계 (사회적일자리과)

○ 65-① : 탈시설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장애인복지과)

○ 65-②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정책과)

○ 65-③- 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지원 (보건정책과)
○ 65-③- ⅱ: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매뉴얼 보급 (안전교육담당관)
○ 66-① :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휠체어 싣는 고속버스 시범 도입) (교통정책과)
○ 66-② :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내실화 및 권역별 장애인인권센터 확충 (장애인복지과)
○ 67-① : 장애인과 1:1 상담 통한 최적의 서비스 설계 지원 (장애인복지과)
○ 105-① : 노노케어 등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및 사업기간 확대 (사회적일자리과)
○ 105-② : 경기도내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조정을 통한 수행기관 확대 (사회적일자리과)
○ 105-③ : 사회적 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창업 준비사업 구축 (사회적일자리과)
○ 106-② : 장애인 고용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일자리과)
○ 106-③ :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에 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업지원과)
○ 158 : 실버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경로당의 교육적 기능제공, 어르신께 문화교육 등 제공 (문화정책과)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이관
○ 누락과제추가 :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건강증진과)

❍ 문화체육관광국 (30개)

○ 35-① : 파주출판단지 복합문화콘텐츠클러스터 활성화 (콘텐츠산업과)
○ 62 : 역사문화유적지에 스마트 다문화 해설안내판 및 QR코드 설치 (문화유산과)
○ 64-②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체육활동 기회 확대- 유니버설 체육관 전환 (체육과)
○ 89-① :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콘텐츠산업과)
○ 90-② : 파주시 · 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콘텐츠산업과)
○ 90-③ :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지원 확대 (콘텐츠산업과)

○ 92-① : 경기 서해안-DMZ 동부 생태관광 거점 조성 (관광과)
○ 134 : 폐교 및 유휴공간을 도민들의 문화 · 예술 공간으로 조성 (문화정책과)
○ 140-① :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및 조성 (관광과)
○ 140-②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과)
○ 140-③ : 경기도 내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관광과)
○ 161 : 예술인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 경기도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 확대 추진 (문화정책과)
○ 163-① : 공연장 개방 및 창작활동 지원 (문화정책과)
○ 164-① :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운영 (문화정책과)
○ 165-② : 건축 · 도시 설계시 문화영향평가 적용 확대 (문화정책과)
○ 166 : 중앙정부'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문화정책과)
○ 167-①-ⅰ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인원 확대 유도 (문화정책과)
○ 167-①-ⅱ :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인원 확대
○ 167-② :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시 지역화폐 활용 (체육과)
○ 168 :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조성 및 확대 (문화정책과)
○ 170 : 도민 박물관 · 미술관 전시 관람 일상화 추진 (문화정책과)
○ 171 : 경기도내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콘텐츠산업과)
○ 172-① : 독립영화 제작 지원 분야 지원금 확대 (콘텐츠산업과)
○ 172-② : 독립영화 완성작 공간 지원 (콘텐츠산업과)
○ 172-③ : 독립영화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콘텐츠산업과)
○ 183-① :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 (체육과)
○ 183-② : 자연환경을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 산업 유치 및 활성화 적극 추진 (체육과)
○ 184-① : 도민이 함께하는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독립야구단 적극 지원 (체육과)
○ F4-3-① : DMZ 세계평화자연유산 등재 추진

6. 정책제안 및 과제

1.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

❍ 제안사유

- 이자수입 감소로 이자부담 지속 증가 : 18년(12월) 15억, 19년(6월) 24억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 불가, 자체 수익사업 곤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 중복

❍ 내용

- 공제회 현황
  - 설립일자 : 2010.05.07.
  - 예산(18년) : 955백만원
  - 직원/회원 : 현원 8명(정원 12명) / 16,014명(사회복지 7,337 + 보육 8,677명)
  - 출연금 : 5,639백만원
- 공제회 해산 및 공제 제도 폐지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18.12.31까지 유예)

- 사회복지사업법 상 모든 종사자 대상 복지카드 발급
  - 공제회원 대상이 아닌 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문화, 건강, 교육 등에 사용
- 공제회 직원 고용 문제 : 민관 복지거버넌스 인력으로 편입
- 기존 회원 반발 예상되나 법적 문제 없음

❍ 기대효과

- 이자보전 부담 감소 및 운영비 절감으로 도 재정 건전화 기여
-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공정한 혜택 부여 가능

2. 무한돌봄센터 개편

❍ 제안사유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 정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역할 약화
- 읍면동 사례 관리 확대와 사례 관리 수행기관 분화로 개편 필요
- 민간사례관리사는 이원화된 지시체계(무한돌봄관련과와 파견 기관)로 인한 혼란 및 이직률 증가

❍ 내용

- 현황 및 개편 방안

• 사업량 : 29개 시·군, 65개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 189명

• 예산액(`18년) : 8,470백만원(도 2,798 시군 5,672 / 시군차등보조)

•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타 시도 사례

> ■ 부산 수영구 : 이웃이 이웃을 돕는 민관협력체 희망플러스단 사업
> - 기존 개별적 추진되던 민관협력 단체를 희망플러스단으로 재조직화
> - 발굴팀, 지원팀, 돌봄팀으로 구성
> - 참여인원 :1,641명(동대표협의체 141명, 실무참여인원 : 1,500명)
> ■ 경기 부천 : 함께해요, With 부천 사업
> - 동 단위 순수 시민 주도형 지원 발굴·지원 시스템 마련
> - 시민이 직접 지역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 동 복지협의체 주관(703명)과 거점 사회복지관 협약

• 사무국 적정 시설·인력배치 기준(안) 권고 : 공간확보, 사무국장 1인, 간사 2인, 5~7개 읍면동 협의체당 사례관리사 1인

• 시군지역보장협의체와 무한돌봄센터 조직 통합 :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간사례관리 강화

- 조직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행동(행복한 동복지)지원단'
- 역할 : 동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읍면동협의체 컨설팅

• 경기복지재단 : 읍면동협의체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민간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성 강화
- 무한돌봄팀 공공인력의 재배치 가능

❑ 장애인 생활임금 도입

❍ 제안사유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단위 : 명, 2018. 5월 기준)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명)	**537,858**	43,379	70,937	91,009	77,125	114,296	141,112
	(100%)	(8.1%)	(13.2%)	(16.9%)	(14.3%)	(21.3%)	(26.2%)

- 필요성 : 저임금 장시간 장애인 노동자 대상 생활임금 도입은 대상 범위, 장애 정도, 도입 영역 등에 대한 사전 연구 검토가 선행된 후 도입 가능한 과제

○ 정책 목표

- 선진 사례, 연구검토 후 도입 방안 마련으로 타 장애인 지원과 중복방지 마련
- 새로운 경기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점 도출
- 민선7기 내 장애인 생활임금 부분 도입 시행

❍ 내용

- 중증장애인 중심 공공·민간 영역별 장애인 고용실태 파악
- 장애인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 대상범위, 장애정도, 도입영역, 정부보조금 등 기타 지원에 대한 차감여부 등
  - 효과적인 재원마련 선행연구로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방안 마련
  -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에 따른 실천방안과 협의점 도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구를 통해 합의점 도출
- 시·군과 재정합의를 선행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노동조건이 불리한 장애인의 안정된 삶 지원 가능

3. 국제장애인교류센터 설치

❍ 제안사유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현황

(단위 : 천명, 2018. 6월 기준)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전 국(A)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56
경기도(B)	500	505	506	506	508	513	522	533	537
B/A(%)	19.9	20.0	20.1	20.2	20.4	20.6	20.8	20.9	21.0

–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장애 환경 구현을 위한 대표시설 필요

–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의 수요는 급증, 국내 이용편의시설 완비 시설 전무

○ **정책 목표**

–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못하는 환경 조성

• 민선7기내 '경기장애인국제교류센터'(가칭) 건립 로드맵 제시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교류의 장으로 중증·중복장애인의 문화·예술, 여가생활 증진 및 국내·외 교류협력의 공간 확보

❍ 내용

– 설립추진 TF팀 구성 및 설립추진 전략 수립

• 중앙부처에 경기도 설립 의지 전달, 국고보조 확보방안 모색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외부자원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 모색

–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

• 국내외 현황과 추세, 유사 사례,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 부지선정의 타당성 및 설립방안, 설립 소요 예산 추정

– 시·군협의 설립부지 확보 및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협의 진행

•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및 규모 등 확정

❍ 기대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 확보

– 선도적 장애인 정책으로 경기도가 국제사회에 모델 제시

4. 장애인 생활편의 스마트 앱 구축

❍ 제안사유

- 경기도 전체 장애인 537,858명 중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이 205,325명(38%)으로 일상생활 불편
-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없이 이용 가능한 일상생활 시설 정보제공 필요
- 경기도는 Universal Design 기반 Smart City로 미래지향 전략설계 필요

❍ 내용

-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식당, 쇼핑·공연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 안내 '앱' 서비스 제공
  (2019년 경기도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협업 앱 개발 진행)
- 장애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발굴, 접근성 개선유도 및 다각적 정보 제공
- 앱 서비스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 기대효과

- 장애인 편의시설 앱의 지역사회 인프라 정보력을 높여 사회활동 범위 확대
- 선도적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지 도정운영 지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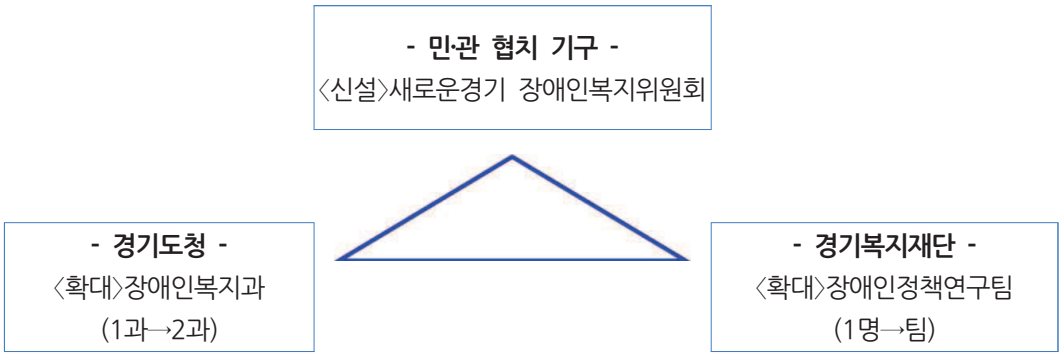
5. 장애인정책 협치·연구·조직 확대(안)

❍ 제안사유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구 분	보건복지부	경 기 도	서 울 시
등록장애인	2,545,637명 (경기도 21%)	537,858명 (서울의 137%)	391,753명 (경기도의 72.8%)
조직현황	1국 4과 46명	1과 4팀 20명	2과 7팀 38명
비 고	2011년 4과 체제개편	타과 장애인업무 포함, 6팀 27명	2012년 2과 체제개편

- 장애인 정책 삼각편대 구축으로 선도적 장애인복지 실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경기도 실현 및 신규 업무 폭증으로 조직 강화 필요



○ 정책 목표

- 새로운 경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민·관 협치를 위한 민간전문가·장애당사자·실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축
- 道 장애인복지 조직 확대
  - 장애인 문화·체육·교육·교통·보건·안전 등 장애인 복지 업무총괄 기획·조정 조직
  - 65세 이상 장애인 224천명(41.7%), 선도적 장애어르신 정책, 인권보장 추진 조직 필요

* 서울시 대비 장애인이 37% 많으나, 서울시 2개과 38명 대비 경기도는 1개과 20명에 불과

-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팀 신설

❍ 내용

- 새로운 경기 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목적) 민·관 협치를 위한 민간전문가, ·장애당사자·실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 필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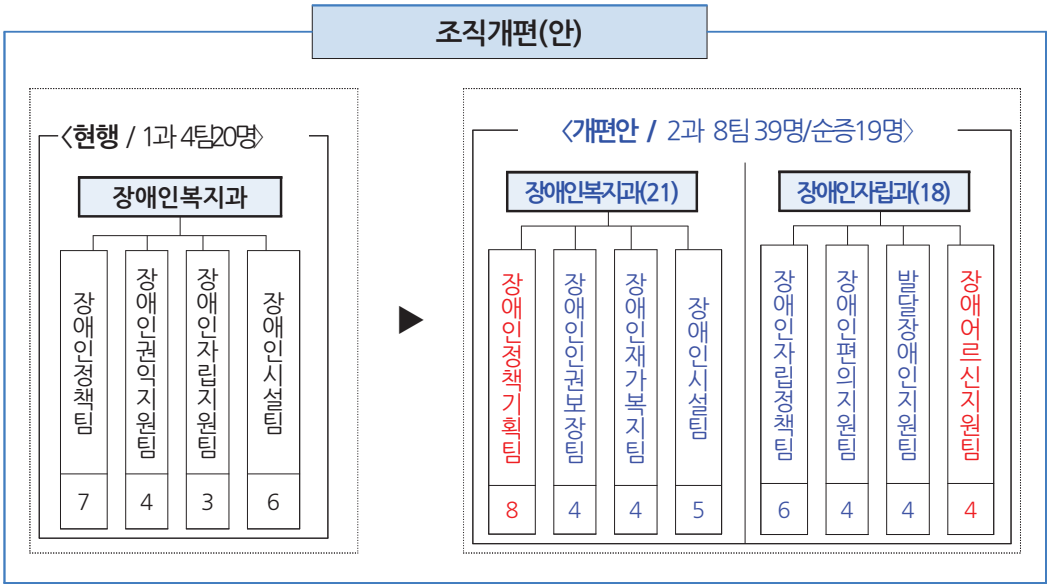
(기능)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기획,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

- 道 장애인복지 조직 확대

• 장애인 문화·체육·교육·교통·보건·안전 등 장애인복지 업무총괄 기획·조정 조직 필요

• 65세 이상 장애인 224천명(41.7%), 선도적 장애어르신 정책, 인권보장 추진 조직 필요

•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장애인 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조직 필요



- 경기복지재단 장애인정책연구팀 신설

• 책임연구원 1인이 경기도 전체 장애인 관련 전담연구로 도 및 시·군 지원 한계

※ 서울복지재단의 경우 장애인 관련 4명의 연구원 업무 수행

• 장애유형별, 등급제 폐지, 공약이행 등 연구과제 지속 증대하나, 정책개발 한계

구 분	(기존)		(변경)
인 력	• 책임연구원 1인	▶	• 정책연구실 내 장애인정책팀 신설 - 기존 1명 → 변경 3명(증 2명)
운 영	• 전체 장애인 연구 수행		• 정책, 시설, 권익/자립 분리 연구 수행

❍ 기대효과

- 증가하는 장애인 인구 및 장애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
- 경기도의 선도적 장애인 정책으로 전국 표준모델로 위상 강화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제도 확대

❍ 제안사유

- 공무원의 정신질환 관련 정보부족으로 상담 어려움
- 현재 경기도 보건복지센터에 의존
- 정신장애자 접근금지법에 의해 기관 접촉 어려움
- 치료를 위해 평생교육, 약물복용이외 체육 프로그램등이 포함 필요
- 고학력자들도 상당 수 존재 사회와 연결고리 필요(직업)
- 15세~30세 사이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나 관심을 통해 예방가능

❍ 내용

- 정신질환자, 가족 복지정책 TF팀 구성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계획수립
- 가칭 정신회복지원센터(재활기관) 건립

❍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권익 향상 및 인권 개선
- 편견과 차별 해소 복지 창출

7. 경기도 예술정책 전담부서 신설

❍ 제안사유

-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술정책 전담 부서가 미설치 상태로 운용 중이며 문화정책과 내 예술진흥팀으로 편제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문화 분야에 있어 예술 부분은 해당 정책 범위가 광범위 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해당 정책 업무 추진시 예술정책 전담부서 운용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내용을 비롯하여 민선7기 경기도 공약 및 정책 이행을 위해서라도 예술정책과 신설을 통한 업무재분장 및 인력 증원이 필수불가결함

❍ 내용

- 문화체육관광국 내 예술정책과 신설.

• 예술정책과 : 예술정책팀, 공연예술팀, 공예·도자·디자인팀, 문화예술교육팀 이상 4개팀으로 구성

❍ 기대효과

- 예술정책 기획의 전문화 및 고도화
- 정책 현장 변화에 따른 도정 대응력 확보
- 예술 분야 융복합 정책 및 다원정책 대응 기민성 제고
- 중앙정부 예술정책 주요 방향 부응 및 경기도 예술정책과의 연동성 강화

8. 문화체육관광실 신설 및 실국별 조직 정비

❍ 제안사유

- 현행, 경기도청은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 균형발전실, 경제실 총 4개실 체제로 도청 조직을 운영
- 민선7기 경기도정 및 공약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4개실 체제를 5개실 체제로 확대 개편
- 별도 실 체제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닌 국 대 국 통합을 통한 실 신설(현행 교육협력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문화체육관광실 구성)

❍ 내용

- 교육문화체육관광실 주요 보직

• 실장, 정책관, 문화정책과장(인문정신문화 여가문화 포함) 및 예술정책과장, 문화콘텐츠산업과장(한류월드사업단 통합, 정보화 진흥 업무 분리), 체육과장, 관광과장, 문화유산·종무과장(문화유산과와 종무과 통합), 출판인쇄도서정책과장(독서진흥업무 포함),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 통합)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업무 위상 제고
- 정책 변화에 따른 도정 대응력 확보 및 정책 추진력 강화
- 중앙정부와 정책 협력 및 협업 강화
- 민선7기 공약 이행률 제고 및 도 행정서비스 강화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각 산하기관 관련 기능 조정 내용은 별도 보고

9. '문화가 있는 삶, 삶이 있는 경기' [경기31·생활문화축제위원회] 설립

❍ 제안사유

- 최근 경기도내 제의 절차를 중시하던 전통 축제의 급속한 소멸과 오락성이 강조된 공연 및 거리축제 성행은 도민 삶의 방식이 과거 집단주의적 농촌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도시문화로 바뀐데 기인
- 이상과 같은 흐름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게, 각 주체와 전략에 따라 국내 생활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면모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생동감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 생활문화예술 브랜드 구축 마련이 필요
- 문화예술 경기도의 창작 개성을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마련이 시급하며 생활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새로운 선순환 수익모델 환경 마련을 통해 창작자의 자립도와 경제적인 도움 마련이 필요

❍ 내용

- 경기31·생활문화예술올림픽 사업 개최
- 경기도 생활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추진
- 신진 창작자 발굴 및 육성과 기성 아티스트 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 개방형 생활문화예술 오픈행사(현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축제 연계)
- 소외지역 및 다문화 생활문화 예술지원 지역 개방 행사로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을 연계하는 인문정신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공동체, 나눔, 배려, 책임성 등 경기도의 정체성과 차별적 장점인 인문정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육성

❍ 기대효과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유사 축제 사업을 통합 및 연동 추진, 권역별 생활예술 특성화 도모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지역 정체성 확립
- 축제를 통한 도민 참여 기회 부여로 [모든 도민은 예술가 , 실행하는 주체가 곧 감상의 주체]가 되어 서울 중심의 문화 팔로워에서 문화 리더로의 '문화적 우월성'과 자존감 상승

- 가족 단위의 참여, 최초 참여의 비중을 높여 축제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 이미지 제고
-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을 확보,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창작예술 활성화와 지역 특성화 도모

10.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경기'[경기 축제형 국제 융복합예술 엑스-티벌 (Exhibition-Featival) 개최]

❍ 제안사유

- 경기도는 미래 성장 동력의 허브로써 컬쳐노믹스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역 국제화 추진'과 독립예술로 분절되어 있는 국제 융복합 예술의 집합 및 재구성을 통해 포괄적이고 미래적인 도시기반 강화와 지역 국제화 추진 필요

❍ 내용

- 세계 최초 국제 융복합 예술 X-Tival 초대형 박람회 개최
  - '청년예술가 창조 박람회', '생태계 박람회', '경제 박람회', '교육 박람회', 'K-Culture 박람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융복합 예술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축제를 종합적으로 추구
- 깨어나는 창조 미래자원 융복합예술' 상상의 새시대, 오감으로 횡단하는 미지의 세계로 예술의 계승과 발전, 구체화, 신규 콘텐츠 제공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겨루는 장 마련

① 보이는 예술(Light sence) - 시각/공간/공연 예술관
② 들리는 예술(Auditory sence) - 소리/K-POP 예술관
③ 느끼는 예술(Cutaneous sence) - 체험관, 창의교육관, 세미나 예술관
④ 숨쉬는 예술(Sence of smell) - OFF-OFF 예술관
⑤ 맛보는 예술(Taste sence) - 식품관, 각종 편의 시설, 연계 행사 및 거리행사

- 지성과 감성을 촉발하는 각종 체험관 – VR, 융복합 공연장, 뮤지컬 파크와 음악 전람회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들의 '공동 창작터전'으로써의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환경 토대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국가 문화예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으로서의 융복합 예술 산업화 기대
- 예술 산업과 함께 첨단 산업, 에너지, 전자, 새로운 개념의 X(미지수)산업분야와의 관계로 '발전 범위'와 '발전 가능성' 확대, 장르간의 새로운 소통, 표현 양식 창조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보 및 경제자립수단으로의 일자리를 창출

11. 제목 : 무형문화제 전수장학금 지급

❍ 제안사유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예능 28, 기능 40, 보유자 57명, 전수조교 57명, 보유단체 21개)를 보유
- 현재 전승지원금은 보유자 월 130만원, 전수 조교 50만원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보유단체에는 시군에 30%, 24만원을 보조
-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은 13개 시도에서 월 100만원~26.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 시도는 경기, 세종, 충남, 경남 등 4개임
-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의 중요성에 비해 갈수록 적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수 희망자들에게 최소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자존감을 높여 중도 탈락을 방지

❍ 내용

- 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단체에게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에 소질이 있거나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기·예능을 전수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규모는 타 시·도 규모(평균 20만원)를 고려하여 지급

❍ 기대효과

- 전수 장학생의 자존감 고취 및 장학생 홍보 모집에 효과 배가
- 경기무형문화재 전승·보존으로 도민의 전통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12. 경기스토리텔링 공모사업

❍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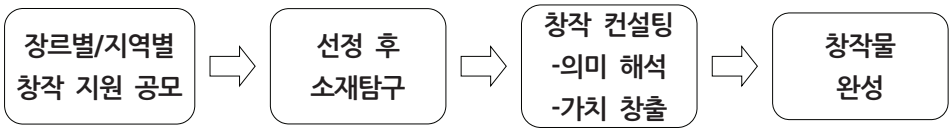
- 기존 지원사업제도 내에서 경기도의 문화자원을 담는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경기도가 목적의식적으로 경기도의 역사, 자연, 사람, 생활, 사건 등을 창작 콘텐츠로 만들어 도민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쉽게 경기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기획 전무
- 경기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도민 의식을 고양하고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문화예술이 춤추는 경기도로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임과 함께 스토리텔링 작품을 통해 도민의 소속감과 자존감 증대

❍ 내용

- **내용**

• 경기도 지역 이야기가 예술작품에 담겨 창작되도록 하는 사업
• 예술작품을 통해 도민들이 경기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사업
• 경기도는 브랜드가 되고, 도민들은 정주의식과 소속감을 높이는 사업

- 과정



- 방식 및 예산

• 집단 창작 공모 : 25개 과제 X 2,000 만원 = 5억원

• 개인 창작 공모 : 100개 과제 x 500 만원 = 5억원

❍ 기대효과

- 경기도 정주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기반 예술활동 장려
- 경기도 문화예술의 창작적 소재 확대 제고
- 창작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
- 경기도 문화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 효과 기대

13. (가칭)경기예술비엔날레 개최

❍ 제안사유

- 경기도 예술인의 정주화, 소속감 제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제가 필요

❍ 내용

- 국내 예술 기득권 작가군을 배제하고 경기도 내(도내 3년 이상 거주 작가) 작가를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 작가군으로 양성하는 대규모 예술박람회 형식(일산 킨텍스, 경기도립미술관, 상상캠퍼스, 도자공원 등의 공간을 이용)이며,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조직위원회로 운영

❍ 기대효과

-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작가들에게 공평한 기회(31개 시.군의 대표적 작가 1~5명 추천제 및 공모제)제공으로 공정경기도 이미지 제고
- 다양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협업으로 축제화 관광화(현재 광주 비엔날레, 충주 공예 비엔날레, 부산 아트페어 등은 국내외 유료 관광객 수백만 명 유

치 중)로 세계화를 지향하며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면 관광 효과와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아트페어를 동시 개최함으로 예술인 복지 효과(현재 국내외 아트페어는 적지 않은 부스비 등 출품료가 있으며 판매 시 주최측과 작가 5:5 배분으로 보편적 작가들에게 혜택이 미비한 상황)가 있음

14. 우리동네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 제안사유

- 도민 누구나 동네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인구 1만~3만)을 확충, '스포츠로 행복한 경기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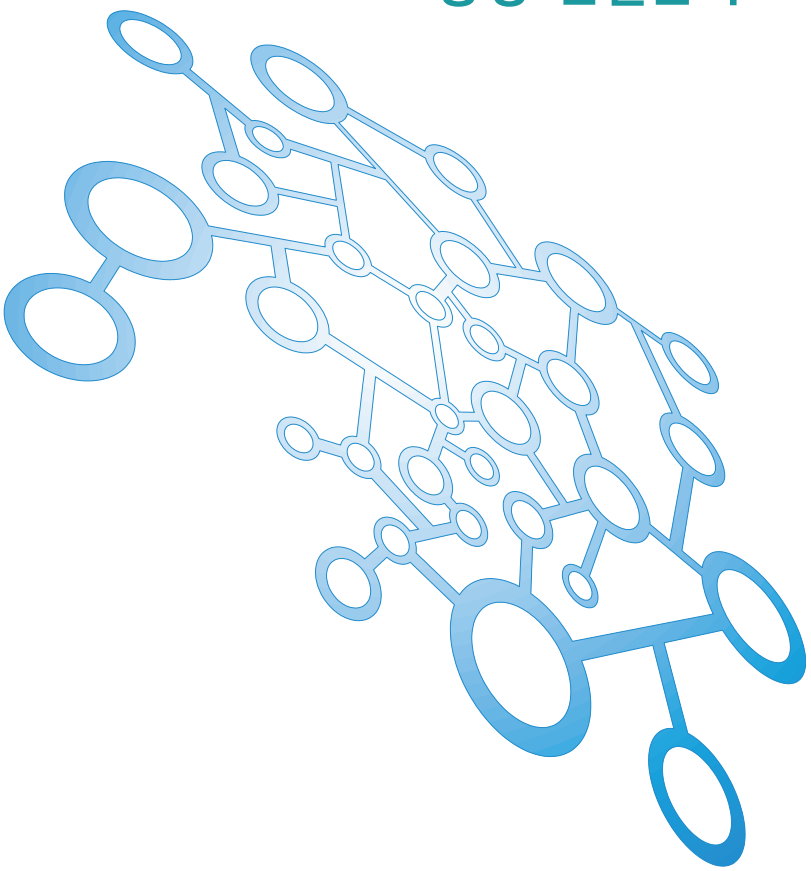
❍ 내용

- 체육활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환경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작은 공간의 체육시설을 지어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선6기까지는 기존 체육활동에만 한정된 단순 공간 확보에만 치중했으나 새로운 경기도에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육,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복합체육시설로 전환
- 19년부터 22년까지 경기도내 50개 지역에 건설하고 소요 예산은 도비 152억원 예상

❍ 기대효과

- 체육시설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소규모 복합체육시설을 만들어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스포츠 복지사각지대 해소
-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기여(스포츠 박스카와 연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기대 등)
-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화합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소규모 체육시설이어서 크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어 광역단체 역할 부각 가능

농정·건설분과



1. 구성

○ 위원장 : 소병훈
○ 기획단장 : 백종덕
○ 간사 : 홍안나(농정), 김형준(건설)

2. 활동방향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분과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농정·건설 분야 경기도 조직 및 산하기관 평가 및 개선안 검토

❍ 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 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철학 및 공약의 취지 공유
-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한 공약 세부 이행방안 검토
- 주민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한 도민의 정책 수요 파악 및 정책 수립 과정에의 주체적 참여 도모
-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조직 개편·업무이관 방안 검토
-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 소요 예산 추계, 총 실행 기간 산정
- 농정·건설 분야 2018년 하반기 추경 반영 사업 검토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건설국, 건설본부,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총 5개 실·국, 4개 기관)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2일(화)	203호	09:30~10:10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10:10~10:30	농업기술원
			10:40~11:40	축산산림국
			14:00~14:30	건설국
			14:30~14:50	건설본부
			15:00~15:50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16:00~16:50	철도국
			17:00~17:50	교통국
2차	6월 27일(수)	203호	10:00~11:50	농정해양국
			14:00~14:50	농식품유통진흥원
			15:00~15:50	농업기술원
			16:00~16:50	축산산림국
	6월 28일(목)	103호	13:30~14:20	수자원본부
			14:30~15:10	경기평택항만공사
			15:20~16:10	건설국
			16:20~17:10	건설본부
	6월 29일(목)	203호	14:00~15:30	도시주택실
			15:40~16:50	경기도시공사

※ 3차 업무보고는 국실별로 공약별 대면보고로 대체하기로 결정함

(2) 업무보고 내용

- 농정·건설 분야 현안
- 도 자체 공약 이행 방안

❍ 현장방문

(1) 경기 화성시 에코팜랜드

- 7월 6일 14:00
- 현황 보고 및 진행현황 견학, 방향성 재검토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2) 경기 동북부 의정부시

- 7월 9일 13:00
- 경기북부 군사지역 주민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대책 토론
- 군납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방안 논의

(3) 경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 7월 10일 13:30
- 한강수계지역 농업인 피해 사례 청취 및 피해보상 대책 토론

(4) 경기 광주시청, 회덕동, 송정동, 태전지구, 태재고개

- 7월 10일 10:00
- 경기 광주시 난개발 문제 파악 및 도시재생 방안 논의
- 경기 광주시 교통난 해소 방안 논의

(5) 경기 용인시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7월 10일 14:00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개발 이익 환원 저조 대책 논의

(6) 경기 수원시 행궁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7월 10일 17:00
- 행궁동 도시재생 사례 청취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논의

❍ 토론회 및 간담회

(1) 농업관련 전문가 1차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농정 방향
일시	7월 3일(화) 15: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장경호(농업농촌정책연구소 '녀름'소장), 길청순(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
주요 논의 사항	농정해양국 업무 및 산하기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G마크 인증 문제 개선 방안

	토양 및 수질검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전문관 사업 문제점 검토 생태환경보전농업 기여금지급 관련 방향성 경기도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단지 형태 토론 군납 비리 관련 대책 방안 친환경무상급식 비율 상향,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공유농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귀농귀촌 인식개선 등 사업 확대 및 지원 방안 우리아이 아침간식 사업 폐기 검토 (교육청방침과 배치) 안전 먹거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전략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망성 검토, 문제점 토론 농업기술원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시농업 지원 필요성 토론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

(2)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간담회

주제	친환경 학교급식과 안전먹거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
일시	7월 4일(수) 12:2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최순영(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최창의(경기도 교육감 인수위원회 정책위원장), 심항일(경기도 교육감 인수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주요 논의 사항	발제1.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거버넌스 필요성(최순영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발제2.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및 내용 (심항일 경기도 교육감 인수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3) 현장농업인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농정 공약 총적 방향 및 현장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일시	7월 4일(수) 14: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민경학(전농경기도연맹 초대 의장), 이승봉(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고문), 이복자(도시농업시민협 상임대표), 박진규(도시농업시민협 정책위원장), 김덕일(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최철(애심

	목장 대표), 정용수(전국귀농운동본부부설자립하는소농학교장), 이영기(G마크연합사업단 대표), 임은주(여주 여성농업인센터장), 박성자(전 농식품부 여성농업정책관), 정찬희(제일영농 청년대표), 남정현(청년농업인연합회 서경제지부장)
주요 논의 사항	농촌 부재지주 문제 해결 방안 및 토지조사 필요성 농촌 경쟁력 관련 사람 중심의 농정 방향 수립 필요 안전먹거리 정책의 축산 포함 필요성 기후변화 대비 식량정책 및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정책 도농상생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귀촌귀농 사업 성공방안에 대한 고찰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방안 반려동물 관련 동물복지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 농정 거버넌스 개선 문제 공유농업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도시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확산

(4) 농정국 각 팀장 세미나

주제	농정 공약 관련 정책 세부화 및 예산 협의
일시	7월 5일(수) 09:3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한태희 신성장농업팀장, 배소영 친환경농업팀장, 원익재 유통마케팅 팀장, 민경록 주무관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 먹거리종합시스템 구축 먹거리위원회 거버넌스 구성 안 G마크 인증제도 개선방향 경기북부 군납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구성 방안

(5) 경기 농민단체협의회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농정의 방향과 현장농업인 애로 청취
일시	7월 5일(목) 14:00
장소	융기원 2층 창업지원센터

참석자	김윤배(경기농단협 회장, 4-H지도자협의회장), 홍응유(경기농단협 부회장,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장), 백한기(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부회장), 이길연(경기농단협 감사,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의장), 이화숙(경기농단협 감사, 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장), 김유헌(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도연합회장), 이정일(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 김준식(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임육택(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장), 윤세구(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장), 조상우(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 이승엽(한농연경기 사무처장), 한국양봉협회 사무국장
주요 논의 사항	각 참가 단체별 정책 건의 농정공약 평가 및 토론 - 안전먹거리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확대의 방향은 올바르나 기존 관행농 역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 농민단체 애로사항 청취

(6) 농식품유통진흥원 간담회

주제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일시	7월 5일(목) 16:30
장소	융기원 2층 창업지원센터
참석자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오강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부장
주요 논의 사항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평가 - 급식 조달이 5개로 나뉘어 있는 문제 - 통합관리를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 필요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 개선 방안 논의 농식품유통진흥원과 농정국과의 협력 필요성 논의

(7) 농업관련 전문가 2차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농정 기조 및 공약 방향
일시	7월 6일(목) 10:00
장소	융기원 10층 콜라보룸

참석자	장경호 자문위원, 송정환 자문위원, 김덕일 자문위원, 황영묵 자문위원, 박공영 자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새로운 경기 농정의 개념 확립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도민 전체로 확산시킬 방안 - 식량생산이라는 농업 본연의 역할 수행 필요성 확인 - 생태·환경·경관 보전의 기능 확대 -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과의 적극 연계 농업예산 확대 필요성 - 농업예산 비율 지속 하락 문제 - 먹거리종합계획,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확산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공약별 세부 토론

(8) 농업기술원 간담회

주제	새로운 농정으로 가기 위한 농업기술원의 과제
일시	7월 10일(화) 09:30
장소	융기원7층 농정건설 사무실
참석자	박인태(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이수연(농업기술원 연구협력팀장), 조정주(농업기술원 지도기획팀장)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 현황에 맞는 농업기술원의 역할 농업기술원 조직개편 방안 및 북부지원 신설의 필요성 공약별 세부 토론 경기농정 방향에 맞는 연구를 위한 연구원 증원 필요

(9) 해양항만 전문가 간담회

주제	평택항 발전방안
일시	7월 11일(수) 10:00
장소	융기원 10층 콜라보룸
참석자	해양항만 전문 자문위원(박명규 교수, 박영선 교수)
주요 논의 사항	평택항의 장점과 발전가능성 검토 지자체의 역할 (정부와의 역할 조율 가능성 타진) 당진항과의 연계방안 토론

(10)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 간담회

주제	친환경융복합 양식기술 개발 연구사업 검토 및 토론
일시	7월 11일(수) 13:00
장소	융기원 10층 콜라보룸
참석자	경기도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담당자 4인
주요 논의 사항	현재 진행중인 양어장+채소밭 복합 재배기술 브리핑 상용화 가능성 검토 투입대비 생산성, 효율성 연구에 포함 요청 농민, 어민 소득보장 가능성 타진

(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간담회

주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정책 방향
일시	7월 11일(수) 14:00
장소	융기원 10층 콜라보룸
참석자	친환경정책팀 김영호팀장, 친환경농업팀 김연기 팀장, 친환경농업팀 한현수 주무관
주요 논의 사항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는 정책 신설 필요성 제안 친환경농업정책의 방향성 검토 생태환경보전 준수 기여금 프로그램 및 지급방안 토론

(12) 급식관련 단체 간담회

주제	친환경학교급식 상향 방안과 고교무상급식 실현 방안
일시	7월 11일(수) 16:00
장소	융기원 10층 ID룸
참석자	학교급식관련 단체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진 경기영양교사회 회장, 황영묵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장, 최제철 부천학교급식센터장, 김수정 경기학교급식센터협의회장)
주요 논의 사항	고교무상급식 예산마련 방안, 단계적 실행 과제 친환경비율 상향을 위한 과제 급식비에서 식품비 인건비 분리와 도청, 교육청 예산분담 필요성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 필요성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예산운영권 농정해양국으로 이관

(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건설 주택 정책 기조 및 공약 방향
일시	7월 3일(수) 10: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이성호(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입법전문위원), 김성희 자문위원(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김재철 자문위원(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주요 논의 사항	발제 : 마을간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구축 (이상경 위원)

(14) 경기연구원 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건설 주택 정책 기조 및 공약 방향
일시	7월 4일(목) 14:00
장소	바이오센터 1층 소회의실
참석자	봉인식 박사(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경기연구원)
주요 논의 사항	발제 1. 서민주거복지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 (권순형 위원) 발제 2.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이상경 위원)

(15)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전문가 간담회

주제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방안
일시	7월 5일(목) 14:00
장소	바이오센터 1층 중회의실
참석자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1처), 한성민 팀장 (성남도시공사 개발계획팀), 김상일 박사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주요 논의 사항	발제 1. 성남시 사례로 본 공공개발 이익 환수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발제 2.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모델에 대한 제언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

주제	새로운 경기 건설 주택 정책 기조 및 공약 방향
일시	7월 6일(금) 10:00
장소	바이오센터 1층 중회의실
참석자	신성해(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입법전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발제 1. 경기도 공공주택 보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신성해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발제 2. 경기도시공사 기능 활성화 방안 (신성해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발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확대 방안 (신성해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

(17)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간담회

주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일시	7월 9일(금) 14:00
장소	융기원 16층 소회의실
참석자	임계호 센터장(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인권(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운영팀장), 송원석(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주요 논의 사항	발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및 기능 활성화 (박인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운영팀장)

(18) 주거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주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기의 주거정책 비전
일시	7월 12일(목) 14: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성달 팀장), 민달팽이유니온(최지희 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진남영 원장),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사무국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강훈 부본부장, 박효주 간사), 한국도시연구소(최은영 소장), 도시재생환경시민연대(안정희 대표), 수원경실련(유병욱 사무국장), 능곡뉴타운반대주민대책

	위(전민선 간사)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시흥주거복지센터
주요 논의 사항	발제 1.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사업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발제 2. 뉴타운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민선 능곡뉴타운반 대주민대책위 간사) 발제 3. 주택임대차 정책, 분양주택 공급 (김성달 경실련 팀장) 발제 4. 취약계층 주거복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발제 5. 청년주거정책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 6. 사회주택 분야 (진남영 새로운사회여는연구원 원장) 발제 7. 도시재생사업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농정건설 분과 전체 회의 5회 진행
- 분과 소관 공약의 방향 및 각 세부공약의 목표·이행방안 점검
-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등 일정 점검
- 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전 점검 사항 및 공유
- 분과 소위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2) 분과 농정 소위원회 활동

- 소위원회 회의 7회 개최
- 농정 분야 현안 파악
- 농업 전문가 및 기관 간담회 7차례, 현장농업인 간담회, 농민단체협의회 간담회, 먹거리 분야 단체 및 기관 간담회 2차례, 해양항만 전문가 간담회 등 12번의 간담회 개최
- 화성 에코팜랜드, 경기북부 공약 관련 현장, 양평·광주 등 수계지역 등 3차례의 현장방문 실시
- 타 분과 주최 세미나 참여 및 공약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연석회의 개최

- 이전 경기도정 과제 검토 및 추경 반영 사업 검토
- 농정 관련 부서 조직개편안 검토 (농업기술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3) 분과 건설 소위원회 활동

- 소위원회 회의 8회 개최
- 건설 분야 현안 파악
- 주거 관련 12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도시재생·공공주택 보급 확대 관련 전문가 간담회 3회, 경기연구원 주택·도시재생 전문가 간담회,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6차례의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 경기도 광주 난개발 현장, 용인 영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현장, 수원 행궁동 도시재생 현장 등 3차례의 현장방문 실시
- 타 분과 주최 세미나 참여 및 공약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연석회의 개최
- 이전 경기도정 과제 검토 및 추경 반영 사업 검토
- 건설 관련 부서 조직개편안 검토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농정해양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6	평택항을 세계적 무역항으로 육성
2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7	스마트 팜 혁신 밸리 경기도 유치
3	지속 가능한 청년 농업인 육성 시스템 구축	8	대북 농업 지원 및 상호 교류
4	G마크 인증제도 현황	9	부재지주 현황과 대책
5	경기도종합먹거리전략 사업 추진 현황	10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현황

나. 주요 논의 사항

- 식량자급률 통계 관리 필요성
- 쌀 생산 감축을 위한 농지의 태양광 시설 설치 정책과 대북 교류 정책 연계 검토 필요성
- 이상 저온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 대책 마련 필요
- G마크 인증 제도 관련 실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 부재지주 문제 해소 방안
- 귀농귀촌 유도 및 지원 방안
-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보급 문제점 및 적용방안 재검토
-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 안전 먹거리 관련 수입농산물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 우리아이아침간편식 사업 교육청 방침과 배치, 폐기 제안
-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비율 상향 방안, 교육청과 협력 방안 제안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	- 이 사업은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 학교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교육 현장의 입장과 맞지 않아 확산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 또는 사업 축소, 변경이 필요 - 또한, 사업이 확대될 시 이로 인한 생산자 측의 수혜자가 불분명 - 쌀소비촉진, 결식아동 대책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추진 확정된 사업이라 계약재배를 통한 원물조달 및 공급자 선정의 투명성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되, 2019년 사업으로 유지, 확장은 긍정적이지 않음
2	G마크 인증제도 현황	- 국가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 국가체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GMO 및 방사능 검사로 영역 변경 필요

		- G마크 브랜드화 정책은 마케팅차원에서도 판로확대 가능성이 없어 실효성 없으며, 인증제도로 두는 것이 마땅함 - 1차 농산물에 대한 G마크 인증제 적용은 농업생산 현장에서 취득하기 번거롭고 국가인증제도와 중복되므로 폐기하고, 가공품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3	스마트 팜 혁신 밸리 경기도 유치	○ 농산물시장개방정책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하락 - 1995년 WTO 출범 이후 수입농축산물과의 가격경쟁력이 없는 국내 농축산업 지속적으로 하락, 농업농촌 파탄 - 그 결과로 현재 쌀을 제외한 국내 식량자급률 3%, 97%가 수입 농축산물로 식량안보 위기 - 농업경쟁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농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들은 대체로 실패했으며, 그 중 하나가 스마트팜 사업임 ○ 농민이 아닌 농기업을 위한 정책이 스마트팜 - 스마트팜은 대규모 자재상을 비롯한 농기업이 기획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과 배치되는 정책 - 소규모 하우스에서도 생산 가능한 품목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첨단 유리온실에서 생산하겠다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농민들이 시도할 경우 빚을 떠안은 채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결국 수입 농축산물이 아닌 국내 농민들과 경쟁, 가족농 소농을 퇴출, 축소, 파탄내는 원인으로 작용 (현재 화옹단지 유리온실의 경우 전량 수출을 목표로 대규모 유리온실 건설, 결국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출 포기, 60%이상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교란, 동 품목 생산 농민들과 충돌) - 결국 스마트팜 정책은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아닌 농업 생산의

		주체를 농민이 아닌 농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임 ○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정부시책 수준에서 유지 - 기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해 도가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진행 - 고령농 및 여성농 지원, 청년농 유입을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로 정책 전환
4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 학생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력과 업무 부담의 문제를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 - 현재는 지역 산 과일의 조달을 계약 재배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산자들보다는 유통업체와 과일가공업체만의 사업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
5	경기도종합먹거리전략 사업 추진 현황	- 친환경광역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설립하여 공공급식, 군납 등 영역으로 공공먹거리 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전망을 통해 먹거리전략 구상, 추진 - 종합먹거리전략의 정책생산 주체가 될 먹거리위원회를 거버넌스로 구성, 장기적 먹거리 전략 구상
6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현황	-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를 통해 적정 식품비 확보 필요. 교육청과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비와 운영비 예산 수립의 담당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식품비는 경기도가,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이 바람직함) - 무상급식 예산과 조례를 운영하는 교육협력국의 업무와 예산을 친환경예산과 실제 학교급식사업을 운영하는 농정해양국으로 이관하여 업무 일원화를 해야 함 - 교육협력국은 지원업무가 주 업무로서 친환경비율 상향, 고교무상급식 실현 방안, 급식질 개선의 문제 등을 전문 업무로 다루지 않으므로 2009년부터 실제 이 업무를 다루었던 농정해양국으로 예산과 조례를 이관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담보의 방안임

(2) 농식품유통진흥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2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나. 주요 논의 사항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 친환경학교급식 배송업체 중앙 물류 논란, 해소 방안
-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방안,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성격상 맞지않음. 축산산림국으로의 사업 이관이 합리적

(3) 농업기술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농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4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력 양성 교육
2	우수품종 개발 보급 및 해외 판매 확대	5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계획
3	미래농산업 융복합 기술 개발 보급	6	주요작물 작황

나. 주요 논의 사항

- 친환경 기술보급 확대 및 지원 방안
- 도 농정방향과 지역농업에 부합된 농업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업 연구방향 체계적 정비 필요성
- DMZ생태관광지구에 대한 생태농업 리모델링 필요성
-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현장 기술 지원 확대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 생태환경 변화 연구, 이에 맞는 기술보급 방안
-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 문제점 지적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우수품종 개발 보급 및 해외 판매 확대	- 우수품종 개발 사업이 이미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버섯, 선인장, 다육식물 등에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 농정방향과 현장요구에 기초한 품종 개발 및 연구 미비함 - 참드림 등 쌀 신품종 개발 역시 시군별 기후편차가 큰 경기도의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음. 현재 고시히까리 품종이 경기 전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음 - 수요조사를 우선하여 품종 연구개발이 필요함. 품종개발 종목 설정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 필요. -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 기후변화, 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북부지역 발전방향 등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를 설계하고, 농정해양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속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미래농산업 융복합 기술 개발 보급	-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은 대규모 자본투입으로 소규모로도 생산가능한 엽채류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비효율적 정책임 -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이 아닌 국내 소농과 경쟁하는 정책으로, 생산의 주체인 농업인의 지속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옴 -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나 실상은 높은 투입비로 고부가가치 창출 불가능 - 화훼, 축산 등 일부 적용 가능 - 수출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고령농, 영세농을 위한 스마트 기술지원 확대의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함
3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계획	- [북부 및 북한농업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원 북부지원”설치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북부지역 농업 기술지원, 파주, 연천지역의 친환경과수 재배 연구, 대북교류확대에 따른 농업기술

		지원 등 사업 영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실행할 인력구성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야 함. 무리한 증원, 증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기도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증원, 신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술원장이 경기도지사 임명직이 아닌 중앙 진흥청 추천자 임명방식이다 보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술연구 및 보급,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경기도농업기술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관련성 없는 연구가 우선되는 경향성을 극복해야 함

(4) 축산산림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에코팜랜드」 조성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2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5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3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6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마무리 및 개원

나. 주요 논의 사항

- 사료용 옥수수 수급 등 식량 자급을 위한 사료 자원 확보 대책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
- 살충제 계란 관리 방안
- 남한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강화 방안
- 북한 숲 가꾸기 지원사업의 임·농·축 복합 모델 검토 필요성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에코팜랜드」 조성	- 경기도 포함 총 6개 기관이 각 영역을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기관별 상호 협력, 신뢰관계 구축, 성실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현재 20%정도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타 기관에 변상 책임 벌어질 수 있음 - 수원비행장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대규모 복합휴양지로서의 기능 상실 가능성 있음 - 사업 시작 후 적자발생 시 대책 없음. 수익구조 모호. 운영 방식에 대해 세심한 검토 필요 (각 기관별 임대료 납부 방식, 운영조직 별도 설치, 수익구조 연구 등 보완해야할 점 다수 발견) - 기관, 기업들은 있으나 농민,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음. 즉 경기도 농축수산인들과의 협의구조, 수익 배분 방식, 도민 혜택 내용 등 구체화할 필요 있음
2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농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등 갈등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 필요 - 투자자인 코암인터네셔널이 정상적인 외투기업인지 확인필요하며, 주관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정상가동되지 않았던 사유가 단지 대표 부재의 문제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 - 외국사례의 경우 반려동물공원 조성의 요구는 높으나 성공사례가 없다는 평가를 감안해 성공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 수립을 철저히 해야 함 - 여주시의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겠음 (협약식 진행 등)

(5) 경기평택항만공사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항만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3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인프라 운영·관리
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		

나. 주요 논의 사항

-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 방안
- 유통, 보관, 가공, 생산, 판매 등이 확대 가능한 배후단지 조성 방안
-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령 개정 준비
- 평택항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방안
- 검역체계 간소화 방안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1. 항만 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2.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 3.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인프라 운영·관리	- 평택항은 조건이 좋은 항으로 발전가능성 매우 높으나 적극적 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력이 미흡함. 사업추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전가능성이 퇴보하는 형국임.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해 평택항 전망 세워야. 인천보다는 민원도 적고 가능성 높음 - 빅화주들이 찾는 항이 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필수임 - 부지 확보가 일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현재는 항만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쟁. 평택항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땅을 매입해서 배후단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덕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중 - 국가의 권한을 가져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함 - 친수공간을 넓히고 개방형으로 운영하면 수익창출도 가능함. 다만 운영관리권한을 지자체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택항은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항임. 환경친화적 개선 과제들이 있음 - 24시간 운영제로 변경. 스마트CIQ해야 함. 검역절차 간소화

		- 항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함. 선박 5만톤급이면 수심 12~13미터 정도 되어야 들어올 수 있음 - 지속적 보수관리 하지 않으면 수심 낮아짐. 수심이 낮아 지금은 큰 배가 들어오지 않음. 이는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일 - 환적화물 취급할 수 있어야 함. 대중무역의 최적항이므로 환적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유럽을 겨냥해 중국을 통해 가는 화물들도 선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객선 늘리는 것도 발전 방안임. 화객선을 늘리면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스템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정기선 항로가 부산은 언제나 있는데, 평택항은 정기선 항로가 없음. 이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6) 건설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2018년도 통행요금 조정(서수원~의왕 민자도로)	3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원
2	중부고속도로 내 가칭) 중부IC 개설 지원	4	목감천(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주요 논의 사항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및 자금재구조화 방안
- 목감천 국가하천 추진 방안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및 자금재구조화 방안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하여 자금재구조화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일산대교임 -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 지급과 통행료 인상요구는 기형적인 사업구조와 잘못된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 일산대교 민투사업 최초 사업 협약은 통행료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14.6%를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26%를 적용하는 등 기형적인 사업구조로 진행 - 최초 통행료 산정이 잘못되었고 수요 예측도 과다 계상되어 사업자는 경기도로부터 매년 20~50억원을 보조받고도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경기도는 통행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사업구조 전체를 재구조화하기 보다는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MRG가 적용되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고 사업구조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 - 사업구조 재구조화는 경기도가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사업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 사업자의 통행료 인상 요구에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업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함

(7) 건설본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2	도 신청사 건립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융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 논의
- 도 신청사 건립 관련 논의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및 도청 신청사 건립	- 광교신도시에 2020.12 완공 예정인 경기융합타운 및 도청 신청사는 사업비가 4,032억원이 소요되며 2017.7 기공식 이후 현재 공정률 8.11% 상태임 - 계획공정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일반회계예산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도 주거 복지정책에 따라 따복하우스 부지로 검토되었다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망포4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도유지(경기도종자관리소)의 조속한 매각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해야함 -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일반회계로 투입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건설본부, 기획조정실, 회계부서 간 매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기 매각 방안을 마련해야함

(8) 도시주택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7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2	미래 新 성장산업 창출 플랫폼 테크노밸리 추진	8	고덕국제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조성
3	다산신도시(진건, 지금) 공공주택지구 준공 추진	9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추진
4	경기도형『주거복지센터』설치 및 『주거복지포털』구축	10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기술자문 확대 추진
5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계층』주거복지 지원 추진	11	BABY 2+ 따복하우스 건설
6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 주요 논의 사항

-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지정 확대 방안
- 주거복지 향상 위한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방안
-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방안
- 북부2차 TV 사업 타당성이 낮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다. 자체평가

	도정 과제	분과 평가
1	주거 복지 향상의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지원사업	-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뉴타운 해제 지구 등에서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상가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상가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임대주택은 대학생 등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 - 최초 취지는 상가와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한 계획이나 상가를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음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낡은 숙박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에 기반한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융자, 세제감면 등 막대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 선정제한이 없는 민간업자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 - 특히 촉진지구는 민간업자가 미동의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개발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적폐정책임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함 - 촉진지구는 그린벨트해제 등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어 도지사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공약과 배치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사업은 폐지되거나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원칙에 따라 폐지되거나 재검토 되어야 함

(9) 경기도시공사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4	신도시 및 도시 개발
2	지역발전 기반조성	5	경기도형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립 추진
3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시공사 기능 활성화 방안

(10) 교통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시내버스 운행 대책	3	대중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
2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 출퇴근 광역 버스 확충 방안

(11) 철도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도내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4	경기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철도망 확충
2	도 직접 철도건설 사업 추진	5	구도심과 연계하는 위례 및 하남 신도시 광역서비스 확대
3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건설 추진	6	

나. 주요 논의 사항

- 철도국 조직개편 관련
- 환승센터 및 철도역 건설 시 주변 개발(역세권 등)과 연계 방안 필요
- 철도운영과 관련해 예산절감 등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필요

❍ 공약사업

(1) 농정해양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98-①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100-①	귀농귀촌 지원 및 농업자원·관광자원·문화자원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농촌모델 창출
98-②	생태환경보전 농업기준 준수 농가에 기여금 지급	100-②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98-③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100-③	귀농귀촌 상담지원 강화, 행복 멘토 지정 및 멘토링 데이 시행
99-①	생산지 현장조사 및 방사능 검사 등의 생산지 관리 강화	101-②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99-②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 상향	114-②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나. 주요 논의 내용

- G마크 인증제도 개편 방향 (방사능, GMO검사 포함, 조례 개정)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협력국의 조례 및 예산 농정해양국으로 업무이관 필요성
- 생태환경보전 기여금 프로그램, 기여금 지급 대상 및 방안
- 친환경 농업 현장 지원, 산지관리 방안 (과정중심의 인증관리 대책)
- 토양 및 수질 검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
- 경기도종합먹거리전략 수립 필요성, 먹거리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 요구
- 융복합 농촌모델 개발
- 평택항 발전 방안, 배후단지 조성의 필요성
- 과학영농 지원 방안
- 청년 농업인 지원방안, 귀농 인구 확대 방안
- 농촌 인구 확대 절박성 및 방안

(2) 농업기술원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98-④	친환경 바이오팜 조성과 미생물 생태농자재 지원	101-②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101-①	농업부분의 기초 연구개발 강화 및 기술 지원 확산		

나. 주요 논의 내용

- 과수 재배 기술 연구, 연구 인력 확충 필요성
-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전무 지적, 연구 및 기술 지원 필요성
- 경기북부지역 전담 지원 설립 필요성
- 스마트팜 현장성 재검토,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 개발 영역
- 기후변화에 대비한 경기지역 생태환경 연구 필요성
- 연구인력 증원, 현장지원 강화

(3) 축산산림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98-④	친환경바이오팜' 조성과 미생물 생태농자재 지원	178-②	유기동물 보호소 통한 반려동물 입양 확대 및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
101-②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179-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129-②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개선, 기술협력 추진 및 북한 숲가꾸기 사업 지원	179-②	길고양이와 사람 모두 공존 가능한 환경 조성
138-②	전체적으로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간 교류 강화	180-①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및 등록 비율 증대
176-①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반려동물 공간 확보 노력	180-②	반려동물 등록증 일원화 및 승인기간 단축

177-①	반려동물 행동 교육 지원 및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조성	181-①	동물 방역강화, 불법도축 단속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추진
177-②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 동물보호 및 확대방지 넘어선 공존의 가치 확립	181-②	동물 사료는 유통 기준 확립 후 검증되지 않은 사료 폐기 및 원재료 표기 의무화
178-①	반려동물 입양 유도	182-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속 시행

나. 주요 논의 내용

- 무허가 축사 대책
- 에코팜랜드 현황 점검, 도민과 농축산인 혜택 방안
-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조속 시행 방안, 중단 상황 점검
- 반려동물사업 도시로의 확대 필요성
- 반려동물 등록 승인기간 단축 방안
- 반려동물 관련 생명, 교육기능 확대 방안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 확대, 포획 방안
- 스마트 기술 축산농가 지원 방안, 실효성 낮은 원인 대책
- 북한 숲가꾸기 사업 관련 임·농·축 복합사업으로의 추진 제안
- 축산분뇨 활용 방안

(4) 수자원본부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30-①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137-③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계관리의 시·군 자율성 확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피해 상황 점검
- 두물머리 생태공원 약속 미이행 원인 파악
- 상수원 주민,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한 방안

(5) 균형발전기획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34-②	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 벨트 조성 (DMZ 환경·관광벨트 완성 지원		

나. 주요 논의 내용

- DMZ 환경·관광 벨트 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가능성, 필요성

(6) 건설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71-①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 분쟁상담 지원	139-②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과 공공시설에 자전거 정류장 설립
71-③	경기도 공공부분의 선도적 실천 - 공기업, 산하기관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 대폭 강화	139-③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38-①	보행로, 자전거도로,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체계와 연결	139-④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도입으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139-①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망 연결		

나. 주요 논의 내용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 방안 및 회계과로의 업무 이관 필요성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강화 및 법률지원까지 포함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마을 단위 친환경 공원 및 운동시설 간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 전기 자전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충전 등 편의시설의 확충
- 자전거 도로 사업시 노선 길이를 기준으로한 성과 평가 방식 개선
- 광역 자전거도로망(용인-여주구간)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18 하반기 추경에 반영 요청

(7) 도시주택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24-④	청년주거복지 확대	119-①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
116-①	시·군의 낙후된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선정 적극 지원	120-①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116-②	구도심을 쾌적한 주거지로 재생	120-②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균등 향상을 위해 시·군 간 주택공급 조정
116-③	더 많은 도시재생특별회계 확보	121-①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116-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121-②	신생아 출산 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117-①	20~30 청년세대 및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1-③	산업단지 내 청년세대 근로자, 창업자,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

117-②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생활 맞춤형 주택환경 정비사업 발굴·추진	122-①	서민가구 전세금 대출 보증 추진
118-①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군과의 협력 통해 지역별로 리모델링 지원	122-②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 추진
118-②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123-①	경기도시공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118-③	리모델링 위한 사업성 분석, 분담금 산정 컨설팅 및 주민설명회 지원	123-②	저렴한 분양으로 신속한 자금 회수 및 단계적 임대주택 공급확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비결혼출산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금 보증 관련 전달시스템 개선
- 산단형 공공주택의 경우 창업과 주거 혼합형 모델 개발 및 확대
- 경기도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및 시·군별 편차 개선 노력
- 공공주택 보급과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의 연계
-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모델 개발 및 환원 관련 지침 개선
-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전담 조직 구성 및 사업 재협상제 도입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재협상 촉구
- 노후 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대수선 등 유지 관리 지원 확대
-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 구성
- 도시재생사업에의 주민 참여도 제고
- 도시재생 특별회계 규모 확대
- 노후 공업지역 재생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사업비를 `18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
-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해 `18 하반기 추경에 연구용역비 반영 요청

(8) 경기도시공사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17-①	20~30 청년세대 및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3-①	경기도시공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117-②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생활 맞춤형 주택환경 정비사업 발굴·추진	123-②	저렴한 분양으로 신속한 자금 회수 및 단계적 임대주택 공급확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경기도시공사의 개발 사업 이익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구조 또는 시스템 마련
- 공공주택의 수요 파악 및 이를 공급 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 공급 호수 기준의 실적 평가 방식 개선
- 경기도시공사의 소극적인 자체물량공급 지적 및 경기도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및 시·군별 편차 개선
- 경기도시공사 매입주택의 높은 공실율 문제 개선
- 도시재생 모델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 활성화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1) 공약 조정 현황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원(118-②)

→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118-②)으로 공약명 수정

(2) 공약 목록

○ 청년주거복지 확대 (24-④, 도시주택실)

○ 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 벨트 조성 (DMZ 환경·관광벨트 완성 지원) (34-②, 균형발전기획실)

○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 분쟁상담 지원 (71-①, 경제실, 건설국)
○ 경기도 공공부분의 선도적 실천- 공기업, 산하기관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 대폭 강화 (71-③, 건설국)
○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98-①, 농정해양국)
○ 생태환경보전 농업기준 준수농가에 기여금 지급 (98-②, 농정해양국)
○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 (98-③, 농정해양국)
○ 친환경바이오팜' 조성과 미생물 생태농자재 지원 (98-④,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 생산지 현장조사 및 방사능 검사 등의 생산지 관리 강화 (99- ①, 농정해양국)
○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 상향 (99-②, 농정해양국)
○ 귀농귀촌 지원 및 농업자원·관광자원·문화자원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농촌모델 창출 (100-①, 농정해양국)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100-②, 농정해양국)
○ 귀농귀촌 상담지원 강화, 행복멘토 지정 및 멘토링 데이 시행 (100-③, 농정해양국)
○ 농업부분의 기초 연구개발 강화 및 기술 확산 지원 (101-①,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101-②,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114-②, 농정해양국)
○ 시·군의 낙후된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선정 적극 지원 (116-①, 도시주택실)
○ 구도심을 쾌적한 주거지로 재생 (116-②, 도시주택실)
○ 더 많은 도시재생특별회계 확보 (116-③, 도시주택실)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116-⑤, 도시주택실)
○ 20~30 청년세대 및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117-①, 도시주택실)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생활 맞춤형 주택환경 정비사업 발굴·추진 (117-②, 도시주택실)

○ 경기도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군과의 협력 통해 지역별로 리모델링 지원 (118-①, 도시주택실)

○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118-②, 도시주택실)

○ 리모델링 위한 사업성 분석, 분담금 산정 컨설팅 및 주민설명회 지원 (118-③, 도시주택실)

○ 공공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 (119-①, 도시주택실)

○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120-①, 도시주택실)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균등 향상을 위해 시·군 간 주택공급 조정 (120-②, 도시주택실)

○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121-①, 도시주택실)

○ 신생아 출산 시 아이사랑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121-②, 도시주택실)

○ 산업단지 내 청년세대 근로자, 창업자,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 (121-③, 도시주택실)

○ 서민가구 전세금 대출 보증 추진 (122-①, 도시주택실)

○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 추진 (122-②, 도시주택실)

○ 경기도시공사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123-①, 도시주택실)

○ 저렴한 분양으로 신속한 자금 회수 및 단계적 임대주택 공급확대 (123-②, 도시주택실)

○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개선, 기술협력 추진 및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 (129-②, 환경국, 축산산림국)

○ 수도권 규제, 도시계획규제, 농지규제 등을 동시 개선 (136-②,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농업정책과 협조)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계관리의 시·군 자율성 확대 (137-③, 수자원본부)

○ 보행로, 자전거도로,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체계와 연결 (138-①, 건설국, 철도국)

○ 전체적으로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간 교류 강화 (138-②, 축산산림국)
○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 도로망 연결 (139-①, 건설국)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과 공공시설에 자전거 정류장 설립 (139-②, 건설국)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139-③, 건설국)
○ 보행자 우선도로 등의 도입으로 보행친화 환경 조성 (139-④, 건설국)
○ GMO 완전표시제 시행 (148-③, 보건복지국(식품안전과))
○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반려동물 공간 확보 노력 (176-①, 축산산림국)
○ 반려동물 행동 교육 지원 및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조성 (177-①, 축산산림국)
○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 동물 보호 및 확대 방지 넘어선 공존의 가치 확립 (177-②, 축산산림국)
○ 반려동물 입양 유도 (178-①, 축산산림국)
○ 유기동물 보호소 통한 반려동물 입양 확대 및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 (178-②, 축산산림국)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 (179-①, 축산산림국)
○ 길고양이와 사람 모두 공존 가능한 환경 조성 (179-②, 축산산림국)
○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및 등록 비율 증대 (180-①, 축산산림국)
○ 반려동물 등록증 일원화 및 승인기간 단축 (180-②, 축산산림국)
○ 동물 방역강화, 불법도축 단속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추진 (181-①, 축산산림국)
○ 동물 사료는 유통 기준 확립 후 검증되지 않은 사료 폐기 및 원재료 표기 의무화 (181-②, 축산산림국)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속 시행 (182-①, 축산산림국)

6. 정책제안 및 과제

1. 기존 사업 재편

[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재협상

○ 제안사유

-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융자, 세제감면 등 막대한 공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 선정제한이 없는 민간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임. 특히 촉진지구는 민간업자가 미동의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개발 원칙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주택 정책임

○ 내용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함. 또한 촉진 지구는 그린벨트해제 등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어 도지사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공약과 배치되고 있으므로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사업은 폐지되거나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 원칙에 따라 사업재협상을 통해 공공개발 이익 환원율을 높이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 줘야함

○ 기대효과

- 사업재협상을 통해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취지 달성

[2] 급식예산구조 개편으로 적정식품비 확보와 친환경 급식 비율 상향 추진

○ 제안사유

- 현 무상급식비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매년 인건비 비중 증대로 식품비 비중은 자동적으로 하락함. 때문에 적정 식품비 확보가 불가하여 급식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

○ 내용

- 지자체(경기도, 시군)가 식품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적정 식품비 확보가 가능함.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로 인하여 교육청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기대효과

-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고유의 정책적 목표(계약재배 확대, 친환경비율 상향 등)를 추진하기 용이하여, 적정 식품비 확보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3] 이원화되어 있는 경기도 급식 지원체계를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

○ 제안사유

- 학교급식에서 공적 조달체계의 구축, 운영이 지자체의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예산 구조로 정비하여야 함.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전담부서가 교육협력국(무상급식예산, 조례 운영)과 농정해양국(친환경예산, 실제 사업부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교육청과의 협력, 예산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여러 문제 발생

○ 내용

-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아울러야 하는 급식의 특성상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업부서로서 축적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정해양국으로 급식 예산과 조례운영, 사업 운영을 일원화해서 경기도의 급식지원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함

○ 기대효과

- 이원화되어있는 사업을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함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될 학교무상급식 사업에서 공적조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친환경비율 상향 및 급식 질 상향평준화라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 예산 운용이 가능해 짐

2. 기존 사업 재편 및 조직 신설

[1]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공공급식, 군납, 대학급식 등 경기도 내 공적 조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적극 확장, 경기도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확대발전 도모

○ 제안사유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공적조달체계안에 있지 않은 곳의 급식질의 문제, 비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 특히 군납의 경우 해당 지역 단지장 몇 명이 납품을 독점, 지역 농산물이 아닌 가락동 시장 또는 농협유통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함

○ 내용

- 계약재배와 민관 거버넌스가 공적 조달 체계의 양대 축이 되어야 함. 학교급식과 유사점이 많고, 물류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큰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국공립 복지시설부터 공공급식의 영역 확장이 필요함. 또한 향후 경기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과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경기도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납 등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간 장벽 극복과 민관의 소통, 시민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먹거리 정책담당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군납,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을 공적체계 내에 둠으로써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급비리, 급식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 건강불평등 약화가 가능함

3. 기존 사업 확대

[1] 도시농업 육성

○ 제안사유

- 현재 경기도에는 유휴지 텃밭이나 상자텃밭을 이용하여 도시농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부가 55만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내용

- 미집행 공원부지 또는 기존 도시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1시군에 1개 이상의 도시농공원(빗물, 자원순환, 퇴비 등 테마 공원 포함)을 건립하고, 도시농부가 많은 시군을 우선하여 공영농장을 설치.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 텃밭 설치를 장려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여 도시농업 공원, 공영 및 민영농장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도시농업관리사는 기 실행 사업임). 또한 도시농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협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농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지원본부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산하에 두고 경기도의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도시농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참여와 교육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지원군 역할을 하며, 실제 도시농 시민들은 일반 도시소비자들보다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가는 적극적 소비층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효과 기대. 또한 이들로 인해 종자, 포트 묘 시장이 확대되고 토종 씨앗의 확산·보전 효과도 있음

4. 신설 사업 제안

[1] 상수원다변화, 규제완화, 주민지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실시

○ 제안사유

-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재명 도지사 역시 후보 시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경기 동북부 주민의 희생에 깊이 공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내용

-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500만 명이 한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특히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이후 2016년 말까지 6조 1,708억원을 수질 개선에 사용하였으나 팔당수계 환경오염측정 9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1994년 이후 매년 1등급에 미달하고 있음
- 여러 학술·연구단체(2005~2015)들은 팔당호는 취수원으로서의 기능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국토부·환경부)는 여전히 상수원 다변화와 팔당상수원 지역 등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부정적임.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상수원다변화, 규제완화, 주민지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도지사의 가치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함

○ 기대효과

-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완화가 반영됨으로써 경기 동북부 발전 방안 마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가능

[2]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제안사유

- 과거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개발되던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은 수도권의 남북축 교통문제를 야기했으나, 최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동서축의 교통문제가 예상됨

○ 내용

- 경기도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확장 및 공간구조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 이동(서울외곽↔경기, 경기 지역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

○ 기대효과

- 변화된 수도권 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기도민의 이동권 및 경기도내 도시경쟁력 향상

[3] 「수도법」 개정 지원

○ 제안사유

- 현행 「수도법」 상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어 시·군은 별도의 상수도 협력시스템 없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각각의 급수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시·군은 수도법 상 수도사업자, 환경부는 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최종 승인권자로 되어 있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은 미미함. 따라서 가뭄, 정수장 운영 중단, 대형 관로 파손 등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인근 시·군간 연계된 비상급수 대책이 미비함
- 또한 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 부재와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등 광역자치단체 예산 보조사업의 중지 등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중앙권한 이양 및 지방분권 강화가 강조되는 추세에 맞추어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수도법」 개정을 건의 및 지원해야함

○ 기대효과

-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상수도 시스템 연계를 조정·조율할 수 있음

[4] 청소년수련원 등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안사유

- 경기도 소유의 공공시설 중 일부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직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저조함
-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지만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각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경기도 소유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편임
- 이재명 도지사 역시 경기도 소유이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바 있음. 청소년수련원 외에도 경기도 소유 도서관, 기타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 등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도민의 편익 증진

5. 조직 신설 및 재편

[1] 경기도의 먹거리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 제언

○ 경기북부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설

○ 경기북부 물류센터 또는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 새로운 센터의 설치는 북부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지역 내 도농 상생의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두어야 함
- 광주 유통센터와의 중복 기능을 최대한 없애고,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한 군납, 전처리, 농민 가공 지원, 농축림 남북교류 지원 기능 등을 아우르는 복합센터로 위상을 잡아야 함. 단순 권역 물류센터는 지역민이 체감하는 고용효과와 경제기여 효과가 거의 없음
- 특히 북부센터에서 생산된 전처리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북부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기여 가능

[2] 경기연구원내 농정해양연구실 신설

○ 제안사유

- 현재 경기연구원 내 농업(전공)·해양·수산 연구 인력이 전무한 상황. 타 도의 경우 농업전공 박사 평균 3.5명(10%)이나 경기도는 농업전공이 아닌 경제전공 1명(2%)이 타연구와 농업 분야를 병행하는 실정임. 경기도의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전공 연구인력은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문적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 내용

- 경기연구원 내 농업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인력 보강. 단기적으로는 농업전공자 1인, 해양·수산분야 전공자 1인을 확충하여 '새로운 농정'의 정책연구 및 평택항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연구에 투입. 장기적으로는 농정해양연구실을 신설하여 농업, 해양·수산 연구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기대효과

- ‘새로운경기농정’의 전략적 이행, 시장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방향 연구, 식량 안보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농정시책 연구, 먹거리 전략수립과 확대에 따른 경기농업 방향 연구 등 민선7기 농정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과학적 설계가 가능. 또한 도 유일 무역항인 평택항 및 전곡·제부 마리나항 활성화 등 서해안 시대 경기만 발전전략 연구와 소외되어 있는 연안·내 수면어업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성 있는 정책 연구가 가능해짐

[3]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검토

○ 제안사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수산물 안전팀(양평 11명)의 주 업무는 내수면 시험연구사업이며, 하천 생태조사, 수산자원조성, 질병검사, 우량종묘 생산보급, 양식기술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수산물 안전성검사 업무를 별도로 분리, 운영 필요성을 건의해 옴.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불량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1000건/년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함

○ 내용

- 수산물안전팀을 내수면연구팀과 수산물 안전관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 3팀 1센터(총무팀, 수산물안전팀, 갯벌연구팀, 수산기술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5팀(총무팀, 내수면연구팀, 갯벌연구팀, 기술보급팀, 수산물안전관리팀)으로 개편하고, 이 중 연구사 1인을 연구관으로 직급 상향하는 안 (인원 충원 없이 팀 개편)

○ 기대효과

- 수산생물 전염병예찰 및 검사, 병성감정, 해·내수면 수산물 안전성검사(금지약품, 중금속, 방사능 등), 수산물 의약품 안전강화 대책 수립 및 지도·교육 등 기능 강화의 효과

6. 정책 수정 제안 - 농정 시각에서 본 스마트팜 시행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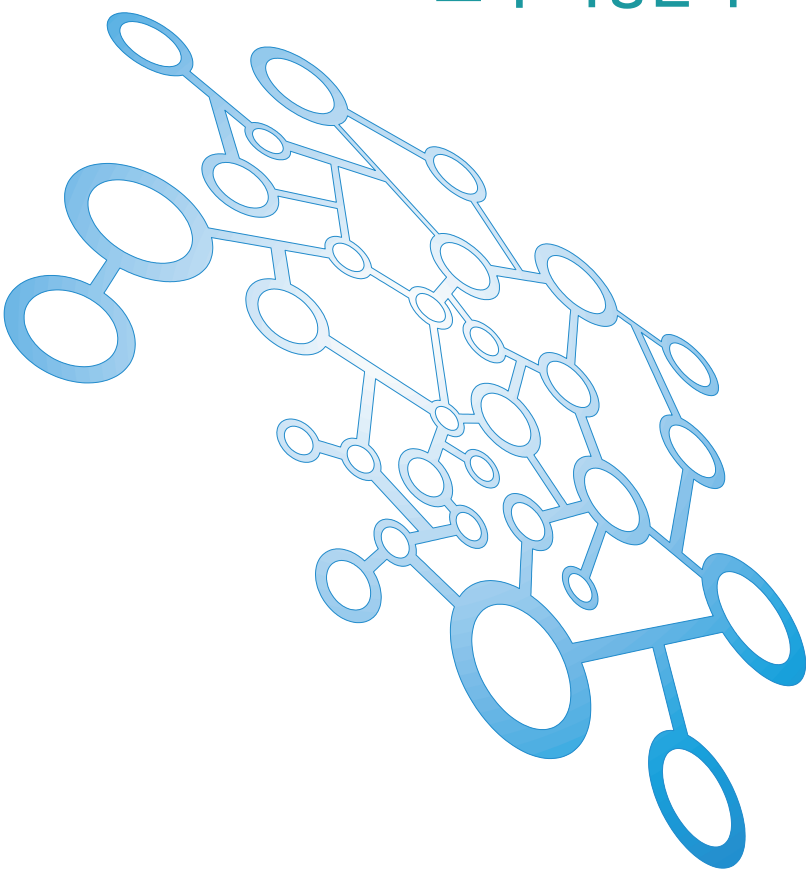
○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농업계 일부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1995년 WTO 출범 이후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과의 심도 깊은 협의 없이 진행된 정책들은 대체로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정책으로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해 실패로 귀결. 즉 생산의 주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부족한 정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데, 스마트팜 사업이 현재로서는 생산의 주체 문제를 고려하지않은 대표적 사업으로 농업계 반발을 사고 있으며, 실패 사업 1순위로 꼽히는 농업정책임. 정부 농업정책 비서관실에서도 농정 수정 정책 1순위 대상으로 올라있는 정책임

○ 스마트팜은 저투입 저가 하우스에서도 생산 가능한 품목(상추, 쌈채류 등)을 수십 수백배의 비용이 투입된 첨단 유리온실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농민이 아닌 농기업(농업시설 기업, 농업기술 개발 기업)이 연구개발한 정책이며, 현실농민들에게 적용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임. (비용, 상용화 가능성 미흡 등 원인)

○ 실제 농정인수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 화성 첨단유리온실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수백억을 투자해 건설하였으나 생산품목은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두 가지로 노지나 저가 하우스시설에서도 생산 가능한 품종이었고, 설비 투자 및 유지로 인한 과다 운영비 발생으로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출길이 거의 막힌 상태. 결국 물류비 절감 방책으로 국내시장에 물류 방출, 국내 영세농민들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형되었음. 즉, 대자본 기업농 육성,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야기하는 스마트팜은 전면 재설계되어야 할 사업임

○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분야 적용은 소수 자본형 농기업 육성 결과를 낳는 스마트팜 확대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 소농, 가족농, 청년 창농인들에게 맞춤형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으로 정책을 재설계, 수립해야 함

교육·여성분과



1. 구성

○ 위원장 : 정춘숙

○ 기획단장 : 고인정, 최재백

○ 간사 : 조화영

2. 활동방향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검토
-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책 및 담당부서간 업무 통합, 재조정 검토

❍ 공약 이행수립계획안 마련

- 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철학 및 공약의 취지 공유
-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및 소요 예산 추계 마련
- 교육·여성 정책 방향 설정

•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경기도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경기도

• 자기 주도적 미래설계가 가능한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경기도

• 생애주기맞춤 경기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교육협력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여성분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총 3개 실·국, 3개 기관)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6일(화)	203호	09:00~11:00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1:00~13:00	여성가족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5:00~17:00	복지여성실(여성분야)
2차	6월 28일(목)	16층 대회의실	13:00~16:00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6월 29일(금)	16층 대회의실	14:00~17:00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여성분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3차 업무보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

(2) 업무보고 내용

- 실국별 현안 사항 보고, 질의 응답 및 자료 요청
- 공약 이행 방안 보고 및 요청 사항 검토 보고

❍ 현장방문

(1)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주제	여성비전센터 주요 업무사항 보고 및 시설 점검
일시	6월 29일(금) 10:00
장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참석자	고인정, 양해경, 홍춘희, 이선정, 이영희(전문위원) 김향숙(여성비전센터장), 정경임(건강가정지원팀장), 최창우(여성활동지원팀장)
주요 논의 사항	1) 여성비전센터가 거점기관으로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2) 자체사업 비중 확대와 홍보강화방안 마련 3)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짐으로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 방안 마련

(2)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제	여성능력개발본부 업무보고 및 시설 점검
일시	7월 2일(월) 14:00
장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참석자	고인정, 양해경, 홍춘희, 이영희(전문위원) 윤영숙 본부장, 김규선 팀장, 허정은 차장, 한지원 차장, 오석원 차장(본부)
주요 논의 사항	1)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선도적 여성 취업교육 및 창업보육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 2) IT·CT특화 교육 이외에 5060 신중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여성창업 성공사례 확산 및 지속적인 창업보육기반 마련 방안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제	'장기현장실습교육' 공약 관련 대학 IPP 추진 현황 청취 및 간담회
일시	7월 3일(화) 10:00
장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충남 천안)
참석자	조화영(전문위원) 박승삼,김창범,김홍관(경기도) 김민영(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장병일 평생교육본부장외 4명(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요 논의 사항	1) IPP(장기현장실습) 사업 설명 및 일학습병행제와 비교 2) 일학습병행제의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어려움 3) 광역단위 역할에 대한 논의(양질의 일자리 발굴 대행)

(4)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주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시설 현황 파악 및 여성폭력방지시설 지원확대’ 실현 방안을 위한 여성폭력지원시설 실태 파악
일시	7월 3일(화) 13:00
장소	경기가족여성연구원 224호
참석자	양해경, 홍춘희(전문위원) 임혜경(경기가족여성연구원) 김영자 (전국여성폭력방지시설 연대 대표) 박희숙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대표/하남 소장) 한영애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대표 대리) 김양순 (남양주한상담소 소장)
주요 논의 사항	1)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임금가이드라인 필요) 2) 상담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량이 과중 되고 있어 상담의 질이 저하. 전문인력 충원 논의 필요 3) 52시간 근로기준에 맞추 근로조건 개선안 논의

(5) 가천대학교 IPP사업단

주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일시	7월 4일(수) 10:30
장소	가천대 IPP사업단(성남)
참석자	조화영(전문위원) 박승삼, 김창범(경기도) 김화수, 임희정, 김민영(경기도일자리재단) 한기태, 이충우, 상정규(가천대 IPP사업단)
주요 논의 사항	1) IPP유사 사업이 많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 통합된 하나의 체계가 필요 2)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대한 광역 단위의 노력 필요 3) 현장 실습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을 휴학생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필요

(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제	센터 운영현황 및 시설 점검
일시	7월 5일(목) 9:30
장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참석자	홍춘희(전문위원) 김창진, 김효정(경기도) 오경석, 양모란, 박선희, 이경숙, 홍규호(센터)
주요 논의 사항	1) 다양성 및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강화 2)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추진 논의 3) 상담기능을 갖추기 위한 센터 공간 확대 및 이전논의

(7) 아시아소통센터 다문화작은도서관 '아삭'

주제	다문화 서가 공약 관련 벤치마킹 시설 방문
일시	7월 5일(목) 13:00
장소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다문화작은도서관 '아삭'
참석자	홍춘희(전문위원) 엄상미(정책자문위원) 이용근, 심소영(센터)
주요 논의 사항	1) 외국 서적 도서구입 과정 및 관리 현안 2) 독서프로그램 현황 3) 초중고 입학 준비를 위한 예비학교 운영 만족도 4) 다문화 강사 양성의 필요성

(8)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주제	체인지업캠퍼스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
일시	7월 6일(금) 10:00
장소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참석자	김문수, 이영희(전문위원) 이순늠, 유소정(경기도) 유돈현, 정영수 및 관계직원(평생교육진흥원)

주요 논의 사항	1) 현재 영어 사업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논의 2) 사업 위탁교육기관 선정시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3) 학교폭력예방사업 및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계 사업 검토

(9) 경기도청수년수련원

주제	수련원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
일시	7월 6일(금) 15:00
장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안산)
참석자	조화영, 김문수, 이영희(전문위원) 배한일, 박병우(경기도) 양철승 원장 외 관계직원(수련원)
주요 논의 사항	1) 노후시설 개선 방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 2) 친환경적 자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세월호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의 문제로 수련원시설 이용을 자제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수련원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 할 대안 필요 (대안)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에 대한 아젠다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음

(10)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강화 실현을 위한 센터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일시	7월 13일(금) 16:00
장소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석자	고인정(단장) 임혜경(경기가족여성연구원) 유순덕, 박사휴(센터)

주요 논의 사항	1)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활동공간 부족, 공간확보에 대한 방안 논의 2)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 3)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4) 야간, 주말 개방의 문제점 개선

❍ 토론회 및 간담회(세미나)

(1) 여성소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주제	여성분야 전문가 간담회
일시	6월 27일(수) 14:00
장소	융기원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고인정, 양해경, 이선정, 홍춘희, 백미연(전문위원) 엄상미, 백선정(정책자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1) 작은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방향 논의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3)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아이사랑놀이터' 시군 대안 논의

(2) 교육소위원회 공약별 이행 계획수립 간담회

주제	청소년 및 청년 전문가 간담회
일시	6월29일(금) 11:30
장소	융기원 1층 로비
참석자	이영희, 김경표, 김문수(전문위원) 박승자(정책자문위원) 이순늠, 김영화, 조경희, 이관형, 배한일, 심혜인(경기도)
주요 논의 사항	1) 위기청소년지원강화방안 2) 청년위원회 정책기능 및 운영강화 방안 마련

(3)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간담회

주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현장 실태파악 및 의견청취
일시	7월 3일(월) 13:00~15:00
장소	경기가족여성연구원 224호
참석자	양해경, 홍춘희(전문위원) 김영자 (전국여성폭력방지시설 연대 대표) 박희숙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대표/하남 소장) 한영애 (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대표 대리) 김양순 (남양주한상담소 소장)
주요 논의 사항	경기도 내 여성폭력시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 수렴 1) 급여체계 개선 2) 업무량증가 및 역할 확대로 인한 인력충원 요청 3)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4) 성평등옴부즈만 간담회

주제	성평등옴부즈만 실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일시	7월 9일(월) 11:00
장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24호
참석자	백미연, 양해경, 홍춘희(전문위원) 정형옥, 안태윤, 최윤선, 정혜원, 남승연(가족여성연구원) 김영옥, 은연정(경기도)
주요 논의 사항	1) 성평등옴브즈만의 핵심기능 2) 성평등옴브즈만의 조직구성 원칙 3) 기구의 위상과 권한

(5) 교육소위원회 공약 이행 계획 수립 간담회

주제	고등학생 진학주치의 공약 이행 계획 수립 간담회
일시	7월 10일(화) 15:00

장소	융기원 로비
참석자	조화영, 김문수(전문위원) 박승삼, 성현숙(경기도)
주요 논의 사항	고등학생 진학주치의 공약 관련 도교육청 협의 조정 가능여부 점검 및 방향 설정

(6) 교육 정책협약 관련 토론회

주제	용인 '혁신교육지구'지정과 경기도 교육혁신을 위한 토론회
일시	7월 20일(금) 10:00
장소	용인컨벤션홀(용인시청 3층)
참석자	정춘숙 위원장 및 교육여성분과 전문위원(11명) 백군기(용인시장), 이재정(교육감), 김용련(한국외대교수),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안선영(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연구사), 진근식(경기교육청 장학사), 장현주(오산시청 평생교육팀장),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최성구(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 정 승진(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주요 논의 사항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현안과 대안 2) 지역과 교육이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3) 용인-경기도-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교육지구

(7) 1차 분과자체세미나

주제	전문위원별 공약 검토 결과 발제
일시	7월 1일(일) 14:00
장소	융기원 16층(대회의실)
참석자	정춘숙 위원장 및 교육여성분과 전문위원(11명)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백선정(경기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1) 전문위원별 공약이행 계획수립안 1차 발제 및 전문위원간 방향조정 2) 정책자문위원 의견 수렴

(8) 2차 분과자체세미나

주제	전문위원별 공약 검토 결과 발제
일시	7월 5일(목) 15:00
장소	융기원 16층(소회의실)
참석자	고인정, 최재백, 조화영, 김문수, 김경표, 이영희, 양해경, 이선정, 홍춘희, 백미연(전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1) 전문위원별 공약이행 계획 수립안 2차 발제 2) 전문위원간 의견 수렴 및 공약이행 계획 수립안 보완 및 수정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교육여성분과 전체 분과회의 7회 진행, 실행 내용 역할 분담
- 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전 점검 사항 및 사후 평가
- 분과 내부 팀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 공약 이행 계획 점검, 토론 및 공유
-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국·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2) 분과 내 소위원회 활동

- 교육분야, 여성분야 총 2개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활동
- 교육소위원회(최재백 단장, 김문수, 이영희, 최한상, 김경표, 조화영)
- 여성소위원회(고인정 단장, 이선정, 양해경, 백미연, 홍춘희)
- 소위원회별 회의 총 25회 진행, 정책자문위원 및 공무원과 공약 관련 업무협의

- 소위원회별 현장방문 총 10회 진행,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소위원회별 공약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총5회 진행
- 공약이행 계획수립과 관련한 전문위원과 공무원간의 세부토론회 총25회 진행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4	교육협력 실현 및 대학 경쟁력 강화
2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5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
3	평생학습 교육기반 마련		

나. 주요 논의 사항

-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 기준을 정해야 함
-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전담부서가 교육협력국 (무상급식예산, 조례 운영)과 농정해양국(친환경예산, 실제 사업부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청과의 협력,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 급식이라는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농정해양국으로 교육협력국의 무상급식 예산과 조례운영을 이관하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제안
- 코딩, 드론 등 4차 산업과 연계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체인지업캠퍼스와 연계하여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도민 교육 혜택 보편화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확대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필요
- 도교육청과 협의 하에 진로직업체험교육 등 혁신교육 정책 강화 필요
- 체인지업캠퍼스 교육 운영 방법 및 교육청과의 협력강화

- ‘글로벌 시민교육’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 시민참여 차원에서 시민참여특별위원회로 공약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 ‘작은 다문화서가’ 관련 실적이 미비함. 기존 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 필요 (프로그램 및 서가 관리, 의사소통이 원활한 전문 인력 배치 선행)
- 수적 확보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절실
- ‘장애인 평생교육’은 도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시군에 확산 및 특수보조교사 등 인력풀을 만들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
-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다. 민선6기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정보완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이 소외되어 왔음.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사업 확대 및 강화 운영 필요
2	대학유치 사업 지원	수정보완	도내대학이전가능지역에 대학이전 유치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중앙부처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부정적이며, 대학도 막대한 재정소요 등으로 이전에 소극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대학의 이전수요 또는 시군의 유치요구가 있을 경우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합함
3	산학연계대학생 취업촉진	통폐합 후 사업 전환	기존의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운영,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방학 중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등 3개 사업을 공약과제인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대학생 조기 취업률 제고

연번	사업명	자체 평가	분과의견
4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개보수지원	수정 보완	도내 초·중·고등학교 환경조성(보수등)을 통해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속여부는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
5	꿈의 교실 운영 지원	수정 보완	조기 등교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중심 교육지원 사업임. 현장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만족도는 떨어짐. 지속여부는 교육청과 협의 필요
6	학교교육급식	지속 및 업무 이관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여 학교급식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친환경 급식센터의 소관 부서(농정해양국)와 조례 운영부서(교육협력국)의 이원화로 실효성있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농정해양국으로 소관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를 이관하여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함

(2) 여성가족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	4	도립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
2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의무도입	5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설치
3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의무도입과 관련하여, 국비 및 지방비로 어린이집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는(국공립 100%, 민간·가정 80%)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이 필요함. 민선6기 경기도정은 1년 동안 의무 도입을 잠정보류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리시스템 도입을 반대해 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평가됨.
- 관리 시스템 의무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여성가족국과 어린이집 연합회 간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접 당사자인 영유아 학부모 등과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음. 또한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의 근본 목적은 회계의 편리성 제고가 아닌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있음. 어린이집 연합회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관리 시스템 도입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어린이집 스스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절실
- 도립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성평등위원회 강화와 도지사 직속의 상설기구 신설 필요
- 아동수당 상위 10% 미지급은 크게는 보편적 복지와 맞지 않으며 인력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점
-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심이 부모가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균형이 필요
- 성평등위원회 강화와 상설조직(도지사 직속) 설치 필요
- 여성긴급전화(긴급 피난처) 확보가 미비하여 모텔이나 숙박업소 마련에 문제제기가 있음. 적절한 공간 마련이 필요

(3) 복지여성실(여성분야)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북부 이혼위기 가족 지원 사업	2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예절버스 사업

나. 주요 논의 사항

- 가족여성국과 복지여성실과의 조직 및 기능 문제
- 북부지역에 대한 많은 배려 필요
- 북부지역의 특화사업인 영유아 인성교육 사업은 찬반 대립이 있어 사업의 재검토 필요
-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중요
- 시군 지원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어 본래 취지를 잃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

다. 민선6기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맞춤형10to4시간선택제일자리(10to4 일자리 만들기)	수정보완	시간 선택제 일자리 만들기 사업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5개소) 으로 정책 전환
2	세대간행복프로그램개발추진	폐지일몰	2017년 일몰 사업임
3	맞춤형보육지원(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정보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민선6기까지 도는 시군이 요청한 수요 물량을 단순히 취합하여 비용을 전달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음. 그러나 민선7기에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 간의 보육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4	경기형 공보육 추진	폐지일몰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임차형 따복어린이집(3개소), 직접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로 `19년3월 시범 사업 종료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5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폐지 일몰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2015년도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며, 현재는 신규 어린이집 인가시 설치 의무사항임

❍ 공약사업

(1)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24-③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64-①②, 159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25-②, 102-①	청년-국내외기업 '경기형 장기현장 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154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 실시
52-①, 153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실시	156 -①②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61-①	도내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157 -①②	5060 신중년 지원 강화와 베이비부모세대 맞춤형 교육 실시

나. 주요 논의 내용

- '장기현장실습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필요
- 교육협력국 명칭을 담당 업무에 맞게 '평생교육국'으로 변경 검토
-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는 교육청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진행
- '작은 다문화 서가' 사업은 이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전문인력 배치, 벤치마킹, 프로그램 확충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사업은 청소년, 성인, 여성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특수교육을 이수한 평생교육사 양성·발굴 및 부서간 협엽체계 구축 절실
- '5060 신중년 지원 강화' 사업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한 교육 및 일자리지원 교육 필요

(2)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여성분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20 -①②③	'성평등옴부즈만' 설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견인	55-①	'아이사랑놀이터' 시·군 확대
21-①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확대	59-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
21-②	경기도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까지 점진적 제고	60 -①②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 실시
21-③	공무원 성인지·성평등 교육 적극 진행	61-②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강화
22-①	도 성평등위원회 강화 및 시·군, 공공기관, 기업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장	68- ①②③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22-②	'성혐오·성비하 없는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성평등 캠페인 추진	103-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 여성 역량개발 종합지원 체계 구축
23-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	103-②	3050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26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155-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
53 -①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155-②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멘티 제도 운영
54-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155-③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실시

나. 주요 논의 사항

○ 성평등옴부즈만 제도 등

- 성평등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차별·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요청됨. 도와 시군, 공공기관, 공적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평등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발굴할 필요 있음
- 성평등옴부즈만의 조사 및 시정권고 기능 작동 방안 마련되어야 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조사의 범위와 권한 및 시정권고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

- 도와 시군, 공공기관, 공적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평등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사례 발굴 필요
- 성평등위원회는 현 위원회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학교밖 청소년 대책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 눈높이 프로그램 개발, 이용률 제고, 인식 변화 필요
- 학교 밖 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료급식 및 취미활동 가능 공간 서비스 제공 필요
- 직업 탐색과 관련 전문적인 직업인과의 1:1 매칭 프로그램 개발 필요 (청소년 선호 직업군 적극 반영 및 전문 직업인 멘토 지원 강화)
-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시행
- 각 시·군의 학교밖 지원센터인 두드림센터의 운영 및 상담 및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기능 강화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대책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군 보육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의 정교화 요망. 비용 절감과 높은 보육의 질 유지라는 이중목표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정교화하고, 플랜B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함. 비용절감 차원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계획되고 있는데, 기본 모형에 대한 입장이 부재해 보임. 기본 모형은 무상임대 추진이 되어야 할 것 임.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매우 기계적인 계획으로 여겨짐. 관련 사업 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 계획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함. 비용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시설 위주의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망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들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됨 : 1. 2018~2022년 신축 예정인 시군별 신규 공동주택단지 현황, 2. 도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관리동 어린이집) 설치 현황, 3. 2018~2022년 시군별 시군구 읍면동 청사(주민센터, 복합시설 등)
-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 질 제고 방안 계획 필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 책임자(원장)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과 순환제 검토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 평가를 통해 원장 교체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부분의 보강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평가인증 컨설팅, 취약보육지원, 보육교사 역량강화, 어린이집의 포괄적 교육지원 강화도 포함되어야 함. 어린이집 취약보육지원 사업으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굴 및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가 특화사업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보육전담기구 설치계획과 연계 필요)
- 2017년 아이러브맘 카페 등 운영비 일부지원 일몰 과정에서 도가 시군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기존의 아이러브맘카페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신설되는 아이사랑놀이터와 기존의 아이러브맘카페 등 간의 질적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함. 아이러브맘카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황 파악 및 데이터화가 우선되어야 함
- 아이사랑 놀이터 신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 ‘아이사랑놀이터를 많이 신설한다’ 이외에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 읽혀지지 않음. 기본적 현황과 수요조사에 바탕을 둔 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공간마련과 관련하여, 도내 유휴 공간에

대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음(적극적으로 시군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 성평등 대응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도의 선도적 역할 마련
- 여성비전센터는 광역기능 수행, 가족여성연구원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성평등과 여성정책 담론 등을 연구하고 선도할 연구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됨

○ 기타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수립. 단순히 지원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및 유인체계의 개발이 요청됨
-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움(단속기관인 법무부에 신고의무). 따라서 의료지원 사업은 신고의 의무가 없는 보건쪽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다문화팀에서 분리해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 제시
- 전국 최초로 개설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경기도형 이주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 확보가 시급함
- 국제이주 기구에 매년 임대료 및 관리비 약3억원 이상을 보조해 주고 있으나 소재지가 서울이고 경기도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업무협약 관계 재조정 필요.
- 도·시군 보육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필요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1) 공약조정(병합·이관·신설)

○ 41개 세부공약 검토 및 분석과정을 거치며 내용의 중복, 추진방향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교육여성분과위원회 전문위원 협의를 거쳐 '28개 공약 조정안' 도출

〈교육여성분과위원회 기존 세부공약(41개)- 공약조정안(28개) 비교표〉

	기존 41개 세부공약		교육여성분과위원회 29개 공약 조정안
1	성불평등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1	‘성평등옴부즈만’ 설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견인
2	양성평등기본법의 자발적 준수 유도		
3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률 지원 제공		
4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2	경기도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확대
5	경기도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까지 점진적 제고	3	경기도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까지 점진적 제고
6	공무원 성인지·성평등 교육 적극 진행	4	공무원 성인지·성평등 교육 적극 진행
7	시군, 공공기관, 기업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장	5	도 성평등위원회 강화 및 시·군, 공공기관, 기업 설치 권장
8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정기적 성평등 캠페인 추진	6	‘성협오·성비하 없는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성평등 캠페인 추진
9	피해회복 및 자립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시설 지원 확대	7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
1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11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9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보육교사 인건비 고려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13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방안 수립		
14	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 가정양육보호자에게 육아서비스 지원	11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15	놀이지원전문가 및 육아상담전문가 배치, ‘부모학교’ 운영	12	‘아이사랑놀이터’ 시·군 확대
16	이주노동자 자녀, 다문화 아동·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13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17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현황과 실태조사	14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실시
18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치료 서비스 제공		
19	도내 공공도서관 내 ‘작은 다문화 서가’설치 운영	15	도내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20	다문화 야학과 연계, 다문화 아동에게 이중 언어 교육 지원	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강화

	기존 41개 세부공약		교육여성분과위원회 29개 공약 조정안
21	자립지원 정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17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22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지원		
23	미혼모 원스톱 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24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 여성 역량개발 종합지원체계 구축	18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 여성 역량개발 종합지원체계 구축
25	3050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19	3050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26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0	청년-국내외기업 연결 '경기형 장기현장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27	'장기현장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28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실시**	21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실시**
29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교복비 지급		
30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 실시**	22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 실시**
31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	23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
32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멘티 제도 운영	24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멘티 제도 운영
33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실시	25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실시
34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26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35	장애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지원, 학령기 의무교육을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 강화		
36	장애성인 취업교육, 고급 정보화 교육 등 맞춤형 평생 교육과정 개발 하여 운영		
37	4차 산업혁명시대 신종 직종 관련 직무능력강좌를 개발하고 운영	27	경기도 온라인평생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38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필수 업무지식강의 시리즈 개발 및 운영		
39	개인적 여건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직업훈련, 지역사회 기여방법, 창업 설계 등 지원	28	5060 신중년 지원 강화와 베이비 부모세대 맞춤명 교육실시
40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확대하고 운영과목 다양화		
4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확대**	**이관**	**시민참여특별위원회로 공약 이관**

(2) 공약사업 세부 과제

○ ‘성평등옴부즈만’ 설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견인 (20-①②③, 여성가족국)
○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확대 (21-①, 여성가족국)
○ 경기도 전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까지 점진적 제고 (21-②, 여성가족국)
○ 공무원 성인지·성평등 교육 적극 진행 (21-③, 여성가족국)
○ 도 성평등위원회 강화 및 시·군, 공공기관, 기업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장 (22-①, 여성가족국)
○ ‘성혐오·성비하 없는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성평등 캠페인 추진 (22-②, 여성가족국)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 (23-①, 여성가족국)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24-③, 교육협력국)
○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26, 여성가족국)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 (53-①②, 여성가족국)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 (54-①, 여성가족국)
○ ‘아이사랑놀이터’ 시·군 확대 (55-①, 여성가족국)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 (59-①, 여성가족국)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실시(60-①②, 여성가족국)
○ 도내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61-①, 교육협력국)
○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강화(61-②, 여성가족국)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68-①②③, 여성가족국)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 여성 역량개발 종합지원 체계 구축 (103-①, 여성가족국)
○ 3050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103-②, 여성가족국)
○ 청년-국내외기업 연결 ‘경기형 장기현장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25-②·102-①, 교육협력국)
○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실시 (52-①·153, 교육협력국)
○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 실시 (154, 교육협력국)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 (155-①, 여성가족국)
○ 학교밖 청소년 1:1 멘토-멘티 제도 운영 (155-②, 여성가족국)
○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실시 (155-③, 여성가족국)
○ 장애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64-①·159-①②, 교육협력국)
○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156-①②, 교육협력국)
○ 5060 신중년 지원 강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교육 실시 (157-①②, 교육협력국)

6. 정책제안 및 과제

민선7기 교육여성분과 제안 조직개편(안)

[1] 여성정책 전달체계 재구축을 위한 TFT 제안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가족여성연구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함

[2]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정책실로 위상 격상

- 본청 여성가족국과 북부청 복지여성실의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정책실로 격상
-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을 위해 기능적 통합이 요청됨

[3] 여성비전센터 기능 강화 방안

- 사업소 조직을 탈피. 센터장을 민간 전문가로 공채
-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가 배치
- 성평등비전센터로 명칭변경
- 가족여성연구원의 '젠더 거버넌스 사업' 이관할 것을 제안
- 향후 경기여성재단 설립 검토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

- 연구원의 연구와 교육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공보육시범 사업'은 타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젠더거버넌스'는 비전센터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음

[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명칭 변경 필요

-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 변경 제안 : 중앙 정부의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명칭과의 일관성을 위해 명칭 전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명칭은 가부장적 '가족가치'(Family Value)를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주의 가치가 투영된 결과임

[6] 청소년정책과 신설

- 청소년정책 수립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분리해 청소년정책과 신설

[7]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 국 전체 사업을 포괄하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주체로의 의미가 함의된 명칭 변경 제안
- 팀 명칭 변경

• 교육정책팀 → 평생교육정책팀
• 창의인성팀 → 미래교육팀

- 5060 신중년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리직(1 급상당) 채용 방법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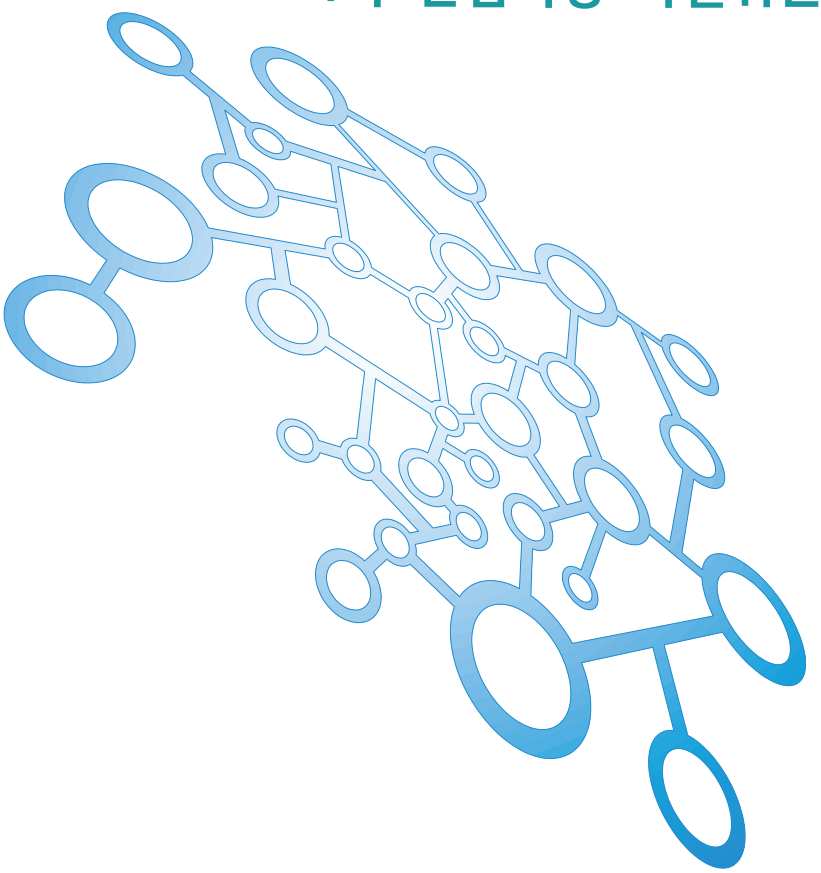
- (현행) 정규직(관리전문직1급)으로 채용
- (개선) 임기제 계약직(최초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병행
- (개선) 도내 모든 산하공공기관 적용
- 정관개정 필요

본부장 현황

직위 수	보직 수	주 요 업 무	임용방식
5명(관리 전문직 1급)	5명	원장 보좌, 각 본부 업무 감독·총괄, 대외협력	정규직

2장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이원욱

○ 수석부위원장 : 임문영

○ 부위원장 : 문재웅

○ 간사 : 김선우

2. 활동방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주요 보고서 분석을 통한 특위 지식기반(knowledge base) 강화

○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추진 전략 파악

- 4차 산업혁명 경기도 모델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경기연구원)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경기연구원)

○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전 분야에 걸쳐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특위 역량 보강

○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전문성 확보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경제실, 도시주택실, 교통국, 철도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국, 공유시장경제국, 환경국, 교육협력국,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바이오센터,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인재개발원, 경기테크노파크, 농업기술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총 13개 실·국, 8개 기관)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논의내용
1차	6월 26일(화)	R&DB 2층 대회의실	10:35 ~ 11:25	경제실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개념 정립 및 거버넌스(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11:35 ~ 12:25	정보화 정책관 - 경기도의 디지털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CIO(Chief Innovation Officer) 역할 수행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102호실	09:30 ~ 13:00	문화체육관광국 - AR/VR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 헬스케어 등 공공 응용 적극 발굴
		R&DB 5층 소회의실	16:00 ~ 18:00	경기융합타운추진단 - 신청사에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채택하여 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2차	7월 5일(목)	R&DB 2층 대회의실	09:00 ~ 09:40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 (농정해양국) 식물공장, 정밀농업 등 경기도 스마트 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축산산림국)“Connected Cow”등 축산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09:50 ~ 10:30	문화체육관광국 / 경기콘텐츠진흥원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일산 테크노밸리를 AR/VR 산업의 메카로 발전
			10:40 ~ 11:20	건설국 / 건설본부 - “건설산업 로봇 및 자동화(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11:30 ~ 12:10	보건복지국 -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경기도형 스

	날짜	장소	시간	대상/논의내용
				마트 헬스케어 마스터플랜(정밀의료, PHR, 스마트병원 등) 수립
			13:00 ~ 13:40	공유시장경제국 -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를 토대로 한 기존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정 및 보완
			13:50 ~ 14:30	재난안전본부 - 드론, 빅데이터, IoT 등 재난안전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거버넌스 구축(개별 부서 수요 취합)
			14:40 ~ 15:20	환경국 / 수자원본부 - 측정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analytics)을 위한 클라우드/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30 ~ 16:10	교육협력국 - 코딩 교육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필요
3차	7월 6일(금)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대회의실	09:30 ~ 10:10	도시주택실 - 테크노밸리 건설 후 지속가능한 스타트업/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
			10:20 ~ 11:00	교통국 - 자율주행 V2X 등 급속한 기술발전 트렌드를 고려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추진
			11:10 ~ 11:50	철도국 - 물류 업무의 일원화(철도, 항만) 및 하이퍼루프 등 철도 중심의 물류 4.0 대응

※ 4차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받기로 결정

(2) 업무보고 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질의응답 및 자료 요청
- 공약 검토 및 이행 방안 보고 및 요청 사항 검토 보고
- 공약 외 신규 제안 방안 협의 및 검토 요청

❍ 현장방문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8일(목)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10:00 ~ 12:00	빅파이추진단 - 빅데이터 도정 서비스 사업의 효과 분석 및 빅데이터 역량 내재화 필요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16:00 ~ 18:00	융합보안지원센터 - 사이버보안과 물리적 보안이 결합되는 융복합 추세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2차	6월 29일(금)	판교 테크노밸리	13:30 ~ 14:30	경제과학진흥원(자율주행차량) - 자율주행 MaaS 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및 경기도 전역 확대
		판교 스마트시티 사업현장	16:00 ~ 17:00	경기도시공사 -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하여 경기연구원, 차세대융기원 등 산하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3차	7월 3일(화)	차세대융합기술원	09:00 ~ 11:30	차세대융합기술원 - 경기연구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에 맞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강화
		경기연구원	16:00 ~ 18:00	경기연구원 - 진행중인 프로젝트(“4차 산업혁명 경기도 모델”)를 민선7기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보완 필요
4차	7월 4일(목)	경기농업기술원	10:30 ~ 12:30	경기농업기술원 - 식물공장, 정밀농업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5차	7월 6일(금)	경기바이오센터	15:00 ~ 17:00	경기바이오센터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기도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날짜	장소	시간	대상
6차	7월 9일(월)	경기테크노파크	14:00 ~ 15:30	경기테크노파크 - R&D 및 기업 지원 업무에 있어서 경제과학진흥원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16:00 ~ 18:00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도 스마트 팩토리 혁신 클러스터 조성

(2) 현장방문 내용(공통)

-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실증
-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협의
- 공약 외 신규 제안 사업 검토

❍ 토론회 및 간담회

(1) 제1차 정책토론회

주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정책
일시	6월 25일 16:30 ~ 18:00
장소	융기원 2층 나노조합사무실
참석자	임문영 수석부위원장, 문재웅 부위원장, 김선우 간사, 김성용 위원
주요 논의 사항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 방안 - 경기코인(청년 배당, 에코 마일리지, 복지포인트 등) - 경기도형 크립토밸리 조성 - 블록체인 지역화폐의 호환성(타지자체 지역화폐)

(2) 제2차 정책토론회

주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유경제
일시	6월 28일(목) 16:30 ~ 18:00
장소	융기원 1층 세미나실 102호

참석자	문재웅 부위원장, 전병선 위원, 김성용 위원, 이응준 위원
주요 논의 사항	공유경제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방안 - 도민 중심의 개인데이터 정책(MyData) - 빅데이터 관련 교육 확대 : 공무원 및 일반 시민 -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

(3) 제3차 정책토론회

주제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코딩 교육
일시	7월 4일(수) 16:3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
참석자	이원욱 위원장, 임문영 수석부위원장, 문재웅 부위원장, 김선우 간사, 김성용, 김익규, 도수만, 이응준, 전병선, 전한구, 최수만 (이상 전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초중고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을 위한 코딩 교육 확대 방안 - 코딩버스, 코딩캠프 등 정책 아이디어

(4) 제1차 워크샵

주제	4차산업혁명특위 내용 토론
일시	7월 4일(수) 18:00 ~ 2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
참석자	이원욱 위원장, 임문영 수석부위원장, 문재웅 부위원장, 김선우 간사, 김성용, 김익규, 도수만, 이응준, 전병선, 전한구, 최수만 (이상 전문위원)
주요 논의 사항	정책자문위원 내용 검토(인공지능 119센터 등) 전문위원 제안 발표 및 검토(탑승형 드론 등) 최종 보고서 관련 논의(특위 내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 작업 수행 - 거버넌스/R&D, 산업혁신)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매일 특위 전체회의 개최. 역할 분담 및 진행 상황 확인
- 일일 업무보고, 전체회의 자료 작성 등 보고서 제출
- 업무보고,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구글 문서와 드라이브 활용)

(2) 분과 내 팀 활동

-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
- 제1소위원회(위원장 : 김성용, 위원 : 최수만, 김익규)
  제2소위원회(위원장 : 전병선, 위원 : 이응준, 전한구, 도수만)
- 소위별 회의 4회 실시. 제1소위원회는 거버넌스, R&D를 맡기로 하고, 제2소위원회는 신규 제안 사업을 담당하기로 함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경제실, 정보화기획관

가. 경제실

-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 관련업무가 도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경기도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필요
- 테크노밸리 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 : 인프라 조성 뿐 아니라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필요
- 스마트 팩토리 확산 : 경기도형 모델 개발 필요
- 자율주행 실증단지 : 자율주행 MaaS(Mobility as a Service)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축 필요

나. 정보화기획관

- 빅데이터 : 데이터전략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필요
- 전문인력 양성 :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 필요

- 스타트업 육성 :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강화 필요
- 총평 : 전산지원 업무에 치우쳐 있는 정보화기획관은 경기도의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CIO(Chief Innovation Officer) 역할로 업그레이드 필요. IoT/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대한 전 부서의 수요를 취합하여 통합 전략 수립 필요

(2) 문화체육관광국

-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산업 육성 : 본격적인 시장 형성전이라도 교육, 헬스케어 등 공공 분야 응용 적극 발굴 필요
-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 2018) 개최(하반기 예정) : 보여주기가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경기융합타운추진단

- 신청사 건설 :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신청사를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건물로 만들고 신청사를 표준 모델로 삼아 道내 스마트 빌딩/스마트타운 생태계 구축

(4)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가. 농정해양국

- 시설원예 분야 IoT 기반 스마트팜 :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구축 후 운영 및 유지관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물 공장(수직 농장) 방식 스마트팜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적극 추진(신청사 등에 적용 검토)
- 총평 : 시설 원예, 식물공장, 정밀농업 등을 포함한 스마트팜 마스터플랜(경기도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 개발 등) 수립 필요

나. 축산산림

- 축산 분야 : ‘Connected Cow’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증 환경 구축(생성 데이터의 저장/분석 인프라 중요)

(5) 보건복지국

- 경기의료원 클라우드 HIS : PHR(개인건강기록) 등이 포함된 도민 중심의 통합적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총평 : 경기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경기도형 스마트 헬스케어 마스터플랜(정밀의료, PHR, 스마트병원, VR/AR 활용 헬스케어 등) 수립 필요

(6) 공유시장경제국

- 공유경제 확대 :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기존 공유경제 지원 계획 업그레이드 필요(플랫폼 협동주의 등 해외 트렌드 반영)
-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앞서 도지사의 비전과 철학에 맞는 블록체인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경기연구원 등을 통한 정책연구 강화)

(7) 재난안전본부

-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인공지능 119) : 운영자와 인공지능 시스템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IoT 기반 스마트화재 시스템 확대 : IoT 분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타 분야 사물 인터넷 사업과의 통합 관리 필요
- 총평1 : 재난안전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도지사의 핵심 정책 분야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 가능한 대표적 응용임
- 총평2 : 드론, 빅데이터, IoT 등 재난안전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거버넌스 구축(개별 부서 수요 취합, 도입 전략 수립 등)

(8) 환경국

- 드론, 센서 기반의 환경 감시 : 도내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인 화성시, 시흥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IoT 활용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원격 모니터링 : 센서, IoT 인프라 외에

측정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필요
- 총평 : 재난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9) 교육협력국

- 온라인 평생교육플랫폼(GSEEK)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문제 해결 능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을 위해 코딩 교육 커리큘럼 강화 필요
- 총평 : 코딩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필요

(10) 도시주택실(테크노밸리)

- 테크노밸리 건설 후에 지속가능한 스타트업/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테크노밸리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테크노밸리 근무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

(11) 교통국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 자율주행 V2X 등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사업 추진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 경기도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교통 빅데이터 전략 수립 및 플랫폼 구축

(12) 철도국

- 물류 업무 일원화 : 철도 물류(철도국)와 항만 물류(농정해양국)로 이원화되어있는 체제 통합 필요
- 미래 모빌리티 및 물류 4.0 대응 : 하이퍼 루프 등 미래형 철도 기술에 대한 검토, 철도를 중심으로 드론, 자율주행 트럭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하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연구

(13) 경기연구원(현장방문)

- 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과제(경기도 4차 산업혁명 모델 개발, 워킹 그룹 운영 등)을 도지사의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보완(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등 분야 추가. 사회적경제와의 결합 등)

(14) 경기경제과학진흥원(현장방문)

- GBSA의 미션과 역할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정
- 경기도 R&D 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 총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R&D 역량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능 강화

(15) 차세대융합기술원(현장방문)

-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R&D를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 경기도 R&D 혁신 차원에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역할 강화 검토

(16) 경기도시공사(현장방문)

- 판교제로시티를 자율주행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반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 경기연구원 등이 추진 중인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모델의 핵심은 스마트시티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 공약사항 검토 결과

공약명	공약번호	검토 결과
스타트업 공간 조성 시범사업 시행	80-①②③	•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거버넌스 정비 필요 • 다양한 부서 및 산하기관에 산재된 관련 기능 통합 • 공간 제공 뿐 아니라 대기업 협력 등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81-①	• 대학, 스타트업 업계, 산하기관 , 대기업 등 혁신 주체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존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81-①	
권역별 대학을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취업 연결체제 구축	85-①	
특허기술 사업화 및 재창업 지원 확대	82-①②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강화 • 재창업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창업 문턱을 낮춰야 함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83-①	• 테크노밸리의 구축 뿐 아니라 구축 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교통, 주거 환경 등)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기 완공 지원)	83-①-1	• 테크노밸리의 구축 뿐 아니라 구축 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양주테크노밸리 : 2022년 착공(예상) 지원)	83-①-2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 2023년 착공(예상) 지원)	83-①-3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 에너지, 스마트공장)	83-①-5	
테크노밸리 산업생태계 창업기업 적극 유치	83-②	

공약명	공약번호	검토 결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일산 테크노밸리 : 3D/4D, 방송·문화·콘텐츠 관련 클러스터 구축 지원)	83-①-4	• 대형 정부과제 참여 및 공공 응용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AR/VR 생태계 조성 지원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 조성 및 융복합 강화	84-①	• 경기 서해안권에 드론, 하이퍼루프, 자율주행 트럭, 항만 자동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벨트를 조성하여 물류 4.0 적극 대응
경기도 대학의 취업 네트워크 역할 강화	85-①	
4차 산업혁명과 구조고도화 선도할 '미래일자리' 준비	86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코딩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강화 • 에너지, 모빌리티 혁명 선도를 위한 관련 직업 교육(재생에너지, 자율주행전기차 등) 확대
산업단지를 노동자 재교육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노동자 재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86-①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89-①	
파주시·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90-②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90-③	
경기북부 패션, 가구관련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91-①	
경기북부라인 최첨단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	92-①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개발	93-①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계획 수립	94	
스마트 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101-②	• 경기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산하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업, 축산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스마트 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식물공장, 배양육 등 농식품 분야의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한 준비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스마트 팜 보급)	101-②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101-②	

공약명	공약번호	검토 결과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 기능 강화)	114-②	• 화성, 평택 등 경기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 물류 인프라를 발전시킴으로써 해양경제 및 미래 모빌리티(물류 4.0) 주도권 확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125-③	• 기술 발전 트렌드를 고려하여 급속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검토(해외 선진국들은 급속 충전 인프라에 투자 집중) • 중앙정부, 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중복 투자를 회피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충전 네트워크 구축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디지털 굴뚝 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 대상 확대	126-②	• 환경 분야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굴뚝 자동감시스템(TMS)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고도화 방안 검토(예지분석 기능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39-③	•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인프라(전용도로, 충전시설 등) 구축 병행 필요 • 퍼스널 모빌리티 인프라 설계 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 허브(스마트 환승 및 라스트마일 이동수단 지원) 등과 연계된 종합적 계획 수립
재난통제 정보통신 조직 강화 및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44-①	• 재난통제 전분야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필요
사물 인터넷(IOT) 기반 무인 스마트 화재신고시스템 확대 운영	144-②	• 사물 인터넷, 드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된 스마트 화재 시스템 구현 • '스마트 안전 골목길' 개념의 고도화 및 도내 조속 확대 방안 마련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156-1,2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코딩교육, 에너지/모빌리티 관련 직업교육,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의 과정을 확대

❍ 도정 300개 과제 평가

번호	제목	평가결과	비고
10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코딩, 사이버보안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스타트업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보완
22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 생태계조성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보급 지원	보완
25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O2O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 거래 활성화(시장별 위치기반 연동)	보완
29	경기도 착한결제 시스템(써니페이)구축	• 사업 미진행	중단
32	스타트업지원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 스타트업 캠퍼스의 장소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등 문제 • 융합보안지원센터의 지원사업 강화 필요 • 스타트업 캠퍼스 중복지원업무 통합으로 효율화 도모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지원	보완
34	G-NEXT 게임산업의 메카	• 경기게임산업위원회(가칭) 구성 및 월드게임 콩그레스(가칭) 설립 검토 필요	수정
37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지원	• 블록체인 캠퍼스 예산 추가 지원(2019년 이후 예산 없음)	수정
39	스타트업-랩 조성 및 운영	• 예산 미반영, 전담부서 없음	종료
40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 제로셔틀 운행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확보 • 추가 예산반영을 통한 자동차 모델 개발	보완
42	지식 첨단형 노후산단 활성화	• 기존사업 종료. 신규 공약사업(94번 노후산업단지 재생)으로 추진	종료
43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구축	• 도내 스마트 팩토리 우수기업(삼성,LG등)들과 연계하여 생태계 조성	보완
46	SW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	• 판교, 광교 TV 중심으로 (SW융합)지원 강화	보완

번호	제목	평가결과	비고
47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조성사업	• 서울대 시흥캠퍼스(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중심의 TV 조성	보완
52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조성	• 기존 빅파이 추진단은 효율성, 전문성 문제 • 클라우드 기반 대용량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수정
53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 관광지,상업지구 중심으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수정
54	평택항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	• 하이퍼루프 등 신기술 접목으로 물류4.0 대응	수정
56	판교제로시티 조성	• 자율주행 MaaS 기반의 경기도 표준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보완
57	제3판교 (금토지구) TV 조성	• 블록체인 캠퍼스 이전 확장필요	수정
58	도시첨단산업 확충을 통한 고급일자리 창출	• 도시형 스마트팜(테스트베드)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유통망 단축 및 IoT 기반 생산 구매 연동	수정
66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69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융복합 농산업 육성		
71	기후변화 대체작물개발 보급		
62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 태양광, ESS 등이 통합된 공동주택 모델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수정
297	스마트고지서와 지능형 세정 상담봇 활용으로 지방세정 혁신	• 실질적 사용자는 적으며 도비지원이 없음	종료
299	사무공간 혁신, 도신청사 건립	•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경기도 스마트빌딩/스마트시티 생태계 확대에 기여	보완
300	신청사 스마트워크 조성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공약명	공약번호	주관부서
스타트업 공간 조성 시범 사업 시행	80-①②③	경제실(기업지원과)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81-①	경제실(과학기술과)
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존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81-①	경제실(기업지원과)
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창업과 취업 연결체제 구축	85-①	경제실(기업지원과)
특허기술 사업화 및 재창업 지원 확대	82-①②	경제실(기업지원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83-①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기 완공 지원)	83-①-1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양주테크노밸리 : 2022년 착공(예상) 지원)	83-①-2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 2023년 착공(예상) 지원)	83-①-3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일산 테크노밸리 : 3D/4D, 방송·문화·콘텐츠 관련 클러스터 구축 지원)	83-①-4	도시주택실(도시정책과)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 에너지, 스마트공장)	83-①-5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
테크노밸리 산업생태계 창업기업 적극 유치	83-②	경제실(산업정책과)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 조성 및 융복합 강화	84-①	경제실(과학기술과)
경기도 대학의 취업 네트워크 역할 강화	85-①	경제실(일자리지원과)

공약명	공약번호	주관부서
4차 산업혁명과 구조고도화 선도할 '미래일자리' 준비	86	경제실(산업정책과)
산업단지를 노동자 재교육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노동자 재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86-①	경제실(산업정책과)
게임 관련업체 집적지인 성남시 중심으로 확장	89-①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
파주시·고양시의 컨벤션 기능 및 한강축의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	90-②	문화체육관광국 (한류월드사업단) ※ 우리 특위와 연관성이 낮아 제외
부천 만화영상클러스터	90-③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 우리 특위와 연관성이 낮아 제외
경기북부 패션, 가구관련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91-①	경제실(특화산업과) ※ 우리 특위와 연관성이 낮아 제외
경기북부라인 최첨단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	92-①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 우리 특위와 연관성이 낮아 제외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개발	93-①	경제실(산업정책과) ※ 우리 특위와 연관성이 낮아 제외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계획 수립	94	경제실(산업정책과)
스마트 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101-②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스마트 팜 보급)	101-②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101-②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 기능 강화)	114-②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

공약명	공약번호	주관부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125-③	환경국 (기후대기과)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디지털 굴뚝 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 대상 확대	126-②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39-③	건설국 (도로관리과)
재난통제 정보통신 조직 강화 및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44-①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자연재난과)
사물 인터넷(IOT) 기반 무인 스마트 화재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144-②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156-1,2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6. 정책제안 및 과제

1.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

❍ 제안사유

- 중앙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운영
  - 인천 등 9개 시·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경기도는 총괄부서가 없으며,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각각 업무 추진하여 통일된 정책 추진 및 체계적 사업관리가 어려움

❍ 내용

-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의사결정 및 관련 사업의 심의·조정·자문을 위한 「(가칭)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 도지사 직속 기구로서 위원장과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 산하의 상설 추진단 설치
-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등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산하기관들과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기관의 혁신 역량 활용
-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경기도내 정부출연기관* 등과의 폭 넓은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혁신 추진(*건설기술연구원(고양), 철도기술연구원(의왕))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역량 강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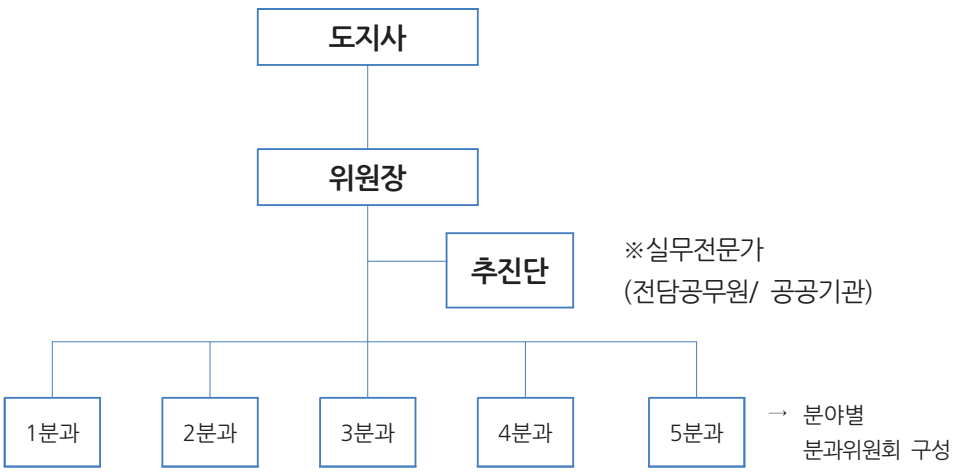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과학기술 담당 정책보좌관 신설 검토
- 정보화 정책관 독립성 강화 및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 필요성 검토
- 과학기술 담당부서(경제실 과학기술과) 위상 강화 방안 검토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수행 및 유사 중복 업무 최소화

〈참고〉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구성 20명 내외)



참고 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황 및 역할

❍ 위원회 현황

○ 위원현황 : 25명(위원장 : 장병규)
-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6명

○ 분과위원회 : 3개 혁신위원회(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특별위원회(특정 현안논의)

○ 설치근거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설치목적 :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위원회 역할(다음 사항의 심의·조정)

○ 4차 산업혁명 종합 국가전략
-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등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총 5대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전 부처의 추진 실적 분석 검토

※ (5대분야) ①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②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성장 촉진, ③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④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⑤ 미래사회 변화대응

○ 4차 산업혁명 근간인 과학기술 발전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대학산업수학센터 개소, R&D 과제 기획 → 선정 → 평가 → 보상 프로세스 혁신 방안 수립

○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 스마트 의료, 제조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 이동체, 미래형 에너지 혁신, 스마트 농수산업 등 육성

참고 2 시·도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 총괄

○ 총 9개 시·도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중임

운영(9)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운영(8)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 위원회 운영지원은 집행부 전담(TF)팀에서 지원하고 있음

❍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일
1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2. 20.
2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2017. 7. 31.
3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12. 11.
4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2017. 11. 20.
5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8. 6. 6.
6	전라남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3. 15.
7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2017. 5. 29.
8	경상남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 위원회	2017. 10. 13.
9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4. 19.

2. 경기도 R&D 체제 혁신

❍ 제안사유

- 2018년 경기도 총예산은 21조 9,765억원(전년대비 11.7% ↑)이며, R&D를 포함한 경기도 자체 과학기술 투자는 2,995억원(전년대비 8.6% ↑)
  -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 투자 비중은 1.4%(15년 1.6%, 16년 1.2%, 17년 1.4%)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산·학·연의 R&D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자체 과학기술 투자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족한 상황

❍ 내용

- R&D 국비 유치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
  - 균형발전 관점의 수도권 배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 건의(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산업기반 및 혁신 자원 활용도 제고 필요)
  -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합리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지역특화산업 지정 등 과학기술 분야의 수도권 배제 정책 방향에 대한 완화 건의
- R&D 국비 유치를 위한 자체 기획역량 강화
  - 자체 기획역량 강화 및 국비 유치 확대를 위해 도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활용 확대(ex, 경기도 R&D 기획위원회)
- 효율적 기획·관리를 통한 R&D 효과 극대화
  - R&D 국비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 경기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및 예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R&D 사업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및 성과 극대화
  - 단계별(기획→중간→최종) 사업평가 시스템을 통해 R&D 성과에 따라 예산을 기획·조정·배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기대효과

- R&D 예산 및 효과(ROI) 증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3.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확대

❍ 제안사유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적극 뒷받침 : 농림부, 2022년까지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 4,300개 창출 등 청사진 발표
-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 생산 체제 준비 : 도시화, 기후변화 등 대비
- 도시 내 폐건물·폐공장·우범지역 등 구도심 활용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내용

- 도시 내 폐건물 등을 식물공장형 스마트팜으로 조성
  - 예) 방치된 도심 주차타워 / 전철역 교각 하부 활용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자체-(대)기업간 협력

※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Newark) 사례

- 공업단지 내 폐공장을 개조해 스마트팜(에어로 팜) 건립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130명 (95%가 지역주민)

❍ 기대효과

-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 뒷받침 가능
- 도시화 및 기후변화를 대비한 지속가능 미래 식량 생산 체제 구축

4. 경기 드론 특구 조성

❍ 제안사유

-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수요 전년대비 600% 이상 증가
  - 드론 불법비행(`15년 20건→`16년 21건) 및 사고(`15년 176건 →`16년 247) 증가
- 드론화재·재난감시·구명활동·건축·측량·교통상황 모니터링 등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 마련 시급

❍ 내용

- 경기 화성 및 시흥에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 자격 취득 및 국가법정교육시설(드론 종합실기 시험장, 복합교육훈련센터)을 건립하여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드론 특구화 추진
- 드론 종합실기시험장 구축 (경기 화성)
  - 사업비 : 건축비 59억원 / 시험장 3개, 교육동 1개
  - 조종자 필기 및 실기시험
-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구축 (경기 시흥)
  - 사업비 : 건축비 67억원 / 시험장 3개, 교육동 1개
  - 드론 지도조정자·드론실기평가 조종자·공공부문 조정 인력 교육

❍ 기대효과

-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로 세계 표준 드론시험/교육장의 선도적 모델 제공
- 드론분야의 대중화, 전문화, 안전성 확보
  -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인 드론 인구 확대 기여
  - 드론 전문인 양성 및 드론 안전사고 선제 대응

5. 스마트 파킹

❍ 제안사유

- 도시 내에서 빈 주차공간을 찾아서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
-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도시 내의 주차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내용

- 센서(카메라, 노면 센서 등)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클라우드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림
- 운전자는 온라인 예약 기능을 통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으로 이동
- 이동통신사, 스타트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공영 주차장,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스마트파킹 확대 추진
-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지역화폐 등과 연계하여 도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정산 경험 제공

❍ 기대효과

- 도시내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 삶의 질 개선
- 스마트 신호체계, 스마트 도로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기반을 마련

6.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 제안사유

- 증가하는 정보자원을 수용할 플랫폼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분산된 전산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운영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분석, 활용을 위한, 공공 주도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필요

❍ 내용

- 통합데이터센터(IDC) 설립 추진
  - 통합대상 : 운영예산, 기관별 통합의지, 물리적 여건 고려(본청 대상, 본청+공공기관 대상, 본청+공공기관+시군 대상)
  - 장소 : 소요 예산 및 입주 시기 고려(신축, 리모델링, 신청사 내 입주)
- 빅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 도내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인력 육성

❍ 기대효과

- 도 및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IT자원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
- 축적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제공

7. 블록체인 기반의 도정 공정성 및 신뢰성 증대

❍ 제안사유

- 경기도의 각종 공공거래, 사업공모 등에 있어 도민의 불신 해소
- 공공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 및 투명성 증대

❍ 내용

- 공공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공공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 구축
- 블록체인 공공거래 프로세스
  -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정 서비스(거래) 제공함
  - 행정 서비스(거래)장부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각 분산원장에 기록 저장됨
  - 공무원 또는 해당 민원인이 자신이 서비스 받은 거래원장 히스토리를 열람하여 새로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

❍ 기대효과

- 공공 거래 장부를 분산 장부에 기록 보관하여 비용 절감 및 보안 증대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도민 편의성 증대

8. 인공지능 120 경기도 콜센터

❍ 제안사유

- 도민생활 혁신 : 상담 목적을 조기에 달성, 만족도 높이고 처리 증대
- 상담 능력 배양 : 상담 능력을 조기에 숙련화, 전문화, 상담 품질 제고
- 상담사 보호 : 악성 민원, 욕설 등 감정노동 저해요소 제거

❍ 내용

- 인공지능 상담 지원시스템 구축
  - 만족도 낮은 ARS로의 대체가 아닌, 인력상담지원 시스템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민원취지 파악, 최적 답변 제안
  - 음성인식 녹취, 전문분야 할당, 단순 민원 분류 및 신속 응대
- 상담 업무 능력 배양
  - 비숙련 상담사의 숙련 노하우 활용한 인공지능 지원 체계 구축
  - 전문 상담분야 육성
- 감정노동 보호 기술 적용
  - 인공지능 민원인 정보, 성향 분석, 감정 분석, 상위(2차) 상담 전달
  - 욕설 제거, 정보 보호, 악의적 재민원인 자동처리

❍ 기대효과

- 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상담 목적을 조기에 달성(만족도 평가 Index 제고, 처리 시간 단축, 완료율 제고)
- 상담업무 능력 조기 숙련화(상담사별 편차 축소, 전반적 상담품질 제고)
- 감정 노동 저해 요소 제거로 업무 만족도 제고
- 상담 데이터 축적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상담 내역, 음성인식, 감성 분석, 요약보고)

9.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로봇 솔루션 보급 및 확산

❍ 제안사유

- 중소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위하여 道내 중소 제조기업에 제조업용 로봇·협동로봇의 도입지원,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제고
-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노후 제조공정 개선 지원(경기도 산업단지 수 : 170개, 입주 기업 수 : 27,995개사)

❍ 내용

- (스마트 로봇솔루션 보급) 분야별 로봇융합공정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형 로봇공정 토탈 솔루션 기술 지원
- (제조공정혁신 컨설팅) 제조공정분석 및 로봇공정 설계·운영·기술 도우미, 협력체계 인프라 구축·연계
- (로봇 솔루션 기술위원회) 제조로봇기업 및 SI 기업, 로봇 전문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전문가중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기대효과

- 로봇 기반 스마트 융합 공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성 극대화 및 중소제조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성공모델 제시
- 다양한 중소제조기업의 로봇 자동화 공정의 성장에 대응한 생산라인 구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중소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10. 인공지능 119 정보센터 구축

❍ 제안사유

- 4차 산업혁명 선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인공지능에 의한 119 신고접수·지령 → 도착시간 단축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내용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및 대응체계 구축
- 인공지능 학습 및 재난·재해 예측을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
- 음성인식 기반, 소방대원 현장활동 시 양손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무전장치 보급
- 불법 소방도로 주차 차주 자동연락 등 소방차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실 설치 등 조직 강화

❍ 기대효과

-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보강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 안전하고 첨단화된 재난종합지휘센터 구축·운영으로 도민안전 강화
- 보유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를 통한 제공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축적된 데이터로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

<참고 자료>

소요예산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공지능119정보센터	130억	50억	48억	16억	16억

추진일정		'19년	'20년	'21년	'22년
119	지능형신고 접수 시스템	시스템 도입	음성인식 향상	접수/지령 시스템 구축	분석 능력 향상
	지식데이터 허브	ISP 사업 추진	실시간 분석체계	서비스발굴	활용고도화
	음성인식 무전장치	무전기 보급	무전기 보급	-	-
	신속출동시스템	신속출동시스템	고속도로 시스템	-	-

	정보보안 강화	데이터유출방지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리시스템	AI 보안시스템
	재난통제 조직	사업전담부서 신설	운영/분석실 신설		-

- 고려사항(제안)

• 최첨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구성, 추진단 운영

가) 구성(18명) : 인공지능 7명, 데이터분석 5명, IoT 5명, 단장 1명

나) 확보방안 : 전문관 신규채용 10명, 지원관리 소방직 8명

• 도 재난관련 부서 및 시·군 보유 최신 데이터 제공 협조필요

❍ 인력구성 : 전문관(신규채용) 10명 + 행정지원(소방직) 8명

- 전문인력 10명(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 가급 1, 나급 3, 다급 6

• 인공지능 및 S/W 전문관(4명) : 가급(S/W) 1명, 나급(인공지능) 1명, 다급(S/W) 2

• 데이터 분석 전문관(3명) : 나급(통계) 1명, 다급(빅데이터) 2명

• 사물 인터넷 및 네트워크 전문관(3명) : 나급(네트워크) 1명, 다급(IOT) 2명

11. 육, 해, 공 무인이동체 연구, 실증 클러스터 조성

❍ 제안사유

-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 적극 뒷받침
  - 과기부, 향후 10년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에 5,500억원 투자 계획(과기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 내용

-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원천기술연구와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R&D부지
  - 참여기관 :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T,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대우조선해양 등

구분	글로벌 복합 연구단지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센터	무인항공이동체 연구센터	서울대-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센터
목적	대·중·소·벤처기업 원천기술 공동개발	자율주행 실증연구	무인항공체 실증연구	무인선박 등 실증연구
사업비	건축비 : 1,000억원 토지비 : 서울대부지활용	건축비 : 250억원 토지비 : 서울대부지활용	건축비 : 100억원 토지비 : 서울대부지활용	건축비 : 1600억원 토지비 : 서울대부지활용
비고	미정	`19년 6월 준공	`19년 8월 준공	1단계 `18년 8월 준공 2단계 `19년 12월 준공

※ 실증연구를 위한 3개 센터(▲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센터 ▲무인항공이동체 연구센터 ▲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센터)는 서울대·민간기업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음. 대·중·소·벤처기업 간 원천기술 공동연구를 위해 추진 예정인 '글로벌 복합연구단지' 사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일조
  - 생산 유발 효과 : 약 1조4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8,929억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업으로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능

1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연구개발 사업 지원

❍ 제안사유

-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는 '스마트시티' 사업임
- `18년 초, 국토부가 세종시와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됨('18.7.10.)
-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내용

- 경기도 시흥시(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일대)에 2022년까지 총 592억원(국비 263억원, 민간257억원, 지자체72억원)을 투입해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지자체 부담 비용 중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 아젠다인 '혁신성장' 일조
- 이재명 도지사 4차 산업 대표 브랜드로 활용 가능
-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선도지역으로 부상

• 경기도 시흥시 R&D 실증도시 주요 제안 내용

- 전담조직 :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
- 리빙랩 운영 : 총23,045명의 시민 참여 예정(환경2,400명, 에너지 15,019명, 생활복지 1,613명, 추가제안 4,013명)
- 허브센터 : 현재 운영중인 시흥 도시정보통합센터내 허브센터 공간 확보 예정
- 사후관리 : 시흥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13. 은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안심하고 상용시키는 "테크 세이프 (Tech-Safe)

❍ 제안사유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기술 검증으로 고품질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가 쉽게 찾고 판단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
- 기술 이전 계약 후 원천기술의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필요
- 상용화가 가능한 경쟁력있는 기술을 이전하여, 기존 기술창업 수요 해결

❍ 내용

- 사업목표

•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한, 기업 눈높이에 맞춘 기술 검색+상용화 지원 시스템 'Tech-Safe' 운용 (경기도 100대 원천기술 선정 등)
• 기술이전 방식을 통한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 20%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
• 추가 매출 300억원(투자대비 10배) 이상 가능하도록 기술 상용화 지원

- 사업규모 및 기간 : 총 30억원(2019~2021) / 해마다 10억원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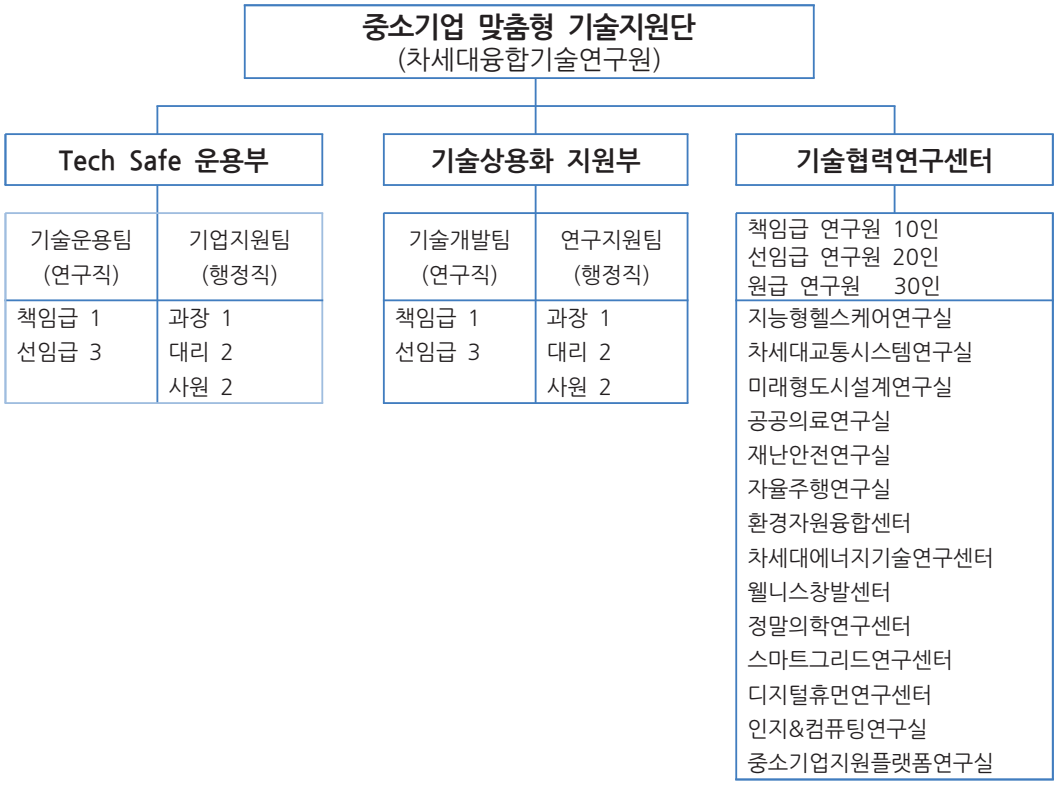
• 'Tech Safe' 시스템 구축
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기술검증으로 고품질 기술을 선별 등록
나) 효율적 정보 활용을 위한 쉽고 찾기 쉬운 검색
• 상용화 단계별 분류 및 기술의 관리
•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약, 신소재, 부품 등의 분야의 경우 추가 공동연구 진행을 통한 기술이전 및 인력 고용
•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술이전의 활성화 촉진

❍ 기대효과

- R&D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의 'Tech-Safe'를 통한 기업 맞춤형 매칭으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 'Tech-Safe'를 통해 외부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

〈참고자료〉

기술지원단 구성 (안)



NO	기술명
1	도민 웰니스를 위한 빅테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서비스
2	인공지능 음향인식 기반 재난신고 분석기술
3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체인식기술
4	환경복합형 미세조류 생산시스템
5	스마트 윈도우용 유무기 복합형 전기변색박막 기술
6	고성능 로봇핸드 및 이동기구를 갖는 양팔로봇 기술
7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멀티 센서 기반 지능형 헬스케어 디바이스
8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9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센서를 활용한 차세대 신호시스템
10	아동심리 분석 및 치료를 위한 음성·그림 분석의 인공지능화 기술
11	식의약 소재 및 기능성 식품
12	유용생물자용 활용 웰빙 건강보조식품 개발기술
13	신약 및 약물전달 디바이스 활용 신약 개발
14	에너지소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반도체 기술
15	생물자원 활용 이산화탄소저감 및 유용물질 생산 개발 기술

※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이미 확보한 상용화가 가능한 원천기술

14. 경기도형 융합기술 R&D 지원 사업 "융합 기술 상용화 사업"

❍ 제안사유

- 경기도 중소기업은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R&D 전문기관인 융기원과 공동 연구 요구 증대
- 융기원의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가 R&D에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성공에 유리
- 기업의 니즈 파악부터 상용화 지원까지의 통합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상용화 가능

❍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 기업
- 지원규모 : 연간 20억원 (과제당 2-3억원, 7-10개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융기원-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기술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상용화 사업 : 검증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단기적인 집중 연구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중장기 전략기술 육성 사업 :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 지원

- 조직 : 기술지원단 구성 (안)에서 운용
- 개발기간 : 1년(중소기업 맞춤형 상용화 사업) 또는 최대 3년(중장기 전략기술 육성 사업)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융기원-도내 기업 간 공동연구로 발굴된 신사업 분야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창출 및 기업 매출 신장
- 사업 참여 인력의 중소기업 직접 고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15. 경기도 초등학생 코딩교육 확대

❍ 제안사유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 내용

- 체인지업캠퍼스(파주·양평) 코딩 교육 확대
  - 대상 : (현행) 초중생 약 1만명 ⇒ (확대) 3만명
  - 방법 : 파주·양평 인근지역 학교 중심 ⇒ 대상 시군 확대
  - 전문 교육기관이 학교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병행
  - 주요 내용 : 창의융합형 사고력 증진을 위한 코딩 프로그램 및 메이커 체험 (일일체험, 1박, 2박, 4박 과정 운영)
- 시군 연계 ‘초등학생 코딩교육’ 사업(신규) 실시
  - 방법 : 시군비 매칭 사업
  - 대상 : 31개 시군 초등학생
  - 교육주관 : 시군 평생교육 부서 ※ 코딩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 추진방법 : 시군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계획수립 후 학교별 코딩 교육 추진 및 지역별 평생학습센터, 대학, 연수시설, 코딩 전문교육기관 등 활용

도	⇔	31개 시군	⇔	시군별 초등학교
道코딩교육 추진계획 수립		- 시군별 자원 활용 교육계획 수립		학교별 코딩 교육 추진

※ 참고사항 : `19년도부터 초등 5,6학년 SW 교과과정(연간 17시간이상) 포함 예정 / 코딩분야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역할 분담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 공학 개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

16. VR·AR 기반 가상 건설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

❍ 제안사유

- VR/AR/MR기술의 건설 분야 접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 건설분야 3차원 정보모델인 BIM 활용이 확산·정착되는 추세로 가상현실 기술과 센서장비 등의 결합으로 신규시장 창출과 기존 프로세스 혁신 추진
  - 싱가포르는 BIM 기반의 'Virtual Singapore'를 추진 중이며, VR·AR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 도시설계, 교통·재난·환경 관리 등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임
- VR/AR 기술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4천억원 투자 예정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핵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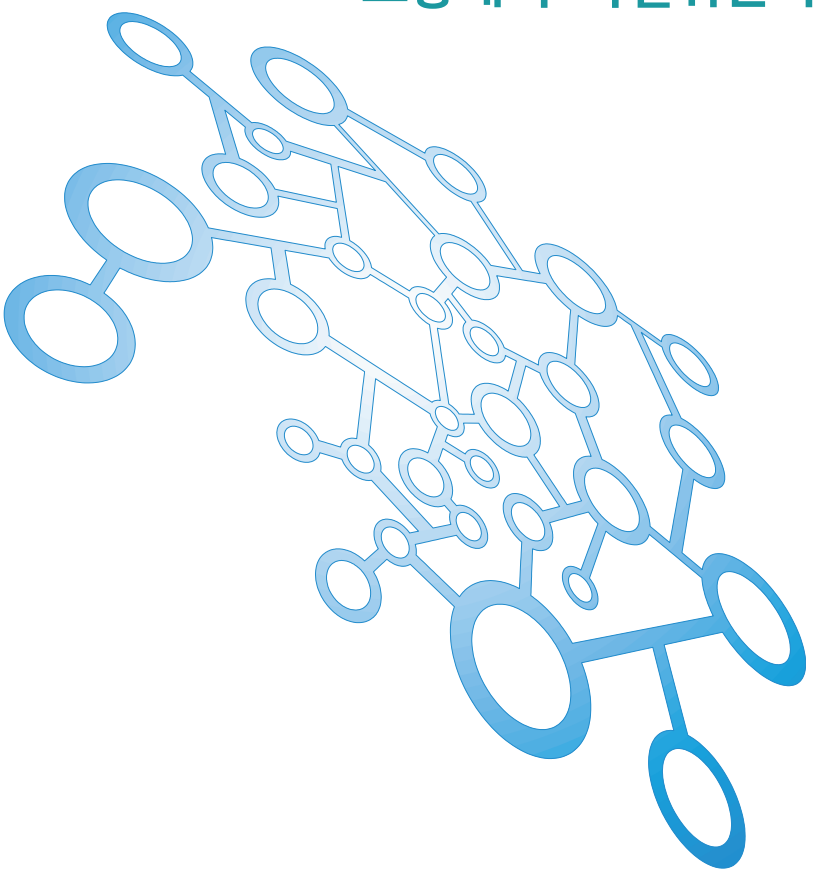
❍ 내용

- VR 기술과 Digital Twin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를 가상화하고 신도시 건설, 구도시 관리 등에 활용하여 신규 산업 창출
- 안전, 교통, 에너지 등의 분야에 적용 가능한 도시 가상화 기술 개발
- 건설 전(全)단계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 가상/증강/복합현실(VR/AR/MR) 기술을 접목하고 문제점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시공, 유지보수가 가능한 가상 건설 기술 개발
-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대형 정부과제 기획 및 참여 추진

❍ 기대효과

- 일산테크노밸리, 경기 방송영상콘텐츠밸리 등에 가상건설 생태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용자, 발주자, 건설사 등을 사이버상에서 연계하여 도면 사전검토, 현장 시공성 검토, 구조물 유지보수 업무의 첨단화 및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 가상건설 기술을 소방, 안전, 교통 등 타 분야로의 확대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김경협
○ 부위원장 : 민경선
○ 간사 : 이용호

2. 활동방향

❍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 목표의 분명한 제시 및 효과적 실현방안 도출

- 선거기간 동안 도민에게 약속한 교통 관련 정책 면밀 검토
- 민선7기 도정에서 실질적 구현이 가능토록 정책 로드맵과 관련 재원조달 계획 구체적 설정
- '이재명 경기도'의 교통정책 철학을 경기도 및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공유

→ 정책의 이해도 제고와 향후 교통정책 추진 동력 확보

❍ 세부활동 방향

- 교통기본권 보장(지역간·계층간 차별 극복)
- 업체(특히 버스기업) 중심보다 이용자(도민) 및 운수종사자에게 직접적 정책 효과가 부여되는 '상생 및 공정체계' 교통생태계 조성
- 'One-City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초연결·초지능의 교통 성장동력 확보 위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문재인 중앙정부와 이재명 지방정부의 정책적 협력 및 공조 강화

• 예1) 중앙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청 추진과 연계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 예2) 남북화해 및 동북아 평화시대 위한 경기 교통축 개발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교통국, 철도국, 건설국(도로 분야), 농정해양국(물류항만 분야), 균형발전기획실(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물류교통기지) (총 5개 실·국)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2일(금)	융기원 2층 세미나룸	14:00~17:00	건설국, 철도국, 교통국 ※농정건설분과 업무보고 동시진행
2차	6월 26일(화)	R&DB센터 7층 교통특위 회의실	10:00~12:00	교통국 일부 공약
			14:00~17:00	교통국, 건설국, 철도국 농정해양국, 균형발전기획실 ※공약내용별로 실무자들과 면담
3차	7월 3일(화)	경기바이오센터 1층 이노카페	11:00~12:40	교통국
			13:20~14:00	철도국
			14:00~14:30	건설국, 농정해양국, 균형발전기획실

(2) 업무보고 내용

-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대한 노선 사유화 및 절차적 위법성 문제 지적
  → 한정면허로의 '원복(元復)' 방안 논의
- 현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 →'새경기 준공영제' 정책 철학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위한 세부 이행 방안 논의
  →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므로 업무 범위 등 역할 문제 토의
  → 중앙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청과의 관계 설정 검토
- 민선7기 교통공약 전반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논의
- 유라시아 철도 연계 물류 중심지 조성의 정책적 고민
- 31개 시·군 교통공약 현황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 요청 사업 검토
- 신규 정책제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검토안 확인 및 추진 방향 도출

❍ 현장방문

(1)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7월 10일(화) 14:00
- 버스운전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현황보고/질의응답

❍ 민원대응

(1)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촉구 민원 관련 건

- 7월 11일(수) 16:00 교통대책특위 회의실
-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서수원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주민 방문 (제안서 전달 받음)

❍ 자체 활동

(1) 핵심과제 선정

- 민선7기 경기도 교통공약 중 세 공약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정책 집행을 위한 이행 방안 중점 검토 및 실행 대안 도출

대주제별 분류 (기존 공약)	1)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2)빠르고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추진·완공 3)유라시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교통 물류기지를 확보

⇩

핵심과제 분류 (특위 선정)	○ 공약 추진의 시급성 및 중요성 등 고려 1)경기교통공사 설립 (공약번호 109-①) 2)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공약번호 110-①) 3)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버스면허발급 (공약번호 110-②)

(2) 공약 조정(병합·이관·신설)

- 26개 세부공약 검토 및 분석 과정 거쳐 내용의 중복성, 추진 방향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특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차원의 '21개 공약 조정안' 도출 (6.27 특위 2차 보고서, 위원장 의결 완료)

※ 최종 공약 확정은 인수위 보고서 최종단계에서 정리될 필요

〈기존 26개 교통 관련 세부공약-특위 21개 공약조정안 비교표〉

	기존 26개 세부공약		교통대책특별위원회 21개 공약 조정안
1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1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2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	2	경기夜 버스 확대
3	출퇴근 교통수요에 최적화된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기획 및 확대 운영	3	도내 차별 없는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4	느림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광역급행을 확대		
5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4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6	벽지노선에 위탁버스 운영	5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7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복지택시 확대		
8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증대	6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증대
9	경기교통공사 설립	7	경기교통공사 설립
10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구성·운영	8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 구성·운영
11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립 협력	9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신속 추진
12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10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13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버스면허 발급	11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14	배차대수, 간격, 고장률 등에 대한 '버스서비스표준' 제정	12	배차대수, 간격, 고장률 등에 대한 '버스서비스 표준' 제정
15	버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	13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운수종사자 직접 지원
16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공 지원	14	빠르고 안전한 경기도 도로 네트워크 조기 구축
17	도내 유료 고속화도록의 명절 무료통행 실시		
18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9	GTX-A 노선 건설관련 행정절차 지원	1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개통 지원
20	GTX-B·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적극적 의견 개진 및 지원		
21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적극 추진	16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적극 추진
22	예비타당성 진행 중인 GTX-C노선(금정-의정부) 노선 연장 건의	1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개통 지원

23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지원	18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24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19	평택항의 해양운송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25	환황해경제권과 서해안경협벨트 구축 지원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 기능 확보(경제실/균형발전기획실로 공약 이관)	20	유라시아 철도 연계 물류중심지 조성(신설)
26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물류교통기지의 활성화 촉진	21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설치로 물류교통 활성화

(3) 특위 전체회의 운영

- 목 적 : 특위 조직력 강화·신속한 의사결정·업무 집중력 향상
- 운 영 : 매주 2회, 총 7차례 운영(6.20 ~ 7.16)

〈특위 전체회의 운영 진행과정〉

구분	일시	주요 회의 안건
1차	6.20(수)	- 상견례/ 특위 활동 목적 및 운영방향 공유/ 회의체계 확정/ - 핵심과제 선정(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 경기교통공사 설립)
2차	6.23(토)	- 공약별 위원 배정 완료 / 2주차 활동계획 확정
3차	6.27(수)	- 1차 공약 검토보고서, 위원장 보고 - 핵심과제, 중점 논의
4차	6.29(금)	-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 검토안 확정 - 민선6기 교통/철도/건설 등 교통분야 사업 전반적 검토 - 추경 반영 및 중지 사업 정리 - 특위 제안 사업 및 민원 사업 검토
5차	7.2(월)	- 2차 공약 검토보고서, 위원장 보고 - 핵심과제 대한 특위 대안 및 입장 확정 - 특위 제안 사업 및 민원 사업 2차 검토
6차	7.5(목)	- 3차 공약 검토 및 민원 사업 검토보고서, 위원장 보고 - 핵심과제 대한 특위 입장 최종 확정 - 인수위 1차 보고서 작성 관련 논의
7차	7.16(월)	- 특위 최종 보고서, 위원장 보고 및 승인

(4) 보도자료 배포

① 1차 (6월27일)

- '한정면허로의 원상복구' 관련 도 집행부의 개선의지 결여 지적

② 2차 (7월10일)

- 핵심의제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특위 최종 입장 발표

※ 공보실 보도자료 목록 및 내용 참조

(5) 도내 31개 시·군 교통 공약 사업 검토보고

(6) 경기지역 국회의원 요청사업 검토보고

(7) 신규 정책제안

-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 수요응답형 셔틀(Dial-a-Ride) 도입 방안
- 청소년/어린이 버스 이용요금 혜택 지원 방안
-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제 도입 방안
-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방안
- 경기도 택시 노동 복지회관 건립 방안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특위 선정 핵심과제 및 사업 중지 또는 축소 검토안 중심으로)

(1) 특위선정 핵심과제 관련

가. 주요 내용

	주요 현안
1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사유화 저지 및 노선 공공성 강화)
2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공공성 강화 버스생태계로의 전환)
3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철도 통합운영 전담기구 설립)

나. 주요 논의 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사항

핵심과제 1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사유화 저지 및 노선 공공성 강화)

[1] 공약개요

❍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주요 추진경과

- `18. 1월 : 한정면허 기간 갱신 신청 불허 (道→3개 운송사)
- `18. 2월 :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18. 3월 : 사업자 선정 통보 (경기고속, 태화상운, 용남고속)
- `18. 5월 : 사업계획 변경인가 (경기고속, 태화상운, 용남고속)
- `18. 6월 : ㈜용남공항리무진(신설법인) 신규면허 발급
- `18. 6월 ~ 현재 : 경기공항리무진 차량임대 거부로 전세버스 대체 운행

○ 문제점

- 사업범위와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성급한 요금인하 정책을 내세워 영구적 성격의 시외면허로 전환한 정책적 하자

  ※ 한정면허는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 또는 갱신 가능

-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시외버스 신규면허 등 인·면허 절차에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상의 법률적 하자
- 원칙이 결여된 버스행정과 공항버스 운송업계의 무질서 등으로 공항버스 파행운행 초래

❍ 정책 목표

○ 공항버스의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로 도민 편의 증진

○ 요금인하, 심야 운행(막차시간 연장) 등 공항버스 서비스 고도화

[2] 기대효과

○ 공항버스의 공공성 강화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

○ 확고한 원칙과 공정성을 담보한 행정처분으로 운송질서 확립

[3] 공약사업 추진내용

○ 시외면허 취소

- 시외면허로 전환된 수원권(용남공항리무진), 안산권(태화상운), 성남·경기북부권(경기고속)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취소
- 시외면허 전환 과정상의 정책적·법률적 하자에 따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조치로서 시외면허 취소 추진
- 행정처분이 귀책사유로 적용될 때 면허권자를 상대로 한 운송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및 이에 대한 대처

○ 한정면허 복원

- 한정면허 갱신불허 및 시외면허 추진 과정에서 시외면허 전환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면허권자의 재량권으로 검토
- 한정면허 복원 시에도 앞의 추진 과정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면허권자의 재량권(국토부 회신)에 해당

○ 한정면허 업체 선정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한정면허 업체 선정

[4] 자체평가

–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 가능, 한정면허 사업자 신규 공모

핵심과제 2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공공성 강화 버스생태계로의 전환)

[1] 공약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방식) 시행(2018. 4월)

-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55개 노선) 도입

○ 문제점

- 현재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비롯하여 양도·상속으로 그 권리가 지속됨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의 무조건적인 수익 보장 제도로서, 경기도민의 증가 추세에 따라 광역버스를 지속 확충해야 하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재정 증가로 정책의 지속성 결여

❍ 정책 목표

○ 노선입찰제 도입 및 한정면허 발급을 통한 버스운영체계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 버스 서비스 표준 제정·시행을 통한 버스 서비스 개선

○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인식 제고

[2] 기대효과

○ 운송업체 의지에 의존한 버스행정 근절 및 운송업체간 경쟁체제 형성

○ 노선입찰제 대상의 비수익노선의 수익노선 전환 시 재정수익 발생으로 준공영제 재원확보 용이

○ 시외버스 또는 광역버스 대상의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안착 시 향후 일반형 시내버스로 확대 등 파급효과 극대화

[3] 공약사업 추진내용

○ 현 준공영제 시행 중지 통보 → 1년 후 노선입찰제 중심의'새경기 준공영제'도입

- 「경기도 광역버스 중공영제 시행 협약서(2017.12.20.)」 제7조(효력 발생과 갱신)에 따라 "일방이 협약 내용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통보" 가능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8.1.11.)」제20조(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지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준공영제 시행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

- 도의회, 시군(시군의회)의 협조,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충족 필요
- 경기교통공사 설립,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조직 구성, 예산확보 등 필요(유예기간 1년 내 추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

제7조(효력발생과 갱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중 일방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준공영제 중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도 및 시·군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체가 제16조에 따른 책무를 여러 차례 위반하는 경우
3. 사·군 및 운송사업자, 업체협의체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준공영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
5.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 노선입찰제와 버스 서비스 표준을 근간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 연구용역(추경) 추진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도 버스 서비스 표준 조례」 제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
- 시·군 협의를 통한 도와 시·군 간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 마련
- 시외버스 또는 광역버스 대상 비수익 및 신규노선 노선입찰제 시행(2019년)
- 경기도 버스 서비스 표준 조례에 따른 수익노선 서비스 질 개선(2019년)
- 일반형 시내버스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시행 확대(2021년)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경기도 노·사·정·시민 위원회」 구성을 통한 표준 인건비 산정, 지원방안 등에 있어 사회적 합의 선행
- 시내버스 전 업종(직좌형,좌석형,일반형)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존 및 도내 지역 간,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임금격차 단계적 해소 (표준인건비 제도 도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완료 후, 조례로 수당 지원대상, 방법, 기준 등 구체화
- '운전자 임금 인상 조건부'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 매년 2,000명 운수종사자 양성(`18년~'22년 : 8,800명)
-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교통안전공단 및 버스업체 연수교육
- 교통연수원을 버스운전직 양성교육의 허브로 재정립
-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한 운수종사자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개정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시기>

<table>
<tr><th rowspan="2">사 업 장
규 모</th><th colspan="4">연도별 시행시기</th></tr>
<tr><th>2018. 7. 1
←↓→</th><th>2019. 7. 1
←↓→</th><th>2020. 7. 1
←↓→</th><th>2021. 7. 1
←↓→</th></tr>
<tr><td>300인 이상</td><td rowspan="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td><td>1주
68시간</td><td colspan="2">1주
52시간</td><td></td></tr>
<tr><td>50인 이상
300인 미만</td><td colspan="2">1주
68시간</td><td colspan="2">1주
52시간</td></tr>
<tr><td>5인 이상
50인 미만</td><td colspan="3">1주
68시간</td><td>1주
52시간</td></tr>
</table>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19.7월부터 전면적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 전환 불가피

○ 1일 2교대제 전환 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8,832명 부족(급여 26% 감소 예상)

○ 인접 광역시 대비 임금 수준이 낮아 운수종사자 이직 심화

[4] 자체평가

-현 준공영제 중지, 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핵심과제 3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철도 통합운영 전담기구 설립)

[1] 공약개요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실현

○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행정 혁신

- 빠르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추진·완공
- 자가용보다 더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혁명 추진

❍ 현 황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의 필요성 증대

○ 철도운영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광역철도 연장선 지자체 건설·운영 사업 증가
- 도내 시군 도시철도(경전철·트램) 건설·운영 사업 증가

❍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필요성

○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입찰제의 운영 주체 필요

○ 철도운영조직이 없는 시·군 특성상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철도 운영 전문성을 갖춘 통합 운영기관 필요

○ 각 시·군이 복지교통수단 제공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 및 이용자 불편에 대한 통합 운영의 필요성

❍ 정책 목표

○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시설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립

- '새경기 준공영제'의 운영주체로서 기능하여 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버스 서비스 제공
-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안정성, 일관성, 지속성 확보

-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복지교통서비스 총괄 관리 • 운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공영버스, 복지택시, 수요응답형 셔틀 등 복지교통수단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2] 기대효과

○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간의 노선 환수 및 노선입찰제 운영을 통한 버스 노선의 공공성 및 버스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버스 서비스의 비용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및 버스업체의 재정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

○ 도내 철도의 직접 운영을 통한 재정지출 감소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적 운영에 따른 서비스 향상 제고

○ 복지교통수단의 직접 운영을 통해 시·군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지역 간 / 지역 내 형평성 제고를 통한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

[3] 사업 추진내용

○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운영

- 민영제와 노선입찰제가 서로 상생하는 버스 서비스 운영

○ 경기도 대중교통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노선입찰제를 위한 버스 서비스표준 공표, 인건비 등 예정가격 결정

○ 철도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군의 철도 운영협상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내 철도에 대한 역무 • 기술 • 관제 • 승무 • 차량 분야에 대한 수탁 운영

- 철도 운영 협상 지원 :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 수탁 운영 : 별내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천구간, 도봉산-옥정선, 하남선, 진접선 등

○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수단의 통합 운영

- 벽지노선 공영버스 및 복지택시, 수요응답형 셔틀 등의 통합 운영

○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확대

- 버스, 광역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운영
- 버스전용차로, 환승센터, 정류소 등 교통시설 계획 및 운영 총괄

[4] 자체평가

-대중교통 통합운영 위한 경기교통공사, 조속한 추진단 구성 필요

(2) 사업 중지 또는 축소 검토안

	사업명	내 용	
1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교통국)	기 추진 경과	- 시내/마을버스 기사 대상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해 예산 확보 - 1인당 월 5만원 - 시내버스 운전자 17,535명/ 마을버스 운전자 3,719명
		중지/축소 사유	- 1인당 월 5만원 지원은 근복전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 - 법적 지원근거 부재로 사업 추진 정당성 미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함진규 의원) 됐으나 개정여부 불확실 - 근로시간 단축 대응 등 종합대책 일환으로 사업 재검토 필요
		검토 결과	- 사업 중지(`18년 예산액 : 990백만원)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교통국)	기 추진 경과	-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출근(06:00~09:00) 이용객에 한해 시내/시외버스에서 마스크 지급 - 마스크 375만매(12,500대 x 100매 x 3일) - 마스크 버스업체 배송 및 배포 준비 완료 - 추경에 40억원 추가확보 필요 검토 - 비상저감조치 발령예상일 수 7일 기준, 4일분(500만매)
		중지/축소 사유	- 일부 대중교통 이용객에 한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 - 정책 효과 미비 및 형평성 문제 대두
		검토 결과	- 사업중지 - 추경 요구 예산 전액삭감 (4000백만원)
3	멀티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교통국)	기 추진 경과	- 편의·휴게시설 설치, 대기공간 확보, 승차공간 분리 등 정류소 정비 - 도내 주요 거점별 환승정류소, 연도별 10개소 내외 개선 - 최근 3년 10개시, 37개소 구축
		중지/축소 사유	- 일부 시만 참여, 사업효과 제한적 - 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은 시 자체 재원으로 가능
		검토 결과	- 시·군비 확보에 따라 도정 신뢰성 고려해 `18년까지만 추진
4	법인택시 운수종사	기 추진 경과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해 예산 확보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 `18.6.29

	사업명	내 용	
	자 처우 개선 (교통국)	중지/축소 사유	- 1인당 월 5만원 지원은 근본적 처우 개선에 의문 - 타 운수업종(버스)과의 형평서 고려한 종합대책 수립 후 추진 - 전체 운수업종 종사자에 대한 균형적 대책 필요
		검토 결과	- 사업 중지
5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지원 (교통국)	기 추진 경과	- 11개 GG콜센터(16개 시·군) - 도비 100% 사업
		중지/축소 사유	- 카카오택시의 편리성 및 이용확대로 최근 GG콜택시 호출 실적 지속적 감소 추세, 재검토 필요 - `16년 월 111,949건 → `17년 81,946건
		검토 결과	- 사업 중지 (`18년 예산액 : 65백만원)

❍ 국별 공약사업 업무보고 요약

(1) 교통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07-①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109-①	경기교통공사 설립
107-②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	109-②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구성·운영
107-③	출퇴근 교통수요에 최적화된 정기 이용권 버스 노선 기획 및 확대 운영	109-③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립 협력
107-④	느림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광역 급행을 확대	110-①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107-⑤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	110-②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버스면허 발급
108-①	벽지노선에 위탁 버스 운영	110-③	배차대수, 간격, 고장률 등에 대한 「버스 서비스표준」 제정
108-②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복지택시 확대	110-④	버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
108-③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증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 경기교통공사 설립

(2) 철도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12-①	① GTX-A 노선 건설관련 행정절차 지원	113-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GTX-C 노선(금정-의정부) 노선 연장 건의
112-②	② GTX-B·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지원	114-①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지원
112-③	③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적극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철도연계 물류중심지 조성과 관련 경기도 방안 마련 우선 고려

(3) 건설국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11-①	①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공 지원	113-③	③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11-②	② 도내 유료 고속화도로의 명절 무료통행 실시	114-①	④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지원

나. 주요 논의 사항

- 고속도로 통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결 방안을 최우선 고려 추진

(4) 농정해양국·균형발전기획관실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114-②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115-②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물류 교통기지의 활성화 촉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평택항의 해양운송 거점 기능 강화방안
-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교통기지 활성화 방안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107-①, 교통국)

○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 (107-②, 교통국)

○ 출퇴근 교통수요에 최적화된 정기이용권버스 노선기획 및 확대운영 (107-③, 교통국)

○ 느림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광역 급행을 확대(107-④, 교통국)

○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107-⑤, 교통국)

○ 벽지노선에 위탁버스 운영 (108-①, 교통국)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복지택시 확대 (108-②, 교통국)

○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증대 (108-③, 교통국)

○ 경기교통공사 설립 (109-①, 교통국)

○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구성·운영 (109-②, 교통국)

○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립 협력 (109-③, 교통국)

○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110-①, 교통국)

○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버스면허 발급 (110-②, 교통국)

○ 배차대수, 간격, 고장률 등에 대한 '버스 서비스표준' 제정 (110-③, 교통국)

○ 버스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 (110-④, 교통국)

○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공 지원 (111-①, 건설국)

○ 도내 유료 고속화도록의 명절 무료통행 실시 (111-②, 건설국)

○ 중장기 도로건설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11-③, 건설국)
○ GTX-A 노선 건설관련 행정절차 지원 (112-①, 건설국)
○ GTX-B·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적극적 의견 개진 및 지원 (112-②, 철도국)
○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적극 추진(112-③, 철도국)
○ 예비타당성 진행 중인 GTX-C 노선(금정-의정부) 노선 연장 건의(113-①, 철도국)
○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지원(114-①, 철도국·건설국)
○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114-②, 농정해양국)
○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물류교통기지의 활성화 촉진 (115-②, 균형발전기획실)

6. 신규 정책제안

1. 수요응답형 셔틀(Dial-a-Ride) 도입 검토

❍ 제안의 배경 및 기대효과

○ 현재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및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군이 벽지노선에 공영버스를 위탁 운영하거나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공공형 택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복지교통수단의 운영이 시·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 경계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단일 통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 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수요응답형 셔틀(Dial-a-Ride)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종점이 유사한 다수의 통행에 대해서 한 대의 셔틀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수요응답형 셔틀 서비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관련법령 주요 내용 (참고)

- (사업종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대상)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와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함
- (요 건) 시군에서 사업계획 및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한정면허 대상, 사업자 공개 모집 등
- (필수사업내용) 운영노선(운행구역), 운행차종·대수·운행방법,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등

❍ 문제점

○ 면허권자인 시·군 참여 방안,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도시지역과 달리 수요응답형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앱(APP) 활용보다는 콜센터 운영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운영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 불가피 (소요재원/지원대책 검토 필요)

-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지원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벽지노선, 복지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등과 중복이 예상되므로, 경기교통공사 통합 운영을 고려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예) 복지교통수단 통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 대 안

○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단기 정책연구과제(GRI) 수행 후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사업 추진 부서별도 지정하여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필요

- 경기교통공사 설립 준비조직에 할당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이후 업무 이관 필요

○ 따복·공공형 택시는 기존 택시를 활용하여 시행됨에 따라 택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운영상 한계가 존재함

- 요금 문제, 합승 불가, 택시 총량 등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에 위임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권한을 환수하고 도지사가 경기교통공사에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

- 택시 총량 제약을 받지 않고 한정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택시가 아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전환하여 운영
- 초기 이원적 운영 (시·군 위탁, 공사 운영) 후 점차적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로만 사업 추진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 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생략)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생략)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어린이 버스 이용요금 혜택 지원

❍ 제안의 배경 및 기대효과

○ 2017년 기준 경기도내 청소년의 버스 이용 건수는 약 1억 1,665만 건, 어린이의 버스 이용건수는 약 1,094만 건으로 전체 경기도 버스 이용 건수의 약 9.5%를 차지함

- 이용요금 기준 : 청소년은 약 947억원, 어린이는 약 67억원,
  경기도내 전체 버스 이용 요금의 약 0.7%

○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도농복합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도보권 밖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서울시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를 고려할 때,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이용 요금 혜택 지원은 당위성을 가짐

- 청소년, 어린이의 통학통행은 성인들에 비해 단거리 통행이 대부분이고, 주간에 추가적인 통행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요금 인하에 따른 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대한 염려가 적기 때문에 정책 실현가능성 제고 가능

○ 경기도는 2017년 청소년 요금 할인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 추진하여 현재 시행중임

- 시내버스 : 2017. 5. 27 시행, 마을버스 : 2017. 7. 29 시행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에서 징수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기준, 경기도 전체 징수액이 약 500억원으로 이를 직접 활용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이 귀속되는 교통 특별회계를 활용한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문제점

○ 교통유발부담금은 21개 시에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자체 설치하여 운용하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음

-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49조 제 3항, 제 4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에서만 징수되기 때문에 미부과 10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대두 가능성이 있음

○ 관련기관(부서) 의견

- (국토교통부)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버스요금 할인 지원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버스정책과) 버스이용요금 할인 지원의 업체의 운임결손분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영개선 사업과 상이할 수 있음
-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부과되고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시·군 참여 독려시 위법 논란 내재

❍ 대 안

○ 교통유발 부담금의 직접 활용이 어려울 경우, 각 시·군별로 운용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시·군 조례 개선을 통한 지원 가능 여부 검토

○ 전액 지원에 대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통학기간 (방학 제외) 중 등하교 시간대(예. 등교 : 07~09시, 하교 : 15~17시, 22~23시)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시·군 특별회계와 도 재정의 매칭에 대한 검토 필요

○ 교통유발 부담금 활용 대중교통 요금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 유권해석 질의(국토부) 후 불가시, 도촉법 개정(버스이용요금 지원 용도 추가) 가능성 검토

3.GB지역 내 공영 차고지(사업용 대형버스) 확보방안 검토

❍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경기도 내 공영차고지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따른 불법주차로 교통혼잡, 교통사고 위험노출 등 안전문제가 발생 가능

○ 그러나 공영 차고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바, 그 대안으로 GB지역 내 공영 차고지 확보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전세버스 등) 주차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문제점

○ 현재 'GB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시, 사업용 대형버스 가능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동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③ 그 밖의 자가 설치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며, 전세버스만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2호파목)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공동 차고지 : 전세버스, 화물차량만 허용

○ 현행법상 GB 지역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는 설치 불가

❍ 검토내용

○ GB지역 내에서 사업용 대형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의 공영 차고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시"에는 가능함

○ 「도시군계획시설」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세버스만 가능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려면 법률 개정 필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호

※ 개정 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동차고지 범위에 '노선 여객용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

❍ 실행대안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지속 건의

-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내 공동차고지 범위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가 포함되도록 개정 지속 건의

※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칙 개정에 공감, `18년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제시 중임

○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서 공영 차고지 설치·임대시 사업용 대형버스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설치 권고 및 설치시 도비 지원 검토

❍ 그 밖의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방안

○ 제안배경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GB지역 등으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유도

○ 검토내용 및 대안

- [단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확대 지속 추진
- [중장기] GB지역 내 등으로 설치 유도
- 과다한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유지 또는 보상비가 저렴한 GB지역 내 등으로 설치 유도

※ GB지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GB관리계획 수립' 필요

○ 재원 조달 방안 : 국비(70%) 및 지방비(30%)

참고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공동차고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1조제4황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다. 〈신 설〉	제31조(자동차정류장) ----------. 1. ~ 3. (현행과 같음) 4. (좌 동)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참고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1] 제2호 파목 나)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자동차정류장)

4. 공동차고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4.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검토

❍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에 기존 학교 운동장(공공용지)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 문제점

○ 비용문제,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한 협의 지연

⇒ 타당성 검토 및 학교장·학부모 협의를 통한 지속 설득 필요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한 현장실사 및 실무회의 필요

❍ 검토내용

○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지침 및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임

○ 시·군-교육청-학교장 협의 완료 후, 국·도비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신청 시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국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보조율 국비 50% : 시·군비 50% (도비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일반회계), 보조율 도비 30% : 시·군비 70%

○ 부천(신흥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협약체결 사례 존재

⇒ **체육관 조성과 병행 추진하여 협약체결 완료** (2016. 9.)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협약체결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길주로 391번길 71	체육관 조성과 병행
시설규모	지하 1층 / 168면	
예상사업비	금68억	
사업기간	약10개월	
비 고	협약체결	

❍ 실행대안

○ 학교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체육관 조성) 재정 지원 시,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함

○ 위와 관련, 조례 제정 필요

○ 교육청 협의를 통해 시·군-교육청-학교장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 50% : 시군비 50% 매칭 사업으로 재원조달 체계 구축

5.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 제안배경

○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 설치 및 재단법인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5조에 의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단체(연합회, 시·도 조합)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기금관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연합회의 경우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17.9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이 되었으나, 시·도 조합의 경우 기금 조성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 사례가 없는 실정임

※ 「택시발전법」 상의 재원 조달 방안

(1) 「택시발전법」 상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약 80억원)

❍ 검토내용

○ 현 법령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단체(연합회, 시·도 조합)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 단체의 출연금 회피로 시·도 조합의 경우 재원 확보 난망

○ 한편, 국회에서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중임

❍ 실행대안

○ 단기적으로는 기 설립된 연합회의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17.9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이 각 시·도의 운수종사자 복지 정책을 적절히 배분하여 집행토록 협의

○ 동시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노력 병행

참고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2

발의연월일 : 2017. 1. 13.
발 의 자 : 문진국 · 장석춘 · 김종대 김석기 · 황주홍 · 성일종 신상진 · 주광덕 · 김현아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안 제7조).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관련 법령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2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 시·도지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관련 법령 3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6.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제 도입

❍ 제안배경

○ 택시 이용객 증가 유인책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할인제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택시-대중교통(버스, 철도)간 환승할인 제도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 경기도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서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는 논란의 소지도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검토내용

○ 택시-대중교통 환승할인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할인 방법), 소요재원, 경기도민의 편익 및 경제성 분석 등 필요

○ 택시-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에 있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0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재정 지원)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생 략)	4 . ---------- 환승할인·시설---------- 5. (현행과 같음)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재정지원사업)에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 삽입 필요

❍ 실행대안

○ 택시-대중교통 환승할인제의 최적 정책대안(할인 방법), 소요 재원, 경기도민의 편익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연구 후 추진 계획 수립

7. 경기도 택시 노동 복지회관 건립

❍ 제안배경

○ 택시 운수종사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부터 수원시·고양시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립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교통복지회관 추진이 불가하여 대안으로 규모를 축소한 택시 복지센터를 권역별로 추진 중에 있음

- `17.4.13. 수립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 및 시행 계획(5개년)에 '20년까지 복지센터 4개소(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권역별 1개소) 건립 목표 제시

구 분		사업소 위치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총 사업비	설계비	건축비			추가 건축비	
					계	도비	시군비		
계		4개소	6,877	351	5,666	2,833	2,833	860	
`19년 완료	북부센터(양주)	삼숭동 640-31	1,400	44	1,356	678	678		실시설계중
	동부센터(여주)	천송동 300-4외3	2,057	97	1,400	700	700	560	실시설계중
'20년 완료	남부센터(용인)	역북동 551-4	1,920	120	1,500	750	750	300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
	서부센터(부천)	상동 21	1,500	90	1,410	705	705		부지선정 협의(협약체결) 중

※ 기타 용지비 및 추가 건축비(시설 부대비 포함) 등은 시·군 부담

❍ 검토내용

○ 운수업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택시 업종 외 버스, 화물 분야의 운수종사자(가족 포함)를 포함한 복지시설 검토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서울시 교통회관, 수원시 녹색교통복지회관 등과 같

이 운수사업의 모든 운수종사자(택시, 버스, 화물 등)를 위한 종합 복지회관(휴식·복지·교육·의료·예식·체육 시설 등) 건립 검토

❍ 실행대안

○ 경기도 내 시·군, 운수업종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교통복지회관 건립 방안 검토

참고4 택시쉼터 · 택시 복지센터 · 복지회관 구분

구 분	택시 쉼터	택시 복지센터	복지회관
일반 정의	운수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및 과로 해소를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택시쉼터 보다 한 단계 위의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로 휴식+교육, 차량정비 등을 할 수 있는 곳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종합시설로 휴식+복지+교육+의료+예식 시설, 수영장 등을 모은 건축물
주요 시설	휴게실, 화장실, 매점 등	휴게실, 화장실, 매점, 교육 및 회의실, 체육시설, 차량정비 등	휴게실, 화장실, 매점, 교육 및 회의실, 체육시설, 건강시설, 수영장, 예식장 등
경기도 설치 (계획)	• 2016년 이전 : 8개소(5개시) • 2016년 : 6개소(6개시) • 2017년 : 7개소(6개시) • 2018년 : 3개소(수원,화성,가평)	• 2017년 : 2개소(양주, 여주) • 2018년 : 2개소(부천, 용인)	• 수원시 : 1개소 (2018. 12월 준공예정)

※ 교통복지회관은 운수사업 모든 운수종사자(택시, 버스, 화물 등)를 위한 종합 복지회관(휴식+복지+교육+의료+예식 시설, 수영장 등) 개념

- 설치 사례 : 수원시 녹색교통복지회관,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서울시 교통회관

관련 법령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택시발전법)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법령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

6.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 사업 [전문개정 2016.07.19.]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법령 3

근로복지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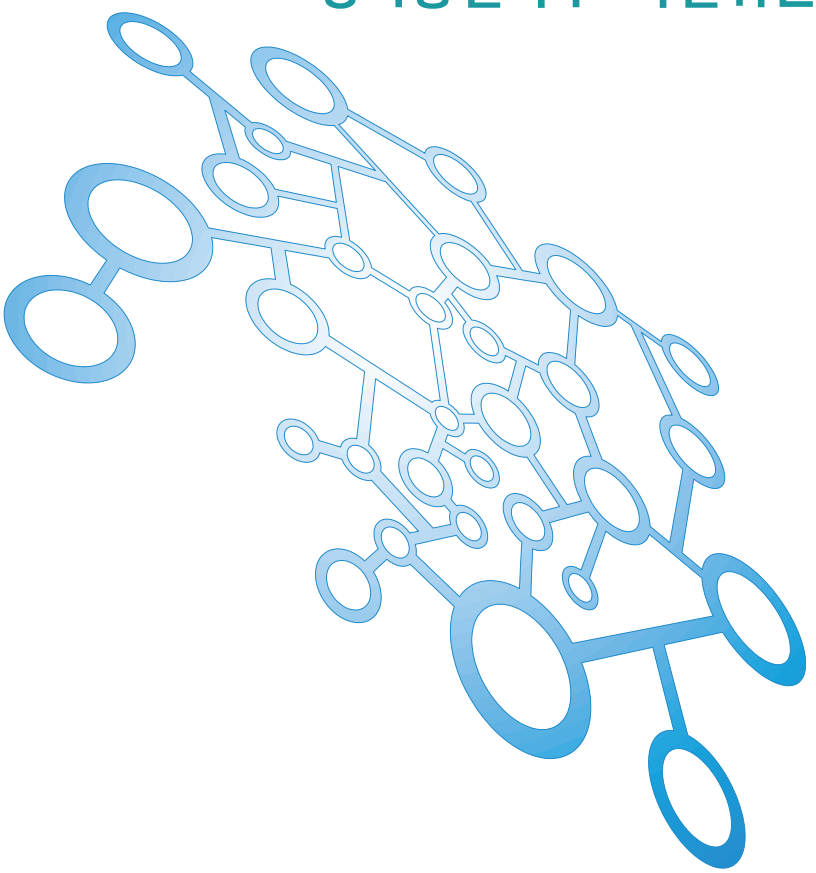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평화통일특구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박정
○ 부위원장 : 이재준
○ 기획단장 : 임근재
○ 간사 : 박덕종

2. 활동방향

❍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경기도

-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추진 적극 뒷받침
-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적극 추진 또는 지원
- 지방정부를 통한 교류의 분권화 추진

❍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경기도

-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를 활용한 경제발전 노력 부응
-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경제교류 추진
- 남북경제의 연결성 강화와 경제교류협력지대 가능성 모색

❍ 교류협력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는 경기도

- 경의선과 경원선 연결 추진 지원
- 남과 북의 고속도로와 도로 연결 추진 지원
- 한강하구의 뱃길 연결 모색

❍ 친환경 생태보전에 앞장서는 경기도

- DMZ 생태를 보전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 모색
- DMZ 생태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휴양공간 마련
-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발전 모색

❍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경기도

- 규제합리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군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

-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모색
-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교류협력과 지역발전 추진

❍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에 앞장서는 경기도

- 재정투입 대비 성과가 높은 정책발굴에 역점
-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과가 경기도민에 돌아오는 사업추진
- 지속가능하고 더 확대되는 교류협력 추진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균형발전기획실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6일(화)	R&D센타 2층 대회의실	14:00~16:30	균형발전기획실
2차	7월 3일(화)	R&D센타 2층 대회의실	11:00~12:30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규제개혁추진단

(2) 업무보고 내용

- 통일경제특구법안 통과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 마련
-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경기도가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 준비 필요
- 신경제 지도가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개성공단과의 차별화된 경제특구 방향성 제시 필요
-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토탈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 북부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SOC 투자 필요(국도 1호선과 3호선 사이 도로 증설 등)
- 민선7기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운영기조의 변화 필요. 인도적 차원의 일방적인 사업은 지양. 도민이 직접 체감·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전환. 사업에 따른 경기도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

❍ 간담회

(1) 간담회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6월 27일(수)	R&D센타 2층 대회의실	14:00~16:30	균형발전기획실
7월 5일(목)	R&D센타 708호 회의실	15:00~17:00	균형발전기획실

(2) 간담회 내용

- 통일경제특구의 범위, 성격,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필요
- 통일경제특구는 물류, 생산, 교육, 대북진출의 인큐베이팅 시스템 등 복합적 기능을 포함해야 함
- 경기북부 도로의 횡적 연결을 강화한 마스터플랜 필요
-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관련 임기내 구체적 목표 제시 필요
- 경의선 일대 경제·산업·물류벨트 조성 관련 통일경제특구 외 내용 부족
- DMZ 활용 모색 관련 장단반도-문산습지-초평도 생태탐방로 당장 가능하며 파주권역, 연천권역, 김포해상지구 구상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조와 원칙 수립.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완성과 대북정책을 적극 지원, 경기도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사업, 접경지를 포함한 경기도에 맞는 방향 등 정립 필요

- 남북교류협기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기금 운영 원칙과 방향 검토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성수학여행과 파주-개성 마라톤을 단기 핵심사업으로 검토

❍ 세미나

(1) 세미나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7월 4일(수)	R&D센타 2층 대회의실	10:00~12:30	일반 공개 특위 위원, 외부 전문가

(2) 세미나 내용

○ 열린 접경지역으로 미래 긍정, 부정 변화에 대한 동시 대비 필요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에서 DMZ를 포함 접경지역 관리와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경기도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다가올 긍정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남북 주민들 간의 문화충격 및 새로운 갈등,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 변화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

○ 통일경제특구

-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남한의 우선적 선점이 필요하며,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통일 남북경협 지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중앙 행정적 기구가 통일경제특구내에 설립되어야 함
- 통일경제특구법이 현재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 그리고 '남북특별자치시'와 같은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후에 관련 내용 반영 작업이 필요함

○ 통일경제특구, 접경지역 정책 고려사항

- 과거 경기도 정책 경험을 반추해 볼 때, 북한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가 접경지역 보존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북한의 변화, 경제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산업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분권형 남북교류의 프레임 변화를 준비하고 북한이 경기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

❍ 현장답사

(1) 현장답사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7월 10일(화)	파주 민통선 지역 일대	09:00~18:00	특위 위원

(2) 현장답사 내용

○ 장단반도-문산습지-초평도 생태 탐방로 답사를 통한 이용가능성 확인

○ 캠프그리브스 활용 방안

○ 주요 DMZ 공약 관련 주요 장소 답사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통일경제특구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

○ 국회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움직임에 맞추어 보조를 맞춘 것은 평가할 만한 사례임. 그러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북부 시·군과의 소통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 통일경제특구와 연계되는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마련이 미흡한 것도 아쉬움

○ 경의권과 경원권, 한강하구권(김포,고양)의 통일경제특구 대상지역과 그 배후지역(고양,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점은 향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임. 통일경제특구를 경기 북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또한 통일경제특구를 경기 북부 SOC 투자 확대로 유도해야 함

○ 통일경제특구가 자족기능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SOC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종적, 횡적 연계성이 부족한 경기북부 SOC는 통일경제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음. 간선도로망, 철도, 전철의 국가전략적인 집중투자 유도를 위한 대책 수립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 있음. 경기북부는 군사대치로 인한 투자 위험요소만 제거한다면 서울과 인접하여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남북교류협력사업

○ 인도지원 사업 중심

- 개발협력 중심으로 전환된 북한의 변화에 뒤쳐짐
- 북한 2009년 이후 국가(지자체) 단위의 인도지원 거부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만 허용 그러나, 경기도는 NGO를 통해 인도지원 유지

○ 공동이익 창출이 아닌 일방적 지원 중심

- 남북공동 방역 사업을 제외하고, 진행된 모든 사업은 일방적인 지원
- 임진강 홍수 방지 등 남북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선 진척이 없거나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

○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 부족

- 말라리아 방역, 양묘장 현대화 등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거나 함께하는 사업 위주
- 경기도만이 할 수 있고 도민이 경기도의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특화된 사업이 없음

○ 도민 체감사업 전무
- 도민이 직접 체험하거나 참여하는 남북교류사업 전무
- 도내 개성식 한옥마을이 한 곳도 없는 조건에서도 개성 한옥 보존사업 지원
- 국제학술회의, 재중동포 축구코치 연수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업 위주
- 체육, 문화 교류 등도 소수의 선수단 중심

○ 지원기관으로 축소
- 남북 교류협력은 거버넌스 구조로 진행해야 함에도 NGO의 지원 기구로 역할 축소

○ 가성비 높은 사업 부재
- 남북교류협력기금 연 20억을 쓰고도 효과가 뚜렷한 사업이 없음

(3) 종료·중단 및 수정·보완 업무

○ 사업명 :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양묘장 현대화 지원 및 산림병 해충 방제 사업추진을 위한 (사)겨레의 숲과의 위·수탁협약 체결
- 검토의견 : 유보
- 예산절감 : 547백만원
- 유보사유 :
  - 예산 투입에 비해 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음
  - 민간단체 지원 방식의 협력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북한이 요구하는 '임농복합경영' 산림협력 우선 추진
  - 특히, 도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음

○ 사업명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용역 (기간 : 18'03.09-09.18, 경기연구원)
- 검토의견 : 유지 + 보완
- 보완사항 :

• 민선7기 남북교류협력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연구진과의 간담회
• 도지사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효율적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진행.

○ 사업명 : 2018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18년 10월 예정)
- 검토의견 : 검토 + 보완
- 보완사유 :
• 대표적인 기금사용을 위한 사업
• 2017년 접경지 정책 수립을 위한 아일랜드 방문 등 비효율적 사업

○ 사업명 : 재중동포 체육교사 축구캠프
- 검토의견 : `18년 유지, 19'년 폐지
- 예산절감 : 63백만
- 폐지사유 :
• 남북 교류사업으로 도민 체감 효과 미미
• 전형적인 기금사용을 위한 사업

○ 사업명 : 개성 한옥 보존 사업 재개
- 검토의견 : 유보
- 절감예산 : 500백만원
- 유보사유 :
• 북측과 공동계획, 공동추진, 공동이익의 원칙 하에 재협의 필요
• 경기도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
• 개성 한옥보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기도의 이익이 모호

○ 사업명 : 개성지역 실학 유교문화 교류
- 검토의견 : 유보
- 절감예산 : 200백만원
- 유보사유 :

-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기대효과 불확실.
- 사업 방향, 추진 체계 검토 후 실시 여부 결정

○ 사업명 : 남북스포츠 교류

- 검토의견 : 유보
- 절감예산 : 400백만원(추정)
- 유보사유 :
  - 2017년 체육교류 사업 중단에 대한 평가 무시
  - 탁구, 양궁 등 도민이 참여하기 힘든 종목의 교류는 지양
  - 추진주체의 불법성 논란

❍ 공약사업(도정사업)

(1) 공약

연번	과제	내용
33	통일경제특구 지정추진	
33-1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지원
33-2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
33-3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기반 조성
34	경의선 경원선 연결사업 지원	
34-1		경의선 일대, 경제 산업 물류벨트로 조성 (서해안 경협벨트 완성 지원)
34-3		DMZ를 중심으로 생태평화광광지구 조성
35	경기북부 지역별 특화 산업을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발전과 평화경제권 형성 선순환 추구	
35-1		파주 고양에 출판 및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36	DMZ를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조성	
36-1		DMZ생태평화지구 추진

36-2		DMZ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 모색
36-3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38	남북공동수계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	
38-1		임진강 하구와 한강하구 중립수역, 파주·김포 주변 수역 명소 조성
129	북한발 미세먼지 절감 위한 남북협력 추진	
129-2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및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
141	DMZ 올레길 조성	
17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	
173-1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강화 및 시·군별 특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173-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추진
174	중앙정부 남북 교류사업 지원 및 협력 확대 추진	
174-1		남북 문화재 공동 사업 지원
174-2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활용 남북 공연예술단교류·공연사업 지원
175	남북체육교류사업 적극 지원	
186	남북체육교류를 활성화	
186-1		DMZ 평화체육 프로그램

(2) 평가 및 제안

○ 공약 이행 기조

- 공동계획, 공동추진, 공동이익
- 도민 체감, 도민 참여 우선
- 단순 인도지원에서 포괄적 개발협력으로 전환
- 경기북부발전과 연계
- 문재인정부 시책 사업과 협력 추진
-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사업에 참여

○ 공약조정 및 통합의견 제안

- 33-②, 33-③, 34-① 통합 ⇒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 34-③, 36-①, 36-② 통합 ⇒ DMZ생태평화지구 추진
- 33-①, 129-②, 173-①, 173-②, 174-①, 174-②, 175, 186-① 통합 ⇒ 남북교류협력사업 협력 지원 및 확대
- 175, 186-① 통합 ⇒ 개성-파주 남북마라톤대회
- 35-①, 36-③, 38, 38-①, 141 ⇒ 별도

○ 공약의 재구성

- **통일경제특구 지정추진을 포함한 경제공동체 중심지 기반 조성**
  -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 33-②, 33-③, 34-①
  - 파주 고양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35-①
  - 임진강 하구와 한강하구 중립수역, 파주 김포 주변 명소 조성 ⇒ 38-①
- **DMZ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
  - DMZ생태평화지구 추진 ⇒ 34-③, 36-①, 36-②
  -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 36-③
  - DMZ 올레길 조성 ⇒ 141
- **새로운경기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력 지원 및 확대)
  - 남북공동수계 관리 ⇒ 38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 ⇒ 173-①, 173-②
  - 개성수학여행(체험학습) ⇒ 33-①, 129-②, 174-①, 174-②, 175, 186-①
  - 파주-개성 마라톤대회 ⇒ 33-①, 129-②, 174-①, 174-②, 175, 186-①

○ 공약 외 별도의 신규 정책 및 제안

- 개성수학여행(체험학습)
- 개성-파주 남북마라톤대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개방형직제로의 전환 혹은 도내 공무원으로 전환(지금까지 공무원 교류 차원에서 통일부 4급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 임명)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 지원(33-①, 균형발전기획실)
○ 통일경제특구법의 신속히 통과 입법 지원(33-②, 균형발전기획실)
○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기반 조성(33-③, 균형발전기획실)
○ 경의선 일대, 경제 산업 물류벨트로 조성(34-①, 균형발전기획실)
○ DMZ를 중심으로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33-③, 균형발전기획실)
○ 파주 고양 출판 및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35-①, 문화체육관광국)
○ DMZ 생태평화지구 추진(36-①, 균형발전기획실)
○ DMZ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평화적 활용 모색(36-②, 균형발전기획실)
○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36-③, 균형발전기획실)
○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38, 균형발전기획실)
○ 임진강 하구와 한강하구 중립수역, 파주 김포 주변 수역 명소 조성(38-①, 균형발전기획실)
○ 북한 숲 가꾸기 사업 지원(129-②, 균형발전기획실)
○ DMZ 올레길 조성(141, 균형발전기획실)
○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강화(173-①, 균형발전기획실)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추진(173-②, 균형발전기획실)
○ 남북 문화제 공동 사업 지원(174-①, 균형발전기획실)
○ DMZ 공연예술클로스터 활용 남북 공연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지원(174-②, 균형발전기획실)
○ 남북체육교류사업 적극 지원(175, 문화체육관광국)
○ DMZ 평화체육 프로그램(186-①, 문화체육관광국)

6. 정책제안 및 과제

판문점 포럼

❍ 제안사유

○ 신남북평화시대 대북교류전진기로서 접경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정립

○ 기존 진행된 통일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세계적인 국제포럼으로 격상

❍ 주요내용

○ 안보공동체 : 민간차원의 신6자회담 추진

○ 경제공동체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경제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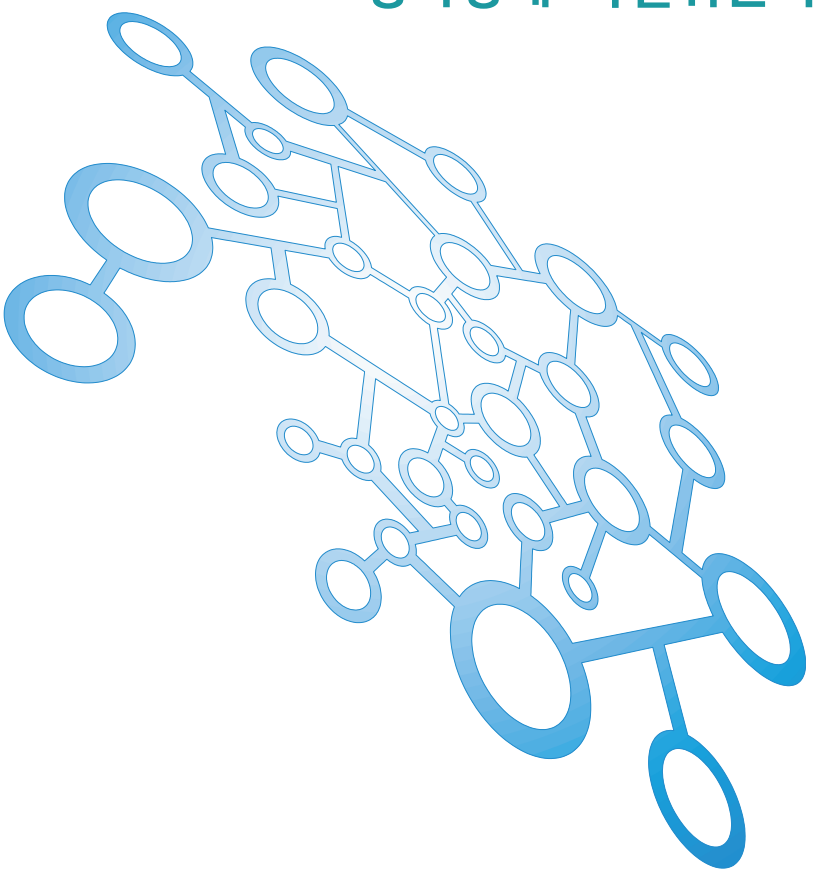
○ 평화공동체 : 평화공동체 지향을 위한 국가, 지자체, 민간의 역할

❍ 기대효과

○ 평화정착, 평화경제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세계적 위상 확립

○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평화증진에 기여

평화경제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정성호

○ 부위원장 : 소성규, 손경식, 이상기

○ 기획단장 : 신명섭

○ 기획부단장 : 유재석

○ 간사 : 서준섭, 이석주

2. 활동방향

○ 도지사의 핵심 정책기조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발전 공약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중/러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정책 의제 발굴

① 경원선 축 지역의 남북협력 시대 대비 경제발전 방안 구체화(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 벨트 구축) :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산업·물류·문화·관광 등 기반 구축 등

② 경원선 축의 교통망 구축(사통팔달 경기북부 프로젝트) : 경원선 복원 및 경기 북부지역 도로·철도망 정비·확충과 북한과 연결 준비

③ 남-북-중/러 교류·협력 준비 : 관광·문화·스포츠 교류, 산업 기술 교류, 농업 교류, 에너지·자원 교류 등 모색

3. 주요 활동내용

일자	시간	행사	내용
6. 21 (목)	11:00	특위 업무회의 (1차)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세미나실)	- 특위 업무추진 계획 논의 - 특위 아젠다 설정 : 경원축 경제활성화, 경기북부 교통망 구축, 남-북-중/러 교류협력 의제 발굴 등
6. 26 (화)	11:00	특위 업무회의 (2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특위 업무범위 재점검(타 특위와 역할분담) - 업무보고, 자료요청, 활동계획 등 논의
	11:30	특위 세미나 (1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도지사의 특위 유관 공약 현황(서준섭 간사 발제)

	14:00	경기도 업무보고 (1차) (경기R&DB센터 2층 대회의실)	- 균형발전실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경원축 활성화 방안,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협력, DMZ 사업 등 보고(3개 평화 관련 특위 공동으로 실시)
6. 28 (목)	11:00	특위 업무회의 (3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활동 일정 점검 - 경기도 기존 사업 평가 및 공약 연계성 검토
	11:30	특위 세미나 (2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보상 방안 (소성규 부위원장 발제)
	14:00	경기도 업무보고 (2차) (경기R&DB센터 1층 교육실)	- 건설국 : 경기북부 고속도로망 구축, 남북연결도로망 확충, 경원축 도로망 확충 사업 - 경제실 : 패션·가구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노후산업단지 재생, R&D 지원, 복합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 철도국 : 통일대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GTX 노선 지원 등
7. 2 (월)	13:30	특위 업무회의 (4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특위 인력 충원(조영철, 이지영 자문위원) - 전문위원 활동점검 및 특위 보고서 작성 방향 논의
7. 3 (화)	14:00	중앙부처 업무 청취(1차) (국회의원회관 6층 11세미나실)	- 통일부 : 남북 철도, 도로, 산림 회담 등 현황과 지자체의 역할
	16:30	특위 세미나 (3차) (국회의원회관 6층 11세미나실)	- 경기북부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 (엄승덕 전문위원) - Non GMO 농식품, 유기축산 클러스터, 남북중교류 등

	17:00	중앙부처 업무 청취(2차) (국회의원회관 6층 세미나실)	- 행안부 :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7. 4 (수)	10:00	경기북부 마스터플랜 세미나 (경기R&DB센터 2층 대회의실)	- 평화경제특위, 통일특구특위, 경기연구원 참석 - 경기북부 관련 현안 검토 및 협의
	15:30	경기도 업무보고 (3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경기관광공사 현안 보고 및 협의 - 해외협력(중/러), 관광자원 확대, 관광비용 분석 등
7. 5 (목)	14:00	지역현황 청취 : 경원축 5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 제2청사 본관 층 상황실)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부시장 및 부군수 - 시군 현안 및 공약사업 추진계획 협의
7. 6 (금)	14:00	경기도 업무보고 (4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농업기술원 - Non GMO콩, 친환경농업기술/자재, 북부지역유통센터, 낙농업, 친환경 학교급식 등 협의

7. 9 (월)	14:00	전문가간담회 (경기북부발전방향)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경기연구원 김동성 박사 -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경기북부 패싱 등
	15:00	특위 업무회의 (5차) (경기R&DB센터 7층 특위 회의실)	-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점검 - 정책제안 및 추경 제안 점검
7. 12 (목)	11:00	경기북부 현장방문 (연천, 포천) 소성규 부위원장 외 8명	- 연천평야(통일경제특구 대상지) : 25사단 상승 GOP - 경원선 복선전철 토공구간 교량화 현장 : 전곡 - 평화의 숲(대북 양묘장) 조성사업 현장 : 연천읍 차탄리 - 군남댐 : 남북 공동 수계관리 대상지 -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1) 균형발전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5	DMZ 관련 사업 현황
2	경원축(국도3호선, 평화로) 활성화 방안	6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추진	7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4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확대	8	임진강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 한반도 신경제 지도 추진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경제 지도가 한반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압록강에서 두만강 사이의 산업벨트를 조사하여 아이디어 발굴 필요
- 통일경제특구법안 통과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통일경제특구가 북한 진입의 전진기지로 매력을 갖추기 위해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 업종을 선정하며, 경원축의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히 경원선 연결에 따른 관광·농업·물류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다각적인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배치를 검토할 필요
- 과거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DMZ '보존'에 대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
- 미군 반환 공여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인력과 재원 배치 등 자체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접경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했지만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이 많지 않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공조할 필요

- 국도3호선(평화로)는 도로가 노후하고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경관이 열악하여 낙후한 경기북부의 상징이 되어 있는 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

(2) 경제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북부 패션·가구산업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4	접경지역 바이오 소재 남북 공동활용 기반조성
2	친환경 산단 개발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북부 경쟁력강화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북부 골목상권 활성화
3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기북부지역 R&D지원	6	포천 의정부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

나. 주요 논의 사항

- 도지사 임기 내에 북부지역의 경제적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보다는 발상을 전환하여 바로 추진할 수 있고 가성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이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가구, 섬유 등 북부 5개 시군의 전통적 산업 외에 미래 특화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발전 동력을 마련하고, U턴 기업 유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 경기북부 지역 R&D 지원 사업은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북부의 R&D 기반이 남부의 절반 수준이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와 재원 배분 필요
-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 공약인 노후산단 재생을 동두천을 필두로 경기북부에 적용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접경지역 농축산물을 남부지역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직거래 장터 또는 로컬 푸드 정책을 개발하고, 북부의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여 남-북-중/러 농업 협력 시대를 대비할 필요
- 북부의 전통시장 등 지역 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 수요 창출 방안 마련하고, DMZ과 연계해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3) 건설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적극 추진	3	경기 북부 5개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 현황
2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		

나. 주요 논의 사항

-'사통팔달 경기북부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국비가 적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 도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할 필요

- 중앙정부가 추진·구상 중인 고속도로망 구축사업 중에서 경기북부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집중할 우선 사업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
-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사업 중 도지사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못할 사업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도3호선(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실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구리-포천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43번 도로이용자 저감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 필요

(4) 철도국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통일대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3	지하철 급행화 확충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지원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원선 복원이 남북 간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경원선 복원(연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 필요하며, 사업이 중단된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구간 복원 사업이 신속히 재개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 협의 필요
-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은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인 바, 교외선 복원을 포함하여 순환철도망 구축이 임기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논리 개발 필요
- 경원선 복원에 따른 철도 물류 수송을 위한 물류기지 부지확보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철도 물류는 철도국이 담당하고 항만 물류는 농정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평화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의 물류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철도물류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추진 준비 중인 철도망 구축 사업 중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시군별로 철도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경기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경원선 철도역사를 활용한 여행객 물품 보관소 시설 확보 등 철도 역사를 관광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경원선 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5) 농정국(농업기술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Non-GMO 콩 생산 러시아 협력	4	경원축 5개 시군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단지 확대
2	친환경 농업기술 농자재 개발 성과 북한 및 주변국 보급	5	경기도 급식 안전성 향상
3	북부지역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	6	

나. 주요 논의 사항

○ 농업기술원

- 연해주 현지 농업환경조사와 시범생산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동의하고, 현지조사와 시범생산이 조기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범생산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
- 경기도가 개발한 콩 품종 중 연풍콩과 만풍콩은 연해주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활용 가능한 품종 기술로 판단
- 친환경 농업기술과 농자재 개발 성과 중에서 북한 및 주변국에 보급할 가능성이 있는 자체 성과를 적극 발굴할 필요

○ 농정국

- 광주에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전처리 시설이 없고, 공간 활용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기에 북부지역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시 전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남부와 북부센터를 기능을 구분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
- 경원축 5개 시군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단지를 확대하고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차별화 필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도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내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

(6) 부단체장(5개시군)과의 간담회

가. 의정부시

○ 주요 보고 내용

	지역현안 건의사항		지역현안 건의사항
1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건의	5	경기북부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경기북부연구원 설립
2	도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추가지원	6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3	의정부역 지하상가 변압기 교체비 지원	7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북부 스타트업 허브 조성
4	동일로(서울시계~의정부IC 구간) 확장사업비 지원		

○ 주요 논의 사항

- 4차로인 동일로가 350미터 가량이 3차로로 축소되며 극심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할 필요성과 적정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
- 경기북부에 특화된 연구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분원을 확대 혹은 독립적인 연구원 설립 방안을 검토 필요
- 조만간 반환될 캠프레드클라우드의 국가주도 개발에 공감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정부의 스타트업 허브 사업이 양주시의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 조정 필요

나. 양주시

○ 주요 보고 내용

	지역 현안 사항		제도 개선 건의
1	전철7호선 옥정지구 내 연장 및 GTX-C 노선 연장	6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도개선
2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7	경기북부 인센티브 법제화
3	장흥일영 및 천성농원(한센촌) 도시개발사업 추진	8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지원조례 평가방법 개선
4	경기도 의료원 양주병원 설립	9	드론사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건의
5	경기북부(양주,하패) 복합물류단지 조성	10	

○ 주요 논의 내용

-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의정부의 스타트업 허브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기능 조정 필요
- 도지사 공약 사항인 '접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관련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협력하여, 도지사와 양주시의 약속인 공공 의료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 필요
- 경원선 복원 및 TSR과 연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패 지역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에 불과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적정한 지표가 적용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전철 7호선 옥정지구 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직후부터 본격화하고 포천까지 연장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다. 동두천시

○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사항		주요 현안 사항
1	쾌적한 동두천을 위한 악취 문제 해결	4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2	동두천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교량(은현IC) 설치공사	5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3	경기북부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	6	

○ 주요 논의 내용

-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문제는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집단 민원 사항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는 문제를 종결할 필요
- 동두천시의 공여지는 전국의 17%에 해당하나 지난 10년간 국비지원이 1천5백억원에 불과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바,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여지개발청' 설립을 검토·추진할 필요

- 동두천 '산림 레포츠 자연 휴양 산업 육성'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동두천시가 추진 중이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가 행정·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천의 연강 포레스트 사업 등 주변지역 관광 관련 사업과 연계할 필요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군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바, 분양 원가를 인하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라. 연천군

○ 주요 보고 내용

	주요 현안		주요 현안
1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토공구간 교량화 사업	4	국도 3호선 연천 IC 연계도로 개설공사
2	연천군 보건의료원 도립의료원 전환 건의	5	통일경제특구 지정
3	연강-Forest 조성사업	6	
	교류협력 업무추진 계획		교류협력 업무추진 계획
1	통일경제특구 지정	8	두루미 보호 관리 남,북 공동연구
2	평화의 숲 조성사업	9	경원선~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 실행계획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산가족사보행사장 지정추진	10	AI 구제역 등 방역사업 추진
4	임진강, 북한 황강댐 운영정보 공유	11	말라리아 등 남,북 공동 방역사업 추진
5	고려종묘(숭의전)연계 개성시 자매 결연 추진	12	DMZ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사업
6	평양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13	국도3호선(초성~장탄)외 2개 도로 개설
7	남, 북 연결 사이클 대회 추진	14	국지도78호선 외 1개도로 개선

○ 주요 논의 내용

-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토공구간 교량화를 통해 전곡 지역이 양분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나, 도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과 창조적인 해법 마련 필요
-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55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해법을 우선 마련하고, 도지사의 접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 인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사업과 연계된 '연강-Forest 조성사업'이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DMZ 관련 사업이나 동두천의 산림복지지구, 포천의 한탄강 생태휴양 사업과 연계성(관광축 형성)을 고려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필요
-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도 3호선 연천 IC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 DMZ 내에 있는 연천평야에서 남북 공동경작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연천평야가 통일경제특구의 선도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연천군이 과거부터 진행 중인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양묘장 조성 사업 등 축적된 성과가 경기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마. 포천시

○ 주요 보고 내용

	지역 현안사항		지역 현안사항
1	구절초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5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2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6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시범사업
3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7	가축전염병 방역예찰요원 인건비 지원 건의
4	공여구역관련 발전종합계획사업 도비 지원 건의	8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지원 및 행정보조인력 신규지원 건의

	당면 건의사항		당면 건의사항
9	국도43호선(포천~철원간) 확· 포장공사	12	신북면 갈원~금동리 일원 용수공급 사업
10	포천시 철도 유치 추진 사업	13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
11	국제 물류 중심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업	14	군내~내촌 간(수원산터널) 도로건설 공사

○ 주요 논의 내용

- ‘가축전염병 방역예찰요원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지원 및 행정보조인력 신규지원’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기 북부지역의 가축전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인력 및 예산 배정 등 체계적 조치 필요
- 포천시는 경원선 지선 신설, 7호선 연장, 4호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 영평 사격장 문제 등 대규모의 군 관련시설 관련 주민 피해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포천시 추진 사업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고모리에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예상되는 바, 이 사업의 재추진 혹은 여타 대안 마련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판단 필요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1]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 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벨트 구축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35-①, 균형발전기획실)
○ 경기북부 패션 가구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91-①, 경제실)
○ 양주 테크노밸리 지원(35-②, 도시주택실)
○ 노후산업단지(동두천) 재생 활성화(94, 경제실)
○ 경원선 대륙 물류 지구(115-②, 경제실)
○ 공연예술 산업 육성 지원(의정부, 경제실)
○ 산림 레포츠 자연 휴양산업 육성(동두천, 축산산림국)
○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동두천, 경제실)
○ 한탄강 생태휴양 관광 산업 육성(포천, 균형발전기획실)
○ 접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46-③, 보건복지국)

[2] 경원선 연결, 사통발달 경기북부 프로젝트

○ 경원선 연결지원(114-①, 철도국)
○ GTX-C 노선 예타 통과지원 및 노선연장(112-②, 113-①, 철도국)
○ 순환철도망 구축(112-④, 철도국)
○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지원(114-①, 건설국)
○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적극 지원(111-③, 건설국)
○ 체계적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111-3, 건설국)

[3] 남-북-중/러 교류·협력 준비

○ **관광·문화·스포츠 교류, 산업 기술 교류, 농업 교류, 에너지·자원 교류 등 모색**
○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한 (가칭)남북러 평화농장 설립 및 경기도 Non-GMO 농식품 확보(33-① 균형발전기획실, 148 농정국)
○ 한국(경기)·북한(강녕)·중국(산동) 유기농업 협력사업 (33-①, 균형발전기획실)

6. 정책제안 및 과제

1.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 제안사유

○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미군공여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제한과 생활권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경기도 구현

○ 반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접경지역 발전 지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준하는 특단의 재원마련 대책 필요

○ 경기도 차원의 이행재원 마련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에 마중물 역할이 필요

❍ 내용

○ 조성 규모 : 5천억원 ~ 1조원 내외

○ 조성 재원 : 도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조성 기간 : 2019 ~ 2023(5년)

○ 사용용도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 접경지역 개발 사업
- 기타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사업 등

○ 가칭 '반환미군공여구역 등 개발 지원기금 설치조례' 제정 필요

❍ 기대효과

○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실현

○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신속한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제안사유

○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정체된 저발전 지역에 대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시군이 6개에 불과하고, 지원금 규모가 작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

❍ 내용

○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원 대상이 되는 낙후 시군을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하기 위해 지표를 보완하고, 지원금 규모를 당초 5개년 2,926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 기대효과

○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3. 경기도 북부청사의 예산편성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 제안사유

○ 북부청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행정2부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미흡하여 북부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 발생

* 2실 1본 5국 3,904명(일반직 1,115명) 근무

○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북부청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필요

❍ 내용

○ 인사 상 불균형 해소

- 현행 5급 이하 부서 배치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만 부여하여, 수원 근무자들에 비해 승진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식 팽배
  → 승진 후보자명부 별도 관리 등 인사상 불이익 완화 방안 마련

○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

(현행)

- 행정2부지사 소관 7개 국 중 2개 실국(균형발전기획실, 축산산림국)에 대해서만 예산 심사기능을 부여하고 5개국은 수원도청에서 직접 관리
- 북부지역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수원 도청에서 직접 관리 : 2부지사 권한 배제

(개선)

-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행정2부지사가 관리
- 행정2부지사 소속 실국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이관

❍ 기대효과

○ 북부청 위상제고 및 시군에 대한 지원과 관리기능 강화

○ 북부청 공직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로 근무의욕 고취 등

4.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확대 개편

❍ 제안사유

○ 경의·경원선 등 남북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고 환황해 경제권 구축 정책에 따라 경기도가 철도물류와 항만물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1)에 따라 경기도에는 45개 철도 노선이 추진되고 있고(공사 완료 5, 공사 중 17, 예비타당성조사 등 14, 기타 9개), 기존 국가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철도 사업 기획·관리가 필요

○ 대광법 개정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 시 지자체가 시행·운행하게 되었고, 도시행 철도사업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개통예정(3개노선)되어 철도 건설·운영 관련 조직의 확대 필요

○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비하여 광역철도업무 및 서울·인천시와 정책협의 등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유지 필요

❍ 내용

○ 농정국의 항만물류 업무를 철도국으로 이체하고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확대 개편

❍ 기대효과

○ 다가오는 남북 평화시대 및 동북아 번영의 시대에 경기도의 철도 건설 및 운영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철도·항만 물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5.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설치

❍ 제안사유

○ 반환 미군 공여지와 접경지 개발, 남북교류 활성화 등 북부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기관(경기북부 발전연구원) 설치 절실

-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공특법 개정 등을 위한 논리 개발과 자문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마련
- 남북 평화시대 경기도의 주도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추진

❍ 내용

○ **1단계** : 기존 경기연구원 북부센터 확대 개편 : 15명 → 30명

- 인사 · 예산 · 연구 활동 등 독립성 보장, 경기북부지역 연구 전담 기능 부여

※ 공여지, 접경지, 남북교류, 경기북부 전문가로 재구성

○ **2단계** : 독립된 연구원으로 설치

- 경기연구원과 분리하여 별도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
- 경기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제정) 필요(2019년)

현 행	개 정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북부발전연구원(이하 “북부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기대효과

○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의 체계적 연구 및 비전 제시

○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발굴로 교류 선도

○ 반환미군공여구역과 접경지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책 개발 및 타당한 논리 제시로 불평등 완화

6. ‘경기북부 평화포럼’(가) 설립·운영 지원

❍ 제안사유

○ 경기북부가 낙후한 이유는 남북이 대립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등 다양한 중첩적 규제를 받기 때문이나, 남북 평화 실현이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이 관건

○ 중첩 규제 합리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남북 교류 실현,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사통팔달 경기북부 등 도지사의 핵심 공약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진 의제로서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

❍ 내용

○ '경기북부 평화포럼'(가) 설립 및 운영 지원

- 남북 평화와 경기북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포럼을 결성하고, 필요한 법률개정 및 예산 확보를 주도
-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참여하여 경기 북부의 낙후성과 서울-경기도 및 남북부 간의 격차와 관련한 홍보 논리를 개발하고 공감대 형성

❍ 기대효과

○ 경기북부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도지사의 공약이 국회 및 중앙정부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실현

○ 남북 교류의 시대에 경기도가 폐싱되지 않도록 하고, 남북 평화의 과실이 경기도 낙후 지역에 적절히 분배

7. 경원선 'Peace Road' 관광·문화 벨트 조성

❍ 제안사유

○ 경원선 주변 지역의 관광·문화 관련 사업들이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중심축' 결여

○ 경원선 주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박'이 필요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절실

○ 'KBS이산가족특별전(2017,연천)'을 통해 경원선 '문화+경제'의 실현 가능성 확인

❍ 내용

○ 의양동연포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각 콘텐츠가 'Peace Road(경원선)'를 통해 확장해 '1박'이상의 관광 개념 실현

○ 경의선 문화·관광 콘텐츠 + 기존 올레길 + 전통시장 등이 연계해 교차소비 가능

○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여 기업 참여(협찬)를 이끌어 내고 홍보 효과 극대화

〈주요 프로그램 예시〉

지역	주제	소재
의정부시	'Peace Road' 관문	〈지구촌 평화의 역사를 쓰다〉 세계적인 학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양주군	'Peace Road' 평화 프리 마켓	〈상생발전형 전통시장〉 1인 창작 기업거리, 물물교환 장터, 남북장마당 등
동두천시	'Peace Road' 흥겨운 도시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일 파티가 열리는 도시'
연천군	'Peace Road' 종착역	〈분단의 끝에서 평화를 보다〉 - 평화를 주제로 한 '락 페스티벌' - "만남의 강은 흐른다"(KBS세계기록유산) 상설존

❍ 기대효과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 이익 및 지역 아이덴티티를 확립

○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원축 – DMZ로 이어지는 관광–문화–생태 벨트 형성

8. 평화로(국도 3호선) 가로 환경 개선 추진

❍ 필요성

○ 경기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평화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설 및 장기간 활용에 따른 도로 주변 노후화 및 자전거 · 보행자 도로 단절, 전신주 등의 난립

○ 지역 활성화 및 평화로 이용자의 쾌적한 가로 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필요

❍ 현 황

○ 사업 위치 : 경기북부 평화로 주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 사업 기간 : 2018 ~ 2022

○ 사업량 : L=65km(기본 계획 후 사업 규모 확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 산출기초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액(백만원)
계		1,000
학술용역	1식	600
기술용역	1식	400

❍ 주요내용

○ 경기북부 평화로 구간 및 주변 현황분석

○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한 평화로 주변 추진 및 계획 사업 조사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문자 증대 방안

○ 도로축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공간 색채,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시군별, 구간별 가로 환경 개선 사업 발굴

예) 경관조성, 전선지중화, 가로수, 간판 정비화 등

○ 사업추진 재원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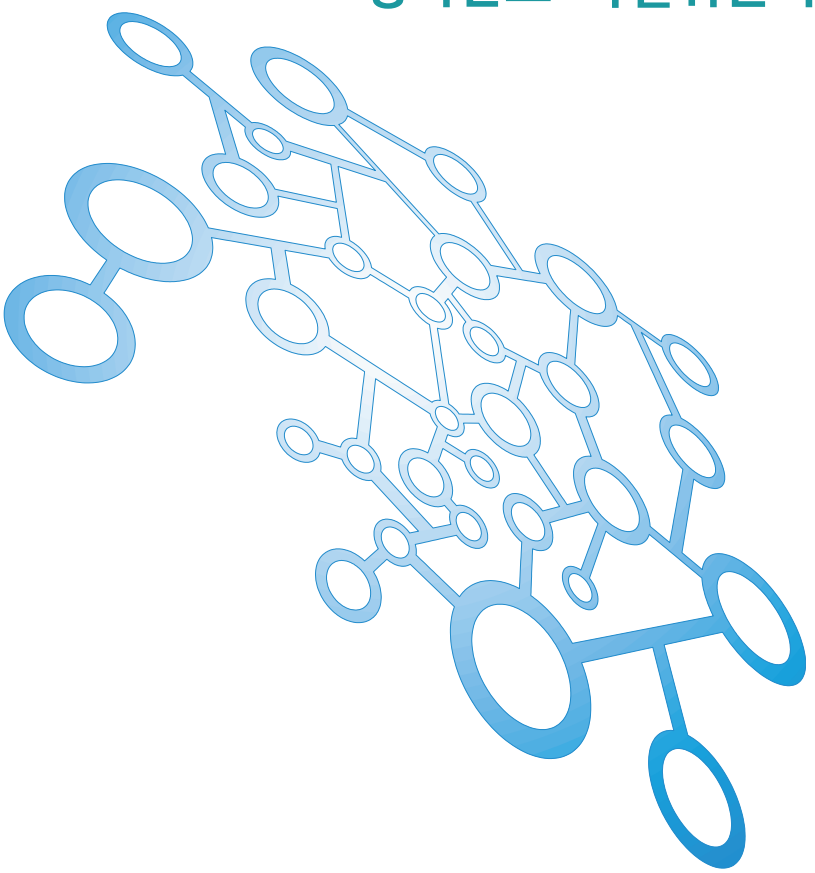
❍ 기대효과

○ 평화로를 경원축의 중심 도로로 재구축하여 문화·관광·경제·남북교류의 주축으로 발전

○ 낙후된 경기북부 이미지 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단절된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연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예방

평화안보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이용광

○ 부위원장 : 장윤화

○ 기획단장 : 이재헌

○ 간사 : 이석재

2. 활동방향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전임 도지사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 분석
- 특위와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도정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공약 이행위한 주요 추진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도지사 약속 :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책무
- 특위 활동 목표 : 도지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안보환경'을 만들고 '규제합리화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3개 분야의 추진 과제를 선정

(1)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에 평화안보조정관을 신설
- 평화안보조정관은 안보정책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및 정책자문과 평화안보지원단 및 민관군협력지원단을 통제
- 평화안보지원단은 평화안보조정관의 지시사항을 수행, 안보정책 및 통합방위업무, 정부 연습 등에 대해 도지사께 자문하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와 협조
- 민관군협력지원단은 평화안보조정관의 지시 사항을 수행, 민관군 협력업무 및 한·미군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하며, 도내 각 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조

(2)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

-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본 전제이지만 안보로 인해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함
- 불합리한 제약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와 제3야전군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협의회를 도내 주둔 중인 해·공군·해병대를 포함하여 확대 운용
-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는 각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식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조직으로 발전
- 협의체는 의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는 경기북부와 남부권역으로 나누어 반기 1회 회의 실시
- 각종 규제완화,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대전차장애물, 사격장의 유탄 문제, 작전에 긴요치 않은 철책 제거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
-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대한민국 청년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병역의무를 수행함
-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의무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봉사와 희생을 감내해야 함
- 군 생활 동안 불의의 사고발생 시 안타깝게도 법률이 정한 일정 부분의 보상 외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성남시에서 시행하였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 필요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후유장애·사망 시 보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군 생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원

3. 주요 활동내용

❍ 특위의 주요 활동

- 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사항 검토
- 전임 도지사의 도정 수행과제 검토(NEXT 경기 도정과제 2018)

- 당선자 공약 중 사업화할 공약 선정
- 기존 도정사업 중 계속사업, 축소 또는 중단, 폐기할 사업을 식별

※ 공약 사업계획 발전을 위해 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도지사의 의도와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 등 설명)

❍ 업무보고

(1) 일정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6일(화)	특위 사무실	16:00~18:30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2차	7월 3일(화)	R/DB 5층 소회의실	14:00~15:30	군관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15:40~16:10	자치행정과장
			16:20~17:00	복지정책과장

(2) 보고 내용

- 업무보고 전, 특위와 연관성 있는 도정과제를 선별하여 부서보고에 포함토록 협조함
- 보고에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부서의 추진계획이 포함됨
- 당선자의 의도와 공약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식별되어, 이에 대해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함
-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정과제 7개는 계속 사업으로 평가하였고, 특위에서 발전시킬 공약사업 세가지를 확정함

❍ 현장방문

○ 일시 : `18.7.6(금), 10:30~17:30
○ 장소 : 포천시 영평사격장 주변마을 등 3개소

○ 참석 : 12명(특위 6, 경기도청 6)

○ 확인 내용

-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상 확인
- 영평사격장 주변 마을과 군사훈련 간 학생들이 피해입은 교통사고현장
- 통행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대전차 장애물, 김포지역 한강철책 제거 현장

❍ 특위 자체활동

- 전문위원별 담당 공약 지정
- 전문위원 전체 토의 6회 실시
- 업무연관성 고려, '평화경제특위' 및 '평화통일특구 특위'와 지속 협조

4.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 업무보고

(1) 균형발전기획실

(가) 주요 보고내용

구분	보고 내용
1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2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
3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통한 한강변 관광 및 산업길 조성
4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지원

(나) 주요 논의사항

- 평화안보조정관 편성 및 기능
-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참여 범위, 회의 주기, 주관 기관 등
- 한강하구 철책 제거 사업 현안 해결 방안
-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 통과 지원 방안

(2) 보건 복지국

(가) 주요 보고내용

구분	보고 내용
1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나) 주요 논의사항

- 사업 시행 시기 : `18년 추경 편성 또는 `19년 사업 시작

❍ 경기도 추진사업 검토 결과

(1) 계속 사업(7개)

- 도내 주민불편 군사시설(도로낙석) 개선
- 전방지역(DMZ 내) 지뢰 제거
- 영평 사격장 소음 및 안전 대책
- 한미협력 사업 추진
- 군 훈련도로 노견(갓길) 확보 사업
- 한강하구 철책 제거
- 군사시설 주변 특별법 제정 지원

※ [분과특위 의견]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7개의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통행,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종료, 중단, 수정 사업 : 없음

❍ 공약사업

(1)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공약 24-5)

- 공약 실행시기를 `19년이 아닌 `18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 보험가입 위해 조례 개정 필요 여부 검토 요망

(2) 평화안보조정관 신설(공약 39-1)

- 평화안보조정관의 편성과 기능 등 논의
- 예하 조직과의 관계 설정(과업 부여 및 통제 기능 수행)

(3)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공약 39-2)

- 현재 협의체 범위 확대 : 육군 + 해·공군 및 해병대, 민간 포함
- 협의회의 실시 횟수 확대 : 년 1회 ⇒ 북부, 남부로 구분, 반기 1회

(4) 2개 공약은 삭제하고 도정 계속 사업으로 결정

- 한강하구 철책 제거 : 김포시와 고양시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 지원
-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지원 : 입법 활동 계속 지원

5. 공약사업 세부 과제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4-⑤)

○ 평화안보조정관 신설(39-①)

○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3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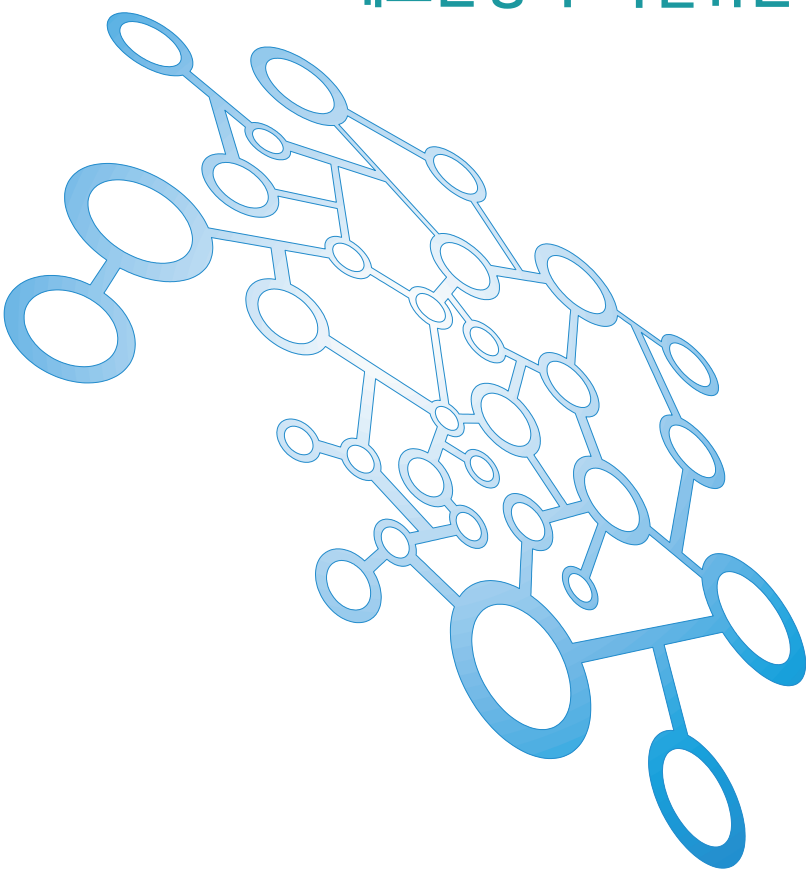
6. 제언

○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안보환경'을 만들고 "규제합리화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자문조직(평화안보조정관)과 의사소통체계(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를 갖추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됨

○ 이러한 조직과 체계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및 관련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않고 발전시킨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경기도는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선이자 중심지역으로 우뚝설 것으로 기대함

새로운경기 특별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김병욱

○ 부위원장 : 오지혜, 김형기

○ 기획단장 : 정종삼

○ 간사 : 권은실, 김학영

2. 활동방향

❍ 새로운경기를 위한 도정 점검

- 경기도정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 제보·민원, 타 분과·위원회 이첩 사안 검토

❍ 새로운경기를 위한 비전 제시

- 민선7기 핵심 도정목표이자 전략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위한 도정 방향 제시
- 새로운 경기의 '6자 협치 구조' 설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도-도당, 도-도의회, 도-도교육청, 도·시군, 도-기관사회단체, 도-광역정부(수도권광역정부간 관계 포함)간 협치 및 상생 모델을 추구

❍ 소위원회 운영

(1) 자치분권 소위원회

※ 새로운 경기 협치 및 자치분권 모델 제시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분과 및 시민참여 특별위원회 등과 공동 활동이 필요하였으므로, 안전행정분과와 경기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경기 자치분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시민참여 특별위원회와는 소관 영역을 조율하여 활동함

(2) 공유경제 소위원회

- 경기도의 공유경제·사회적경제·공동체 등의 정책 점검
- 공동체·사회적경제 융합 및 분리 정책의 장단점 판단
- 공공구매 활성화 등 공약 이행 방안 검토

※ 소속은 노동경제환경분과로 하고 새로운경기 특위에서 운영함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도청 전 실국 및 산하기관

❍ 업무보고

	날짜	장소	시간	대상
1차	6월 27일(수)	융기원 109호	11:00~12:00	기획조정실
			12:00~12:30	자치행정국
			12:30~13:00	감사관

※ 새로운 경기 자치분권 소위는 별도 업무보고 없이 활동하였고, 공유경제 소위는 노동경제환경 분과에서 보고

❍ 현장방문

(1) 1차 (7월 10일 16:00)

- 방문기관 :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모델하우스

(2) 2차 (7월 11일 09:00~18:00)

- 방문기관 : 팀업캠퍼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3) 3차 (7월 17일 09:00~18:00)

- 방문기관 : 킨텍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테크노파크

(4) 4차 (7월 18일 09:00~14:00)

- 방문기관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부지

(5) 방문내용

- 현황보고 청취, 현장 확인, 자료요청

❍ 위원회 자체활동

(1) 경기도정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 이슈별로 수시 진행하여 별도 보고함
- 사안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2) 경기도민 여론조사 계획 수립

- 새로운 경기 비전 수립 및 도정 방향 설계 위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계획안을 시민참여특별위원회와 작성하여 기획실로 이관함

❍ 자치분권 소위원회 자체활동

(1) 회의

○ 1차 (6월 25일)

- 소위의 업무일정(안)을 도출

※1단계 : 새로운경기 협치의 기초설계
2단계 : 새로운경기 협치 설계 구체화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

- 소위 위원장 선출

○ 2차 (7월 1일)

- 소위원회 제안 1차 정리

○ 3차 (7월 2일 ~ 7월 4일)

- 시군과의 협의 현황 파악
- 소위와 도당(당정협력단)간 총 3회에 걸쳐 협치 관련 회의 개최
- 소위의 제안들과 당정협력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 정리

○ 4차 (7월 6일 ~ 7월 8일)

- 소위 활동 사항 1차 정리

○ 5차 (7월 10일)

- 시군과의 협치 관련 도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과 협의키로 함

○ 6차 (7월 15일 ~ 7월 16일)

- 소위 활동결과 최종 정리(특위 활동보고서에 반영)

(2) 연구 및 토론

○ 1차 (6월 26일 ~ 27일)

- 도와 시군간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충남의 사례를 검토
- 소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도와 시군, 도와 중앙정부 등 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중점 고려 대상으로 설정
- 도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방안 제안 및 토론

○ 2차 (6월 28일 ~ 29일)

- 중앙정부와 도 간의 분권, 도와 시군 간의 분권, 광역정부간의 협력, 도와 의회 및 교육청 간 협력 방안 토론
- 소위의 명칭을 '새로운경기 거버넌스 소위'에서 '새로운경기 자치분권'소위로 변경.
- 위원들이 제안한 협치 방안 검토 및 토론

○ 3차 (7월 12일)

- 정책 도서관과 관련하여 사업자(거번테크) 의견 청취

○ 4차 (7월 13일)

- 시군과의 협치 관련 도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 및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장)와 토론

❍ 공유경제 소위원회 자체활동

※ 〈공유경제 소위원회 보고〉 참고

4. 경기도정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와 제안

❍ 경기도정

(1) 민선6기 버스정책

- 점검 대상 : 교통국
- 문제점 :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 및 시외버스 일반면허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불법행정 •2층 버스 도입과정, 준공영제 졸속추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대책 부재

- 개선책 : 공항버스 한정면허 원복과 경기도 버스대책 마련에 대해 교통특별위원회에 의견 제시(☞ 교통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반영)

(2) 현덕지구 개발 사업

- 점검 대상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문제점 : •사업지연(지구 지정 후 10년 경과)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사업시행자 선정경위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 •사업시행자 PF구성 불확실성 등
- 개선책 : 별도보고

(3) 빅파이 사업

- 점검 대상 : 빅데이터담당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
- 문제점 : •민선6기 출범 후 콘텐츠진흥원 내 빅파이추진단 설치 경위 •본청 빅데이터담당관과 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 사이의 업무 추진 과정 등
- 개선책 : 별도보고

(4)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 점검 대상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 문제점 : •위탁업체 선정과정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여부 •위탁업체 운영실태
- 개선책 : 위탁사업자 계약문제 및 캠퍼스운영에 대해 팀업 캠퍼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요구

(5) 경기쿱 사업

- 점검 대상 : 공유시장경제국, 교육협력국, 농정해양국, 도시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문제점 : •민선6기 경기쿱 사업의 추진 경위 •체인지업캠퍼스 운영, 위례따복아파트 상가 임대운영 등 세부 사업 운영실태
- 개선책 : 위례아파트 위탁 사업자와의 계약변경 및 체인지업 캠퍼스의 '체인지 업, 미래교육, 거꾸로' 등의 용어와 명칭 개선 제안

(6)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점검 대상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문제점 : •전임지사의 퇴임 이틀 전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시기적으로 부적절 •사업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이 과다 •기부채납 부분에 원래 개발에 포함된 도로나 공원 부분 포함
- 개선책 : 공약사항인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기여도를 높일 방안 요구

(7)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 점검 대상 : 축산산림국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
- 문제점 :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선정 후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된 과정 •실시 협약 체결 지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조건부 승인) 이행여부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적정성,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 개선책 :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특혜 논란을 불식하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

❍ 산하기관

(1)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운영

- 점검 대상 : 산하기관 전체
- 문제점 : •산하기관 고위직에 전반적으로 공무원 출신이 과다 채용(58%) • 일부 산하기관 임원진의 전문성 부족 및 낙하산 인사의 독단적 운영
- 개선책 :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제안

(2) 산하기관 채용실태

- 점검 대상 : 산하기관 전체
- 문제점 : •산하기관 채용 실태 채용 공고의 기간과 홍보채널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
- 개선책 : 경기도 산하기관의 채용 규정 개선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위한 공공인재 채용 플랫폼 설치 제안

(3)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수탁

- 점검 대상 :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 문제점 : 민선6기 임기 말 수탁업체 선정 졸속 추진
- 개선책 :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공고 중단 및 재검토 명령(6/26)

(4) 경기테크노파크 경영대책

- 점검 대상 : 경기테크노파크
- 문제점 :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영 애로 •경기테크노파크 비정규직 운영 상황
- 개선책 : 경기테크노파크에 발생한 경영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경영대책 마련을 요구

(5) 킨텍스 지배구조 및 민원 사안 점검

- 점검 대상 : 킨텍스
- 문제점 :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출자(같은 지분율)로 만들어진 주식회사로서 누구도 우월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비정규직 채용 등 인사 문제
- 개선책 : 킨텍스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제출 요청, 인사문제는 계속 점검

(6)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 점검 대상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문제점 : •경기도의 청소년 교육 및 수련 사업이 교육협력국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국 및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나뉘어서 운영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 •도자체험장 관련 향후 방안 부재
- 개선책 : 도내 청소년 대상 교육·수련 사업 담당부서 및 기관간 협력구조 및 교육청 협의시 공동협력 요구, 도자체험장에 대한 대응 방안 요구

5. 새로운 경기를 위한 자치분권 소위원회 제안

❍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노민호

(2) 운영

※ 새로운 경기 협치 및 자치분권 모델 제시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분과 및 시민참여 특별위원회 등과 공동 활동이 필요하였으므로, 안전행정분과와 경기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경기 자치분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시민참여 특별위원회와는 소관 영역을 조율하여 활동함

❍ 제안 《새로운 경기, 이제는 협치다!》

(1) 배경 ;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

가.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한계

- 新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탄생한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시민을 행정의 대등한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아닌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결과(정책)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핵심 가치로 상정함
-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공부문을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체계로서는 한계를 지님

나.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

- ICT 융합, 인공지능, 빅데이트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더불어, 경쟁보다는 협력의 원리에 의해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함
- 이에 '공동체 주의와 참여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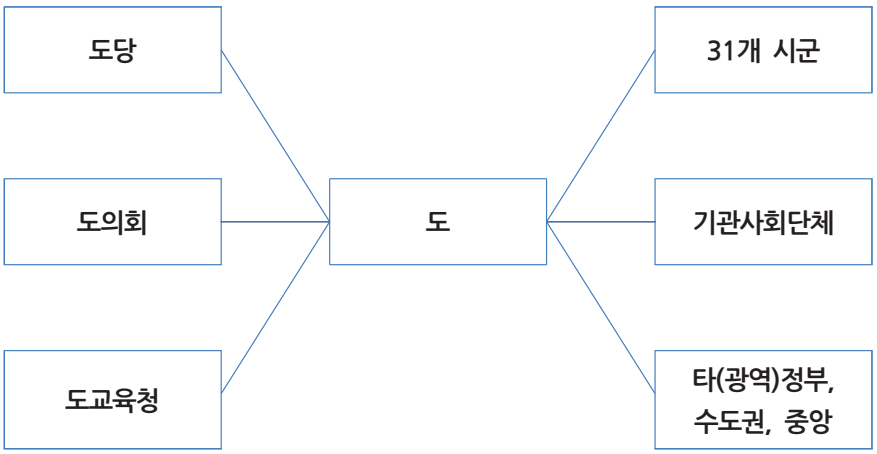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분	시장중심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철학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핵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공정성)**
시민관	고객	주인
원리	**경쟁**	**협력**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자
공무원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촉진자**

(2) 내용 ; 6자 협치체계

가. 개요

- 정당과 타 지자체,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다운 나라와 새로운 경기도를 세우기 위해 중앙, 광역, 기초, 의회의 모든 영역에서 당정 협력과 정무기능이 중요해짐
- 정당과 타 지자체, 기관사회단체 등 유관조직과 경기도 간 원팀 구성의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6자 협치체계'를 제시함



〈6자 협치체계〉

나. 도-도의회, 시군, 도교육청

- 목적 : 갈등과제에 대한 견해차 해소 및 원활한 책임도정 구현을 위한 도의회, 시군, 도교육청 간 협치 체계 구축

	가칭	목적	참석범위	운영
삼자협의체	경기도 고위정책협의회	경기도 연정모델을 확대·강화하여 도정에 대한 실질적 협의	• 도지사·도의회의장·도교육감	월 1회 정례화
교육청	교육정책협의회	교육정책에 대한 도·교육청간 의견 조율	•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및 의제관련 부서장 • 부교육감·의제관련 부서장 ※ 필요시 교육위원 참석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요청에 의해 개최 상시협의체제 필요.
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공약5,6번)	시군의 현안·갈등을 조정·협의하여 지원. 도-시 도 사 무 조 율 및 인사교류.	•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의제관련 부서장 • 31개 시·군 단체장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 필요시 수시 개최
도의회	분야별 도정의정협의회	실·국 분야별 정책심의 및 도정운영에 대한 전략논의	• 의제관련 부지사·정무부지사 및 관련부서장 • 여당의 소관상임위원	월례회의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도의원 공약실천 TF지원	도의 지원과 선제적 대응필요.	• 정무부지사 및 관련실국장 • 해당 지역 도의원	상설기구화

〈도의회, 시군, 도교육청 관계〉

다. 타(他) 광역정부, 중앙정부

- 상황 : 시도지사협의회는 구속력과 실행력에서는 한계를 보였으나, 민선7기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는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목적 : 수도권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정부간 협력, 자치분권 확보 및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기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 확보

라. 도 조직과 관련한 의견 ; 대외협력국(가칭)’설치

- ‘6자 협치체계’ 업무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대(對) 도의회, 도교육청 업무를 넘어 당정협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산하에 ‘대외협력국(가칭)’ 설치가 요망됨

6. 성과 및 제안

❍ 성과

- 특위 인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경기도 버스정책,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개발 사업, 빅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산하기관 운영 실태의 문제점 확인

❍ 제안

- 경기도정 및 산하기관 운영과정에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도정 및 산하기관 운영 점검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청 감사관에 담당 역할 부여 또는 •담당 역할을 수행할 별도의 TF 운영을 제안함

참고 공유경제 소위원회 보고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학영

※ 공유경제 소위원회는 노동경제환경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구성

❍ 운영

- 소속은 노동경제환경분과로 하고 새로운 경기 특위에서 운영

❍ 활동방향

-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공약 이행방안 검토
- 민선6기 따복사업,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검토
- 따복 브랜드,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관련 사업 검토

※ 따복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추진과 분리라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함

❍ 활동내용

(1) 소관 실국 및 기관

-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공유경제 소위원회)

(2) 업무보고

가. 1차

- 일시/장소 : 6월 26일 / 융합기술원 1층 A104호
- 대상기관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센터·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나. 2차

- 일시/장소 : 7월 3일 / 융합기술원 1층 A104호
- 대상기관 : 공유시장경제국

다. 업무보고 내용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현안 및 공약 이행 방안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현황
- 사회적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3) 소위원회 회의

가. 1차 소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6월 25일 / 융합기술원 16층 소회의실
- 회의내용
  - 1차 업무보고 방향 및 2차 소위원회 회의 계획

나. 2차 소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6월 27일 / 융합기술원 16층 소회의실
- 회의내용
  -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요청 사항 논의
  - 따복정책의 운영방안, 경제실 담당 업무 분장, 따복브랜드 변경 방향 논의

다. 3차 소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7월 5일 / 융합기술원 16층 소회의실
- 회의내용
  - 따복정책의 분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지원센터 개편 방안 마련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업 이관과 회사 존속여부, 따복 브랜드를 포함 경기도 운영 브랜드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

(4) 간담회

가. 마을센터 협의회 대표

- 일시/장소 : 7월 2일 / 융기원 10층 창업베이스캠프
- 논의 내용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나. (재)지속가능경영재단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법인)

- 일시/장소 : 7월 9일 / R&DB센터 509호 회의실
- 논의 내용
  - 재단 현황, 민선7기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및 논의

다. (가칭) 경기모두넷

- 일시/장소 : 7월 10일 / R&DB센터 509호 회의실
- 논의 내용
  - 마을공동체의 정책 기조·지원방향·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마을중심형 민관협치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

❍ 업무보고 및 공약사업 검토 결과

(1) 업무보고 및 자체평가

가. 따복공동체 사업

- 민선6기의 '따복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을 융합하여 추진해 왔으나, 역사와 법률 근거가 다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잡음이 지속 발생하였음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복정책 폐지)

나.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 회사가 마케팅·유통사업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디자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 회사 스스로의 매출만으로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어렵고, 경기도 대행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생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회사를 조속히 청산하되, 기능과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환원시켜야 함

다. 따복 브랜드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추진을 의미하는 '따복' 브랜드는 두 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따복' 브랜드는 모두 '경기' 또는 '경기도'로 바꿔야 함
- 그 외 경기도는 'G마크', '굿모닝', '넥스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제시해 왔는데, 민선7기 경기도정은 '경기도' 또는 '경기'를 핵심적이고 단일한 브랜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는 '분리'를 위해서, 위 수탁협약서, 고용승계, 조례의 제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진행 일정 및 절차를 진행

(2) 공약사업

가. 해당 공약

	공약		공약
95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상향	96-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가점 확대
97	시군 기관별 공동구매 실시간 DB 제공으로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나. 주요 논의 내용

○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 현재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한 뒤 '공공구매지원단'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공공구매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주도하고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이 직영하며, 경기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이 타당함

○ **조직관련 검토 결과**

-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 '따복공동체지원과'의 따복정책·따복협력·공동체사업팀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협치담당관' 산하 (가칭)공동체지원팀으로 변경

- ‘공유경제과(경기쿱지원팀)’와 따복공동체지원과(사회적경제육성, 협동경제)는 (가칭)사회적경제과로 변경

조직변경(안)

구분	기존 조직	변경(안)	비고(주요업무)
마을공동체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따복정책, 따복협력, 공동체사업팀)	**(가칭)협치담당관 / (가칭) 공동체지원팀**	기존 따복공동체지원과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경기쿱지원팀) 따복공동체지원과(사회적경제육성, 협동경제)	(가칭)공정경제국/ (가칭)**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육성 및 활성화, 공공구매 확대(공약사업) 추진

(가칭) 사회적경제과 조직구성(안)

팀명	소관업무
사회적경제 정책팀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사회적경제 성과 관리 사회적경제 단체 업무
사회적경제 협력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및 홍보 사회적경제 기술 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업종별 네트워크 지원
공공구매 지원팀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 공공시장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확대 공공구매 플랫폼 구성 및 운영 공공구매 계획수립 및 조례·정책 분석 공공구매 실적분석 및 평가, 인센티브
사회적경제 지원팀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시군 사회적경제 인센티브 사업 시군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발굴조성 시군공모(역량강화, 전문인력) 사업

❍ 공약사업 세부 과제

-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상향 (95 /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가점 확대 (95-② /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시군 기관별 공동구매 실시간 DB제공으로 공공조달 접근성 확대 (95-③ /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성과 및 제안

(1) 공유경제 소위원회 운영 성과

○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와 공약을 별도 TF성격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관련된 분과 및 특위에서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운영

○ 각 분과의 전문성 및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각 위원들의 식견이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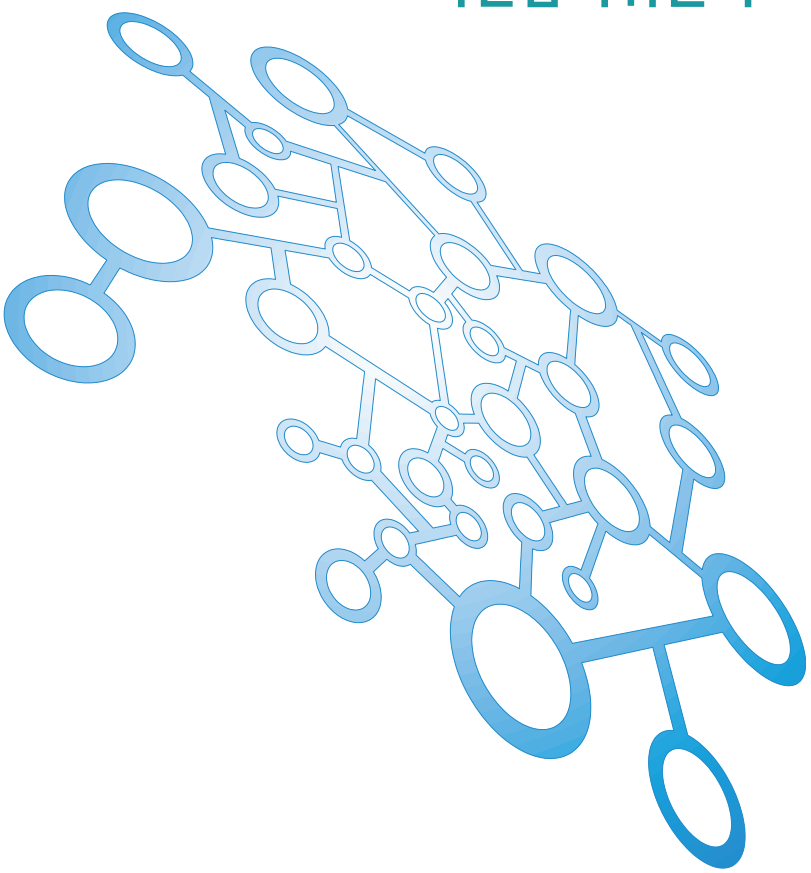
○ 경기도의 관련 정책 및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제안됨

(2) 소위원회의 제안

○ 민선7기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찾기 위한 경기연구원·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 연구가 필요

○ 경기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찾기 위한 연구과정부터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 필요

시민참여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 최순영

○ 부위원장 : 최연, 송원찬, 박신숙

○ 실장 : 박범수

○ 간사 : 노진환, 류해주

2. 활동방향

❍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대

- 시민참여위원회 활동과정 자체가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대, 협치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맹아임을 인식

❍ 경기도정 업무 파악

- 위원회 담당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 파악
- 기존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 '새로운 경기'가 보여 줄 대표적 변화인,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도정 시민참여 실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제도의 혁신
- 경기도형 협치(거버넌스) 모델 제안
- 경기도 협치 추진계획(안) 제안

3. 주요 활동내용

❍ 소관 실국 및 기관

- 기획조정실, 소통기획관실, 자치행정국, 교육협력국(총 4개 실·국)
  (자치행정과 / 미래전략담당관 / 홍보미디어담당관 / 빅데이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팀장 / 언제나민원실장 / 정보기획담당관 / 양성평등정책팀장)

❍ 업무보고

	날짜	장소	시간	대상
예비	6월 25일(월)	소회의실	14:00~16:00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내부 워크숍
1차	6월 27일(수)	차세대 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 102호	14:00~15:00	홍보미디어담당관 기획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2차	7월 4일(수)	차세대 융합기술원 세미나룸 203호	10:00~11:30	홍보미디어담당관 기획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팀장 언제나민원실장 양성평등정책팀장

※ 3차 업무보고는 소위별, 전문위원별로 받기로 결정

❍ 도지사 임명식 실무 준비

-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비 태세로 취소

❍ 공개 특강

주제	시민참여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서울시청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일시	7월 5일(목) 14:00
장소	차세대융합기술원 세미나룸 201호
참석자	시민참여위원회 자문단 등 100명
주요 논의 사항	서울시 사례를 통해 본 시민참여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

❍ 시민참여위원회 자문단 회의

- 1차 전체회의 : 7월 5일 오후 16시 ~ 17시
- 2차 전체회의 : 7월 12일 ~14일 (온라인 자문 조사)

❍ 인수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 7월 6일 오전 10시 / 브리핑룸

❍ 자체 활동

(1) 분과활동

- 시민참여위원회 전체 회의(12회) 진행, 업무보고 및 보고서 작성 역할 분담
- 위원회 전체 업무보고 사전 준비 점검 및 사후 평가
- 분과 내부 팀 활동 상황 점검 및 공유

(2) 분과 내 팀 활동

- 도지사 임명식 TF팀 (팀별회의 총 10회/ 현장답사 6회)
- 협치 TF팀 (팀별회의 7회)
- 타운홀미팅 TF팀 (팀별회의 5회)

4. 업무보고 검토 결과

❍ 홍보미디어 담당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사항 현황	4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행 방안
2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현황	5	도청 및 산하기관 눈 소통관 배치 공약 이행 방안
3	열린 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활용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민원 신속 대응 방안

나. 주요 논의 사항

-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통합 구축 방안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道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	통합 운영	• 직접민주주의 확대, 도민참여, 정보공개 관련 사이트들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제작, 운영됨 • 사용자 중심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필요
2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민원 신속 대응		

❍ 미래전략담당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제안 활성화 추진 방안	3	온라인 정책도서관 운영 방안
2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행 방안	4	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협력시스템 마련

나. 주요 논의 사항

-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제작 유보 통지.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 당선인의 SNS에 모이는 도민들의 의견 처리 방안
- SNS 소통관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 직접민주주의 확대, 도민참여, 정보공개 관련 사이트들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제작, 운영됨
- 사용자 중심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필요

❍ 자치행정과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비영리민간단체 / 시민단체 지원현황	4	갈등조정 역량 강화 방안
2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 도민 참여 확대 방안	5	주민 등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정치축제 개최 방안
3	가칭 '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 지역별, 영역별 협치 플랫폼 실행방안		

나. 주요 논의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 31개 시·군과의 '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 지역별·영역별 협치 실행 방안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지원	수정확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공익활동과 무관한 단체 지원, 특정 단체 중복지원, 1회성 행사 지원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을 분리하고 분야별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엄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방법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함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은 지원금 위주의 단편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협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2	각종 위원회 운영	수정보완	196개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계 및 직능 단체의 전문가(75.8%)와 공공기관(20.8%)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며, 회의가 없거나(26개) 서면 회의(30%)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음. 의견 수렴 수준의 위원회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과 밀착된 의제지향적인 위원회로의 전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와 다양한 도민이 참여토록 위원회 운영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함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3	31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수정 확대	31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와 시·군 장들의 협의 기구에 불과하여 시·군 간의 정책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정책협력 부서를 설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별, 영역별 협치 실행에 긍정적일 것임.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처럼 부서간의 정책 협의 기능을 넘어 별도 구성된 협치 담당관을 통해 협치담당관이 민간 영역과 도·시군간 협치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시·군간 정책 조정 및 갈등 조율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임

❍ 빅데이터 담당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공개 추진계획
2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내외부 소통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현황		

나. 주요 논의 사항

- 통합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공개 사이트 연계 운영 방안
- 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 계획 일정

❍ 예산담당관(주민참여예산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현황	3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현황
2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안	4	

나. 주요 논의 사항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안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심사 과정 및 계획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주민참여예산제	보완 확대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31개 지역주민의 균등한 참여가 저조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로 인해 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 제안 사업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예산학교의 경우, 연 1회 개최에 참석인원은 64%에 불과함. 교육시간 및 운영기간 다양화 등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함. 사업 선정 방식의 경우, 위원회 심사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의 의견 반영이 불가했음.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언제나민원실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언제나민원실 운영 현황	2	도민청원제 도입 운영 방안

나. 주요 논의 사항

- 도민청원제 도입 운영 방안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 직접민주주의 확대, 도민참여, 정보공개 관련 사이트들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제작, 운영됨
- 사용자 중심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필요

❍ 여성정책과(양성평등정책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5급 이상 고위직 성인지 교육 현황	3	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현황
2	젠더거버넌스 센터 운영 현황	4	

나. 주요 논의 사항

- 성평등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조
- 6개 네트워크 사업 운영 및 예산 현황
- 젠더거버넌스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현황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젠더거버넌스 센터 운영	수정확대	현재 젠더거버넌스센터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사업본부 성평등사업부에서 출연금을 통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센터에 대한 설립근거 마련(조례개정) 및 인력확충과 예산확보가 필요함.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각종 성평등 사업과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성격의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한 여성 부서의 검토가 필요함

❍ 교육정책과(평생교육사업팀)

가. 주요 보고 내용

	주요 보고		주요 보고
1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 운영 관련	3	민주시민 교육 사업 및 공모사업 관련
2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 관련	4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나. 주요 논의 사항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내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운영 현황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및 위원회 구성 등
- 민주시민교육 사업 및 공모사업 진행 사항

다. 도정사업 자체평가

연번	사업명	자체평가	분과의견
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위탁기관 변경 후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 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센터장 포함 3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사업은 주로 공모사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위탁 기관의 운영 방식과 센터의 운영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지원에 앞서 민주시민교육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정비 후 사업을 확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공약이행 세부 과제

❍ 소관 공약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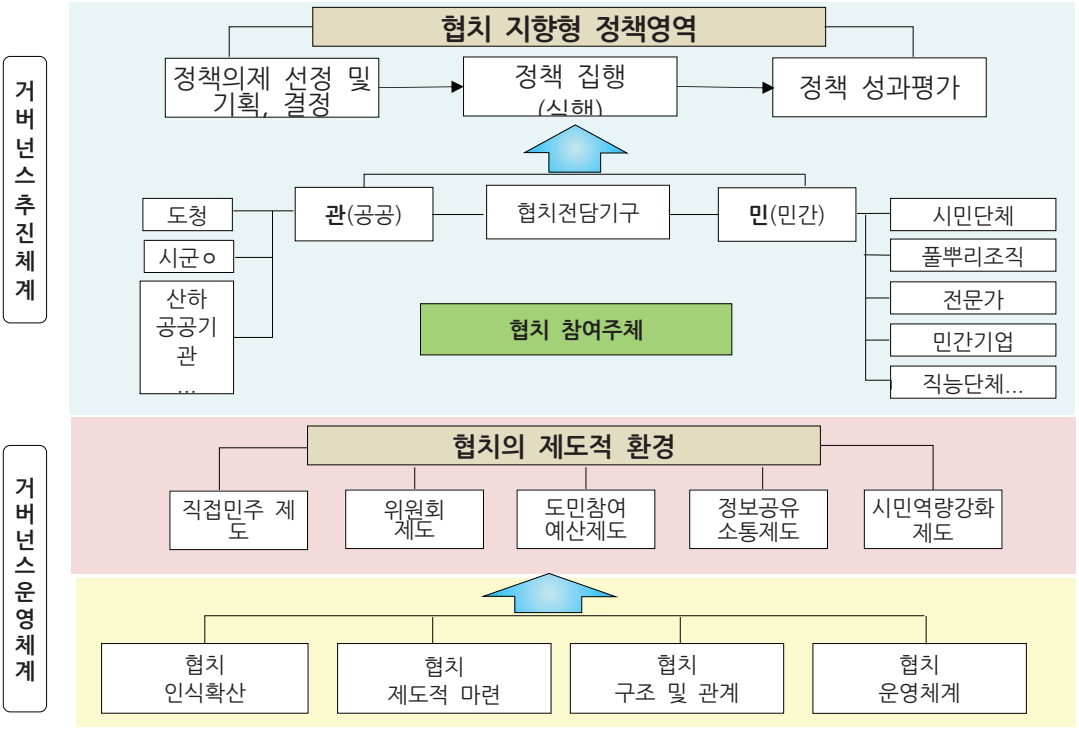
○ 1-①. 정치축제의 장으로 '경기지방정치축제'개최
○ 2-①. 도민청원제 도입 운영 (5만명 이상 청원 시 답변)
○ 2-②. 도민발안제(입법과정에 주권자 도민들의 직접 참여 확대)
○ 3-①.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 3-①. 행정정보 공개의 편의성 증진
○ 3-②. 공공데이터 공개
○ 3-③.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운영
○ 4-①. 도청 및 산하기관 SNS 소통관 배치
○ 4-②.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 민원 신속 대응
○ 5-①③. 31개 시·군 공동의 정책의제 설정, 시군 정책기획부서 협의회 설립

○ 5-②. 도, 공공연구소와, 공공기관에서 시군 필요 정책 연구 및 제공
○ 5-④. 온라인 정책도서관 운영
○ 6-①. (가칭)'정책협력위원회'설치 지역별, 영역별 협치 플랫폼 실행
○ 7-①.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 8-①. 갈등 조정 역량 강화(갈등 조정관 임명)
○ 160-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확대

❍ 공약 이행 혁신 방안

○ 그동안 경기도정에서 부재하거나 부서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2-①. 2-②. 3-①. 3-②. 3-③. 4-①. 4-② 공약을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조 하에, 사용자(도민) 중심의 단일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가칭 '경기광장')에서 구현할 것을 제안.
○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1-①. 2-①. 2-②. 3-①. 3-②. 3-③. 4-①. 4-② 공약 실현을 도청 집행부 내에서 전담할 담당관(콘트롤 타워)과 산하의 전담 부서 필요성 제안
○ '경기도 협치 추진계획(안)' 작성으로 '민관정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
○ 31개 시.군 공동의 정책의제 설정, 시군 정책기획 부서 협의회 설립 공약 이행을 행정적 관점이 아닌, 협치 실현의 관점에서 이행하기 위한 방안 제안
○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와 투명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방안 제안
○ '경기지방정치축제'(가칭 '경기광장') 기획 방향 제안 : (공약 1-①. 2-①. 2-②. 3-①. 3-②. 3-③. 4-①. 4-②. 5-①. 5-②. 5-③. 5-④. 6-①. 7-①. 8-①. 160-①을 이행하기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내 민-관-정의 모든 활동을/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시민 참여, 민관정 협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총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기지방정치축제'를 기획할 것을 제안
○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 체계 제안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 체계도〉



● 협치 제도적 환경

1. 직접민주주의 확대(도민청원 및 발안제도 도입/**공약** 1-2)
2. 위원회 제도 혁신(협치친화적 위원회 활성화/**공약** 2-7)
3.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공약** 1-3)
4. 정보공유 제도 확대(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공약** 1-3)
5. 시민역량 강화제도(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NGO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 갈등조정/**공약** 2-7, 8/160-1)

● 협치 인식확산 및 총괄 협치기구 구성

- 협치 인식확산 및 총화 : 타운홀미팅, 협치학교, 지방정치축제 등/**공약** 1-1)
- 협치 제도적 마련 : 총괄협치기구(경기도 협치위원회 조례개정, 예산 등
- 협치 구조 및 관계 : 총괄협치기구(경기도협치위원회, 협치추진단, 31개 시군협치(정책)협의회 /**공약** 2-5,6/ 영역 및 의제별 협치시스템 등)
- 협치 운영체계 : 협치전담부서 설치 등

6. 성과 및 제언

○ 시민참여위원회 활동과정 자체가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확대, 협치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맹아임을 인식,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도 이를 대내외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음

○ 시민참여위원회는 민선7기 도정의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의 정리,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그리고 향후 상설적인 민관의 협치모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시민참여위원회 담당 공약의 관련부서가 도청 조직 내 분산되어 있어, 공약 담당부서 간 상호 논의 없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통합 연계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시민참여와 협치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수위원회 기간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자문위원 125명 구성, 1400여명의 온라인 시민참여위원 모집, 공개특강 개최, 타운홀 미팅 기획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단축되면서 기획했던 사업들이 온전히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인수위원회 종료 이후 기존 자문위원과 온라인 시민참여위원의 활동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상설적인 민관협치 모델 개발 관련, 인수위원회 활동이 단축되면서 지난 민선6기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해 향후 정책토론회,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협치 추진계획(안)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

시민참여위원회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직접민주주의 실현 열망과 시민사회의 성장

○ 지난 촛불혁명에서 확인되었듯이 직접참여를 원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시민이 등장하였고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의 보편화는 시민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 관여가 확장되면서 공공영역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음

➡ * 시민사회조직이란 국회에 제출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 법안」(진선미 의원 당초안)에 따르면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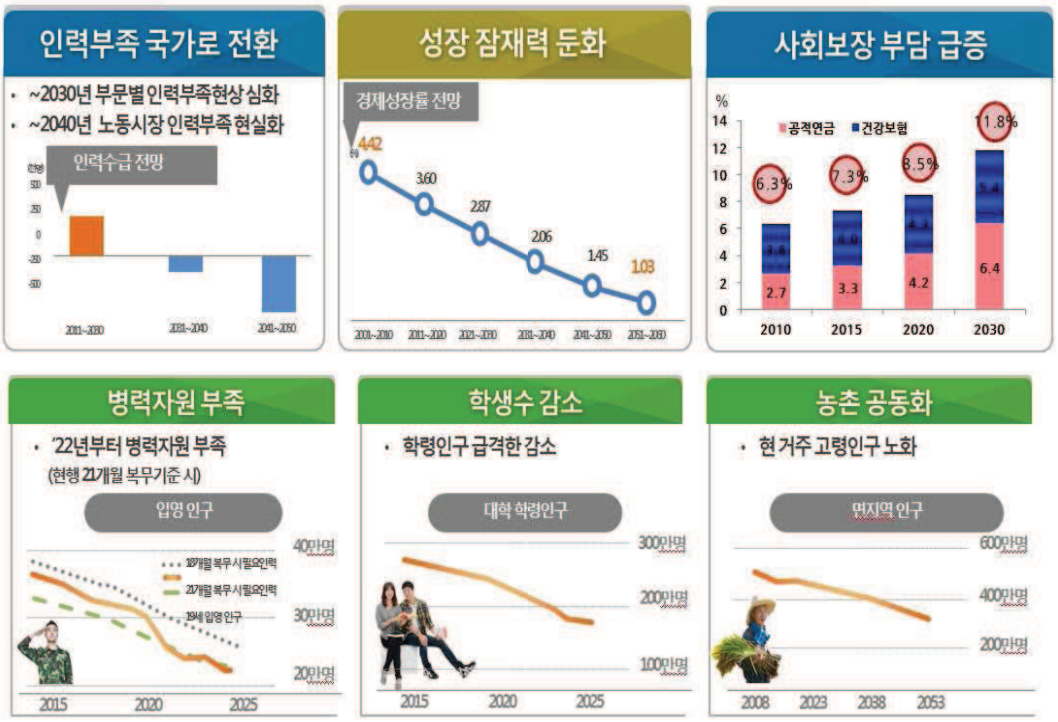
❑ 문제해결 패러다임의 전환

○ (지방)정부는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이 상시화되면서 신뢰 저하로 인한 정당성 약화가 야기되었고, 과거의 '정부실패론'은 '관료제와 엘리트 실패론'으로까지 확장되었음

○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사회로의 진입, 부와 소득의 불평등,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함

○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상시적인 소통 및 폭넓은 정보 공유,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시민의 참여 범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

〈사회문제 저출생의 위험〉



❑ 분권형 문제해결 플랫폼으로서의 경기도형 협력적 거버넌스(협치) 요구

○ 경기도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의 도시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상태와 환경조건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책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관료조직의 혁신 및 새로운 문제해결 플랫폼인 경기도형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민선 6기 경기도정 거버넌스 현황과 총괄 평가

❑ 민선 6기 복지, 젠더, 환경 거버넌스 현황

○ **복지거버넌스는**

- 2015. 04. 27. 2015「경기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합동연찬회」를 통해 경기도 복지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방향을 도출
- 2015. 12. 05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 2016. 04. 14 「경기복지거버넌스」 선언 및 출범
- 사회보장 관련 9개 분야 실무회의(위원166명)와 실무회의의 민·관대표인 실무협의회(위원18명), 최종심의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위원40명), 경기복지재단이 전담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 **젠더거버넌스는**

- 민선6기 연정에 따른 사회통합부지사의 3대 거버넌스 추진사업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양성평등실천TF'를 구성
- 2015. 12. 17. TF 1차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
- 2016. 05. 30.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출범
- 운영위원회(12명), 전문위원회(22명), 네트워크사업(1기 110명).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젠더거버넌스센터가 전담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 **환경거버넌스('경기환경포럼')는**

- 2015년 사회통합부지사와 환경단체가 환경분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의 제안내용을 수용
- 2016. 04. 15. 거버넌스창립포럼 발족
- 공동대표(5명), 운영위원회(20명), 실무위원회(3명), 6개분과(58명)로 구성되어있고,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포럼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음

❑ 민선 6기 복지, 젠더, 환경 거버넌스 평가

○ 지난 민선 6기의 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영역별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음. 하지만 민과 관이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 역할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존재했음

○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파트너십, 신뢰형성 과정의 민관의 학습과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회의를 통한 의제중심 접근의 한계로 관(공공)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의문, 민(민간)은 의견 수렴 후 행정 미반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함

○ 따라서 경기도정 전반의 전면적 협치체계의 구축에 기반하여 민관정의 책임 있는 실질적 참여 및 권한 공유로 의제별, 영역별 협치시스템을 내실 있게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3 경기도형 협치의 개요

❑ 법적 근거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향후 제,개정 필요)

(제정 2017. 11. 13. / 시행 2018. 7. 1.)

❑ 개 념

"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경기도정 운영방식 및 체계

○ (협치) 넓은 의미로 사회적 갈등 조정 양식, 좁은 의미로 정책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양식

○ (협치의 범위) Crosscutting 이슈.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메커니즘.

※ 서울 적용 사례

- 예산분야 - 주민참여 예산제도
- 복지분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 도시정책분야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환경분야 - 초미세먼지 대응방안

※ 백악관 고령화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 1961년부터 10년에 한번씩 개최
- 백악관이 주도, 전국 각 지역의 마을 단위 회의에서 시작
-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 각종 정부부터, 시민사회 내 대학 등 12,000여명이 논의
- 논의된 노인복지 관련 아젠다를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하여 장기적인 정책 마련
- 2005년 회의에서는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되어 관심이 부각
  ※ 노후설계, 미래의 고용환경, 지역사회, 건강한 노후, 사회참여 및 시장 6개 주제
-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 시니어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라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역설

○ (사회문제) 국가와 시장 중심으로는 그간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영역에서의 경기도와 31시군의 의제별, 영역별 공통현안 – 사회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민선7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직면한 사회문제(공통현안 예시)

문제		해결방안
● 남북,31개시군 지역간 격차 심화		● 남북교류협력, 복지균형발전, 도시재생
●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커뮤니티케어) 구축
● 부와 소득의 불평등	▶	● 경기형 복지시스템, 일자리창출
● 괜찮은 일자리 감소		● 사회적경제활성화
● 청년 실업, 청년 빈곤		● 청년 지원정책, 일자리 창출
● 일·가정양립, 여성혐오		● 경기형 여성정책
●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 친환경정책, 공동체 활성화
● 주거 빈곤층 증가		● 경기형 주거복지정책
● 초미세먼지, GMO		● 환경, 친환경 먹거리
⋮		⋮

☐ 31개 시군(시민참여·협치·소통 관련)위원회 /추진기구 현황 (2018. 7. 12. 기준)

시·군	명칭	비고
수 원 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좋은시정위원회, 더큰수원기획단, 협치위원회(하반기 예정)**	
고 양 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용 인 시	**공약이행시민검증단**	
성 남 시	**성남시정위원회**	하반기 예정
부 천 시	해당 없음	
안 산 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화 성 시	해당 없음	
남양주시	해당 없음	
안 양 시	**시민참여소통위원회(가칭)**	9월 예정
평 택 시	해당 없음	
의정부시	해당 없음	
파 주 시	해당 없음	
시 흥 시	**시민협치위원회(가칭)**	9월 예정
김 포 시	해당 없음	
광 명 시	해당 없음	
광 주 시	**광주시민혁신 기획위원회(가칭)**	9월 예정
군 포 시	**100인 위원회**	향후 예정
이 천 시	**제2기 이천시 기획위원회**	향후 예정
오 산 시	**오산시민소통위원회(가칭)**	`19. 1월 예정
하 남 시	해당 없음	
양 주 시	**새로운 양주 소통위원회(가칭)**	9월 예정
구 리 시	**시장자문위원회**	
안 성 시	해당 없음	
포 천 시	해당 없음	
의 왕 시	**의왕시 미래위원회**	9월 예정
여 주 시	**여주시 시민위원회**	향후 예정
양 평 군	해당 없음	
동두천시	해당 없음	
과 천 시	해당 없음	
가 평 군	해당 없음	
연 천 군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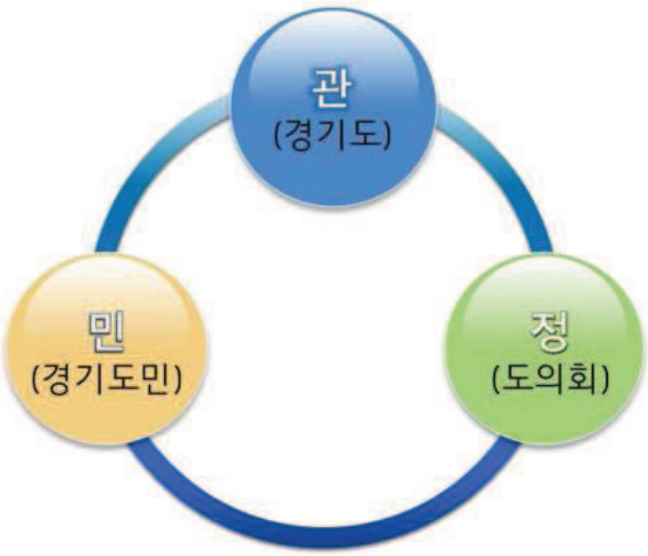
4 경기도형 협치의 파트너 및 체계도

❑ 협치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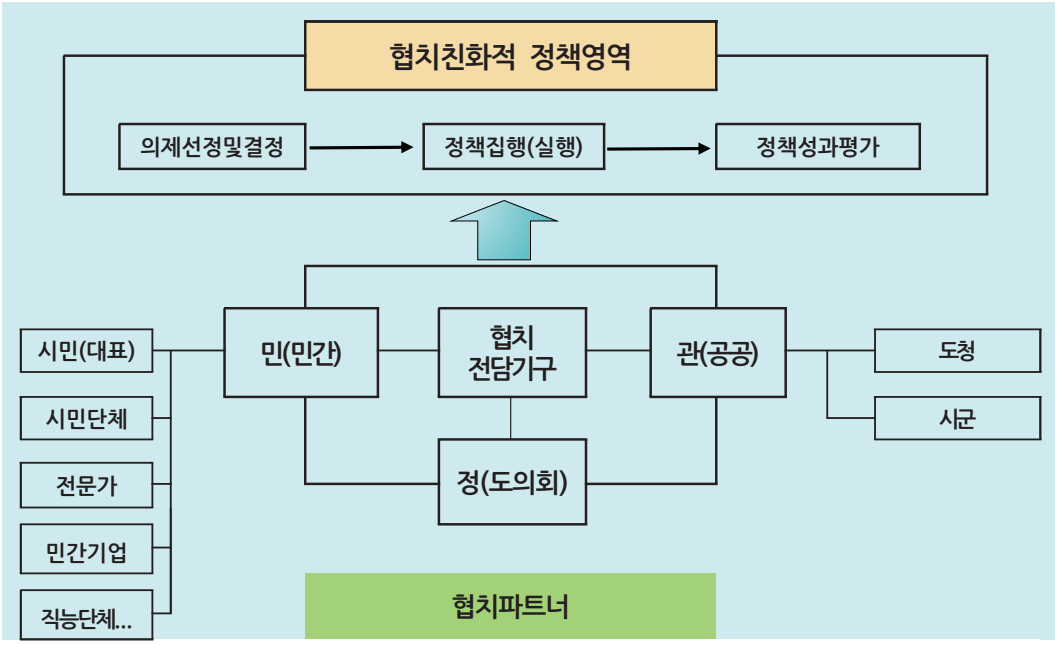
○ **"민"** 이란 경기도민, 경기도 내 시민사회조직(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복지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마을공동체 등), 사업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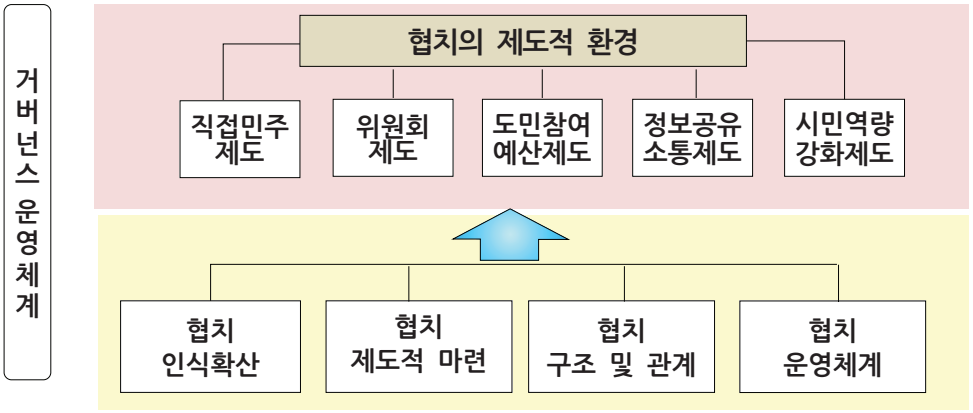
○ **"관"** 이란 지방정부로서의 경기도, 31개 시군

○ **"정"** 이란 도의회



❑ 협치 체계도





● 협치 제도적 환경

1. 직접민주주의 확대(도민청원 및 발안제도 도입/**공약** 1-②)
2. 위원회 제도 혁신(협치친화적 위원회 활성화/**공약** 2-⑦)
3.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공약** 1-③)
4. 정보공유 제도 확대(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공약** 1-③)
5. 시민역량 강화제도(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NGO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 갈등조정/**공약** 2-⑦, 8/160-①)

● **협치 인식확산 및 총괄 협치기구 구조**

1. 협치 인식 확산 및 총화 : 타운홀 미팅, 협치학교, 지방정치 축제 등/**공약** 1-①)
2. 협치 제도적 마련 : 총괄협치기구(경기도협치위원회 조례개정, 예산 등)
3. 협치 구조 및 관계 : 총괄협치기구(경기도협치위원회, 협치추진단, 31개 시군협치(정책)협의회/**공약** 2-⑤,⑥/ 영역 및 의제별 협치시스템 등)
4. 협치 운영체계 : 협치전담부서 설치 등

5 민선7기 경기도형 협치의 특징

❑ 문제해결 중심의 협치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경기도차원의 영역별, 의제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1개 시·군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 민선6기 서울시정도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를 추구하였으나 민간 중심으로만 구성된 협치추진단(경기도 민관협치 조례상의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질적인 성과지표 관리에 실패하고 행정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에도 실패함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의 거버넌스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도민 참여형 협치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9조 협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도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을 협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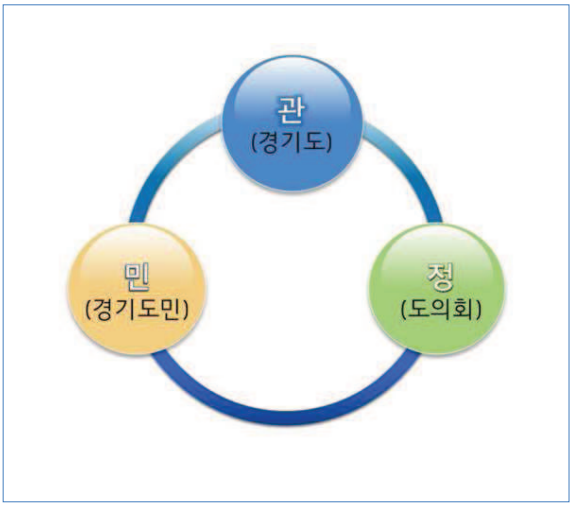
❑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

○ 경기도는 각 권역별 혹은 31개 시·군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며 지자체의 상대적 독자성이 강해 도가 전체를 총괄하면서도 시·군의 특색과 조건에 맞는 〈현장밀착형 협치〉와 기존 협치의 파트너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경기도는 온라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상적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 발안, 청원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형 협치〉

○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이나 시·군과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축제 등을 통해 도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참여형 협치〉와 주민의 정책결정 과정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이 예산 선정 참여권을 가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등의 〈주민참여형 협치〉

❑ 민·관·정 협치

○ 민-관, 정-관, 민-정의 개별적 협치가 아닌, 하나의 협치체계 하에서 민·관·정 3자의 상호유기적 협력 관계를 지향함



6 추진 프로세스(제안)

추진과제	공약사항	추진일정
1. 협치 추진체계 정립/ 협치추진전담체계 구축		
1-1. 협치 기본계획 수립		
1 협치활성화 연구용역		’18.下
2 협치활성화 기본계획 도출		’18.下
3 협치 실행계획 수립		’18.下
1-2. 문제해결형 플랫폼 구축		
1 경기도 협치추진단 구성		’18.下
2 의제별, 영역별 민간거버넌스 구축	공약 5, 6	’18.下
3 31개 시·군 거버넌스 구축	공약 5, 6	’18.下
1-3. 협치친화형 행정조직개편		
1 협치 전담부서 신설		’18.下
2 개방형 민간전문가 배치		’18.下
2. 협치시스템정착을 위한 기반 확보(18년)		
2-1. 협치 기본조례 제·개정		
1 기본조례 제·개정		’18.下
2 시행규칙 제정	협치추진단 설치 근거 확보	’18.下
2-2. 협치가치 공유 위한 교육체계 마련		
1 공공대상 협치교육 계획 수립		’18.下
2 민간대상 협치교육 계획 수립		’18.下
3 협치교육 기초·기본교육 진행		’18.下

추진과제	공약사항	추진일정
2-3. 민간거버넌스 역량 강화		
1 독립적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공약 106	'19.上
2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약 7	'19.上
3 시민사회 중간 지원조직 설립	공약 7	'19.上
3. 협치 시스템 기반 구축		
3-1. 협치친화적 (주민참여) 예산 운영체계로 혁신		
1 18년 추경예산 협치친화적 예산반영	공약 3	'18.下
2 19년 본예산에 협치친화적 예산반영	공약 3	'18.下
3-2. 협치친화적 민간위탁 제도 혁신		
1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		'19.上
2 위탁 유형별 평가 체계 마련		'19.下
3-3. 각종 위원회 협치친화적 혁신		
1 협치도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혁신	공약 7	'18.下
2 위원회의 핵심 기능 전환	공약 7	'19.上
4. 협치 시스템 가동		
4-1.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1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약 2,3,4	'19.上
5. 협치성과 평가 제도 구축		
5-1. 협치친화적 평가시스템 도입		
1 협치평가 계획 수립		'19.上
2 협치평가제도 실행		'19.下
3 협치 우수 공무원 포상 제도 마련		'18.下

7 시민참여위원회 제안 사항

❑ 협치추진단(또는 준비단) 구성 및 운영

(1) 구성

-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위원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통기획관실, 비서실 등 관련 부서 공무원
- 경기연구원 협치 관련 연구원
- 도의원 등으로 구성

(2) 기간

- 2018년 8월 ~ 협치 전담부서 설치 전까지

(3) 기능과 역할

- 전반적인 협치체계 구축계획 수립
- 협치조례 검토 및 개정안 마련 (시행규칙 포함)
- 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마련
- 협치 전담부서 역할과 업무분장 계획

참고자료

〈조례 제,개정 필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017-11-13 조례 제 57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경기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민”이란 도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도내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3. “관”이란 지방정부로서의 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치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③ 도지사는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치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도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치위원회의 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가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사람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3. 도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협치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의견 수렴 등) ① 협치회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4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협치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치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기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한다.

제1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11.13.〉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장
대변인실 활동 보고

1. 구성

○ 수석 대변인 : 김병욱
○ 대변인 : 김용
○ 간사 : 박문수

2. 활동방향

❍ 인수위의 對언론 채널을 대변인실로 단일화

- 인수위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오해 및 의혹을 차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인수위 관련 왜곡 및 부정적 언론 보도 관리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수위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감시, 정정보도 요청

❍ 언론인과의 원활한 소통 분위기 마련

- 평소 언론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인수위의 對 언론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인수위 분과 및 특위의 성과 홍보

- 총 14개 분과 및 특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수위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경기도청과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

- 도지사님의 원활한 도정 활동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함

3. 주요 활동내용

❍ 업무보고

(1) 업무보고 일정 및 내용

날짜	장소	시간	대상
6월 26일(화)	16층 소회의실	14:00~16:00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실

※ 부서 현황 보고 및 도청과의 협업 등에 관련한 토의

(2) 도청 취재 언론사 현황

○ 도청 상주 출입언론사 현황 : 총 116개사

본청	북부청	의회
66개사 88명 (18.6.18 기준)	107개사 125명 (18.6.12 기준)	50개사 54명 (18.6.8 기준)
* 중앙지 21개사 25명 * 경제지 11개사 12명 * 지방지 34개사 51명	* 중앙지 11개사 12명 * 경제지 7개사 8명 * 통신사 8개사 8명 * 방송사 8개사 10명 * 지방사 34개사 45명 * 지역케이블 2개사 4명 * 기타 37개사 38명	* 지방지 36개사 39명 * 방송 4개사 5명 * 통신 6개사 6명 * 케이블 4개사 4명

※ 총 언론사 수는 각 사별 중복 출입으로 본청+북부청+의회 총 수(223)보다 작음

○ 출입통보 : 총 136개사 183명

신문	방송	인터넷
70개사 91명	5개사 9명	61개사 83명

(3) 협업을 통한 성과

○ 도민 홍보 강화를 위한 매체 개발 아이디어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시스템의 사진 관련 의견 조율

○ 장기간 적체되고 방치되어 왔던, 경기도 유관 언론사 리스트에 대한 대대적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경기도 유관 언론사 리스트 정리 결과 및 현황

구 분	관리 대상 언론사 수
상주 출입 (본청+북부청+의회)	116개사
출입 통보 (미 상주)	136개사
보도자료 발송대상 (미 출입)	232개사
계	484개사

❍ 공문 발송 대상인 신규 언론사 발굴 완료

구 분	대상 언론사 수
한국기자협회	총 188개사 중 35개사
한국신문협회	총 53개사 중 1개사
한국방송기자협회	총 59개사 중 3개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총 88개사 중 54개사
계	95개사

※ 규모와 공신력을 갖춘 국내 각 언론협회 소속 언론사 중 보도자료 등 경기도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언론사 선별

❍ 대변인실 정례 브리핑

- 기간 및 일시 : 6/29(금)~7/13(금), 총15일간 7차례(매주 화, 수, 금 오전 10시)
- 참여 분과/특위 : 5개분과/ 3개특위/ 시민참여위 (총9개)
- 정례브리핑 순서

❍ 정례브리핑 일정표

	분과/특위	소통 주제
6/29(금)	농정/건설분과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농정/건설 관련 전반
7/3(화)	노동/경제/환경분과	노동/경제/환경 위원회 전반에 대한 기자들과의 간담회
7/4(수)	새로운경기특위	비젼 제시 및 민선 6기 도정 점검
7/6(금)	시민참여위	시민참여 위원회 현황 및 이슈 관련 전반
7/10(화)	교통대책특위 (10:00)	'새버스 준공영제' 보도자료 브리핑
	안전/행정분과 (10:30)	공약 검토 방향에 대한 브리핑 후 질문 받는 형태로 진행
7/11(수)	4차산업혁명특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보고 및 성과 홍보
7/13(금)	문화/복지분과 (10:00)	지난 11일 배포한 청년 정책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
	교육/여성분과 (10:30)	분과가 진행한 주요 안건에 대한 개괄 브리핑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 정례브리핑 사후 보고서 예시 (교통대책특위)

정 례 브 리 핑
- 교통대책특위편 (18/07/10(화)-
일시: 매주 화수금 (AM 10:00) 장소: 인재위 3층 브리핑룸
*대변인 : 김용 (010-5481-6722)
새로운 경기 위원회
● 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도자료 브리핑
■ 질문
황영민 기자(중부일보)
Q: 이미 부여된 버스노선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A:
· 37개 노선(5개업체, 버스 360여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장 예정
· 잘 운영되는 노선은 현행 유지
· 신도지, 택지개발지구 신설노선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
· 도가 모범사례를 만들고 시.군을 동참시키는 형태로 진행
이승구 기자 (경기일보)
Q : 경기교통공사 설립 시 철도국, 교통국 존치 여부
A : 경기교통공사는 철도, 도로를 아우르는 집행조직으로 철도국, 교통국은 존치될 것
성장욱 기자 (기호일보)
Q : 준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직접 지원 방식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아는데?
A :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질적으로 법 개정 필요. 표준임금 체계 만들것
나남준 기자 (인천일보)
Q : 버스업체 담합 시 대안은 있는지
A :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업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
강병호 기자 (OBS)
Q : 한 그래도 산하기관이 많은데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A :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
장기정 기자 (경인일보)
Q : 수도권 교통청과 경기교통공사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수도권 광역청과 경기교통공사는 다른 영역
광역 교통 인프라 관련 부분은 광역청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할 계획.
경기교통공사는 철도, 버스 등을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예정.
● 참석 위원: 김용 대변인, 유정훈·이용주·이용호 교통특위 전문위원
● 기자: 장기정·신지영 기자(경인일보), 이승구·김태희 기자(경기일보), 황영민 기자(중부일보),

[이미지 : 교통대책특위 정례브리핑 장면 및 내용]

❍ 각 분과/특위 정례브리핑 스케치

- **6/29(금), 농정/건설분과**

- 7/3(화), 노동/경제/환경분과

- 7/4(수), 새로운경기특위

- 7/6(금), 시민참여위

- 7/10(화), 교통대책특위

- 7/10(화), 안전/행정분과

- 7/11(수), 4차산업혁명특위

- 7/13(금), 문화/복지분과

- 7/13(금), 교육/여성분과

❍ 인수위 관련 미디어 기록 현황 (사진 및 영상촬영)

미디어 기록 촬영	인수위원회 전체 분과별 회의 기록 사진 촬영 총 20회 인수위원회 전체 분과별 회의 기록 영상 기록촬영 총 8회 현충원 참배 등 지사님 팔로우 사진, 영상 촬영 총 6회
사진 및 영상 언론 제공	언론 기사 배포 사진 제공 총 N회(이부분은 공보팀에서 확인기록) 가짜뉴스 기자회견 MBC 정오뉴스 영상 제공 인수위 전체회의 Jtbc 뉴스 영상 제공
자료정리	2010-2018 성남시장 재임기록 자료정리 2016-2017 19대 대통련선거 경선후보 기록 자료정리 2018 경기도지사 후보캠프 자료정리

❍ 새로운 경기 인수위 영상촬영 목록

날짜	시간	내용	장소
6월18일	9:30	새로운경기위원회 현판식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18일	10:00	새로운경기위원회 1차회의(모두발언 공개)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19일	15:00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의원총회 및 경기도당 의원교육	경기도의회 대회의실1층
6월20일	14:00	경기도 기초의원 당선자 교육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
6월26일	10:00	이재명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장 백종덕변호 기자브리핑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6월27일	14:00	인수위업무보고_시민참여위원회_안전행정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8일	10:00	새로운경기위원회 4차회의(모두발언공개)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9일	14:00	인수위업무보고_교육여성분과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7월1일	10:00	이재명경기도지사 수원현충탑 참배	수원현충탑
7월1일	10:50	취임식 선서및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태풍대비)	도청재난상황실
7월4일	10:00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융합기술원 1층
7월4일	10:30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R&D센타 2층 대회의실
7월5일	11:30	경기노상정대표자간담회_인수위_이용득위원장발언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7월5일	14:00	서울시시민소통기획관초청특강_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인수위 관련 미디어 기록 (영상촬영)]

❍ 새로운 경기 인수위 사진촬영 목록

날짜	시간	내용	장소
6월18일	9:30	새로운경기위원회 현판식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18일	10:00	새로운경기위원회 1차회의(모두발언 공개)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19일	15:00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의원총회 및 경기도당 의원교육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1층
6월20일	14:00	경기도 기초의원 당선자 교육	경제과학진흥원 3층경기홀
6월21일	11:00	인수위 회의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2일	14:00	안전행정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대회의실
6월22일	14:00	노동경제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소회의실
6월22일	14:00	농정건설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6월26일	10:00	이재명선대위 가짜뉴스대책단 고발 관련 기자브리핑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6월26일	9:00	여성분과위원회 정책회의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6월27일	14:00	인수위업무보고_시민참여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7일	15:00	인수위업무보고_안전행정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8일	10:00	새로운경기위원회 4차회의(모두발언공개)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8일	11:00	기획재정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6월28일	15:00	노동경제환경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소회의실
6월28일	14:30	농정건설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6월28일	15:00	문화복지분과 업무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6월29일	14:00	인수위업무보고_교육여성분과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6월29일	10:00	기본소득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대회의실
7월1일	10:00	이재명경기도지사 수원현충탑 참배	수원현충탑
7월1일	10:50	취임식 선서및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태풍대비)	도청재난상황실
7월4일	10:00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융합기술원 1층
7월4일	10:30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R&D센타 2층 대회의실
7월5일	11:30	경기노상정대표자간담회_인수위_이용득위원장발언	차세대융합기술원 16층
7월5일	14:00	서울시시민소통기획관초청특강_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차세대융합기술원 2층

[인수위 관련 미디어 기록 (사진촬영)]

❍ 보도자료 배포 현황 (별첨)

- 6/18(월)~7/19(목) 보도자료 목록 (총 37개)

6/1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본격 가동
6/19(화)	이재명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질적 협치 실현하겠다"
6/20(수)	민선7기 경기도정 윤곽 담은 이재명 표 공약 밑그림 '미리보기'
6/21(목)	새로운 경기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6/22(금)	이재명 인수위 민선7기 경기도 로드맵 그린다...첫 업무보고 착수
6/25(월)	"경기도에 직접 정책제안해볼까?"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개설
	"취임식 아닌 임명식" 남다른 이재명 취임식, 참신하고 소박하게 치른다
	새로운 경기 특위, '수탁업체 졸속 선정' 중단 요청... 공정한 도정 위해 민원수렴 및 적극 조치
6/26(화)	'성평등 부재한 경기' 지적... 성평등 도정 위해 쇄신 나선 이재명 인수위
6/27(수)	2일 만에 정책제안 1,700건 돌파... 경기도민 참여 열기 '폭발적'
	조응천 "유해 소독제·살충제 제한하여 경기도민 건강권 지켜야"
	김경협 "경기도, 공항버스 문제 개선 의지 없다" 일침 … 전향적 대책 마련 요구
	민선7기 경기도,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 시대' 개막
6/28(목)	경기도 산하기관 고위직 채용시스템 개혁 필요"공무원 비중 너무 높아... 민간전문가와 균형 맞춰야"
6/29(금)	이재명 지사 첫날 행보에 담긴 의미는? '균형발전'과 '안전'
6/30(토)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식 전격 취소…"모든 역량, 재난 대비에 집중할 때… 긴급 취소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
7/2(월)	경기도 인수위'새로운경기위원회'에 일주일 만에 정책제안 1만2천 건 모여
7/3(화)	이재명 인수위,'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6곳'여성 임원 제로'... 경기 인수위 여성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나선다

7/4(수)	경기도 인수위,‘직접민주주의’모델 구체화 나선다... ‘시민참여 정책 실현’ 특강 개최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 구체화
	민선7기 경기, 통일경제특구 등 '경기북부 마스터플랜' 첫 걸음 내딛어
7/5(목)	신개념 노사관계 컨트롤타워‘경기도형 노동회의소’설립 논의
	경기도 인수위, '촛불 정신 계승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현할 것'... 경기도형 시민참여 모델 구축 구체화
7/9(월)	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민생경제 범죄’소탕 나선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KBS)
	새로운경기위원회, 경기지역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지원 시스템 강화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7/10(화)	새로운경기위원회,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 (중앙일보, 한겨레,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道,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한겨레,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7/11(수)	새로운경기위원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경기 시흥시 스마트시티로 도약...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실증도시 선정 (아시아경제,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7/15(일)	법망 사각지대 놓인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조례 마련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소방관 동행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
	민선7기 경기도, 전국 최초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민선7기 경기도,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한다
7/17(월)	30일간 달려온 이재명 표 경기 인수위 활동 톺아보기
7/18(수)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19일 개최…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道 역할론 모색
7/19(목)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비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제시
7/22(일)	경기도정 나침반 될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24일 개최
7/24(화)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새로운경기위원회' 24일 활동 마무리

❍ 대표적 언론 스크랩

(1)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닻 올렸다 (경기일보)

경기일보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001면 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위원회' 현판식에서 조정식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과 현판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안철민기자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 닻 올렸다

이재명 "공직자는 지배자 아닌 국민 대리인"
인수위 본격 가동… 도정 변화와 혁신 예고
7개 분과·6개 특위 구성, 시민참여위도 활동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준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새로운 경기', '평화시대의 중심'을 기치로 내세운 인수위의 첫 발걸음에 따라 도정 변화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이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는 이날 수원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현판식, 1차 회의 등 공식일정을 진행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20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상임위원장 조정식 의원(시흥을·4선), 공동위원장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 부위원장 정성호 의원(양주·3선) 등이 중심을 잡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평화통일특구·경제환경·새로운경기 등 이 당선인의 도정 변화 의지를 담은 7개 분과·6개 특위·시민참여위의 활동을 준비하며 도정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꼈다"며 "인구 1천300만 명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에 걸맞은 위상, 자부심,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혁신적으로 그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 새로운경기특별위원장은 경기도의 변화를 위한 지제·조직 개편, 이용득 경제환경분과위원장은 노동 공약에 대한 전폭 지원, 소병훈 농정건설분과위원장은 북부 및 동부 지역의 규제 개혁, 박정 평화통일특구위원장은 평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평화경제 선구자 역할, 최순영 시민참여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도민 참여 독려 등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공직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의 대리인"이라며 "올해가 경기정명 천 년인 만큼 경기도의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한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수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실용적인 구상은 협치로 가야 한다. 연정도 가치가 있지만 선출된 권력 간 이뤄지는 특성상 한계가 있다"며 "이를 뛰어넘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분과별로 실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 현안사항 등을 파악해 당선인 공약 중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추진 과제를 정리한다. 또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민선 7기의 틀을 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규대·이승구기자 관련기사 3면

(2) 새로운경기특위 (6/25일(월))

이재명 인수위,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신규 사업자 선정 중지 요청, “수탁업체 졸속 선정 민원 접수”(경인방송)

경기도 청사. <사진= 경인방송 DB>

이재명 인수위,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신규 사업자 선정중지요청, “수탁업체졸속선정 민원접수”

홍성민 2018-06-25 경기, 사회, 정치

좋아요 539명이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하기
좋아요 1개 Share 트윗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 경기특별위원회)는 최근 진행 중인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 졸속 추진 의혹이 제기돼 절차 중지와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김용 이재명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25일)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신규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 시기가 4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 당선인 취임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같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다음달 2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지만, 현 남경필 도지사 임기 만료 직전 서둘러 입찰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의 현 운영사업자 계약만기 시점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소유주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경기도지사)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4개월가량 이른 이달(6월1~27일) 조기 추진했습니다.

김용 대변인은 “민선7기 지자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은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사업 등은 결정을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 당선인 측과 사전협의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hsm@ifm.kr

(3) 농정/건설위 (7/2일(월))

“미뤄졌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10월 첫삽’”(인천일보)

인천일보

HOME > 정치 > 경기

미뤄졌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10월 첫삽'

김중래 | 승인 2018.07.02

> 도-여주시-민간컨소시엄 이달중 협약 체결

차일피일 미뤄졌던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1일 이재명 경기지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에 민간컨소시엄 '펫토피아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참여하는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테마파크사업 추진 동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도는 이달 중 여주시, 민간컨소시엄과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 도와 여주시, 민간컨소시엄은 지난 2월 반려동물 테마파크 본격조성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5월로 한차례 미뤄진 후 또 다시 연기된 바 있다.
이는 민간컨소시엄인 '펫토피아컨소시엄'의 주관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대표 공석 등의 이유로 협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동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안건 통과로, 도는 3자 협약 이후 10월 공공구역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아울렛 인근 16만5000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000여㎡)과 민간구역(7만여㎡)으로 나눠 조성한다.

358억원이 투입되는 공공구역에는 유기견 1000마리를 보호하고 연간 1만여마리의 유기견을 분양할 '유기견 보호동'과 청소년 인성교육 및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위한 '반려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민간구역에는 민간컨소시엄이 200여원을 들여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12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00여면의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등을 만든다.

소병훈 인수위 농정건설분과 위원장(민주당·경기광주갑)은 "조만간 경기도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반려동물과의 휴식 공간 제공, 반려동물 훈련 및 정보공유 기회의 증대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및 부대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래

(4) 평화통일특구특위 (7/4일(수))

‘경기북부 마스터플랜' 전문가 세미나... "통일특구 준비해야”"(뉴시스)

NEWSIS 전국 > 경기북부

'경기북부 마스터플랜' 전문가 세미나..."통일특구 준비해야"

배성윤 기자 | shinybae@newsis.com

등록 2018-07-04 19:59:25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경기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07.04.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가 4일 오전 경기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주재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 평화와 번영의 중추가 되도록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접경지 관광 인프라와 연결하면 첨단산업과 관광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외국 자본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통일경제특구는 '평화의 시대'라는 지금껏 가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일·통합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기획재정위 (7/4일(수))

"'모든 사람 일정수준 이상 보장'... 李지사 기본소득 로드맵"(경인일보)

경기일보

2018년 7월 5일 목요일 006면 종합

'모든 사람 일정수준 이상 보장'… 李지사 기본소득 로드맵

인수위, 핵심공약 '기본소득제' 도입 운영방안 토론회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kyeongin.com 경인일보

(6) 노동경제환경위 (7/5일(목)

"노사관계 컨트롤타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되나"(뉴스1)

HOME 전국 경기남부

노사관계 컨트롤타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하나

인수위, 노동정책 담당부서 '과'에서 '국'으로 확대 건의

한민재 기자 승인 2018.07.05 17:46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지역 노·사·정 관계자들이 컨트롤타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등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현재 1개 과로 구성된 도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7) 시민참여위 (7/5일(목))

"도지사직 인수위, 경기도형 시민참여 모델 구축 본격 시동"(뉴스1)

전국 > **경기**

도지사직 인수위, 경기도형 시민참여 모델 구축 본격 시동

최순영 위원장 "마을에서 이뤄내면 국가 바뀐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초청 강연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7-05 20:46 송고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가 5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시민참여 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News1 진현권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최순영)가 5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시민참여 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확대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 정책의 현재를 살피고 새로운 경기도형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순영 시민참여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장 핵심 공약은 도민이 도정을 함께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도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경기도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8) 안전/행정 위원회 (7/9일(월))

"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민생경제 범죄'소탕 나선다"(KBS)

KBS

2018-07-09

이재명 인수위,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입력 2018.07.09 (21:41) 수정 2018.07.09 (21:42) 뉴스9(경인)

(9) 교통대책특위 (7/10일(화)):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생태계 전환'플랜 발표"(경기신문)

경기일보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001면 종합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생태계 바꾼다

경기도인수위 '밑그림'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경기위원회)가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인수위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는 10일 오전 자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세부계 신설될 교통공사는 ▲세경기 준공영제 도입·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올해 (광역을 통해) 공기업 설립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명칭인전부와 협의를 하여면 도청 내에 국장(1급) 직위의 과 단위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 면허는 최소에 원래 한정면허로 환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과 관련, "시외면허 수위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차량 이용보'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안산·의남·경기북부권은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령 정책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들 업체의 면허 원상복구 뒤에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앞서 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지난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의남·안산·경기북부권 4개 권역, 3개 버스회사에 시외면허를 발급해줬다.

이로써 남경필 전 지사의 핵심교통정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폐지된다. 대신 노선 입찰제 중심의 '세경기 준공영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다만 특위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선입찰제'는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노선을 넘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준공영제는 업체 간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다.

특위 유정훈 전문위원이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공공이 노선권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했다"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앞으로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효과수익 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노선과 벽지지구 신설노선 등을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 잡아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입찬형 노선제도 도입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최준석기자 schoi@

(10) 4차산업혁명특위 (7/11일(수))

“경기도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전자신문)

전자신문 etnews

경기도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

발행일 : 2018.07.11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92억원을 투입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스마트시티 핵심시설인 '데이터 허브센터'가 설치되며 리빙랩을 활용해 에너지·환경·복지 분야 신사업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실증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시흥시가 자율제안 과제로 제안한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버스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기도에 적합한 신산업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의 조정식 상임위원장(시흥, 국회의원)과 인수위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이원욱 위원장(화성, 국회의원)의 노력이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선정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원욱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장은 “지난 한 달 여간 이재명 도지사, 조정식 상임위원장과 경기도의 스마트시티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부기관을 적극 설득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경기도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한 가운데 시흥시가 최초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11) 문화복지위 (7/11일(수))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 3종세트' 시행”(연합뉴스)

2018. 8. 31.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인쇄하기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 3종세트' 시행

기사입력 2018/07/11 17:28 송고

인수위 "청년국민연금 등 보편적 청년복지 정책반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청년배당, 군복무 청년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묶은 '청년정책 시리즈'를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자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청년은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청년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모두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해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12) 교육여성위원회 (7/15일(일))

“이재명 인수위 “무상교복 경기 전역 확대 시행””(한국일보)

이재명 인수위 “무상교복 경기 전역 확대 시행”

이종구기자 등록: 2018.07.15 16:14 수정: 2018.07.15 20:44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 확대키로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경기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의 교육여성분과(위원장 정춘숙)는 2019년도부터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편성, 현재 중학교 신입생으로 한정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은 210억원(도교육청 140억원, 도 7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무상교복 사업 확대를 위해 연내에 도 교육청 조례 제정과 함께 도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시·군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성남시 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당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성남 3대 무상복지’로 알려져 있다.

이 지사는 6·13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13) 평화경제특위 (7/18일(수))

"'평화시대의 경기도' 19일 정책토론회"(뉴시스)

NEWSIS 수도권 > 경기남부

'평화시대의 경기도' 19일 정책토론회

김광복 기자 | kbkim@newsis.com

등록 2018-07-18 14:59:49

【수원=뉴시스】수도권취재팀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도민들이 모여 논의를 갖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남북평화정착' 활동을 전개해 온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평화안보특별위원회 등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시작으로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도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DMZ 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군부대주변 지역 지원방안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환황해경제벨트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진다.

정책 제안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해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평화 정책을 검토한 새로운경기위원회 3개 특위의 활동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평화번영 정책 점검 및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진흥 행정2부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통일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 [별첨] 대변인실 보도자료 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본격 가동

○ “문재인 정부와 손발 맞춰 ‘나라다운 나라’ 일조하며 지방분권 실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6층에서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를 본격 가동했다.

또한 이 당선인과 약 20명의 주요 위원들은 현판식 직후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곧바로 인수위 업무에 착수했다.

이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경기도가 일조하겠다"며 "31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갖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의 대리인이다"며 “주어진 권한과 예산, 그리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기회가 오로지 도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인수위원들에게 “올해로 경기정명 천 년인 지금, 경기도의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한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수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꼈다”며 “인구 1,300만 명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에 걸 맞는 위상과 자부심,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분과별로 실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여 당선인 공약 중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추진 과제를 정리한다. 또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민선7기의 큰 틀을 다잡는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조정식(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이한주(가천대 부총장) 공동위원장, 정성호(국회의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 6개 특별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의회와 함께 실질적 협치 실현하겠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 같이 밝혀
○ 도의회와 도 집행부 사이, 형식적 협치 넘어 실질적 협치 강조
○ 촛불혁명의 연장선 … 국민들 기대 부응하도록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 함께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협치를 핵심 기치로 삼아 도의회와 함께 정책과제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 사이에 협치점을 만들고 형식적 협치가 아닌 실질적 협치를 실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일상에 까지도 협치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참석한 도의원 당선인들에게 “많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위 ‘가성비’ 높은 정책구상에는 현장에 계신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임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통 및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부패한 국가권력을 교체해낸 촛불 혁명의 연장선”이라 평가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다시없을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국민들이 기존의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이 당선인을 비롯해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및 경기도의회 도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선7기 경기도정 윤곽 담은 이재명 표 공약 밑그림 '미리보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등 경기도정 초석 될 5대 비전 담겨
○ '효율성 강화'에 초점 맞춘 재원 조달 방안도 내놓아
○ 인수위, 해당 내용 골자로 구체적인 세부 이행 방안 마련할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민선7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이 되는 공약 기초안을 수립하고 도정 목표와 도정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 측 정책연구단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5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도 구체적이다. 정책연구단은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등 도정 목표 별 16가지 전략을 세웠다.

도정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공약은 총 185가지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공을 거두었던 '가성비' 높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책연구단은 공약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소요 재원이 4년 간 1조 6,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 평균 4,150억원 규모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약 4조 300억원이다.

1조 6,600억원의 재원은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000억원, 연정 사업 조정으로 4,000억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000억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원, 기타 100억원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 하에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고 '3대 무상복지'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실현한 바 있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와 전략을 근간으로 공약의 실천 가능한 세부이행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경기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 조정식 위원장 주재 2차 회의 열고 업무 현황 점검 및 취임식 논의
○ 취임식에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한반도 평화의 중심인 경기도' 상징성 담기로
○ 깜짝 방문 김진표 의원 "인수위 핵심은 공약 이행 프로세스 구축 … 겸손한 자세" 강조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21일 오전 조정식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될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각별한 당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등을 맡아온 김 의원은 자신의 인수위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며 인수위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는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리 겸손해도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 참고) 민선7기 경기도정 5대 목표 및 16대 전략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1.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2.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3.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1.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2.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3.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 경기도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1.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2. 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3.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1.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2.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3.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2. 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3.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4.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이재명 인수위 민선7기 경기도 로드맵 그린다...첫 업무보고 착수

○ 22일부터 1주간 경기도청 각 실국과 두 차례씩 회의 진행
○ 기존 사업 검토 및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 당선인 철칙대로 '실질적 구현 방안 수립'에 초점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조정식 상임위원장)가 22일부터 경기도청 각 실국과 함께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행정분과, 문화복지분과, 노동경제환경분과, 기획재정분과, 농정건설분과, 교육여성분과 등 인수위 내 총 6개 분과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위치한 인수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내 유관 부서들과 각 두 차례씩 회의를 갖는다.

22일과 26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청의 기존 사업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된다.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간다.

안전행정분과(조응천 위원장)는 22일과 27일 각각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내 안전·행정 분야, 재난안전본부, 북부재난안전본부와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노동경제환경분과(이용득 위원장)는 경기도청 경제실 및 공유시장경제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농정건설분과(소병훈 위원장)는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건설국 및 건설본부, 철도국, 교통국, 도시주택실을 차례로 만나 회의를 갖는다.

26일과 28일 양일간 문화복지분과(문진영 위원장)는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내 복지 분야와, 기획재정분과(윤후덕 위원장)는 경기도청 감사관 및 연정협력국, 대변인실 및 소통기획관, 균형발전기획실 내 기획·재정 분야, 기획재정실과, 교육여성분과(정춘숙 위원장)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내 여성 분야와 각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이 당선인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약 이행률은 민선 5기 96%, 민선 6기 94%다. 이 당선인이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공약한 정책의 실질적 구현 방안 수립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임식 아닌 임명식” 남다른 이재명 취임식, 참신하고 소박하게 치른다

○ 내달 2일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 규모는 소박하게
○ 당선인 아닌 주권자 관점에서 ‘취임식’ 대신 ‘임명식’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2일 11시 남다른 장소에서 참신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취임식의 행사명은 ‘새로운 경기, 도지사 임명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이 당선인 관점에서 당선인을 주체로 한 용어라면 ‘임명식’은 주권자 관점에서 당선인을 객체로 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뽑은 머슴’이라는 이재명 당선인의 철학이 ‘임명식’이라는 도민 관점의 언어로 표출된 셈이다.

도민의 참여에 초점을 둔 임명식 행사의 면면도 참신하다.

13인의 경기도민은 임명식에서 각자가 직접 쓴 나만의 임명장을 이 당선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도민이 작성하고 수여하는 임명장은 25일 오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임명자로 선정된 13인 뿐 아니라 도민이라면 누구나 임명식에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7th)에서 29일 17시까지 접수하면 온라인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임명식이 경기 북부에 위치한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것도 남다르다.

김용 인수위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임진각에서 임명식을 여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성실한 실천으로 구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장소와 달리 행사는 매우 소박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귀띔이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연주회 등의 형식 및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는 대신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밴드 연주와 댄스 등 공연을 펼친다. 역시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함께하는 평화기원식’ 퍼포먼스도 계획돼 있다.

이재명 당선인의 특징인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임명식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인수위 측은 “민선7기 경기도가 나아갈 길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며 “임명식은 새로운 경기도를 도민과 함께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기도의 바람, 일곱자로 말해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약속대박”, “다시쓰는경기도”, “도민과함께직진”등 새로운 민선7기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모이고 있다.

새로운 경기 특위, '수탁업체 졸속 선정' 중단 요청
공정한 도정 위해 민원 수렴 및 적극 조치

○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졸속 선정 민원 접수... 무리한 추진 및 문제점 발견해 중지 및 재검토 요청
○ 민선 6기 임기 말 인사, 인·허가, 대규모 사업 계약 전면 조사 요청
○ 공정하고 깨끗한 도정 위해 폭넓은 도민 의견 청취 및 검토 예정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중 '새로운 경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임기 말에 졸속 추진되는 수탁업체 선정 관련 민원을 접수, 선정 절차 중지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지난 21일 한 도민으로부터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해당 사업이 2018년 11월부터 실시되어 계약시기가 4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직전인 이달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파악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방침 결정 및 사업 추진에 임해도 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월드컵스포츠센터 사업자 선정은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9월에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은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의 경우 결정을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 당선인 측과 사전협의 후 조치'하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자 취임 후 사업자 선정을 결정하거나 최소한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재단 측은 이러한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이 사업 수탁업체 선정이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돼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또한 경기도청 및 관련 산하기관의 인사,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선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해당 사업 추진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성 △운영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상가임대차보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항 삭제 여부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직접 정책제안해볼까?”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개설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구현 첫 걸음 내딛어
○ 지역 · 분야별 정책제안 수렴 및 도민참여 캠페인 진행

경기도민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웹사이트가 25일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도입,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SNS소통관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새로운경기위원회’ 플랫폼 구축이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소통과 참여라는 당선인의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지역 및 분야별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광장’, 지난 16년간 보수정권의 구태와 부패를 신고하는 ‘도정핫라인’,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이재명 도지사 임명장 수여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정핫라인’을 통해 16년간의 보수정권 하에 이루어진 인사 및 채용비리, 인·허가 및 사업 관련 비리, 예산 남용 및 횡령 등의 내용을 바로 제보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 접수된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은 경기도 행정뿐만 아니라 도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과의 협치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도민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경기위원회는 그동안 구호로만 그쳤던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정책제안은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www.newgg.org)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민들이 제안한 지역 · 분야별 정책은 인수위원의 검토를 거쳐 경기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평등 부재한 경기’ 지적 … 성평등 도정 위해 쇄신 나선 이재명 인수위

○ 민선6기 ‘경기도 공공기관 여성 54% 성폭력 경험, 경기도 성평등지수 9위로 폭락’

○ 인수위 교육여성분과 “성차별 적폐문화 청산 위한 근본적 쇄신 계획 수립” 촉구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교육여성분과(위원장 정춘숙)가 26일 오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과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성평등 도정 구현을 위한 쇄신에 박차를 가했다.

인수위 교육여성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노동자의 54%가 성희롱·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는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경공노총)이 지난 3월 실시 및 발표한 ‘공공기관 성폭력 실태 조사’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다.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조사 결과는 성폭력 없는 환경 구축 및 성평등 구조 개혁을 위한 민선 6기의 고민과 실천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풀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차별 적폐문화 청산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지난 5월 25일 “경기도의 성평등 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하위권에 머문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차별과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등 도내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성평등 지수는 201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 중 1위였으나 민선 6기에 들어선 2014년 5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15·16년 9위로 폭락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성평등위원회 강화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50%로 확대 △공공부문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교육여성분과는 이 같은 이 당선인의 성평등 공약 기조에 발맞춰 △젠더폭력과 성차별 없는 경기도 △유리천장·유리벽 없는 경기도 △혐오표현과 성 비하 없는 경기도 등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실천 전략을 수립해나가게 된다.

교육여성분과와 경기도청 여성가족과의 2차 업무보고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선7기 경기도,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참여 시대' 개막

○ 최순영 시민참여위원장 “연정 넘어 당·정·민 함께하는 협치의 시대 맞이했다” 강조
○ 이재명의 직접 민주주의 5대 공약 실현하여 시민 생생한 목소리 도정에 반영할 것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최순영)가 27일 오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청 관련부서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시민참여 도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최순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경기도는 연정을 넘어 당·정·민이 함께하는 협치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조직개편, 조례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부실했던 경기도의 시민참여 정책을 언급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획기적인 도정 쇄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금주 중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시민을 모집,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전개하는 한편, 내달 서울시청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공개강좌를 열 계획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경기도 각 권역별로 개최하고, 시민들이 보내온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경기도청 SNS 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공공 데이터 공개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구성으로 31개 시·군 협치 강화 △경기 지방정치축제 개최를 통한 갈등 조정과 협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의 정책제안, 도정 핫라인 등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 및 지역·부문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담 인력 등을 두고 이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해나간다.

조응천 “유해 소독제·살충제 제한하여 경기도민 건강권 지켜야”

○ 조응천 인수위 안전행정분과 위원장, “경기 전역에서 유해성 방역제품 제한 방안 모색” 촉구
○ 안전행정분과, 31개 기초단체 인체 유해물질 사용 현황 전수조사 등 도민 건강권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착수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가 27일 오전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그동안 경기도청 방역재료로 사용되었던 화학약품에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됨을 파악, 도민의 안전성 확보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기도청에서 소독제로 쓰여 온 A 제품은 물 95%와 염화벤잘코늄 5%로 구성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쓰여 사회적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염화벤잘코늄은 식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이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공개한 성분이다.

또한 경기도청에서 살충제로 사용한 B 제품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람다싸이할로스린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람다싸이할로스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U.C.-Berkley)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들이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서 조사대상인 6개 화학물질 중 맹독성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성분이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체 유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긴급 실시 △친환경 방역제품 연구·생산·사용 업체 대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조응천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최근 라돈침대까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방역제품을 경기도 전역에서 제한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만에 정책제안 1,700건 돌파 … 경기도민 참여 열기 '폭발적'

○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 가동 이틀 만에 방문자 1만 명, 정책제안 1,700건, 비리 제보 50건 이상
○ 분야별 교통대책 140건, 지역별 고양시 200건… 도민들의 구체적인 현안 요구 이어져
○ 인수위, 밀려드는 정책제안에 즐거운 비명... 높은 참여 열망이 새로운 경기도 만드는 핵심동력 될 것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www.newgg.org)를 가동한 가운데 개설 이틀(27일 11시 기준)만에 방문자 수 1만 명, 정책제안 1,700건을 넘어서는 등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바람이 모이고 있다.

분야별 정책의 경우 인수위원회의 각 분과·특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교통대책에 가장 많은 140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고, 다음은 교육·여성, 노동·경제·환경 순이었다.

지역별 정책제안에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7호선 양주신도시 원안 착공 등 도민들의 생생한 요구가 담긴 구체적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된 지역은 고양시로 이틀 새 200건 이상 접수됐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는 정책제안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핫라인으로 제보하는 ‘도정 핫라인’도 있다. 기존 도정에 존재했던 인사 및 채용비리, 인허가 및 사업 관련 비리, 예산 남용 및 횡령 등을 비공개로 제보하는 기능이다. 부당함을 감내해왔던 도민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부정부패와 갑질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정 핫라인에 올라온 제보도 양일간 50건 넘게 수집됐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도민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해당 플랫폼의 상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밀려드는 도민들의 제안에 인수위는 업무량이 크게 늘었지만,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민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촛불혁명과 함께 대두됐던 ‘시민참여’의 강렬한 요구가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인수위는 그동안 이 당선인의 강점으로 꼽혀온 진정성, 소통, 실행력 등에 도민들이 큰 기대감을 지니고 있어 이같이 이례적인 참여 열기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까지 접수되는 도민들의 각종 정책제안을 전문 인수위원의 검토를 거쳐 경기도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협 “경기도, 공항버스 문제 개선 의지 없다" 일침 … 전향적 대책 마련 요구

○ 김경협 인수위 교통특위 위원장, 경기도의 공항버스 문제 개선 의지 부족에 강도 높은 지적
○ 인수위 교통특위 “개선방향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 정책 재검토 불가피” 강조
○ ‘교통이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 전반적 교통정책 점검 추진 예정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교통특위)가 경기도에 공항버스 면허전환 관련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정 촉구했다.

교통특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는 ‘일반면허 발급 취소 및 한정면허로 원복’ 가능성을 묻는 교통특위의 질의(자료요청)에 “취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위원장은 27일 교통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특히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신규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논란, 한정면허 회수과정의 재량권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산재된 만큼 개선이 가장 시급한 주요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자료는 물론 두 차례 진행된 업무보고 어디에서도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라며 "경기도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엄정 촉구한다.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통특위는 ‘교통이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라는 공약기조에 맞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실시 △경기교통공사 설립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교통공약 이행 방안 수립 및 도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식 전격 취소
“모든 역량, 재난 대비에 집중할 때...긴급 취소에 도민 여러분께 송구”

○ 도지사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태풍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회의 긴급 소집
○ ‘도지사 임명식’ 등 예정된 일정 취소… 재난상황실서 간소하게 취임 절차 밟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기도지사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긴급 재난안전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이 알려진 지난 29일, 이에 대비하는 재난안전대책보고를 긴급 지시했다.

30일에는 2일로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경기도 및 인수위는 상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취임식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 당선인은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10시 수원 현충탑 참배 후 곧바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로 이동, 간소하게 취임 절차를 밟은 뒤 긴급 소집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지휘할 방침이다.

회의는 도지사, 부지사 및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태풍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김용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북상 중인 태풍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재난 대비에 집중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며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도지사 임명식 참석을 기다려 오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취소된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사전에 참여 신청한 도민 등 10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주권자의 관점에서 도민들이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임명식’ 형태로 2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키로 예정돼 있었다.

평소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해온 이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이 당선인은 당초 임명식을 마친 2일 오후 안산에 위치한 ‘416기억교실’을 방문하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더욱 시급한 도민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이 역시 보류하게 됐다.

경기도 인수위에 일주일 만에 정책제안, 1만 2천 건 모여

○ 개시 일주일 만에 정책제안 1.2만 건, 경기도정 비리 관련 제보 92건 접수
○ 분야별 제안은 교통대책〉교육여성〉안전행정, 지역별 제안은 수원〉양주〉안양 순으로 많아
○ 연간 국민신문고 접수 제안 8.4만 건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현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픈 일주일 만에 1만 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되는 등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로 가득 메워지고 있다.

2일 새로운경기위원회(위원장 조정식)에 따르면, '새로운경기위원회' 플랫폼을 선보인 지난달 25일부터 2일 15시까지 12,053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 제안은 교통대책(902건), 교육여성(659건), 안전행정(183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시(2,904건), 양주시(1,595건), 안양시(1,216건)가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이 약 8.4만 건임을 감안하면 단 일주일 만에 광역자치단체에 1만 건 이상의 제안이 쏠린 것은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지난 경기도정의 비리 등을 제보하는 '도정 핫라인'에도 92건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렇듯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어오면서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접수된 제안들은 인수위의 각 분과 및 특위에서 검토 및 선별 과정을 거쳐 경기도정의 차후 정책에 반영될 방침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관이 서로 소통할 창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주주의, 도민과의 소통, 정책의 당사자성 등을 중요시하는 만큼 인수위도 도민의 목소리와 도정을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www.newgg.org)를 통해 분야별⁞⁞지역별 정책제안 및 제보가 가능하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6곳‘여성 임원 제로’
경기 인수위 여성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나선다

○ 경기 산하 공공기관 네 곳 중 한 곳은 여성 임원 전무, 평균 여성임원 비율 14% 불과
○ “‘여성임원 임용목표제’ 도입 등 여성의 대표성 강화 방안 적극 마련 필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6곳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가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곳에서 기관장, 이사(비상임 포함), 감사 등의 임원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은 킨텍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모두 6곳이다.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 368명 중 여성은 53명으로 그 비율 역시 14.4%에 불과하다.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43.8%)이며 경기도의료원(30.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25일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정책 메시지를 통해 “도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고, 고위직 여성 인력을 최대한 늘리도록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경기도의 현황을 검토한 인수위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도정부터 여성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를 위해 연차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산하 공공기관 역시 연차별 ‘여성 임원 및 관리직 임용목표제’ 도입 등 공직 전반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기본소득위원회’ 필요성과 역할 및 구체적 설치 운영 방안 논의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는 4일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위원장 윤후덕)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겸 인수위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상공인 대표, 청년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한다.

토론회는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상재 기획재정분과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개 형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정치 철학인 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 경기, 통일경제특구 등'경기북부 마스터플랜' 첫 걸음 내딛어

○ 박정 “통일경제특구는 평화시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축... 수도권과 평양 잇는 가교 역할 할 것”
○ "경기 북부는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일·통합의 시험장’"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가 4일 오전 경기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통일경제특구를 포함한 경기북부 마스터플랜을 위한 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주재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 평화와 번영의 중추가 되도록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접경지 관광 인프라와 연결하면 첨단산업과 관광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외국 자본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통일경제특구는 ‘평화의 시대’라는 지금껏 가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일·통합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마스터 플랜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접경지역 경계의 변화는 북중러 접경지역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경제적 확장이 중국, 러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접경지역 개발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남북경제협력 고도화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담보이며, 통일경제특구가 남북경제협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 평화통일특구특위는 이를 실현하고자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 및 지원 △국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지원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기반 조성 등 이행 방안을 구체화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정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준 부위원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 구체화

○ 위원회 목적, 역할, 구성 등 구체적 윤곽 담은 조례 기초안 공개
○ 위원회 설치 시기는 조례 제정 후 10월로 가닥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4일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위원장 윤후덕)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이었다"며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 시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기틀을 마련해 모범적으로 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라며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의의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기본소득은 일자리 부족, 불안정 노동의 확대, 불평등 확대 등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한 신근식 씨는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생겼다"며 "특히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경제 생태계를 선순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개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안에 따르면 경기기본소득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도의원, 청년, 소상공인 대표, 도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기본소득 관련 자문 및 심의이며, 향후 실현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탐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위원회는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및 정책 피드백을 담당하는 연구·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기초안을 발표한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도 조례 제정 후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 출범 시기는 10월 내외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수위, '촛불 정신 계승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현할 것' … 경기도형 시민참여 모델 구축 구체화

○ 5일, 시민소통 관련 타 지자체 현직 책임자 초청해 특강 개최해
○ 최순영 위원장 "마을에서 이뤄내면 국가가 바뀐다"... 지방자치 시민참여 중요성 강조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시민참여위원회(위원장 최순영)가 5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시민참여 정책 실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확대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 정책의 현재를 살피고 새로운 경기도형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순영 시민참여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도민이 도정을 함께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도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경기도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마을에서 이뤄내면 국가가 바뀐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주민참여가 곧 중앙정부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시민참여위원회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진행한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주민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도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청원제 및 도민발안제 도입 △경기도청 SNS 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도민과 기초자치단체가 쉽게 활용하도록 '공공 데이터' 공개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구성으로 31개 시·군 협치 강화 △'경기 지방정치축제' 정기 개최를 통한 갈등조정과 협치 강화 등 관련 정책의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민참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도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준비하는 기구"라며 "이 지사의 정치철학을 담아 경기도의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개념 노사관계 컨트롤타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논의

○ 경기지역 노·사·정 관계자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 1개 과로 구성된 노동정책 담당부서 '국'으로 확대 건의
○ 노사컨설팅 사업 확대 추가 예산 편성 제안도

경기지역 노·사·정 관계자들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나갈 컨트롤타워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등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현재 1개 과로 구성된 도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도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 노동경제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득)는 5일 '경기도 노사관계 구축 모색 및 노동현안 청취를 위한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노사관계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동회의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동조합이 대변하지 못하는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며 "경기도 실정에 걸맞은 '경기도형 노동회의소'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이 경영자총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기존의 틀을 깨는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동회의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현재 1개 과로 구성된 도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용목 한국노총의장은 "노동회의소 설치에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우선 도의 노동과를 '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해당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을 도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득 노동경제환경분과 위원장과 오완석 부위원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 도내 노·사·정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특별사법경찰단 단속분야 및 인력대폭 확대, ‘민생경제범죄’ 소탕 나선다

○ 안전행정분과, 9일 특사경 인력기능 확대 계획 발표
○ 단속분야 기존 6개 → 12개 …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 범죄 집중
○ 변호사, 범죄학자 등 전문 인력 투입하고 인력규모도 70%가량 증원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규모를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 발표

○ “공항버스 시외면허 취소 가능...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절차 밟아야”
○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 “대중교통 통합 운영 위한 경기교통공사, 조속한 추진단 구성 필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가 10일 오전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단,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단,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제20조(준공영제 중지)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특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연 2,000명 운수종사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통정책 대전환’ 추진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 특위는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 전담기구로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도민의 이동권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기업 설립안(도 용역)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장 직위의 과 단위 규모’의 추진단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경기지역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육여성분과, 도내 63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운영비 인상 추진
○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 … 근무정원 증원·특수근무수당 인상도 계획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교육여성분과(위원장 정춘숙. 이하 분과)는 도내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4개소 등 63개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사회복지시설 전담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전담 상담사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에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연 급여는 평균 1천990여만원 수준(5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2천320여만원 (5호봉 기준)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년 차 사회복지전담공무원(평균 200여만원)의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분과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근무자를 한 개소 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 인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춘숙 교육여성분과 위원장은 "미투운동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근무자들은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전면 강화를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78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3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道, 체납액 수천억원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도 체납액 5천990억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 계획 밝혀
○ 체납액 통합관리체계 수립,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계획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 적용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천990억여 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천960억원·징수액 2천62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천935억원 등 5천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원 중 2천476억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새로운경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

○ 국내 최초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통해 청년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기반 마련할 것
○ 청년배당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성남시 청년복지정책 경기도에서 이어갈 방침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에 따르면,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하여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경기 시흥시 스마트시티로 도약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실증도시 선정

○ 4년간 592억원 투입,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모델 구축
○ 선정 막후 이재명 도지사, 경기 인수위 조정식 위원장, 4차산업혁명특위 이원욱 위원장 긴밀한 협력 돋보여

경기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92억원을 투입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스마트시티 핵심시설인 '데이터 허브센터'가 설치되며 리빙랩을 활용해 에너지·환경·복지분야의 신사업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실증연구가 진행된다.

또한 시흥시가 자율제안 과제로 제안한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 버스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기도에 적합한 신산업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의 조정식 상임위원장(시흥, 국회의원)과 인수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원욱 위원장(화성, 국회의원)의 노력이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선정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원욱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은 "지난 한 달 여간 이재명 도지사, 조정식 상임위원장과 경기도의 스마트시티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부기관을 적극 설득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경기도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한 가운데 시흥시가 최초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선7기 경기도, 전국 최초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교육여성분과,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성폭력 근절할 것"
○ 피해 신고 및 상담, 관련 지원기관 연계... 피해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까지 실시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성차별·성폭력 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시정 권고를 담당하는 '성평등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교육여성분과(위원장 정춘숙)는 13일 오전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고자 성평등 옴부즈만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성평등 옴부즈만은 실천단과 시민자문단으로 나뉘어 구성될 예정이다.

실천단은 도와 시·군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 조사하고 나아가 시정 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 성평등 옴부즈만의 가장 중점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민간영역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긴급여성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자문단은 도 및 시·군 조례,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연령 등 차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위촉된다.

교육여성분과 관계자는 "성평등 옴부즈만이라는 일원화 된 접수 창구를 통해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민간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과정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를 포함하여 △도정의 실질적 성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육여성분과는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와 더불어 2022년까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50%,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여성 비율을 20%로 늘림으로써 성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도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지 예산 운용 강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소방관 동행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추진

○ 안전행정분과, 13일 '소방관 동행제' 실시 방침 발표
○ 150명 이상 동행하는 대규모 수학여행에 현직 소방관 동행
○ 시설현장 확인·화재대피 교육 등 진행…퇴직소방관 인력풀도 탄력적 운영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도내 초·중·고교의 대규모 수학여행에 전문 안전요원을 동행시키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참석인원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에 대해 현직 소방관을 전문 안전요원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동행 소방관은 여행 출발 전 인솔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학여행지 숙박시설현장 확인, 화재대피 교육실시, 수학여행지 비상연락망 확보,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현직 소방관 외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체 지원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소방관 동행제는 대규모 수학여행이 꾸준히 진행되는 데 반해 학생들을 보호할 전문 안전요원은 없으면서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새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학생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교사 1~2명이 관리할 수 있는 학급단위의 '작은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측은 학사일정이나 장소섭외, 비용문제 등으로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 50명 당 안전요원 1명을 의무배치 해야 한다는 단체 수학여행 방침에 따라 15시간 내외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이 안전요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도내 2천388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4개교(초등 74, 중등 51, 고등 49)가 전문안전요원이 동행하지 않은 채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는 소방관 동행제를 실시 중이다. 2015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트럭 폭발사고 발생당시, 터널 안에 서울소재 초등학생 70여 명이 탑승한 수학여행버스가 있었으나 동행한 소방관의 대처로 모두 무사히 대피한 바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장인력 부족 등으로 미뤄왔던 소방관 동행제를 뒤늦게 추진하게 된 만큼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퇴직소방공무원 인력풀 등을 꼼꼼하게 구성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도지사 후보시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시 소방관 동행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망 사각지대 놓인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조례 마련한다

○ 새로운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 개정 방침
○ 경기북부 44%가 군사시설…개발제한·소음·진동 등 지역주민 피해 커
○ 법적근거 미비로 어려웠던 피해지원, 조례안 개정으로 실질적 보상 나설 것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 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 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30일간 달려온, 이재명 표 경기 인수위 활동 톺아보기

○ 인수위 각 분과·특위, 광범위한 54개 분야 432개 세부실천과제 이행 방안 수립 완료
○ 이행 방안은 예산부터 입법까지 구체적·실용적... 간담회·세미나·현장방문만 100차례 넘어
○ 일부 TFT 외 잠정적 활동 일몰... 24일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회' 개최로 공식 종료 예정

지난달 18일 닻을 올린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가 약 한 달간 집중했던 인수위 활동을 잠정적으로 끝맺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광범위한 공약을 54개 분야의 432개 세부실천과제로 정리했으며, 이를 각 분과·특위에서 검토 및 조정하고 각 과제별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전념해왔다.

'백 마디 약속보다 실천'을 중요시하는 이 지사의 뜻에 따라 각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방안은 연차별 이행 계획부터 소요예산 산출, 재원조달 계획, 입법 계획, 기대효과 측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세워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 시대 속 접경지대인 경기도의 역할을 경제, 안보,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다방면에서 구체화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통복지 확대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방안 제시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설계 등 기본소득 도입 기틀 마련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을 위한 6자(도당,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기관사회단체, 광역·중앙정부) 협치 체계 설계 △시민참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 실현 방안 구체화 △기존 도정·산하기관의 불합리한 운영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 제안 등 이 지사 고유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약들을 실천 가능한 정책의 형태로 구현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기획재정·안전행정·노동경제환경·문화복지·농정건설·교육여성 등 6개 분과, 4차 산업혁명·교통대책·평화통일특구·평화경제·평화안보·새로운경기 등 6개 특위, 시민참여위원회로 구성된 인수위는 이 같이 광범위한 세부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그야말로 쉼 없이 달렸다.

전문가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토론회·세미나가 73차례, 통일경제특구 대상지인 군남댐 및 연천평야, 파주 민통선 지역 일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인 현덕지구 등 주

요 현장방문이 74차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보고 회의를 포함한 분과·특위 회의만 201회, 자체 내부세미나를 포함한 소위원회의 회의도 158회나 열렸다. 경기도청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수시로 진행된 세부 회의 및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로 쏟아진 각종 민원 검토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인수위는 조정식 상임위원장, 이한주 공동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전 기획운영분과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기획단장,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 소병훈 농정건설분과위원장, 백종덕 농정건설분과 기획단장, 정춘숙 교육여성분과위원장, 고인정 교육여성분과 기획단장, 오지혜 새로운경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협 교통대책특별위원장, 이용광 평화안보특별위원장, 김용 대변인, 곽윤석 기획실장, 이우종 행정실장, 조승문 운영지원실장 등 위원장단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인 만큼 변화의 폭이 넓고 인수위 업무 범위가 상당해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런데 역량과 열정을 갖춘 분들이 모여 인수위 활동에 헌신해주셔서 한 달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인수위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경기도 각 실국 및 시군의 공직자 여러분께 인수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파견 오신 경기도청 지원단 여러분이 가장 공약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이니 복귀해서도 이 지사의 철학이 도정에 스며들도록 전문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자로 인수위 각 분과·특위의 공약 이행방안 수립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정 슬로건·재정건전화·도정운영개선 등 최소한의 TFT 외 조직은 모두 일몰한 상태다.

인수위는 오는 24일 14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개최를 끝으로 공식적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19일 개최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道 역할론 모색

○ 오전 10시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각계각층 전문가 등 250여 명 참석
○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할 일' 주제로 각계각층 열띤 논의
○ 평화통일특구특위, 평화경제특위, 평화안보특위 등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사항 발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평화 분야 전문가와 도민들이 모여 논의를 갖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남북평화정착' 활동을 전개해 온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평화안보특별위원회 등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시작으로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도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경원선축 발전방향 △DMZ 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군부대주변지역 지원방안 △DMZ 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환황해경제벨트개발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진다.

정책제안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해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관계자는 본 토론회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평화 정책을 검토한 새로운경기위원회 3개 특위의 활동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평화번영 정책 점검 및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진흥 행정2부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통일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비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개최
○ 이한주 새경기위 공동위원장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 주제 발표서 전략 공개
○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등 3개 지대와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 등 3대로드 개발 구상 발표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3帶3路) 전략'이 제시됐다.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은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 개발을 통해 경기도를 △ 한반도의 경제지도 중심지 △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거점 △ 통일한반도 사통발달의 인프라 △ 살고싶은 생태복지 경기북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의축 개발 사업으로는 △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조성 △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GTX-A연결을 통한 경의 중앙선 연장(문산~도라산역) △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 개성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 등이 제시됐다.

경원축 전략 사업으로는 △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북 경의선 연결 △ 남북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DMZ 동서축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 강화-간성 간 고속도로(파주-연천)사업 추진 지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파주-포천)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5대 방안이 제시됐다. 5대 방안은 △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 환황해 경제벨트 개발 등이다.

끝으로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는 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체계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관련법 제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의 성패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외적 요인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화정책자문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이 제안자로 참여해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및 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및 경원선축 발전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정 나침반 될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24일 개최

○ 24일 14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종합보고회 끝으로 인수위 활동 마침표

○ 인수위가 제시하는 경기도정 비전, 목표, 전략, 중점과제 및 공약사업 이행 계획 구체적으로 담겨

지난달 18일 닻을 올린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가 24일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며 한달 여 간 진행된 인수위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다.

인수위는 24일 14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인수위 활동 결과 및 공약사업 이행 계획 검토 결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종합보고회는 인수위 교육여성분과 조화영 간사의 진행에 따라 조정식 상임위원장의 개회사,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종합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과의 약속 말씀 등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종합보고서에는 인수위가 제시하는 경기도정의 비전 및 원칙, 5대 목표, 16대 전략, 54대 중점과제가 담겼다.

또한 인수위 내 각 분과 및 특위에서 검토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 이행 계획도 포함됐다. 각 사업의 이행 계획은 연차별 계획부터 소요예산 산출, 재원조달 계획, 입법 계획, 기대효과 측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됐다.

촘촘한 검토를 통해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된 인수위 종합보고서는 향후 민선7기 경기도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종합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새로운경기위원회' 24일 활동 마무리

○ 24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보고회 개최... 인수위원, 전문위원, 도의원 등 250여 명 참석
○ 경기도정 비전, 목표, 전략, 중점 과제 및 공약사업 이행 계획 발표하며 인수위 활동 마침표 찍어

지난달 18일 닻을 올린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가 한달 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인수위는 24일 14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 인수위 활동 결과 및 공약사업 이행 계획 검토 결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종합보고회는 조정식 상임위원장의 개회사,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종합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종합보고서 전달 및 도정슬로건 제안식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과의 약속 실천 다짐의 말씀'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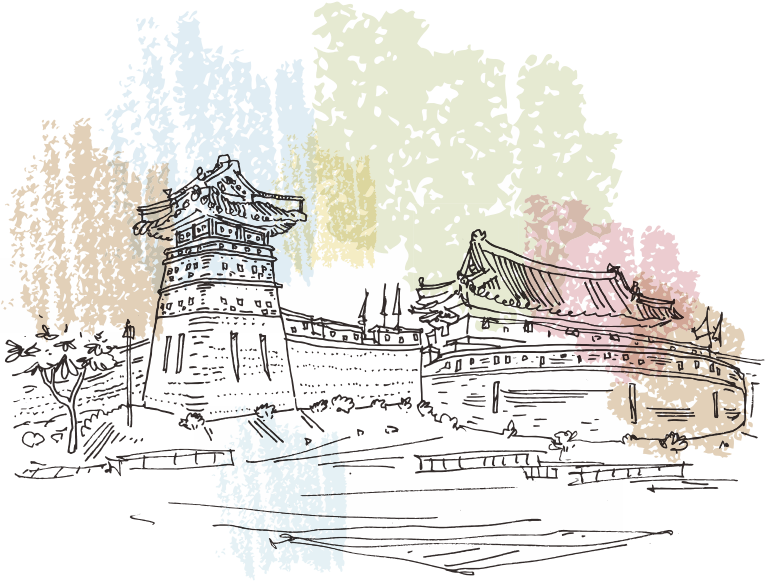
이한주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서는 인수위가 제시하는 경기도정의 비전과 목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대변인실 구성 및 활동 보고, 인수위 운영 총괄평가로 구성됐다.

또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경기를 위한 5대 목표를 골자로 16대 전략, 54대 과제, 186개의 정책과제 및 432개의 실행과제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공약 사업 이행 계획은 연차별 계획부터 소요예산 산출, 재원조달 계획, 입법 계획, 기대효과 측정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됐다.

조정식 인수위원장은 "종합보고서는 인수위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낸 씨앗"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 씨앗을 잘 키워내 새로운 경기도라는 나무를 잘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경기도민들께 골고루 나눠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와 항로를 제시해 주셨다"며 "이 지도를 잘 활용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약 천 페이지에 다다르는 방대한 분량의 인수위 종합보고서는 향후 민선7기 경기도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아울러 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32,396건의 정책제안은 민선7기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이 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밑그림이 될 예정이다.



부록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가평군
의정부시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부천
광명
과천
시흥
안양
성남시
광주시
의왕
군포
안산시
수원시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부록 1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사

-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이 가벼운 임명장에 담긴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경기도의 운명과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제 온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첫째,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도지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주권자인 도민의 것인 만큼 오로지 도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은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도민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희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경기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열고 있는 평화의 시대, 번영하는 나라를 지방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경기도를 남북간 교류 협력,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입니다.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된 복지확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노동권 강화로 일자리와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임이 자랑스러운 경기도, 모두가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자치정부입니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범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화답해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정치, 주권자를 무시하는 독단정치, 기득권만을 위한 배신의 정치를 끝내고 책임을 다하는 진심의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위보다는 해야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권자와의 약속은 계약 그 이상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책임지는 행동과 실천으로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잘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들 옆에서 함께 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경기 정명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 년 전 경기도를 만든 고려 현종은 강감찬과 함께 거란을 물리치고 120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개척한 명 정치가였습니다.

현종은 즉위 조서에서 공직자들에게 "양청격탁(揚淸激濁)을 원칙으로 삼고 배공향사(背公向私)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렴을 장려하고 부패를 배격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방관들에게는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간직하고 만물을 아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종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항상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천 년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경기 천 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원래 경기(京畿)는 왕성의 주변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經), '기초(基礎)'의 기(基), 즉 '경세제민의 터전'이라는 뜻의 '경기(經基)도'로 새로 정립하겠습니다.

도민의 생존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도민의 삶의 안정에 절대가치를 두는 곳, 공정의 원칙이 확립되고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없는 곳, 청년에게는 희망이, 어르신들에게는 재도약의 기회가 제공되는 곳, 그래서 한 명 한 명 모든 도민의 자존감이 충족되는 새로운 경기(經基)도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는 자치의 시대, 분권의 시대, 주권자의 시대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새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부록 2 :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 목록

5대 목표 16대 전략 54개 분야 186개 정책과제

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

촛불정신 계승, 도민 참여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정치축제 개최
2. 도민청원제,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3. 주민참여행정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4. SNS 소통 강화로 주민참여 제고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5. 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협력시스템 마련
6. '(가칭)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영역별 협치플랫폼 실행
7.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8.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

경기도 예산 및 채용·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10. 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 및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11. 감사기구의 주민 참여 확대

경기도 조세정의를 확실히 실현하겠습니다

12. '광역체납기동반' 조직 확대 및 시·군 협업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13.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14. 맞춤형 징수 추진
15.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특별사법경찰을 강화하여 삶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1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 17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 18. '치안보좌관제' 도입
- 19. 자치경찰 준비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 20. '성평등옴부즈만' 설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견인
- 21. 도정의 실질적 성 주류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
- 22.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강화
- 2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확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24. 청년 학업 및 생활안정 복지 지원
- 25. 청년 취업준비 지원
- 26.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및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27. 경기도 노동행정 강화
- 28. 경기도형 노동권 강화 제도
- 29. 노동법 준수, 산업재해 감소
- 30. 비정규직 감축 및 정규직 고용업체 우대
- 31.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조기 달성
- 32.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 문화 환경 조성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경기 북부를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33.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 34. 경의선, 경원선 연결사업 지원
- 35. 경기 북부 지역별산업 특화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발전과 평화경제권 형성 선순환 추구

경기도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36. DMZ를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조성

37. DMZ 공연예술클러스터 조성
38.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
39. 주민들 삶과 함께하는 안보환경 조성

Ⅱ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기본소득과 3대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경기복지 기준선을 제시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0. 모든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가이드라인 「경기복지기준선」 제시
41. 경기복지의 전달체계 개선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준비·실행하겠습니다

42.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43.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배당 우선 실시
44. 지역화폐 발행·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경기도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45. 경기의료원을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조성
46. 시·군 공공의료기관 지원
47. 의료정보 공유 위한 '환자의뢰·회송사업' 정착 지원
48.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및 도 차원의 지원 강화
49. 건강관리사업 경기도 확대

경기도 3대 무상복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50. 경기도 청년배당
51.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52.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무상 지원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공공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53.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54. 육아종합지원 확충
55. '아이사랑놀이터' 시·군 확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를 시행하여 평생 치아건강을 돕겠습니다

56. 경기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치매돌봄체계를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겠습니다

57. 안정적인 치매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8. 치매안심마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를 이뤄내겠습니다

59.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60.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실시

61. 작은 다문화서가 만들기

62. 스마트 다문화 해설안내판 만들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63.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준수 및 민간부문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추진

64.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활동 기회 확대

65.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장애인 복지 강화

66.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강화

67.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상담 강화

한부모·조손가족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68.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Ⅲ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경기형 경제민주화를 실행하겠습니다

69.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70.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71.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2. 지역화폐 도 전역 확대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 73. 경기도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전담기구 설치
- 74.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체계적 확충, 고객편의 증진
- 75. 전통시장 상생발전형 벼룩시장 '경기공유마켓' 지원
- 76. 전통시장·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77.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
- 78.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강화
- 79.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사업 추진(정부정책 연계)

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경기도를 혁신과 창업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80. 스타트업 공간 조성 시범사업 시행
- 81.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 82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경제를 이끌겠습니다

- 83.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 84. 지역별 특화산업 혁신지구 조성 및 융복합 강화
- 85. 경기도 대학의 창업-취업 네트워크 역할 강화
- 86. 4차 산업혁명과 구조고도화 선도할 미래일자리 준비

판교형 지식기반산업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87.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 : 기존 테크노밸리의 혁신 체제 보완
- 88. 7개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서비스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 89. 게임산업 생태계 구축
- 90. 방송·통신·미디어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 91. 경기북부 패션, 가구관련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 92. 경기서해안-DMZ-경기동부 연결하는 첨단 자연 생태관광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93.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개발
94.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계획 수립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95. 도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96. 공유경제 활성화
97. 시민, 상호금융, 기업, 경기도, 시·군이 함께 사회적 기금 조성

새로운 경기농정을 설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8. 생태환경보전농업 지원으로 생태환경 보전 기여
99. 생산지 관리 강화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
100.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101.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2. 청년-기업 연결하는 '장기현장실습교육브리지' 프로젝트 실시
103. 연령별·경력별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104.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105. 경기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106. 장애인 민간부문 고용확대 지원 및 스마트산업 일자리 개발

Ⅳ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7.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108.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109. 교통행정체제 개편
110.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실시

빠르고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추진·완공하겠습니다

111. 추진 중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 추진
112.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및 급행화 추진
113. 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이용권역 확대 추진

유라시아 대륙으로 출발하는 교통 물류기지를 확보하겠습니다

114.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
115. 교통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6. 낙후된 구도심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
117. 경기도시공사 기능 강화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118.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확대
119.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20. 경기도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 계획수립 추진
121. 공공주택 특별공급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122.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추진
123. 경기도시공사 기능 활성화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미세먼지 해결,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대책 수립
125.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126. 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 강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
127. 다중 이용시설 실내 오염도 개선
128. 중앙정부 및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체계 구축
129. 북한발 미세먼지 절감 위한 남북협력 추진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0.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131. 가뭄극복을 위한 가용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132. 수질·생태·치수 등 종합 고려한 하천관리 추진
133.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마련

폐교 및 유휴공간을 도민들의 복지·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34. 경기도 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으로 복지·문화 예술 공간 조성 (지역별, 대상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간 조성)
135. 지역 산후조리원, 문화사랑방 등 복지•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36. 경기 동북부•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지원 강화
137. 경기 동부 중복 규제 합리화 및 발전기반 조성

지역별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고 경기도 역사유적 탐방길을 만들겠습니다

138. 폐철도, 하천, 가로 등 다양한 선형자원 활용해 마을과 마을 연결
139. 마을 단위 친환경 공원, 운동시설 및 이동위한 인프라 개선
140. 생태 공간 및 역사유적 탐방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141. DMZ 올레길 조성

Ⅴ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경기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142. 안전 관련 제도 정비 및 안전 취약지 관리 강화
143.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확충으로 골든타임 확보
144. 최첨단 재해대응체제 마련
145. 의용소방대원, 자율방재단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146. 안전교육 강화

경기시민순찰대를 창설하여 도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147.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48.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소비자 안전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49. 통학로 및 학교 위험요인 제거
- 150. 소방관 동행제
- 151. 안전체험 교육확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를 실행하겠습니다

- 152.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153.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실시
- 154. 경기도 고등학생 진학주치의제 실시
- 155. 청소년종합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형 평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156. 경기도 온라인평생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 157. 5060 신중년 지원 강화와 베이비부모세대 맞춤형교육 실시
- 158.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활성화
- 159.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 16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확대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예술인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고 예술창작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 161. 예술인 권익보호 및 공정 생태계 조성
- 162.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도 행정 서비스 혁신
- 163. 예술가 대상 창작 공간 간접 지원 추진
- 164. 지역기반 활동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마련
- 165. 문화 친화적 도시공간 설계

경기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166. 중앙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 167.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비율 확대
- 168.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조성 확대

169. 문화예술 동호회 교류 네트워크 구축
170. 도민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 일상화 추진
지역 미디어센터 설립과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1. 경기도내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지원
172. 독립영화 관련 창작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남북 문화·체육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
174. 중앙정부 남북 교류사업 지원 및 협력 확대 추진
175. 남북체육교류사업 적극 지원
동물행정체계 정비와 반려동물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76.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177. 경기도형 펫티켓 조성
178.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
179.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80.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181. 동물보호 행정 추진
182.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속 시행
맞춤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을 충전하겠습니다
183.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체육프로그램을 지원
184. 경기도 내의 각종 체육단체 지원·육성
185. 경기도 순환둘레길 적극 조성
186. 남북체육교류를 활성화

부록 3 : 인수위원회 분과 및 특위 신규 정책제안 과제 (115개)

연번	제안내용	분과 및 특위
1	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	안전행정
2	공무원 역량개발 및 평가 강화	
3	학교 및 공원 등을 활용한 재해대피시설 확충	
4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 및 적정 기준인건비 산출	
5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추진을 위한 (가칭) 지방분권추진단을 신설	
6	글로벌 평화예술특구 제안(경기북부)	노동경제환경
7	중소기업 휴게공간 지원사업	
8	중소기업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보조	
9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10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재정립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국 조직개편안(환경에너지실 신설 등)	
12	환경정책 일관성을 위한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13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수자원본부 조직개편(하천과 이관)	
14	경기우수공원인증제(GyeongGi Green Flag Award) 도입	
15	경기도 산하기관 태양광발전소 의무 설치	
16	공동전기료 제로아파트 사업	
17	축령산 산림복지서비스 특화지구 지정 제안	
18	꽃 속의 경기 (GyeongGi in Bloom) 사업 제안	
19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신고 제도 제안	
20	테크노밸리 정책팀 및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21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	문화복지

연번	제안내용	분과 및 특위
22	무한돌봄센터 개편	
23	장애인 생활임금 도입	
24	국제장애인교류센터 설치	
25	장애인 생활편의 스마트 앱 구축	
26	장애인정책 협치·연구·조직 확대	
27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원 제도 확대	문화복지
28	경기도 예술정책 전담부서 신설	
29	문화체육관광실 신설 및 실국별 조직 정비	
30	'문화가 있는 삶, 삶이 있는 경기'(생활문화축제)	
31	경기 축제형 국제 융복합예술 엑스-티벌(Exhibition-Featival) 개최	
32	무형문화제 전수장학금 지급	
33	경기스토리텔링 공모사업	
34	(가칭)경기예술비엔날레 개최	
35	우리동네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36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재협상	농정건설
37	상수원다변화, 규제완화, 주민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38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39	〈수도법〉 개정 지원	
40	경기융합타운조성사업 도청신청사 건립 사업 적기 추진 대책 마련	
41	청소년수련원 등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42	급식예산구조 개편으로 적정식품비 확보와 친환경 급식 비율 상향	
43	이원화되어 있는 경기도 급식 지원체계를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	

연번	제안내용	분과 및 특위
44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공공급식, 군납, 대학급식 등으로 확장	
45	도시농업 육성	
46	경기북부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설	
47	경기연구원내 농정해양연구실 신설	
48	여성정책 전달체계 재구축을 위한 TFT 제안	교육여성
49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정책실로 위상 격상	
50	여성비전센터 기능 강화 방안	
5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명칭변경 및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	
52	청소년정책과 신설	
53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변경	
54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리직(1급상당) 채용 방법 다양화	
55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4차 산업혁명
56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체제 혁신	
57	도시형 스마트팜 활성화	
58	경기 드론 특구 조성	
59	스마트 파킹	
60	경기도 IDC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61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공거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62	인공지능 120 콜센터 구축	
63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로봇 솔루션 보급 및 확산	
64	인공지능 119 정보센터 구축	
65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 실증 클러스터 조성	
66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 실증도시(시흥)	
67	좋은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테크 세이프”	

연번	제안내용	분과 및 특위
68	경기도형 융합기술 R&D 지원 사업 “융합 기술 상용화 사업”	
69	경기도 초등학생 코딩교육 강화방안	
70	VR·AR 기반 가상건설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	
71	수요응답형 셔틀(Dial-a-Ride) 도입 검토	교통대책
72	청소년, 어린이 버스 이용요금 혜택 지원	
73	GB지역 내 공영 차고지(사업용 대형버스) 확보방안 검토	
74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 검토	
75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	
76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제 도입	
77	경기도 택시 노동 복지회관 건립	
78	판문점포럼(안보, 평화, 경제 분야)	평화통일특구
79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교통 SOC 강화	
80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 구성	
81	남북철도 연결 대비 KTX/SRT 문산 연장	
82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83	에너지이용 형평성 제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 마련	평화통일특구
8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85	전통시장 아파트 - 청년주거복지 문제 해결	
86	내가 직접 만드는 스마트시티(이데아 시티)	
87	유라시아 고속철도를 통해 경기도를 동북아경제공동체 허브로 조성	
88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북한 인접 특구와 교류협력	
89	(가칭)경기평화재단 설립추진	
90	북한 요술(마술)공연 남한 개최 추진	
91	DMZ지원청 설치	

연번	제안내용	분과 및 특위
92	근현대 역사 유물인 리비교, 북한군/중국군 묘지 등의 관광자원화	
93	우이령터널 및 송추~적성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94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평화경제
95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96	경기도 북부청사의 예산편성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97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확대 개편	
98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설치	
99	'경기 평화포럼'(가) 설립·운영 지원	
100	경원선 'Peace Road' 관광·문화 벨트 조성	
101	평화로(국도 3호선) 가로 환경 개선 추진	
102	민관협력을 위한 '6자협치체계'구축	새로운경기
103	민관협치위원회 설립 전 단계로서 협치추진단 구성	시민참여
104	원스톱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신설	대외협력소통실
105	시민참여위원회 상설기구화	
106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107	의정부 · 양주 7호선 조기착공	
108	연차휴가촉진제 실효성 제고	
109	내리막길 에코존 표지판 설치	
110	화성 동탄 환승정류장 정책 대립, 수원-화성간 경계 조성	
111	청년활동공간 확산	청년정책단
112	청년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운영	
113	청년정책 관련 공약명에 대한 리네이밍	
114	청년정책에 대한 브랜딩	
115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갭이어 프로젝트	

부록 4 : 시민참여위원회 지역 및 분야별 시민제안 과제 (124개)

연번	정책제안	구분
1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가평
2	공공임대아파트 정책 개선	
3	꽃동네 지원예산 비율 개선	
4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	고양
5	향동역 설립	
6	향동고 설립	
7	도래울마을 버스노선 확충	
8	도래울 GTX역 신설	
9	지축차량기지 이전	
10	향동 송전탑 지하화	
11	고양정수장 옆 골프장 증설 반대	
12	한류월드 K-컬쳐밸리 활성화	
13	킨텍스 노후시설 보수	
14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15	수도요금 누진세 폐지	
16	아파트 특별전형 대출상한 중 신혼부부 제외	
17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18	창릉천 인근 도로 정비	
19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	과천
20	양재천 수질 관리	
21	스포츠시설 확충	광명
22	택시 승차거부 신고시스템 마련	
23	태재지구 대림이편한세상 사용승인처분 감사	광주
24	광명초 과밀로 신현초 설립	

연번	정책제안	구분
25	오포 양우내안애아파트 부실 시공	
26	태전지구 버스 배차간격 단축	
27	물류센터 설립 백지화	
28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 재개	
29	경강선 역세권 개발	
30	태전동 공사현장 시멘트먼지 행정 단속	
31	서울시교육청 퇴촌야영장 경기도민에 개방	
32	갈매초 과밀로 교외 증축	구리
33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미비로 버스기사 근무환경 개선	
34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 일원화	
35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설립	
36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음	
37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군포
38	우신차고지 재개발	
39	대학병원 유치	김포
40	장기동 일대 중학교 과밀	
41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추진	
42	사이비종교시설 허가 반대	
43	올림픽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44	폴리텍 등 전문기술학교 설립	
45	다산물류센터 설립 반대	남양주
46	마석가구공단 불법소각 단속	
47	퇴계원 군부대 철수	
48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 시행사 인허가 감사	
49	백봉지구 종합병원 설립	

연번	정책제안	구분
50	하패리 은현면 악취 개선	동두천
51	건영아파트 방음벽 설치	
5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부천
53	다자녀가정 고교생 혜택	
54	부천시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55	상대원3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촉구	성남
56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법 개정	
57	청년 주거안정 대책	
58	주차장 확대 및 불법주차 단속	
59	신분당선 호매실역 조기착공	수원
60	호매실 방음터널 설치	
61	칠보산 광역화장장 사업 철회	
62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63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초중교 설립	
64	전투비행장 이전	
65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	
66	물왕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선	시흥
67	목감 택지개발지구	
68	정왕동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전세자금 거부 조사	
69	능곡동 중앙광장 내 흡연부스 설치	
70	친환경 버스로 교체	
71	서해고 사거리 육교 설치	
72	마유로 방음벽 개교 전 설치	
73	장애인 복지정책	안산
74	유천, 송탄 보호구역 개발제한 해제	안성

연번	정책제안	구분
75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재가동 중지	안양
76	신도시 내 학교 신설시 심의 완화	양주
77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여주
78	여주 내 일자리 확충	
79	경원선 전철 구간연장	연천군
80	운암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오산
81	수청동 주민센터 건립	
82	동세교 주민이용시설 설립	
83	성남, 남양주 대비 물놀이장 개장	용인
84	한숲시티 고교 설립	
85	기흥구 분구	
86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87	악취 측정시스템 구축	의왕
88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설립	의정부
89	온라인 커뮤니티(옥정연)에 민원인에 선물 이벤트 단속	
90	역세권 개발	이천
91	반월동 시립도서관 건립	화성
92	동탄1·2 신도시 트램 동시 착공	
93	신규 아파트 부실시공 감독	
94	경기도 예산 투명화 및 지출내역 공개	기획·재정
95	실패한 사업주에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	
96	소방관 처우 개선	안전·행정
97	외국인 통합관광시스템 도입	
98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99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효성 제고	노동·경제·환경

연번	정책제안	구분
100	시간선택제공무원 처우 개선	
101	내리막길 에코존 표지판 설치	
102	실손의료보험 보상 단일화 시스템	문화·복지
103	독립운동자 후손 지원	
1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5	다자녀 통합복지시스템	
106	친환경 농가 지원	농정·건설
107	에너지절감형 건설정책 도입	
108	경기전문승용마번식지원센터 활성화	
109	유휴부지 활용 주말농장 확대	
110	서울처럼 과적 적발시 현장고발	
111	장애인학교 설립	교육·여성
1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3	한부모가정 지원	
114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협력벤처특구 조성	평화통일특구
115	대동강 투어 상품 개발	
116	임대인 횡포 근절	새로운경기
117	집단취락지구 10호 이상 지역 그린벨트 해제	
118	상습 주차대란 지역 대상 미터기 설치 및 주차비 징수	교통대책
119	전기버스 도입	
120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내 초기 물량생산 지원비 포함	4차 산업혁명
121	녹색경제정책	
122	초등생 대상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123	청년연금사업 지속	청년정책
124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 토크쇼	

부록 5 :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목적 :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알리고 통일특구, 공여지 개발, DMZ 보전, 환황해경제벨트 등 **주요 현안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과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개최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07.19.(목) 오전 10시 /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평화누리홀
○ 참 석 자 : **280여명 (인수위, 각계각층 전문가, 일반도민, 도·시군 공무원 등)**
○ 주 제 :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할 일은?**
○ 주 최 : 경기도
○ 공동주관 :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2 진행순서

사전환담	09:40~09:50 (10분) | •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사님실(주요내빈 포함 8인)
귀빈소개	10:00~10:05 (5분) | • 귀빈소개는 공식행사 3분 전 진행
개회·국민의례	10:05~10:10 (5분) | • 김태희 아나운서(도청)
개회사	10:10~10:15 (5분) | •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발언대)
축사	10:15~10:25 (10분) | • **조명균 통일부장관 / 김진홍 행정2부지사** (발언대)
개회	10:25~10:30 (5분) | • **좌장 : 정성호**(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국회의원)
기조발제	10:30~11:10 (40분) | • **이종석 前**통일부장관 | •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정발제	11:10~11:45 (35분) | • **좌장 : 정성호**(폐회까지 진행) • 토론자 : **7인**(순서 : 홍현익, 박근식, 소성규, 박영민, 이재헌, 한모니까, 박철수)
종합토론	11:45~12:25 (30분) | • 발제자 및 토론자중 희망자 및 방청석 토론신청자
총평 / 종합정리	12:25~12:30 (5분) | • 총평 : 이화영 [연정(평화)부지사] | • **좌장 : 정성호** (종합정리)
폐회선언	12:30 | • 마무리 인사

3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제목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사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10:05~10:15	10‘	축 사	**조명균 (통일부장관)**	박신환 균형발전실장 代
		축 사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10:15~10:30	15‘	개 회	좌장 :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30~10:50	20‘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PPT
10:50~11:10	20‘	발제 1	**평화협력의 시대 - 경기도가 할 일**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PPT
11:10~ 11:15	5‘	제안 1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	
11:15~11:20	5‘	제안 2	**경기도 통일특구 추진 과제** 박근식 (중앙대 교수)	
11:20~11:25	5‘	제안 3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경원선축 발전 방향** 소성규 (대진대 교수)	
11:25~11:30	5‘	제안 4	**DMZ평화지대화의 의의와 과제**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11:30~11:35	5‘	제안 5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차원)** 이재헌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11:35~11:40	5‘	제안 6	**DMZ·접경지역의 평화미래 연대기**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1:40~11:45	5‘	제안 7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11:45~12:15	30‘	종합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플로어 토론	
12;15~12:20	5‘	총 평	이화영 [연정(평화)부지사]	
12:20~12:30	10‘	정 리	좌장 :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고	주요 참석자(축사·발제·제안) 현황

성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	개회사 발제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축사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기조발제
이화영		연정(평화)부지사	총평
정성호		새로운경기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좌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제안
이재헌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연구위원	제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	제안
소성규		대진대 교수	제안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제안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제안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제안

4 기조발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

이 종석

2018.7.19

1

2018年 한반도 정세
: 평화번영시대를 향한 공고한 전진

-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연쇄 개최**
  - 한반도 냉전구조(대결구조) 해체의 절호 기회 도래
    - ✓ 대결의 양대 축인 남북·북미 대결의 동시 종식 기회

- **위기 원인 제공자(金正恩)의 선제적, 능동적 결단**
  - 김정은, 비핵화 의지 주동적 표명으로 인한 정세변화
    - ✓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지하 핵 실험장 폐기 등 조건없는 先조치 통해 북미정상회담 성립 여건 마련
  - 북한의 수동적 수용으로 대화국면 열렸던 김정일 시대보다 대북협상 성공 가능성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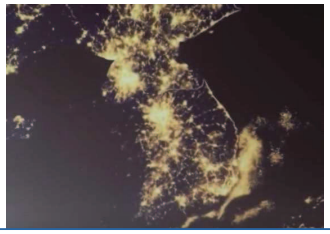
2

트럼프의 비핵화 방식 변화 (all in one → process) 배경과 김정은의 新國家戰略

- **트럼프의 김정은 비핵화에 대한 기존 관점**
  - 미국 등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과 제재'를 못견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책략
    - 이 관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의심 당연. 북한이 틈만 생기면 '기만' 추구 의심
- **트럼프의 인식 변화: 김정은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상 인정**
  - 기존 Model
    - 미국의 위협강조/ 체제 안전보장책으로 핵무기 보유/ 대신에 대북제재로 인한 빈곤 감수
  - 신Model: 고도경제성장 추구하는 정상국가
    - 체제안전보장(경제제재해제 포함) 통해 김정은이 얻으려는 것: 경제부국(經濟强國)
    - 핵 포기 대신에 체제안전보장(북미수교, 평화협정--)과 경제 부국 달성
    - 2018.4.20 조선노동당,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 노선으로 전환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북한인민을 위해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트럼프, 2018.7.5.)

트럼프 메시지



3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밀당' 분석

- **누가 더 급한가?**
  - 본질적으로 북한이 더 급하다
    - 북한 비핵화 확신하는 한, 미국은 비핵화 과정에 대해 시간적 여유
      - ✓ 특히 핵 실험장 폐기에 이어 미사일 대출력발동기(엔진)시험장 폐기하면 최소한 북한의 핵 능력 증진 차단 효과
    - 북한은 현 국면이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져야만 비핵화 관련 조치들이 효과를 봄: 현재까지 제재 관련 조치 전무
      -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및 경제 올인 노선 채택 등으로 인해 제재 해제 위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 불가피
  -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론 변수로 인해 미국이 더 조급해 한다
    - '북미정상회담 실패'와 회의론으로 가득한 미국 내 언론,전문가 중심 여론
      - ✓ 비핵화 성과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바심 자극: 선비핵화 욕구 자극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7.7)
    - 여론 영향 미미한 북한은 경제해제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시간적 여유 과시
- **비핵화 국면 안정 요소**
  -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필요성의 증대(=경제 올인)
  - 비핵화 성공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성
- **불안정 변수**
  - 트럼프대통령 리더십(역지사지 가능? 북한 버티기에 대한 감당 수준)?/ 일방주의 관성
  - 북한의 구태의연한 협상방식(지연, 공갈,벼랑 끝--) 재현 가능성(현재는 과도기)
- **전망**
  - 궤도 일탈 가능성 낮다. 양국 협상에서 새 관행 만들어질 때까지 '밀당'으로 곡절 겪으며 비핵화 논의 진전 예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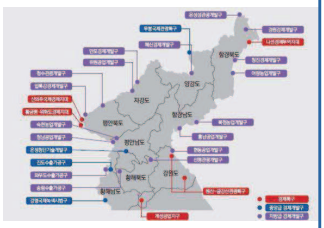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전망 및 남북경협

- **트럼프 임기 내 중요 합의 실천을 목표로 설정(추정)**
  - 2020년 말 이전에 중요 비핵화 달성 - 북미수교,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기간도 2016년-2020년
- **경제제재 완화 관련 전망**
  - '과정으로서 비핵화'에 상응한 단계적 해제 가능성
    - 초기 조치: 민생분야 해제, 10월 이전 실현 기대
    - 이 상황 전개되어야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남북공동번영 관련 원만 논의 가능
    - 한국정부: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복귀/ 일부 남북교역 추진/ 地自體 대북협력 논의 본격화
  - 중간 수준(군사전용 물품 제외): 2019년 (2019.6 ? 2019. 12, 주요 핵 시설 일부 불능, 불용화)
    - 남한의 대북투자 가능/ 남북교역 활성화/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추진(여건 검토 후)
    - 북-중 경협 전면 활성화 예상
  - 전면 해제: 2020년 하반기(주요 핵 시설 완전 폐기)
    - 전면적 남북경협
    - 평화협정 체결(늦어도 2021년까지는 체결 추구)
    -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 개막: 각 주체들은 이 시대 맞기 위한 노력과 준비 필요

5

평화번영시대의 전제조건: 북한의 경제개방

- **김정은, 교역 및 외국인 투자에 바탕을 둔 고도경제 성장 구상**
  -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관계 확대(투자 유치, 교역 증대--)
  - 경제개혁 추구
- **최근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 연혁**
  - 2010년 김정일- 중국 지도부 북-중 공동개발,공동관리의 경제특구 합의
    - 나선, 황금평·위화도
  - 2013년 3월 김정은, 경제개방 공식화
  - 2013년-2017년, 기존 경제특구 외에 22개의 경제개발구 지정
- **고도성장을 위한 북한의 경제 자산**
  - 북한의 자원조건
    - 우수한 산업노동력 /우수한 경공업기술/IT기술인력
    - 풍부한 지하자원/ 물류 통로(지경제적 위치)/ 빼어난 관광자원



✓ **김정은은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나?**

6

정세변화 순항 時 한반도의 미래: 평화번영 시대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평화협정 체결
  - 동북아 공동안보 추구
- **중국의 一帶一路와 한국의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연계 및 Synergy 효과**
  - 남한(5000萬)-북한(2500萬)-중국 東北 3성(1억 1000만)- 극동 Russia-몽골 = 북방경제권 신형성
- **남북경협 중심 북방경제 시대 도래**
  -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천 본격화 예상

7 7

감사합니다

5 발제 평화협력의 시대 - 경기도가 할 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 경기도

경기도 평화경제 3帶 3路

새로운 경기 위원회

Contents

남북평화협력의 중심, 경기도

1 비전, 목표, 전략

2 축별 전략사업

3 중점과제

Ⅰ 비전, 목표, 전략

목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 살고 싶은 생태 복지의 경기북부

비전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 경기도

경기도평화경제 – 3帶3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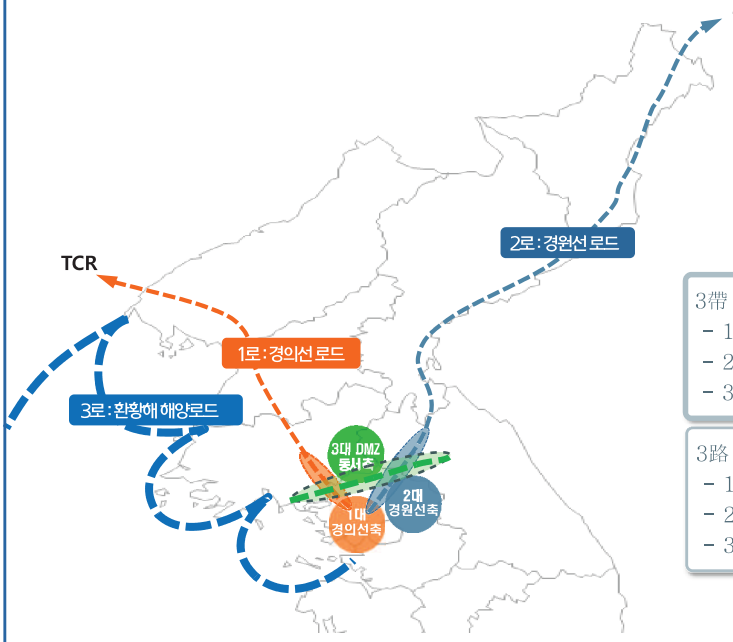
전략

3帶
- 1帶 : 경의축 지대
- 2帶 : 경원축 지대
- 3帶 : DMZ 동서축 지대

3路
- 1路 : 경의선 로드
- 2路 : 경원선 로드
- 3路 : 환황해 해양로드

3

Ⅰ 비전, 목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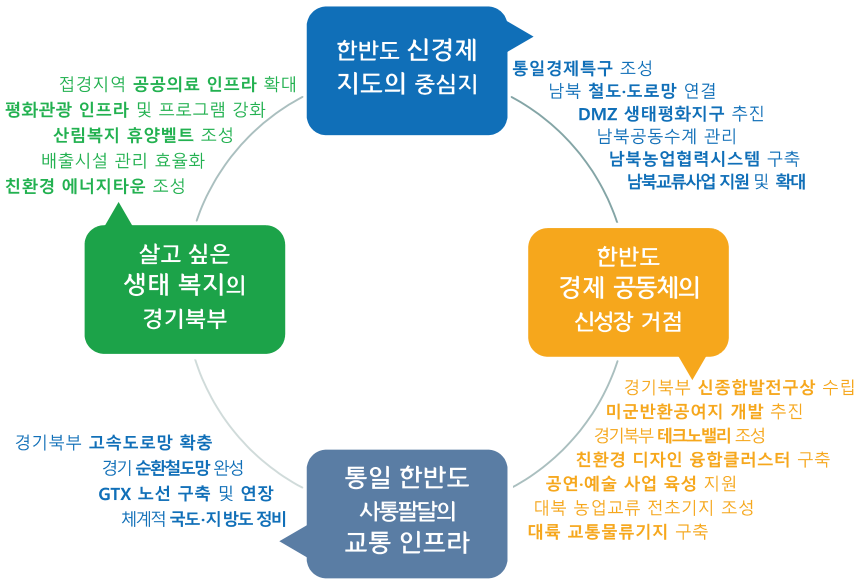
3帶3路 전략

3帶
- 1帶 : 경의축 지대
- 2帶 : 경원축 지대
- 3帶 : DMZ 동서축 지대

3路
- 1路 : 경의선 로드
- 2路 : 경원선 로드
- 3路 : 환황해 해양로드

4

II 전략사업 (4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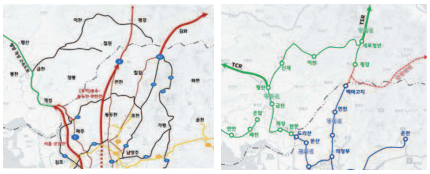


5

II 축별 전략사업 (경의축)

경의축

1.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2. 남북 경의선 연결
3.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4. 고양 · 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5. GTX-A 연결, 경의중앙선 연장(문산역-도라산역)
6.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7. 개성 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6

II 축별 전략사업 (경원축)

경원축

1.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북 경원선 연결
2. GTX-C연결 , 순환철도망 구축 및 물류기지 조성
3.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4.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5.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6. 공연 · 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7.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평화로 정비〉

7

II 축별 전략사업 (DMZ 동서축)

DMZ 동서축

1.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 조성
   -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 DMZ 올레길 조성
   - DMZ 세계평화포럼 개최
2.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3. 강화-간성간 고속도로(파주-연천) 사업 추진 지원
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 조기 착공

〈강화~간성간 고속도로〉

8

Ⅲ 중점과제

1.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2.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3.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4.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5.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9

1.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사업내용

-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추진
  (기존) 유소년축구대회 등 (신규) 개성 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 대회 등
- 중단사업 재개 및 현지 실태조사
  개성한옥보존사업 , 농촌 현대화 사업, 개풍양묘장 조성 등
- 공동 방역, 공동수계관리 등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경기도 역할

- 북측 수요를 고려,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포괄적 종합적 개발협력 추진
-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확대 개편 및 도– 시군 간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및 공조체제 구축
- 남북교류협력 재원 확충
- 지자체의 주도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구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물자 전달〉

〈당곡리 농촌 현대화 사업 〉

10

2.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사업내용

- 북부 접경지역에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경의 · 경원축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

경기도 역할

- 연내 관련 법 제정 노력 및 통일부와 지정 협의
- 특구지정 신청 준비 : 개발계획 수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지역별 인프라와 연계하여 통일경제특구의 성장동력/기능배분 계획
-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여건 조성

〈통일경제특구 기능 및 역할〉

경의축	김포, 파주, 고양	북부 서해안권의 경제기반 활용 산업·서비스업 육성	→ "금융·비즈니스, IT 등"	대중국	유라시아 확장
경원축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자연여건과 동해안 연계 관광·물류, 미래산업 성장 유도	→ "관광·물류, 농업·자원, 미래산업"	대러시아	

11

3.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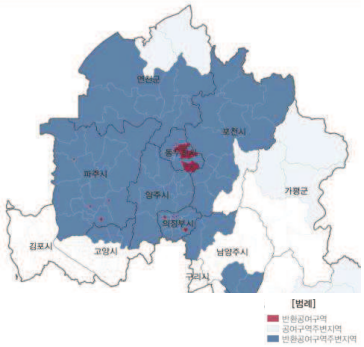
사업내용

- 경기북부 내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지 22개소의 입지별, 특성별 특화개발사업 추진
- 국가주도 개발 및 경기도의 역할 강화

경기도 역할

- 정부에 '미군 공여구역 개발청' 설립 등 전담조직 설치 건의
-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 추진(국비지원 확대 등)
-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 경기도 차원의 지방비 분담 및 재원 확충 검토

〈경기북부 내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분포현황〉



12

4. DMZ 생태평화지구 구축

사업내용 (경기북부 평화생태 관광 벨트 조성)

- 경기 서해안(해양레저) · DMZ 접경지역(평화생태) · 경기 동부권(산악/수변레저) 연계한 글로벌 평화생태 관광벨트로 조성 및 평화생태관광 코스 개발
-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및 세계인이 참여하는 'DMZ 포럼' 형성
  (경제는 다보스 포럼, 평화는 DMZ 평화포럼)

경기도 역할

- 평화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 개발압력 증가에 대비한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 경기도의 생태 평화 역량을 높이고 세계적 위상 제고

13

5. 환황해 경제벨트 조성

사업내용

- 경기도 서해축을 중심으로 남 · 북 · 중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여 동북아 성장 시대 실현
- 경기 서해안 ~ 개성공단 ~ 해주 · 남포 · 평양~신의주 ~중국 단동 ~ 동북 3성을 연결하는 동반성장 벨트 건설
- 동반성장 연결망 구축으로 하나의 경제권 형성
  (4차 산업혁명, 제조, 물류, 관광, 수산 협력)

경기도 역할

- 신의주 북중합작공단, 연태 한중산업단지 사업 적극 참여
- 평택– 북한 해주, 남포– 중국 산동성 연계 항로 개설
-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 서해안 지역을 환황해 중심거점으로 육성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

[개성공단]	[서해평화 협력단지]	[도시]	[수산]
개성공단 재개 후 중국 참여 남북 수도권 연결 경제특구 조성	개성공단 재개 후 중국 참여 남북 수도권 연결 경제특구 조성	신의주를 남·북·중 공동 개발하여 국제자유무역도시로 개발 동북아 복합물류기지로 활용	남북공동의서해공동어로구역설정, 수산가공단지조성등동반수산협력

14

부록 6 :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 보고회

목적 :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의 한달 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인수위 활동 결과 및 공약사업 이행 계획 검토 결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8.07.24.(화) 오후 2시 / 경기도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 30**0여명 (인수위원, 전문위원, 경기도의원 등)**
○ 주 제 :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 보고**
○ 주 최 : 새로운경기위원회

2 기조발제 프리젠테이션

활동 종합 보고회

2018년 7월 24일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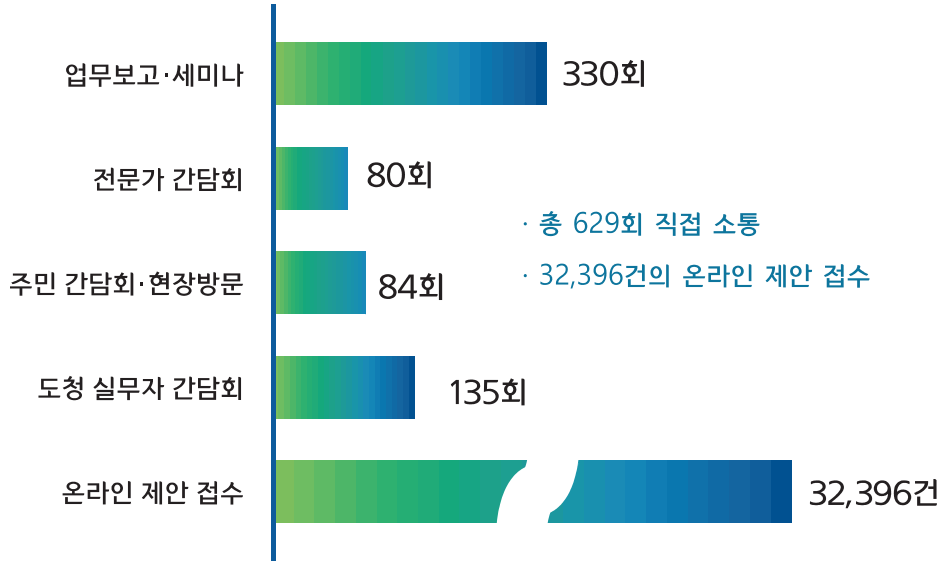
새로운경기위원회

인수위원회 활동 – 인수위원 구성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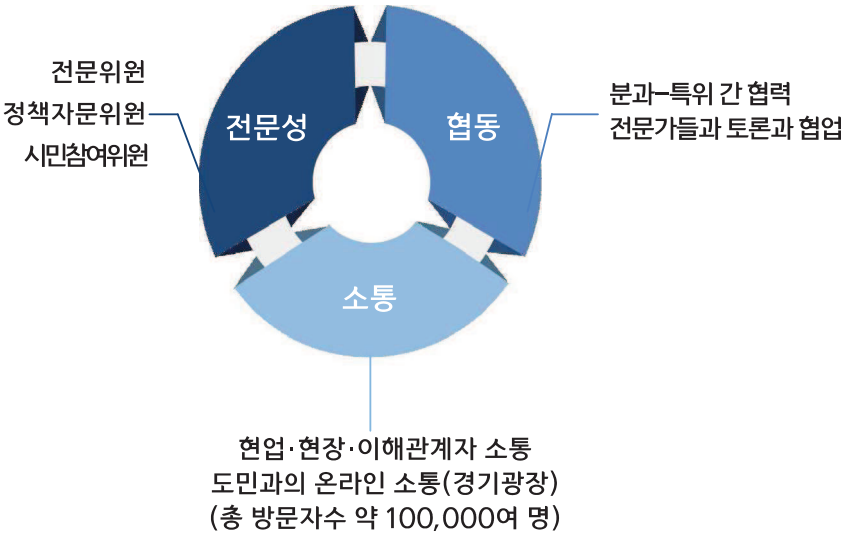
상임위원장	조정식
공동위원장	이한주
부위원장	정성호

기획 · 운영분과	위원장 :이화영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 이원욱
기획 · 재정분과	위원장 : 윤후덕 기획단장 : 박완기	교통대책 특위	위원장 : 김경협
안전 · 행정분과	위원장 : 조응천	평화통일특구 특위	위원장 : 박 정
노동 · 경제 · 환경분과	위원장 : 이용득	평화경제 특위	위원장 : 정성호(겸)
문화 · 복지분과	위원장 : 문진영	평화안보 특위	위원장 : 이용광
농정 · 건설분과	위원장 : 소병훈 기획단장 : 백종덕	새로운경기 특위	위원장 : 김병욱 부위원장 : 오지혜
교육 · 여성분과	위원장 : 정춘숙 기획단장 : 고인정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 최순영

인수위원회 활동 – 소통을 위한 열정



인수위원회 활동 – 성과의 원동력



새로운 경기

5대 목표, 16대 전략, 54대 과제
186개 정책과제, 432개 실행과제

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3대 전략

01.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02.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03.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01 새로운경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시민참여위원회

-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개설

- 32,396건의 제안 접수

관련 공약

- **도민 참여 직접민주주의** 구현
  - 도민 청원제 · 도민 발안제
  - 주민참여 예산제 실질적 강화 및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 **민·관·정 협치위원회** 상설화

01 새로운경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노동이 존중 받는 '을' 을 위한 노동행정”

노동경제환경 분과

- “노동권존중”(관계자토론회)
  - 노동권익센터설립방안
  - 노동존중경기도정을위한 정책제안
- “경기도형노사관계”모색
  - 경기도형노사관계구축 간담회(경기경총-경기노총)

관련 공약

-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 **노동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 노동정책 담당 독립부서 출범 추진
  - 노동상담, 노동교육, 노동복지, 노동권 구제 지원
- 도·산하기관 용역 및 공사입찰 시 비정규직 없는 업체 우대
- 경기도 생활임금 1 만원 조기 달성

01 새로운경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기획재정 분과

- 동북권역규제합리화
  - 경기동북부중복규제합리화로 도민의재산권과생활편의도모

평화경제 특위

- 접경지 5개 시군 대상 경제활성화방안부단체장 간담회
  -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관련 공약

- **동북권역 규제 합리화**
  - **규제 연계형 피해지원 제도 운영**
- 평화경제 중심지로 변모
  - 경원선 일대 환경·관광·교통벨트 구축
  - 경원선 연결, 사통팔달 경기북부 프로젝트
  - 남-북-중/러 교류·협력 준비 : 관광·문화·스포츠 교류, 산업 기술 교류, 농업 교류, 에너지·자원 교류 등 모색

01 새로운경기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의 출발지 경기도”

평화통일특구 특위

- 통일경제 시대 전초기지
  - 중앙정부와의 협력, 입법지원
  - DMZ 개발

평화경제 특위

- 통일경제특구지정추진
  - 미군반환공여지국가주도개발
  - 남북평화시대신물류중심지

평화안보 특위

- 접경지에서 평화경제 전초기지로의 시대적 변화 대응
  - 민관 안보협력 및 교류대비

관련 공약

- **통일 경제 특구 지정 추진**
- **DMZ 생태평화관광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DMZ 올레길 조성, 생태평화축제 등
- 남북공동수계관리 및 교류협력 추진
- **경원선 대륙 물류 지구 개발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 안보정책조정관 신설 및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 활성화

Ⅱ.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3대 전략

04. 기본소득과 3대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05.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06.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02 새로운경기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경기복지기준 – 보편적 복지와 차별 없는 균형 복지"

문화복지 분과

- "경기복지기준" 수립 제시 노력
  - 민관협력 모델 수립
  - 공공의료 강화/지역간 의료복지 불균형 해소
  - 장애인 탈시설화/자립, 재난/안전/이동권/인권 문제에 대한 당사자관점 제시

관련 공약

-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민관협력의 경기복지 거버넌스 강화
  - 경기의료원의 병원시설과 환경 지속 개선
  -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광역치매센터 역할 강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인권센터 내실화 및 권역별 장애인 인권센터 확충
  -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

02 새로운경기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경기도가 가장 잘 하겠습니다”

새로운경기 특위

- 성남에서 성공한 복지정책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
- 출산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통하는 복지 실현

관련 공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초등생 치과주치의 제도** 경기 전역 시행
- 중·고교 **무상교복** 경기 전역으로 확대 시행
- **청년배당** 경기 전역으로 확대
- **산후조리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경기 관내 **학교 실내 체육관 확충**

05 새로운경기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주거복지 실현 – 경기도가 표준을 만듭니다”

농정건설 분과

- 서민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 12개 시민단체 간담회, 도시재생·공공주택보급관련 전문가 간담회(3회) 등 현장과 소통 강화
- “공공개발은 공공의 이익으로”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입 관련 6차례 간담회 진행

관련 공약

-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균등 향상을 위해 시·군간 주택공급 조정
- 취약계층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기준 다변화**
  -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아동·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주거복지 지원 추진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02 새로운경기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청년정책단

- 서울시 청년담당부서·청년활동지원센터 현장방문
-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2회)
- 6개 분과 협업
  - 기획운영/교육여성/문화복지/기획재정/농정건설/시민참여

관련 공약

- **청년배당**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 청년 **주거복지** 실현
- **청년담당관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강화**

02 새로운경기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전국 최초 성평등 옴부즈만 시행”

교육여성 분과

- 성평등위원회 강화 및 도지사 직속의 상설기구 필요
  - 기존 기구·법령 적극 적용
  - 제도적 장치 강화와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관련 공약

-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견인 (도 직영 상설기구)
  - 도 및 시군, 공공기관,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성차별·성폭력 근절
  - 경기도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확대
  - 성혐오·성비하 없는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성평등 캠페인** 추진

Ⅲ.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3대 전략과제

07.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08. 혁신 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09. 농촌과 공유 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03 새로운경기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노동경제환경 분과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의 해소 **“일자리와 생활수준의 향상”**
- 11차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 거버넌스, 부실채권 소각 관리 개선방안, 중소기업지원 기관 업무 조정 및 중소기업 효율적 지원 방안 등

관련 공약

- **“경기형 경제민주화”**
  - 갑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정경제체계 실현
  -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서민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통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혁신

03 새로운경기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일자리가 생기고, 골목이 살아나는 경기형 경제민주화"

노동경제환경 분과

-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조직 및 체계 조기구축"
  - 지역화폐 발행·지원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 법률적·조직적 토대 조기 마련
- "소상공인 살리기"

관련 공약

- 복지지출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 및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03 새로운경기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경기도가 혁신과 창업의 중심이 됩니다"

4차산업혁명 특위

- 젊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구축
  - 4차산업기반테크노밸리조성
  - 공공 정보기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관련 공약

-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 연계한 플랫폼 구축**
-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 혁신지대 조성
- 4차 산업혁명과 구조고도화 선도할 **'미래형 일자리'** 준비
  - 산업단지를 노동자 재교육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노동자 재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GSEEK 재편 및 내실화 (코딩/에너지/모빌리티 등)

03 새로운경기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

"생태환경 보전의 선진농업으로 도약합니다"

농정건설 분과

-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간담회
  - 농정 방향 및 현장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2회)
  - 친환경급식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간담회
  - 새로운 농정으로 가기 위한 농업기술원의 과제 (농업기술원)

관련 공약

- **생태환경보전농업** 지원으로 생태환경 보전 기여
-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마련**

  - 생태환경보전 농업기준 준수 농가에 대한 기여금 지급
  -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 :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 지원

Ⅳ.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

3대 전략

10.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11.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12.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04 새로운경기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경기도"

노동경제환경 분과

- 미세먼지 대책 원칙 : 발생 원인은 줄이고 피해는 최소화
  - 미세먼지 원인과 저감 대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관련 공약

-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미세먼지정책협의체'**
-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 드론 활용 배출가스 감시 확대,
  디지털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 대상 확대

04 새로운경기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

"경기교통 – 더욱 편리하고 공정해집니다"

새로운경기 특위

- 대중교통 정책 문제점 조사
  - 공항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기존 시행정책의 문제 제기

교통대책 특위

-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생태계 전환' 플랜
  - 공공성이 담보되는 준공영제

관련 공약

- 공항버스 및 버스 준공영제 – **"공적지원 = 공적책임"** 기준
  -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실시

※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과 재정투입의 정당성 확보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

- **경기교통공사** 설립
-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 구성 운영
-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립 협력

Ⅴ.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4대 전략

13.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14. 학교 안팎에서 안심 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15.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16.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05 새로운경기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재난과 위해·위험 요소 없는 안전한 경기도”

안전행정분과

- 예방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 실현
- 노후위험시설 및 재해 안전 상시 대비책 마련

관련 공약

- **경기안전특별점검단 확대 운영**
- **소방력 확충** : 소방장비 개선 및 보강
-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및 **시민순찰대** 운영/자치경찰제 준비
- 안전기획실 확대개편(민생범죄/경제범죄/공정경제)

05 새로운경기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기회,
도민에게는 향유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문화복지분과

- "문화로 즐거운 경기도"
  - 문화향유의일상화,예술인 복지 강화 및 권익 보호
  - 고르게 체험하는 문화혜택

관련 공약

- **예술인권익보호**·공정생태계조성,예술인복지확대
  - 독립영화·창작지원확대및영상·콘텐츠클러스터 기능강화
  - 유휴시설및폐공간활용 **창작공간조성** 운영
- **'경기문화의날'** 지정, 지역생활문화활동활성화 지원
- 지역별미디어센터조성·운영및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 경기도내생활문화센터,작은미술관조성및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수혜인원확대

새로운경기위원회 제안

새로운경기 도정운영방향

VISION · VALUES · PRINCIPLES

새로운중심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 도정운영 '핵심가치'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원칙'

부록 7 : 새로운경기위원회 예산결산 내역

❍ 관련 근거

○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단 구성운영계획
[기획담당관-5808, 2018.05.29.]

❍ 예산 집행기준

○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

- **여비** : 국내 공무 출장의 성격에 따라 일비·식비·운임 등의 여비 집행
  - ▸ 관리방법 : 출장명령(위원장, 행정실장)에 의하여 출장확인
  - ▸ 지급기관 : 인수위원 및 사무직원 → 인수위원회
    道 파견공무원 → 道 소속부서에서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 여비(일비·식비 등) 산출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집행

※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4.경기도 예산편성 기준단가 10.운영수당에 따라 기본 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 **특근매식비** : 정규근무 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인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 집행

▷ **초과근무 관리**

- ▸ 관리대상 : 인수위원, 인수위 사무직원, 道 파견공무원
- ▸ 관리방법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은 인수위 행정실장(인수위원, 사무직원 등) 지문등록시스템 활용(道 파견공무원)

- **강사수당** : 「2018년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항목별 지급 예시

구 분	국내여비*			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관내		관외		
	4시간미만	4시간이상			
인수위원	10,000원	20,000원	40,000원	최대 150,000원	1인 1식 8,000원
인수위 (외부)사무직원					
자문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2호 여비지급에 따라 산출(숙박비 미포함) / 관용차량 사용시 기준일비(20,000원)의 10,000원 감액(관내 4시간 미만 미지급 또는 4시간 이상 10,000원 /관외 30,000원)

**위원장이 소집한 인수위 공식(정례수시) 회의 및 분과위(소위원회) 회의, 공식 자문회의에 한에 지급

❍ 인수위원회 운영예산 편성내역

○ **예산 : 1억원**(사무관리비 9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

(단위 : 천원)

편 성 목	지원항목	내 용	예 산 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	필요물품 구입 및 제작	20,000
	특근매식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10,000
	관리비	사무실 관리비	20,000
	백서	인수위원회 백서 제작	10,000
	참석수당	인수위원 참석수당	25,000
	강사수당	특강 등 강사수당	5,000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인수위원, 직원 등 국내여비	10,000

❍ 인수위원회 운영비 집행현황

○ 집행액 : 87,175천원

(단위 : 천원)

편 성 목	지원항목	내 용	집 행 액
계			87,175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	사무용품, 인쇄, 현수막, 다과류 등	19,526
	특근매식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9,890
	관리비	사무실 관리비	15,361
	백서	표지, 내지 컬러 편집 및 인쇄 제작비	9,218
	참석수당	21명×〔(15만원×2회)+(10만원×7회)〕	21,000
	강사수당	11명	2,710
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출장 : 147회	9,470

※ 인수위원회 사무실 사전설치비 : 163,652천원

(단위 : 천원)

편성목	구 분	내용	집행액
계			163,651
기관운영공통 경비	사무실 임대료	인수위 사무실	31,545
	사무기기 임차비	노트북, 책상, 의자, 복합기 등	84,235
	공사비	소 계	47,872
		파티션 공사	12,556
		전기공사	3,432
		통신공사	31,883

부록 8 :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9.] [경기도조례 제5692호, 2017.9.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지사 당선인(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94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경기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도지사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직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와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는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 새로운경기위원회 백서

발행처 : 새로운경기위원회
발행일 : 2018. 8. 30

새로운경기위원회 백서 TFT

단장 : 이한주 위원장
부단장 : 이우종
간사 : 조계원, 김락중
전문위원 : 최만선, 강주영, 박문수
정문호, 박민수
지원 : 김재훈

이 백서의 어느 부분도 저작권자의 승인 문서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진 복사나 디스크 복사 및 기타 정보 재생 시스템을 비롯하여 현재 알려지거나 향후 발명될 어떤 전기적, 기계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복사하거나 재생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